

인천 소상공인 금융접근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2021. 9.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양준호교수팀



제 출 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소상공인 금융소외자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 9.

주관연구기관명: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양준호교수팀

연구진

연구책임자	양 준 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소장)
참여연구원	남 승 균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상임 연구 위원, 경제학 박사)
참여연구원	이 점 순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책임 연구원, 경제학 박사)
참여연구원	박 창 규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책임 연구원, 인천대 박사과정)
참여연구원	윤 효 중 ((주)캠코CS, 대표이사)
참여연구원	배 재 홍 ((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총괄 본부장)
참여연구원	정 지 수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연구 원, 인천대 학-석사통합과정)
참여연구원	고 영 민 (인천대 동북아통상학부 학사과정)

〈목 차〉

I. 들어가며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3
3) 연구의 방법	6
2. 인천 지역경제 현황	7
1) 인천시의 인구 변화	7
2) 인천시의 노인 및 청년인구의 변화	9
3) 인천시 지역내총생산(GRDP) 변화	10
4) 인천시 기업의 경영지표 현황	16
5) 인천시의 사업체 수 및 신규 사업자 수 변화	18
6) 인천시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고용형태	22
7) 인천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1인당 지역총소득	26
8) 인천시의 1인당 민간소비	28
9) 소결	28
3. 인천시 소상공인 금융배제 현황의 개괄	30
1) 인천시의 소상공인 현황	30
2) 인천시의 소상공인 경영환경	36
3) 인천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현황	44
4) 인천 소상공인 위기 대응 금융 현황	52
5) 인천 소상공인 사회적 가치창출 금융 현황	52
4. 금융배제 현상에 관한 개념적/이론적 논의	54
1) 금융배제(Financial Exclusion)의 정의	54
2) 금융배제(Financial Exclusion)의 역사적, 이론적 검토	58
3) 소결	61

5. 인천시 소상공인 금융배제 실태 조사결과	63
1) 소상공인 대상 실태조사 결과	63
2) 금융기관(신협) 대상 실태조사 결과	100
3) 인천시 소상공인 및 금융기관 대상 실태조사 결과 요약 ·	122
6. 인천시 소상공인 금융배제 실태에 관한 통계분석	160
1)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선형회귀분석)	160
2)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162
3) 교차분석	172
4) 금융기관(신협) 대상 설문조사(빈도분석)	174
5) 금융기관(신협) 대상 설문조사(교차분석)	180
6) 소결	181
7. 인천시 소상공인 금융배제 현상의 특징	185
1) 소상공인의 정의, 규모, 경영실태	185
2) 현재 소상공인 부채 현황	185
3) 소상공인 금융배제 현상	186
4) 인천 소상공인 금융배제자 추정	188
8. 소상공인 대상 FGI분석	191
1) FGI 설계	191
2) 인천시 소상공인 대상 FGI 내용	192
3) 소상공인 대상 FGI 분석결과 요약	208
9. 금융기관(신협) 대상 FGI분석	211
1) 금융기관(신협) 대상 FGI 내용	211
10.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개괄	218
1) 경제금융 관련 정책	218
2) 소상공인 직접 지원정책	219

11. 인천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정책에 대한 개괄	222
1)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업무	222
2)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업무 일반현황	227
3)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업무 요약	236
12. 해외사례 검토	240
1) 미국사례	240
2) 독일사례	259
3) 일본사례	262
13. 결론을 대신하며	291

〈표 목차〉

〈표 2-1〉 2020년 기준 인천시 인구현황.....	7
〈표 2-2〉 2008~2020 인천시 노인 및 청년인구 변화 추이.....	9
〈표 2-3〉 2013~2019 17개 광역시·도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현황.....	10
〈표 2-4〉 2016~2019 주요산업 인천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현황.....	16
〈표 2-5〉 2016~2019 주요산업 인천기업의 총자본투자효율 현황 ..	17
〈표 2-6〉 2016~2019 주요산업 인천기업의 부가가치율 현황.....	18
〈표 2-7〉 2015~2019 인천시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개수 및 비중.....	19
〈표 2-8〉 2015~2019 시도별 신규사업자 현황.....	20
〈표 2-9〉 2017~2019 인천 군구별 신규사업자 수 및 비중.....	21
〈표 2-10〉 2020년 인천시 및 전국 시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22
〈표 2-11〉 2017~2019 인천시 산업별 종사상지위별 종사자수.....	24
〈표 2-12〉 인천광역시 임금근로자의 정규직/비정규직 규모 현황..	25
〈표 2-13〉 2019년 시도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1인당 지역총소득 순위.....	27
〈표 3-1〉 2018년도 시도별·기업규모별 기업수.....	30
〈표 3-2〉 2015~2018 인천의 전 산업 기업규모별 기업수 비율.....	32
〈표 3-3〉 2018년도 인천 소상공인 기업 수의 산업별 분포.....	32
〈표 3-4〉 2018년도 시도별·기업규모별 종사자수.....	33
〈표 3-5〉 2015~2018 인천의 전산업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비율.....	35
〈표 3-6〉 2018년도 인천 소상공인 종사자의 산업별 분포.....	35
〈표 3-7〉 2019년도 인천 산업중분류별 소상공인 매출액 및 비율..	38
〈표 3-8〉 2019년도 인천 산업중분류별 소상공인 영업이익 및 비율.....	40
〈표 3-9〉 2019년도 인천 소상공인 부채 실태.....	43
〈표 3-10〉 인천지역 금융기관의 기업규모별 대출현황.....	45

〈표 3-11〉 2015~2020 예금은행 지역별 역외유출률	46
〈표 3-12〉 2015~2020 비은행 금융기관 지역별 역외유출률	48
〈표 3-13〉 인천 중소기업 산업별 이자비용	50
〈표 7-1〉 인천 소상공인 금융배제 실태 추정	190
〈표 8-1〉 FGI 참여자 현황	192
〈표 11-1〉 최근 3년간 보증공급현황	228
〈표 11-2〉 최근 3년간 대위변제현황	229
〈표 11-3〉 연도별 출연실적	230
〈표 11-4〉 인천신보 일반보증 신용등급별 현황(2013~2021.5.) ..	231
〈표 11-5〉 인천신보 특례보증 신용등급별 현황(2013~2021.5)	233
〈표 11-6〉 인천신보 협약보증 신용등급별 현황(2013~2021.5)	235
〈표 11-7〉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용등급별 현황(2013~2021.5)	237
〈표 12-1〉 일본 정부의 금융 및 재정지원 내용	263
〈표 12-2〉 일본은행의 기업 자금융통 지원 내용	264
〈표 12-3〉 일본의 ‘금융기능강화법’ 개정경위	265
〈표 12-4〉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주요 사업 및 대출잔액	267
〈표 12-5〉 실질 무이자, 무담보 금융지원	272
〈표 12-6〉 신용보증협회의 보증실적	274
〈표 12-7〉 효고현(兵庫縣)의 제도용자 개요	280
〈표 12-8〉 오사카부(大阪府)의 제도용자 개요	284
〈표 12-9〉 아이치현(愛知縣)의 제도용자 개요	289

〈그림 목차〉

〈그림 2-1〉 1992~2020 인천광역시 인구규모 변화추세	8
〈그림 2-2〉 1992~2020 광역시의 전국 인구비중 변화추세	8
〈그림 2-3〉 1985~2019 인천광역시 실질 GRDP 추이	11
〈그림 2-4〉 1985~2019 전국 및 인천광역시 실질 GRDP 성장률 추세	12
〈그림 2-5〉 1985~2019 인천광역시 산업별 실질 GRDP 추세	13
〈그림 2-6〉 1985~2019 인천 제조업 세부업종 GRDP 비중 변화	13
〈그림 2-7〉 2000~2020 전국 및 인천광역시 고용률 추세	23
〈그림 2-8〉 2000~2019 전국 및 인천 1인당 GRDP 및 지역총소득 추세	26
〈그림 2-9〉 1995~2019 전국 및 인천 1인당 민간소비 추세	28
〈그림 3-1〉 2018년도 전 산업 시도별 소상공인 기업수 비율	31
〈그림 3-2〉 2018년도 전 산업 시도별 소상공인 종사자 비율	34
〈그림 3-3〉 2019년도 시도별, 산업중분류별 소상공인 사업체수	37
〈그림 3-4〉 2019년도 시도별 산업중분류별 소상공인 사업체 매출 구간 비율	38
〈그림 3-5〉 2019년도 시도별 산업중분류별 소상공인 사업체 영업 이익 구간 비율	47
〈그림 3-6〉 2015~2020 인천 예금은행의 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 비중	47
〈그림 3-7〉 2015~2020 인천 비은행 금융기관의 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 비중	49
〈그림 11-1〉 2015~2020 인천 비은행 금융기관의 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 비중	229
〈그림 11-2〉 보증공급과 보증잔액현황 비교	232
〈그림 11-3〉 일반보증 건수와 금액 비교 및 비중 (2013~2021.5)	234
〈그림 11-4〉 특례보증 건수와 금액 비교 및 비중(2013~2021.5)	236
〈그림 11-5〉 협약보증 건수와 금액 비교 및 비중(2013~2021.5)	238

<그림 11-6>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용등급별 현황(2013~2021.5).....	240
<그림 12-1> 일본의 신용보완제도 운용체계	269
<그림 12-2> 일본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수 및 중소기업 대출 규모	273
<그림 12-3> 일본의 기업 도산 건수 및 지방은행의 여신관련 비용	275
<그림 12-4> 제도용자의 기본 틀	276

요 약 문

‘금융배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사회적 배제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 차원에서 강조되었음.

본 연구결과, 금융배제는 경제활동 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또는 경제적 약자 계층 또는 개인인 금융 서비스 수요자(지역성 또는 계층성)가 공공재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거나(접근성),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자신이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하게(충분성), 적정한 비용지불을 통해 제공받지 못하거나(수용성), 현재 제공받고 있는 금융서비스를 본인의 의사와 달리 유지할 수 없게 되는(지속성) 현상이자 그로 인해 금융 서비스 수요자가 경제적 불이익과 사회적 배제를 겪게 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했으며, 금융배제는 글로벌 차원과 국가차원에서 전개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결과물 중 하나로서 금융자유화와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 금융위기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경영행태 변화로 나타난 현상임.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먼저 ‘소상공인 금융배제’를 “자산담보가 없고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사업자금을 충분하게 대출받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거나, 사업의 지속을 위해 기존 대출을 연장하지 못하는 금융 현상이자 그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과 사회적 배제를 겪게 되는 현상”이라고 개념화했으며, 이러한 소상공인의 금융배제 현상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악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추가 대출 희망 등 금융 서비스 수요 증가 ▲금융기관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잦은 대출 거절과 자산 담보, 높은 신용등급 기준의 대출 행태 ▲소상공인들의 높은 이자비용 부담이라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했음. 특히, 본 연구의 인천 소상공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인천의 소상공인 금융배제자는 “사업자금 대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대부업체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고 있는 26.3%의 인천 소상공인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연간 매출액 1억원 이내, 연간 순이익 5천만원 이내의 영세한 소상공인이다”라고 분석했음.

다음으로 인천시의 소상공인 및 금융기관(신협)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인천지역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형태의 금융소외 현상이 관찰됨. 일부이기는 하나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현상이 존재하며, 금융회사의 대출을 받았더라도 충분한 수준

의 대출을 받지 못하고, 소상공인의 사업 환경에 적합한 특화된 대출서비스가 미흡한 상황임. 이러한 금융소외 현상에 따라 소상공인이 사금융 피해를 당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 가능함.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 수입금으로 금융소외 현상에 대응하지 못하고, 친인척이나 대부업체 등을 통한 자금조달로 금융소외 현상을 타개하는 경향을 보임. 금융회사의 대출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사업 유지, 사업 확장 등 대출을 지원받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향유할 기회가 차단된 것으로 해석 가능함.

소상공인의 금융소외 원인으로는 소상공인의 상환능력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금융회사의 신용할당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됨. 금융회사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서비스에 소극적인 사유 중 가장 중요한 사유는 대출원금의 회수 우려임. 또한 금융회사가 소상공인에 특화된 대출상품이나 대출 심사시스템 등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등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도 미흡한 것이 현실임. 이른바 서민금융기관으로 일컬어지는 서민금융회사가 지역밀착형 상호금융회사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상업은행과 유사한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한 원인으로 이해됨. 아울러 소상공인이 자신의 대출 상환능력이나 사업 현황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제시하지 못하여, 금융회사가 높은 거래비용을 이유로 대출서비스를 기피하는 것도 중요한 사유임.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출금의 상환 부담감을 호소하며, 추가적인 대출 지원을 희망하고 있음. 소상공인은 일시상환대출이나 분할상환대출의 상환자금 마련에 상당한 부담이 있음을 호소하며, 대출만기일 연장 등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매출 및 이익금 감소에 따라 추가적인 대출 지원을 희망하고 있음. 이러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소외 현상 해소를 위해서 소상공인 및 금융회사 종사자 모두 정책자금대출의 확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가 예금자 보호가 필요한 금융회사인 현실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단시일 내에 채택 가능한 대안으로 평가됨. 나아가 상당수의 소상공인은 인천 내의 소상공인 금융소외계층(개인 금융소외계층 포함)의 금융소외 현상 해결을 위해 인천 시민만을 위한 시민은행(지역공공은행)의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천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확대 방안으로 인천지역에 특화된 금융기구의 설립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됨.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첫째, 예금자 보호 등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 비대칭성으로 대출 상환능력 평가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유연한 대출서비스 지원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수요자인 소상공인에게 자금 공급을 직접 지원할 수 있어야 확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통한 지역 서민금융회사의 육성, 지자체의 독자적인 직접 지원방안의 강구 등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본 연구의 인천 소상공인 설문조사 결과를 통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선형회귀분석(OLS)을 통해 인천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천 소상공인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인천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대출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둘째,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t)’을 통해 인천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대출 규모별로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간순이익’이 작을수록 ‘1천만원 이하’ 사업자금 대출보유 확률이 증가하고, ‘연령’이 젊을수록 ‘2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 사업자금 대출보유 확률이 증가하며, ‘연간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5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 ‘1억원 이상~3억원 이하’, ‘3억원 초과’의 사업자금 대출이 증가할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셋째,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t)’을 통해 인천 소상공인의 대부업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천 소상공인의 대출전당 금융권의 대출 거절 경험 횟수’가 1번 늘어날수록 대부업 대출이 있을 승산이 50.5% 증가하며, 인천 소상공인의 대부업 대출 여부에 대한 결정요인의 한계효과를 추정하면 인천 소상공인의 대출전당 금융권의 대출 거절 경험 횟수’가 1번 늘어날 때 대부업 대출이 있을 확률이 6.4%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리고 ‘인천 소상공인의 창업 이후 영업 기간’이 1년 늘어날수록 대부업 대출이 있을 승산이 4.7% 감소하며, 인천 소상공인의 대부업 대출 여부에 대한 결정요인의 한계효과를 추정하면 창업이후 영업기간이 1년 증가할 때 대부업 대출이 있을 확률이 0.75%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넷째,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t)’을 통해 인천 소상공인의 현재 사업자금 추가대출 희망금액 규모별로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간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5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 ‘1억원 이상~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등 고액의 추가대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대체로 추가대출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다섯째, 연간 매출액 규모별 대부업 대출 유무 교차분석을 한 결과, ‘연간 매출액 3억원 이상’ 소상공인의 대부업 대출 빈도는 낮으며 ‘연간 매출액 5천만원 이상~1억원 이내’ 소상공인의 대부업 대출 빈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연간 순이익 규모별 대부업체 대출 유무 교차분석을 한 결과, ‘연간 순이익 7천만원 이상’ 소상공인의 대부업 대출 빈도는 낮으며, ‘연간 순이익 3천만원 이내’ 소상공인의 대부업 대출 빈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금융권 대출 거절 경험 횟수별 대부업 대출 유무 교차분석을 한 결과, ‘금융권 대출 거절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이 그런 경험이 없는 소상공인보다 대부업 대출을 두 배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인천 시민은행 설립에 대한 연간 매출액 규모별 필요성 공감 교차분석을 한 결과, ‘연간 매출액 규모’ 범위와 관계없이 인천 소상공인들은 대체로 ‘인천 시민은행’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금융배제 개념 정의와 인천 소상공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종합할 때, 소상공인 금융수요와 금융회사의 금융 공급을 매칭시켜 금융배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 금융수요를 완화시키기 위한 매출증가, 순이익 증가 등 금융시장 이외의 정책과 금융배제 정책 간의 정책결합(policy mix)이 필요하며, 2) 금융서비스가 가치재, 공공재라는 것을 전제로 정부와 지자체가 개입해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상공인 전담 공공 금융기관 설치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1. 들어가며

1) 연구배경 및 목적

- ☐ 금융소외계층으로서 소상공인 금융소외자의 금융접근성 확대는 다음의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경제활동 지원 기본 금융 확대
 - 위기 대응 금융 확대
 - 사회적 가치 창출 금융 확대

(1)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현황 및 경영환경

-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현황
 - 인천은 전체 기업 수 340,339개중 소상공인 기업 수가 318,288개(93.5%)이다. 이러한 인천의 소상공인 기업 수 비율은 전국 비율(93.3%), 서울(91.9%), 경기(92.9%)에 비해서는 다소 높음. 또한, 인천 소상공인 기업 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24.9%)이었음.
 - 인천은 전체 종사자 950,728명중 소상공인 종사자수가 461,459명(48.5%)임. 이러한 인천의 소상공인 종사자수 비율은 전국 비율(43.6%), 서울(29.5%), 경기(45.9%)에 비해서 높음. 또한, 인천 소상공인 종사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24.0%)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제조업(15.9%)이었음.
-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 산업중분류별 소상공인 매출액
 - 2019년 기준으로 산업중분류별에 따른 인천 소상공인 사업체의 매출 구간비율을 보면, 연매출 2억원 이상이 35.5%로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높고, 5천만원 미만이 23.8%로 전국 평균보다 낮음.

○ 산업중분류별 소상공인 영업이익

- 2019년 기준으로 산업중분류별에 따른 인천 소상공인 사업체의 영업이익 구간의 비율을 보면, 연간 영업이익 1천만원~3천만원미만(%)이 33.3%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며, 5천만원 이상(%)과 3천만원~5천만원미만(%)은 25.6%였고, 1천만원 미만(%)이 15.4%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음. 특히 연간 영업이익 5천만원 이상의 비중은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높았음.

○ 인천 소상공인의 부채현황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천 소상공인의 약 51%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금액별로 살펴보면 5천만원 미만이 41.3%, 1억원 이상이 35.2%,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23.5%임. 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이 4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총 부채액이 가장 큰 제조업의 경우 1억원 이상이 65.2%를 차지했음.

(2) 인천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현황

□ 인천 금융기관의 경제활동 지원 기본 금융 현황 및 특징

- 한국은행 인천본부의 2021.2.24.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의 증가규모가 줄면서 전월대비 감소”했음. 또한, 2020년 10월 이후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했음.
- 한국은행 경제시스템의 지역별 여수신 자료를 활용해 ‘2015~2020 예금은행 지역별 역외유출률’을 산출한 결과, 인천의 경우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역외유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었음. 그런데 인천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금 중 중소기업 대출 비중도 전국 평균 수준에 그치고 있음.
- 한국은행 경제시스템의 지역별 여수신 자료를 활용해 ‘2015~2020 비은행 금융기관 지역별 역외유출률’을 산출한 결과, 인천의 경우

2015년 이후 2020년까지 40%대의 역외유출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업경영분석(지역)에 따르면, 인천 중소기업 전산업의 2017년 기준 2019년의 이자비용 부담이 13.4% 늘어나는 등 2017년~2019년의 인천 중소기업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 인천 중소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천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부담도 이런 실태를 보일 것으로 판단됨.

□ 인천 소상공인 위기 대응 금융 현황

- 인천시의 이러한 위기 대응 금융지원은 금융소외계층 및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공공금융 지원의 대표적 모범사례임. 향후 공공부문에 의한 공적 금융지원의 보다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공공재원의 확보, 공공금융 지원체계의 구축 등의 보완되어야 할 과제임.

□ 인천 소상공인 사회적 가치창출 금융 현황

- 현재 인천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인천서구법인) ▲(사)함께일하는인천사람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본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 남부, 북부센터 ▲신용보증기금 인천 사회적경제팀 ▲인천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인천본부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음.

2) 연구의 내용

□ 인천시 소상공인 금융소외 현황 및 특성분석

- 인천 소상공인의 업종별 시장환경, 매출액, 영업이익, 자산·부채현황(차입기관별), 리스크(부실률), 신용등급 구조 등에 대해 회귀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분석을 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필요성 및 세부 정책방향 설정함.
- 인천 서민금융의 현황을 예금은행, 비은행금융기관, 대부업 등 금융기관별로 파악하고,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권한에 따른 지원방안을 분석하는 한편, 인천 서민금융 지원방안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추정함.

- 이러한 인천 서민금융 현황을 토대로 인천 서민금융 부진의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정책개선 건의과제, 인천광역시의 정책개선 과제를 구분해서 도출함.

□ 소상공인 금융애로 파악 및 정책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 문헌조사(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조사 등)
- 소상공인 금융서비스의 공급자 및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함.
 - 금융서비스 수요자 대상 설문은 소상공인의 필요자금 조달 방법 및 규모, 금융기관의 대출절차 및 소요기간과 거절 등 대출행태, 금융서비스 접근성 및 애로사항, 인천시에 바라는 사항 등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함.
 - 금융기관 설문조사는 사전에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금융서비스 현황(금리수준, 대출기준, 심사요소 등)을 파악한 후 질문지를 작성해 조사를 진행함.
 - 금융기관으로부터 향후 소상공인 금융접근성 확대 정책개선의 방향 및 선결과제, 대안금융제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도 포함함.
- 일부 표적집단에 대한 면접조사(FGI) 등 심층조사를 실시함.
- 해외 소상공인 대상 금융기관 현황 및 특징 등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함.

□ 차별화된 ‘인천형 소상공인 금융접근성 확대 정책모델’ 제시

- 섬세한 과학적 데이터 분석, 현장 설문조사, FGI, 선행 문헌연구 등을 종합하고, 최근의 관련 정책 트렌드를 포함함으로써 기존의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와 차별된 인천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접근성 확대 방안을 제시함.

- ‘금융소외자 금융접근성 확대’ 개념의 적극적 확장을 통해 현재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필요는 물론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부문의 요구에도 조응하는 금융소외자 금융접근성 확대 방안을 아래의 세 가지 방향에 따라 제시함.

- 경제활동 지원 기본 금융 확대
- 위기 대응 금융 확대
- 사회적 가치창출 금융 확대

- 지역개발정책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춘 인천형 ‘공동체 자산 구축 (Community Wealth Building)’ 과의 정책 통합성 검토를 포함한 인천시 지역개발 공공정책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안함.

□ 사업비 추정 및 타당성 검토

- 기존 예산의 조정 검토 및 신규 재원의 발굴 가능성 검토해 금융소외를 극복하고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함.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재원의 조달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가능성을 검토함.
- 민간의 각종 사회적 공공기금의 유치, 조성 가능성을 검토함.
- 이와 관련한 해외사례를 검토함.

- 지역화폐 정책 등과 연계한 시민주도형 재원 조달과 연계 방안을 검토함.

- 전략적 목표의 설정, 사업추진체계의 구축, 단계별 목표 및 주요과제(재원마련 포함) 제시하고, 단계별 세부 과제 제시와 함께 사업의 기반 확보, 사업 공고화, 사업의 확대 등 단계별 사업 추진절차 제시함. 또한, 단계별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사업기반 확보 방안(여론 형성, 홍보, 시민사회 협치 등)과 기타 자원 연계 방안을 제시함.

3) 연구의 방법

- 본 연구용역에 필요한 이론(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화폐금융론, 계량경제학 등)과 해외 사례 및 국내 사례 일부는 문헌 연구방법론에 따라 연구하며, 본 연구용역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은 STATA프로그램을 활용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특히 시계열분석(Time series analysis)과 패널데이터 분석(Panel data analysis)을 통해 수행하고, 본 연구용역에 필요한 실태조사는 조사방법론에 기초한 설문조사(설문지)와 면접조사(조사표), 표적집단 인터뷰(FGI)를 통해 수행하고자 함.
- 본 연구용역의 추진체계는 ▲연구팀 구성(총 10차의 세미나 진행) ▲연구자문위원회 구성(총 3회의 자문회의 진행) ▲소상공인 현장 조직과의 연계(간담회 등 의견수렴 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하였음.

2. 인천 지역경제 현황

1) 인천시의 인구 변화

- 아래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 기준 인천의 인구는 약 294만명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1만 1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해 인천이 고령사회로 진입했음을 나타내며, 청년 인구는 54만 1천명임.
- 또한 <표 2-1>에서 인천의 인구를 군구별로 살펴보면 서구, 남동구, 부평구 순으로 인구가 많으며, 노인인구 비중은 강화군, 옹진군, 동구 순으로 높음. 청년 인구 비중은 계양구, 연수구, 부평구 순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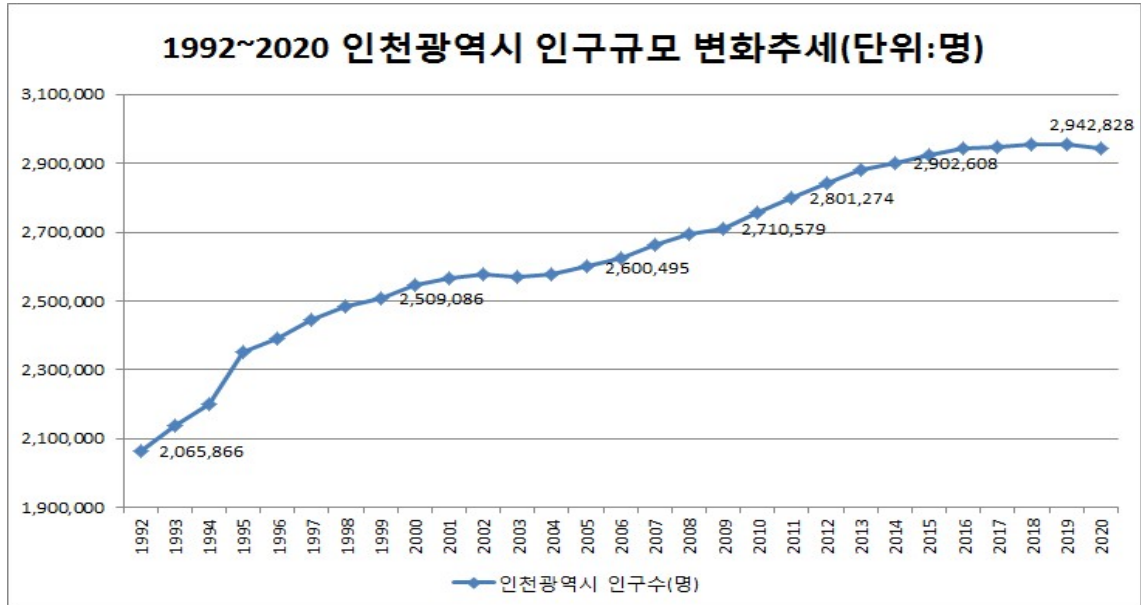
<표 2-1> 2020년 기준 인천시 인구현황

행정구역별	총인구		65세 이상		15세~29세	
	인원(명)	비중(%)	인원(명)	비중(%)	인원(명)	비중(%)
인천광역시	2,942,828		411,483	14.0	541,205	18.4
중구	139,729	4.7	20,531	14.7	25,130	18.0
동구	62,542	2.1	14,453	23.1	9,204	14.7
미추홀구	404,343	13.7	69,074	17.1	73,988	18.3
연수구	387,450	13.2	38,190	9.9	73,229	18.9
남동구	525,354	17.9	71,468	13.6	96,108	18.3
부평구	494,962	16.8	73,424	14.8	93,107	18.8
계양구	296,750	10.1	37,947	12.8	58,520	19.7
서구	542,040	18.4	58,087	10.7	100,906	18.6
강화군	69,203	2.4	22,824	33.0	7,717	11.2
옹진군	20,455	0.7	5,485	26.8	3,296	16.1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아래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천의 인구는 1992년 이후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300만 명에 육박했으나 2019년 이후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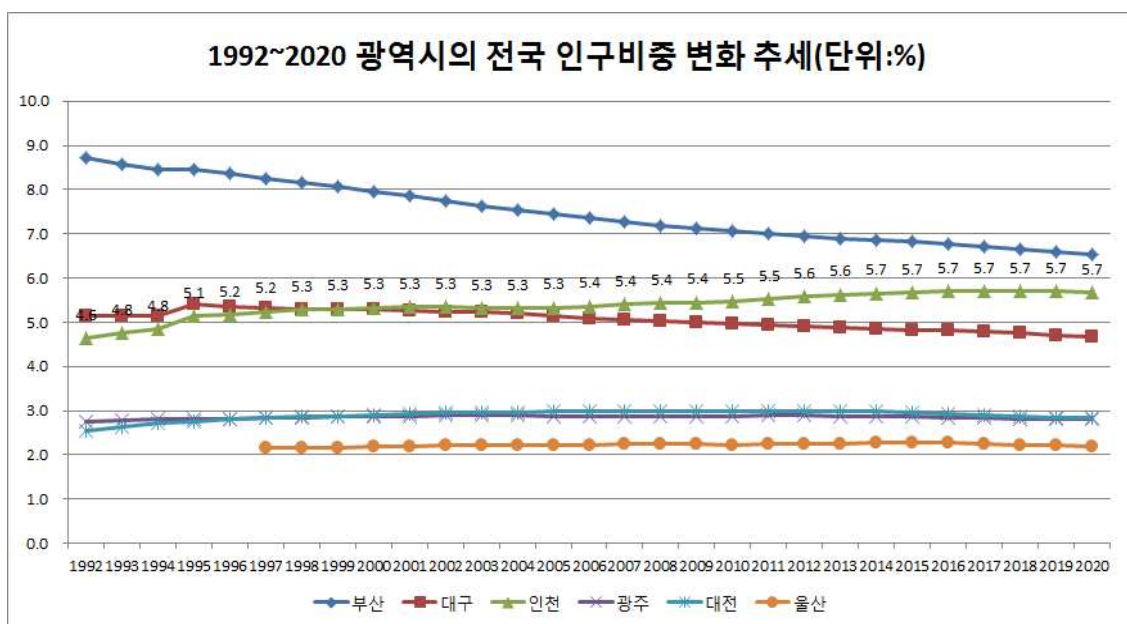
<그림 2-1> 1992~2020 인천시 인구규모 변화추세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아래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천의 인구는 최근 전체 인구에서 5.7%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광역시중 6.5% 비중의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2-2> 1992~2020 인천시의 전국 인구비중 변화추세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인천시의 노인 및 청년인구의 변화

- 아래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이후 인천의 노인인구 비중은 빠르게 커졌으며, 반대로 청년 인구 비중은 빠르게 작아졌음.
- 이러한 인천의 인구 구성 변화를 통해서 인천광역시가 고령사회 대응과 청년 미래도시 지향의 사회·경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 및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음.

<표 2-2> 2008~2020 인천시 노인 및 청년인구 변화 추이

연도	인천광역시 총인구(명)	65세 이상 인구(명)	비중(%)	15~29세 인구(명)	비중(%)
2008	2,692,696	215,860	8.0	604,454	22.4
2009	2,710,579	225,683	8.3	600,889	22.2
2010	2,758,296	237,805	8.6	599,491	21.7
2011	2,801,274	250,528	8.9	595,478	21.3
2012	2,843,981	267,059	9.4	592,655	20.8
2013	2,879,782	282,471	9.8	589,801	20.5
2014	2,902,608	297,951	10.3	588,017	20.3
2015	2,925,815	312,905	10.7	586,759	20.1
2016	2,943,069	324,255	11.0	583,942	19.8
2017	2,948,542	345,024	11.7	576,333	19.5
2018	2,954,642	362,675	12.3	568,500	19.2
2019	2,957,026	384,548	13.0	558,017	18.9
2020	2,942,828	411,483	14.0	541,205	18.4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3) 인천시 지역내총생산(GRDP) 변화

(1) 17개 광역시·도 실질 GRDP 현황(2013~2019)

□ 2019년 기준으로 인천의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87조 6700억 원이었으며, 경기, 서울, 충남, 경남, 경북,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큰 비중(4.7%)을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비중은 2013년 이후 다소 감소한 것임.

<표 2-3> 2013~2019 17개 광역시·도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현황

(단위: 백만원, %)

시도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전국	1,566,633,412	1,660,844,316	1,762,932,983	1,851,763,874
서울특별시 (비중)	354,319,250 22.6	370,167,867 22.3	389,584,629 22.1	411,371,029 22.2
부산광역시 (비중)	77,000,292 4.9	82,701,497 5.0	85,441,974 4.8	88,729,865 4.8
대구광역시 (비중)	49,036,361 3.1	51,822,013 3.1	52,721,214 3.0	54,599,110 2.9
인천광역시 (비중)	75,073,082 4.8	80,137,506 4.8	85,791,563 4.9	87,671,521 4.7
광주광역시 (비중)	32,859,385 2.1	34,845,589 2.1	36,384,616 2.1	39,281,803 2.1
대전광역시 (비중)	35,375,467 2.3	37,162,614 2.2	38,772,485 2.2	40,444,834 2.2
울산광역시 (비중)	72,322,408 4.6	72,854,409 4.4	72,968,962 4.1	72,380,076 3.9
세종특별자치 시 (비중)	6,883,305 0.4	9,261,543 0.6	10,140,164 0.6	11,118,121 0.6
경기도 (비중)	346,430,719 22.1	381,978,306 23.0	426,172,886 24.2	462,406,736 25.0
강원도 (비중)	38,211,948 2.4	40,867,985 2.5	43,761,362 2.5	45,891,953 2.5
충청북도 (비중)	49,519,653 3.2	55,191,633 3.3	61,953,139 3.5	66,974,613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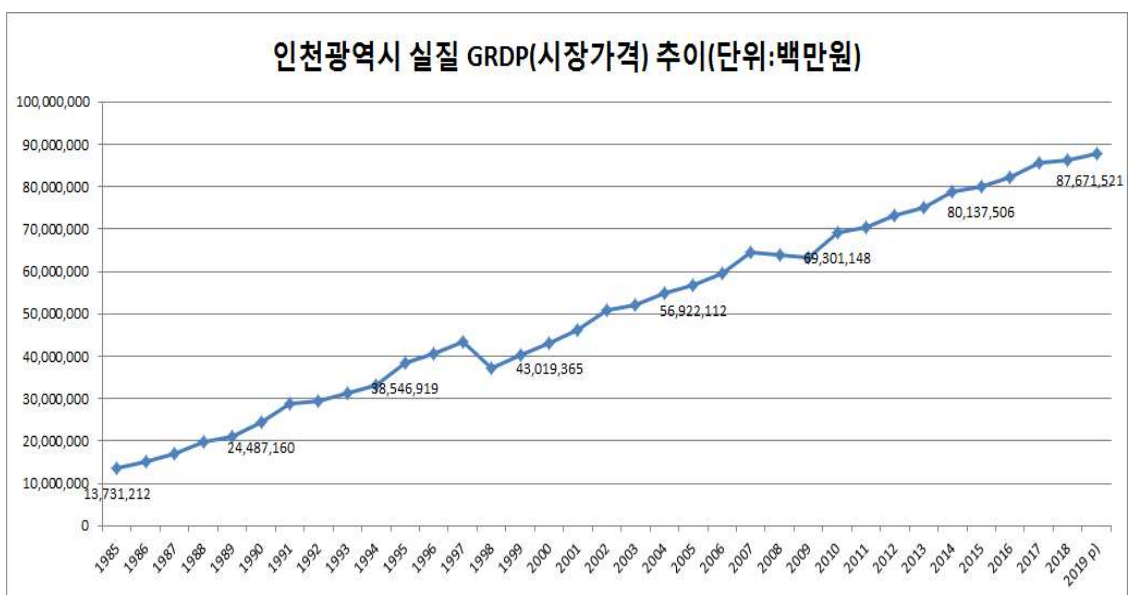
충청남도 (비중)	97,403,497	101,299,131	110,165,655	113,564,245
	6.2	6.1	6.2	6.1
전라북도 (비중)	45,637,671	47,018,028	47,553,099	49,459,526
	2.9	2.8	2.7	2.7
전라남도 (비중)	68,435,908	68,878,376	71,340,179	74,638,452
	4.4	4.1	4.0	4.0
경상북도 (비중)	98,842,637	103,120,174	104,429,785	105,034,691
	6.3	6.2	5.9	5.7
경상남도 (비중)	104,475,348	106,590,936	106,561,346	108,712,745
	6.7	6.4	6.0	5.9
제주특별자치 도 (비중)	14,763,437	16,946,709	19,144,657	19,142,277
	0.9	1.0	1.1	1.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1985~2019년의 인천시 실질GRDP 추세

- 아래 <그림 2-3>과 같이 1985년 이후 인천의 실질 GRDP는 꾸준히 증가해온 가운데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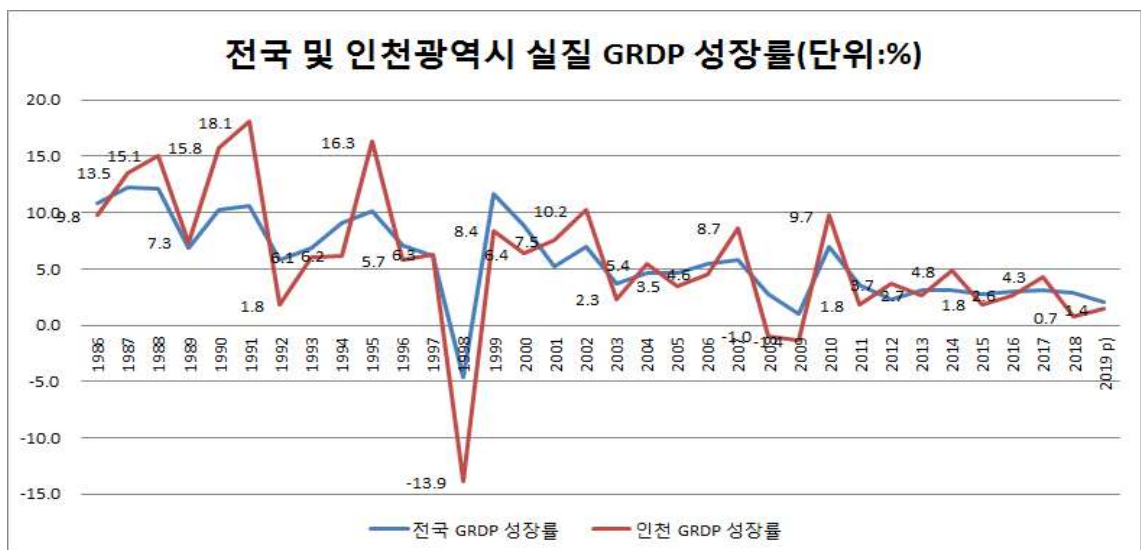
<그림 2-3> 1985~2019 인천시 실질GRDP 추이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그러한 판단은 아래 <그림 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인천의 실질GRDP는 전국 평균에 비해 더 큰 충격을 받았음. 또한 <그림 2-4>를 통해 인천의 지역경제 상황은 전국적 상황과 동일하게 저성장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4> 1985~2019 전국 및 인천시 실질GRDP 성장률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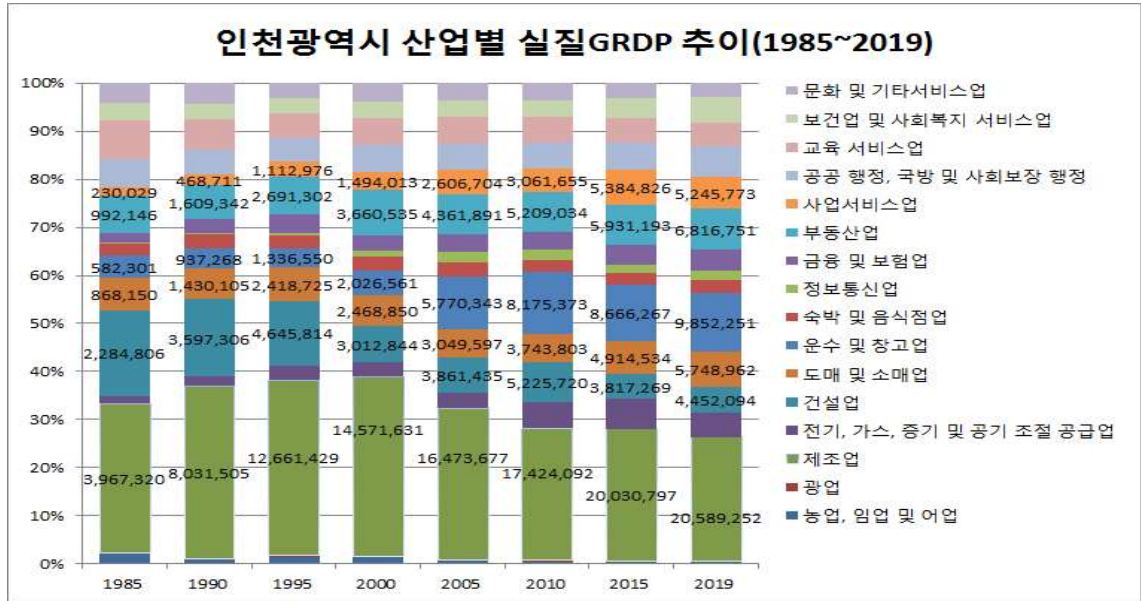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3) 인천시의 산업별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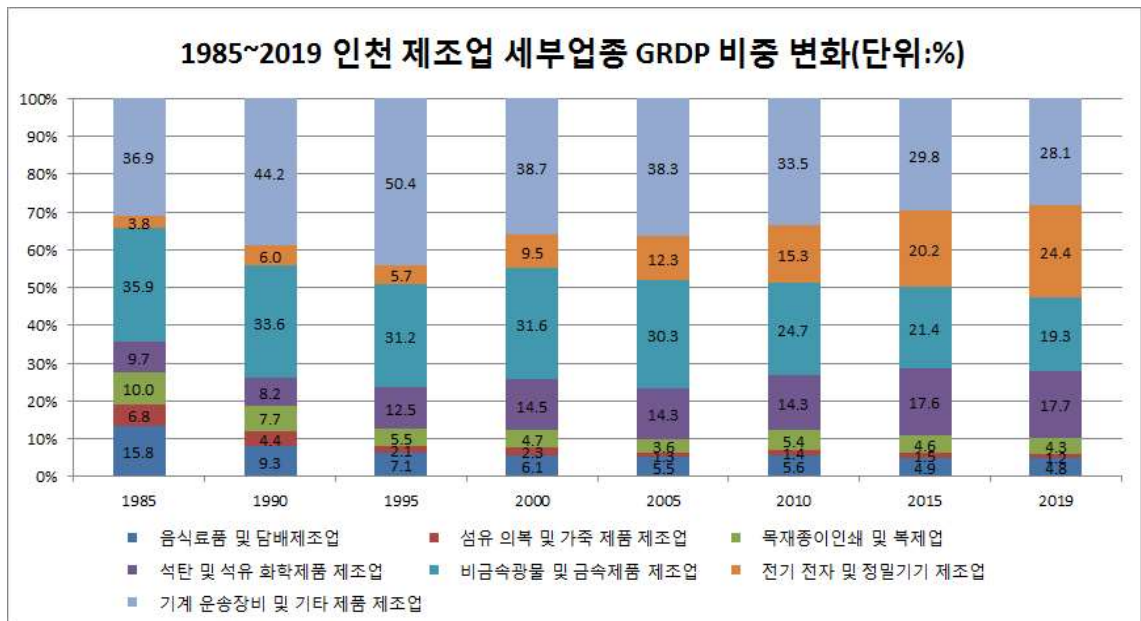
- 아래 <그림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5년~2019년 사이 인천 실질 GRDP의 산업별 비중은 크게 변화했음. 구체적으로 같은 기간 동안 제조업과 건설업의 실질GRDP는 크게 감소했으며, 운수 및 창고업과 사업 서비스업, 전기 가스 등 공급업의 실질GRDP는 눈에 띄게 증가했음.
- 인천의 주력산업이었던 제조업의 실질GRDP 감소는 아래 <그림 2-6>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같은 기간 동안 인천의 제조업은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 석탄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이 성장했지만, 그 성장세가 기계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의 쇠퇴를 뛰어넘지 못한 결과임. 결국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생산이 더 확대되지 않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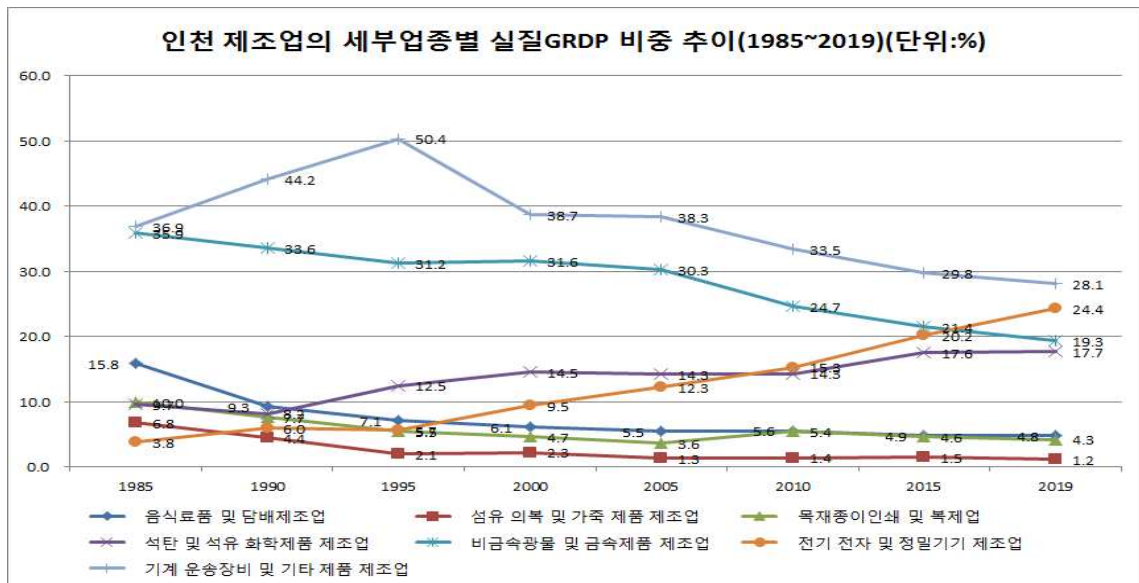
전통 제조업의 생산 감소로 인해 인천 제조업은 계속해서 쇠퇴할 것으로 보임.

<그림 2-5> 1985~2019 인천시의 산업별 실질GRDP 추세



<그림 2-6> 1985~2019 인천 제조업 세부업종 GRDP 비중 변화





(4) 인천 실질GRDP와 주요 경제변수의 상관관계

□ 가설과 추정모형

○ 본 추정은 인천 실질GRDP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작업임. 따라서 본 추정은 두 개의 독립변수를 사용해 검증 가능한 임의적 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했음.

- 인천 실질 GRDP는 인천의 취업자 수가 많을수록 증가함.
- 인천 실질GRDP는 인천 기업에 대한 은행의 기업대출금 규모가 클수록 증가함.

○ 본 추정의 모형을 함수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Y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u$$

- 종속변수(Y) : 인천의 실질GRDP

- 독립변수(X)

- ① 인천의 취업자 수
- ② 인천 예금은행 기업대출금

□ 추정결과

- 아래 <추정결과표>는 본 추정모형인 ‘인천 실질GRDP’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인 ①인천의 취업자 수 ②인천 예금은행 기업대출금에 대한 추정결과임.

<추정결과표>

인천 실질GRDP	선형회귀분석(OLS)	
	추정계수 (표준오차)	t값
인천의 취업자 수	0.0186406** (0.0054524)	3.42
인천 예금은행 기업대출금	0.0002256** (0.0000553)	4.08
상수항	-4.437837 (6.313795)	-0.70
표본수	9	
R-sq	0.9955	
F(2,6)	663.93 Prob > F = 0.0000	

주: **은 5% 유의수준임.

- 추정결과, 독립변수인 ①인천의 취업자 수, ②인천 예금은행 기업대출금은 종속변수인 ‘인천 실질GRDP’과 유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추정결과, 독립변수인 ①인천의 취업자 수, ②인천 예금은행 기업대출금은 종속변수인 ‘인천 실질GRDP’과 유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본 추정은 종속변수인 ‘인천 실질GRDP’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 연구와 추정을 위한 기초적 작업이며, 이후 보다 풍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4) 인천시 기업의 경영지표 현황

(1) 매출액 증가율

□ 아래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2019년 동안 인천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이 증가한 반면 다른 산업은 감소했음.

<표 2-4> 2016~2019 주요산업 인천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현황(단위: %)

주요 세부 산업	2016	2017	2018	2019
C 제조업	-0.41	8.75	1.99	-3.31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0.92	10.90	10.36	0.57
F 건설업	12.01	12.73	5.61	3.31
E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43	12.01	6.80	-1.45
G 도매 및 소매업	6.78	10.53	7.32	4.52
H 운수 및 창고업	7.84	14.00	8.95	5.65
I 숙박 및 음식점업	10.77	25.03	21.48	22.32
J 정보통신업	13.77	9.71	7.35	6.18
L 부동산업	0.42	0.71	-0.22	9.50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4	7.33	3.68	8.96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1.66	4.46	7.71	14.04
P 교육 서비스업	21.68	21.58	16.00	13.32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17	57.33	-18.86	10.16
S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4.06	3.91	22.86	9.36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30.52	27.99	16.16	29.58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 총자본투자효율

- 아래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2019년 동안 인천 기업의 총자본투자효율¹⁾은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을 제외하고 주요 산업에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음.

<표 2-5> 2016~2019 주요산업 인천기업의 총자본투자효율 현황(단위: %)

	2016	2017	2018	2019
C 제조업	16.74	16.79	16.57	15.53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9.18	10.16	9.73	10.51
F 건설업	28.19	32.31	30.34	28.78
G 도매 및 소매업	17.4	16.44	15.22	15.62
H 운수 및 창고업	17.31	16.67	15.44	18.35
I 숙박 및 음식점업	15.12	15.17	17.39	21.32
J 정보통신업	34.69	25.24	24.49	24.62
L 부동산업	4.58	4.8	3.62	3.61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5.79	58.67	39.78	36.56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99.18	111.61	98.4	88.25
P 교육 서비스업	68.87	71.53	71.14	68.23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76	11.37	10	9.65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3) 부가가치율

- 아래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2019년 동안 인천 기업의 부가가치율은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주요 산업에서 정체 하락상황이며, 같은 기간 동안 도매 및 소매업은 크게 하락했음.

1) 기업이 총자본으로 1년동안 어느 정도 부가가치액을 산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임.

〈표 2-6〉 2016~2019 주요산업 인천기업의 부가가치율 현황(단위: %)

	2016	2017	2018	2019
C 제조업	23.32	22.05	21.84	22.23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2.64	40.85	35.89	36.85
F 건설업	33.05	33.9	33.16	32.7
G 도매 및 소매업	43.28	41.29	39.5	35.98
H 운수 및 창고업	49.73	49.45	47.7	48.38
I 숙박 및 음식점업	48.34	46.18	47.24	51.01
J 정보통신업	38.05	39.86	38.13	37.47
L 부동산업	25.96	28.23	22.03	22.45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8.37	59.72	59.78	57.73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67.2	64.59	64	64.03
P 교육 서비스업	51.55	53.62	53	52.38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6.24	41.84	42.14	40.7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5) 인천시의 사업체 수 및 신규 사업자 수 변화

(1) 인천 사업체 수의 종사상 규모별 분포

- ☐ 아래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이후 인천광역시의 사업체 수 증가율은 하락했음. 또한,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사업체수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체의 비중이 98.8%를 차지하고, 1~4명 이하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수의 79%를 차지해 인천의 사업체는 거의 대부분 소규모인 것을 알 수 있음.

〈표 2-7〉 2015~2019 인천시의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개수 및 비중

산업별	종사자규모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체수 (개)	사업체수 (개)	사업체수 (개)	사업체수 (개)	사업체수 (개)
전체	계	186,011	191,566	196,705	202,493	206,244
	증가율(%)		3.0	2.7	2.9	1.9
1~4명	사업체수(개)	148,970	152,932	156,735	160,416	162,876
	비중(%)	80.1	79.8	79.7	79.2	79.0
5~9명	사업체수(개)	21,446	22,482	23,599	25,080	25,979
	비중(%)	11.5	11.7	12.0	12.4	12.6
10~19명	사업체수(개)	8,372	8,928	9,000	9,443	9,684
	비중(%)	4.5	4.7	4.6	4.7	4.7
20~49명	사업체수(개)	4,833	4,871	4,986	5,129	5,219
	비중(%)	2.6	2.5	2.5	2.5	2.5
50~99명	사업체수(개)	1,543	1,505	1,542	1,547	1,606
	비중(%)	0.8	0.8	0.8	0.8	0.8
100~299명	사업체수(개)	688	678	668	712	712
	비중(%)	0.4	0.4	0.3	0.4	0.3
300~499명	사업체수(개)	81	84	91	76	72
	비중(%)	0.0	0.0	0.0	0.0	0.0
500~999명	사업체수(개)	50	61	56	55	63
	비중(%)	0.0	0.0	0.0	0.0	0.0
1000명 이상	사업체수(개)	28	25	28	35	33
	비중(%)	0.0	0.0	0.0	0.0	0.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인천시 신규 사업자 수 변화

- 아래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천은 2017년 이후 신규사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양상은 전국적인 것으로 확인됨.

〈표 2-8〉 2015~2019 시도별 신규사업자 현황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신규사업자 (명)	1,191,009	1,226,443	1,284,589	1,372,895	1,316,360
	증가율(%)		3.0	4.7	6.9	-4.1
서울	신규사업자 (명)	252,462	249,732	256,827	295,806	269,837
	증가율(%)		-1.1	2.8	15.2	-8.8
인천	신규사업자 (명)	64,776	70,518	77,091	80,699	81,238
	증가율(%)		8.9	9.3	4.7	0.7
경기	신규사업자 (명)	307,818	330,057	352,316	386,993	369,661
	증가율(%)		7.2	6.7	9.8	-4.5
강원	신규사업자 (명)	32,536	35,552	36,349	37,140	36,296
	증가율(%)		9.3	2.2	2.2	-2.3
대전	신규사업자 (명)	31,973	32,052	32,597	33,585	34,352
	증가율(%)		0.2	1.7	3.0	2.3
충북	신규사업자 (명)	34,786	35,465	35,492	36,721	37,799
	증가율(%)		2.0	0.1	3.5	2.9
충남	신규사업자 (명)	47,037	47,614	51,071	52,743	52,298
	증가율(%)		1.2	7.3	3.3	-0.8
세종	신규사업자 (명)	9,513	9,846	10,679	10,087	9,219
	증가율(%)		3.5	8.5	-5.5	-8.6
광주	신규사업자 (명)	33,400	32,734	34,037	36,367	35,774
	증가율(%)		-2.0	4.0	6.8	-1.6
전북	신규사업자 (명)	38,264	37,984	46,041	49,285	45,004
	증가율(%)		-0.7	21.2	7.0	-8.7
전남	신규사업자 (명)	37,484	38,556	43,553	46,501	43,914
	증가율(%)		2.9	13.0	6.8	-5.6
대구	신규사업자 (명)	51,751	51,383	51,258	52,240	52,662
	증가율(%)		-0.7	-0.2	1.9	0.8
경북	신규사업자 (명)	55,533	56,471	58,109	58,404	57,459
	증가율(%)		1.7	2.9	0.5	-1.6

부산	신규사업자 (명)	74,458	74,899	76,903	77,209	75,887
	증가율(%)		0.6	2.7	0.4	-1.7
울산	신규사업자 (명)	24,307	25,260	25,264	23,522	23,360
	증가율(%)		3.9	0.0	-6.9	-0.7
경남	신규사업자 (명)	74,674	76,301	74,848	72,957	71,085
	증가율(%)		2.2	-1.9	-2.5	-2.6
제주	신규사업자 (명)	20,237	22,019	22,154	22,636	20,515
	증가율(%)		8.8	0.6	2.2	-9.4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한편, 아래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기준으로 인천의 신규 사업자 비중이 큰 군구는 서구, 남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2-9> 2017~2019 인천 군구별 신규사업자 수 및 비중

군구별	2017		2018		2019	
	신규사업자 (명)	비중 (%)	신규사업자 (명)	비중 (%)	신규사업자 (명)	비중 (%)
소계	77,091		80,699		81,238	
강화군	1,783	2.3	1,977	2.4	1,817	2.2
계양구	5,815	7.5	6,021	7.5	6,137	7.6
남동구	12,645	16.4	12,929	16.0	12,559	15.5
동구	1,742	2.3	1,538	1.9	1,537	1.9
미추홀구	12,050	15.6	9,989	12.4	10,527	13.0
부평구	10,529	13.7	11,147	13.8	11,697	14.4
서구	14,752	19.1	15,987	19.8	17,476	21.5
연수구	9,452	12.3	11,396	14.1	10,738	13.2
옹진군	490	0.6	474	0.6	584	0.7
중구	7,833	10.2	9,241	11.5	8,166	10.1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6) 인천시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고용형태

(1) 인천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 2020년 기준으로 인천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양호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됨.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및 15~64세 고용률 모두 광역시 중 가장 높아 양적 측면에서 인천의 고용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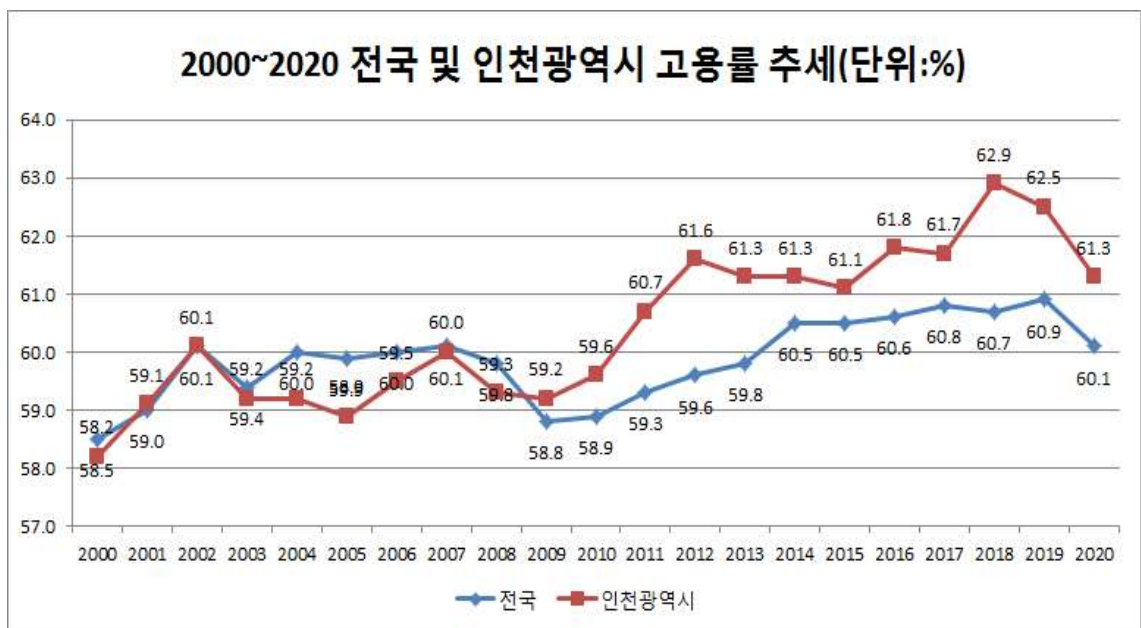
<표 2-10> 2020년 인천시 및 전국 시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시도별	2020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15-64세 고용률(%)
계	62.5	60.1	65.9
서울특별시	62.1	59.3	65.9
부산광역시	58.1	55.6	62.9
대구광역시	58.9	56.6	63.0
인천광역시	64.2	61.3	66.9
광주광역시	61.0	58.7	63.8
대전광역시	63.4	60.7	66.2
울산광역시	60.7	58.1	62.9
세종특별자치시	64.5	62.7	66.3
경기도	62.8	60.3	65.9
강원도	63.3	60.8	67.0
충청북도	65.3	63.2	69.0
충청남도	64.6	62.4	67.8
전라북도	61.5	59.9	64.6
전라남도	65.4	63.9	69.1
경상북도	63.7	61.1	66.4
경상남도	63.1	60.6	65.5
제주도	68.8	67.1	70.7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이러한 양상은 아래 <그림 2-7>에서도 확인됨. 2000~2020년 동안의 인천 고용률은 2003~2007년 기간을 제외하고 전국 평균을 상회했으며, 2009년 이후 그 상회 폭이 커졌음. 하지만 인천의 고용률은 2018년 이후 전국 평균 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2-7> 2000~2020 전국 및 인천시 고용률 추세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인천의 종사상지위별 종사자수와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변화

□ 아래 <표 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천의 상용종사자는 다소 줄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7년~2019년 기간 동안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종사자수가 약 6천명 정도 감소한 가운데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비중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도매 및 소매업은 종사자수가 증가한 가운데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중이 증가했음. 사업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은 종사자 수가 증가한 가운데 상용종사자 비중은 줄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중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음.

<표 2-11> 2017~2019 인천시 산업별 종사상지위별 종사자수

산업별	종사상지위별	2017		2018		2019	
		인원(명)	비중(%)	인원(명)	비중(%)	인원(명)	비중(%)
전체 산업	계	1,034,344		1,070,454		1,092,494	
	자영업자,무급가족	193,866	18.7	197,447	18.4	200,412	18.3
	상용종사자	679,472	65.7	706,128	66.0	712,771	65.2
	임시 및 일용근로자	115,122	11.1	120,948	11.3	128,477	11.8
	기타종사자	45,884	4.4	45,931	4.3	50,834	4.7
제조업 (10~34)	계	250,329		247,361		244,352	
	자영업자,무급가족	20,941	8.4	20,366	8.2	20,295	8.3
	상용종사자	215,413	86.1	212,783	86.0	210,455	86.1
	임시 및 일용근로자	12,892	5.2	12,972	5.2	12,261	5.0
	기타종사자	1,083	0.4	1,240	0.5	1,341	0.5
건설업 (41~42)	계	51,119		55,565		56,774	
	자영업자,무급가족	4,422	8.7	4,619	8.3	4,680	8.2
	상용종사자	23,223	45.4	24,979	45.0	25,770	45.4
	임시 및 일용근로자	21,740	42.5	23,634	42.5	24,174	42.6
	기타종사자	1,734	3.4	2,333	4.2	2,150	3.8
도매 및 소매업 (45~47)	계	143,663		146,626		147,971	
	자영업자,무급가족	49,334	34.3	49,600	33.8	49,640	33.5
	상용종사자	69,270	48.2	72,075	49.2	71,332	48.2
	임시 및 일용근로자	15,143	10.5	16,172	11.0	16,986	11.5
	기타종사자	9,916	6.9	8,779	6.0	10,013	6.8
운수 및 창고업 (49~52)	계	76,998		84,685		83,113	
	자영업자,무급가족	22,279	28.9	24,057	28.4	24,721	29.7
	상용종사자	45,537	59.1	51,976	61.4	49,335	59.4
	임시 및 일용근로자	3,654	4.7	3,176	3.8	3,423	4.1
	기타종사자	5,528	7.2	5,476	6.5	5,634	6.8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계	104,921		111,297		114,801	
	자영업자,무급가족	48,146	45.9	48,770	43.8	50,261	43.8
	상용종사자	31,610	30.1	34,561	31.1	35,316	30.8
	임시 및 일용근로자	24,199	23.1	27,122	24.4	28,509	24.8
	기타종사자	966	0.9	844	0.8	715	0.6
사업시설	계	46,653		47,082		51,649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74~76)	자영업자,무급가족	1,796	3.8	1,862	4.0	1,936	3.7
	상용종사자	38,247	82.0	38,431	81.6	40,182	77.8
	임시 및 일용근로자	4,764	10.2	4,525	9.6	5,909	11.4
	기타종사자	1,846	4.0	2,264	4.8	3,622	7.0
교육 서비스업 (85)	계	72,855		73,735		76,559	
	자영업자,무급가족	7,140	9.8	7,419	10.1	7,507	9.8
	상용종사자	52,848	72.5	53,762	72.9	54,805	71.6
	임시 및 일용근로자	7,428	10.2	7,420	10.1	9,274	12.1
	기타종사자	5,439	7.5	5,134	7.0	4,973	6.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계	95,218		101,680		109,265	
	자영업자,무급가족	6,089	6.4	5,944	5.8	5,983	5.5
	상용종사자	75,671	79.5	80,545	79.2	85,110	77.9
	임시 및 일용근로자	10,025	10.5	11,028	10.8	11,028	10.1
	기타종사자	3,433	3.6	4,163	4.1	7,144	6.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한편 아래 <표 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천의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은 2017~2019년에 증가했으며 2020년에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 인천시 임금근로자의 정규직/비정규직 규모 현황

	구분	인원(천명)	비중(%)
2017. 08	임금근로자	1,228	
	정규직	842	68.6
	비정규직	386	31.4
2018. 08	임금근로자	1,261	
	정규직	857	68.0
	비정규직	404	32.0
2019. 08	임금근로자	1,272	
	정규직	802	63.1
	비정규직	470	36.9
2020. 08	임금근로자	1,285	
	정규직	840	65.4
	비정규직	445	34.6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이렇게 종사상지위별 종사자수 비중과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의 변화를 볼 때 인천의 고용상황은 양적 측면과 달리 질적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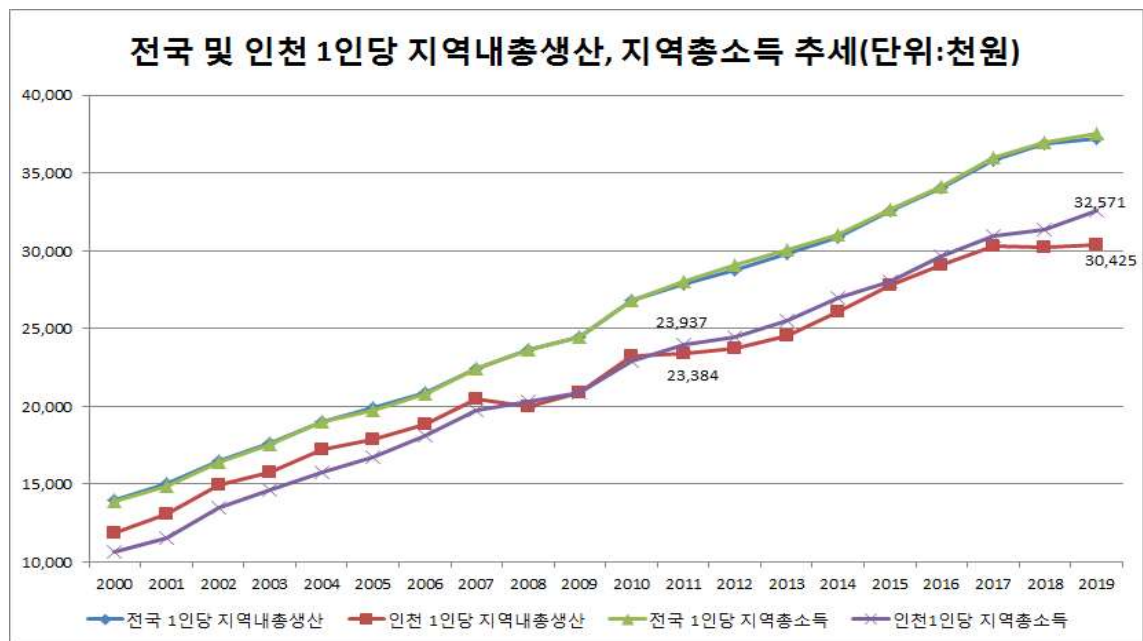
7) 인천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1인당 지역총소득

(1) 인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1인당 총소득 추세

- 아래 <그림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천의 1인당 GRDP 및 지역총소득은 2000년~2019년 동안 전국 평균과 거의 같은 속도로 증가했음.

- 특히, 인천의 1인당 GRDP 및 지역총소득은 2010년을 분기점으로 1인당 지역총소득이 1인당 GRDP보다 커지기 시작했음. 결국 2010년부터 인천 외부로부터 소득이 순유입된 것이며, 2017년 이후 1인당 지역총소득과 1인당 GRDP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있음.

<그림 2-8> 2000~2019 전국 및 인천 1인당 GRDP 및 지역총소득 추세



(2) 인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1인당 지역총소득 비교

- 1인당 지역총소득은 지역 외부로부터 소득이 순유입되는 경우 1인당 지역내총생산보다 크고, 지역 외로 소득이 순유출되는 경우 1인당 지역내총생산보다 작음.
- 아래 <표 2-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도에 인천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2번째로 크고, 1인당 지역총소득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9번째로 컸음. 인천 내로 순유입된 소득이 있음을 나타내는 순위이지만 수도권 입지,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저조한 금액과 순위인 것으로 판단됨.

<표 2-13> 2019년 시도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1인당 지역총소득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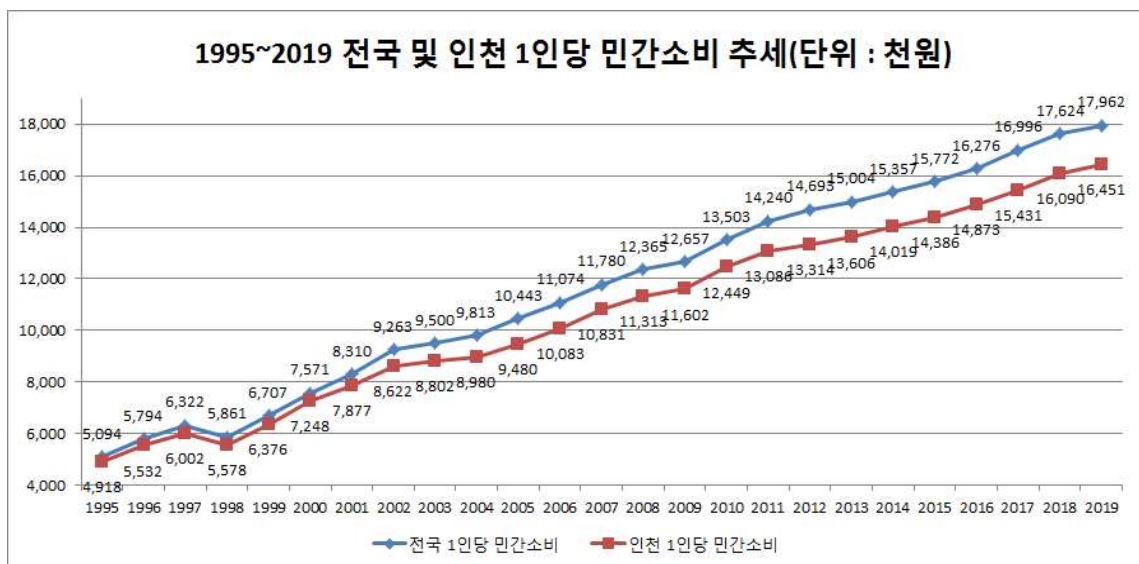
시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		1인당 지역총소득	
	금액(천원)	순위	금액(천원)	순위
전국	37,208		37,530	
서울특별시	44,865	3	49,121	2
부산광역시	27,409	16	29,388	15
대구광역시	23,744	17	27,798	17
인천광역시	30,425	12	32,571	9
광주광역시	27,548	15	30,964	12
대전광역시	28,364	14	31,548	11
울산광역시	65,352	1	54,969	1
세종특별자치시	35,826	8	36,983	5
경기도	36,133	7	38,466	4
강원도	32,061	10	29,392	14
충청북도	42,653	5	34,484	8
충청남도	52,402	2	40,953	3
전라북도	28,740	13	28,260	16
전라남도	43,323	4	35,532	6
경상북도	40,272	6	34,873	7
경상남도	33,690	9	32,140	10
제주특별자치도	30,720	11	30,834	13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8) 인천시의 1인당 민간소비

- 아래 <그림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천의 1인당 민간소비는 2001년까지 전국 1인당 민간소비와 같은 속도로 증가했으나 2002년부터 전국 평균에 비해 증가속도가 점차 감소했음. 때문에 전국 평균과 인천의 1인당 민간소비는 그 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음.

<그림 2-9> 1995~2019 전국 및 인천 1인당 민간소비 추세



9) 소결

- 인천 지역경제는 지역내총생산(GRDP) 추세에서 알 수 있듯이 저성장 체제로 진입해있으며,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했던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신성장산업의 등장이 지체되면서 고용, 소득, 소비 추세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 또한 인천 지역경제는 소규모 사업체가 주도하고 있는 경제구조이며, 양적측면에서 양호한 고용상황과 질적 측면에서 불안정한 고용구조가 교차하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또한, 인구 구조가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라는 이중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경제주체들의 구조적 특징과 주체적 여건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역경제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함.

- 특히 인천 지역경제의 추세 상황을 볼 때 이러한 특징과 약점이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에는 시 정책당국과 전문가, 시민들의 참여와 협치를 통해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관점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의 발전방향과 발전 경로에 대한 탐색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토대로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지역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함.

3. 인천시 소상공인 금융배제 현황의 개괄

1) 인천시의 소상공인 현황

(1) 소상공인 기업 수 현황

① 시도별 소상공인 기업 수

□ 2018년 기준으로 산업별 대분류(10차)에 따른 우리나라의 전체 기업 수는 6,643,756개이며, 이중 소상공인 기업 수는 6,199,980개(93.3%)임. 이를 시도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인천은 전체 기업 수 340,339개중 소상공인 기업 수가 318,288개(93.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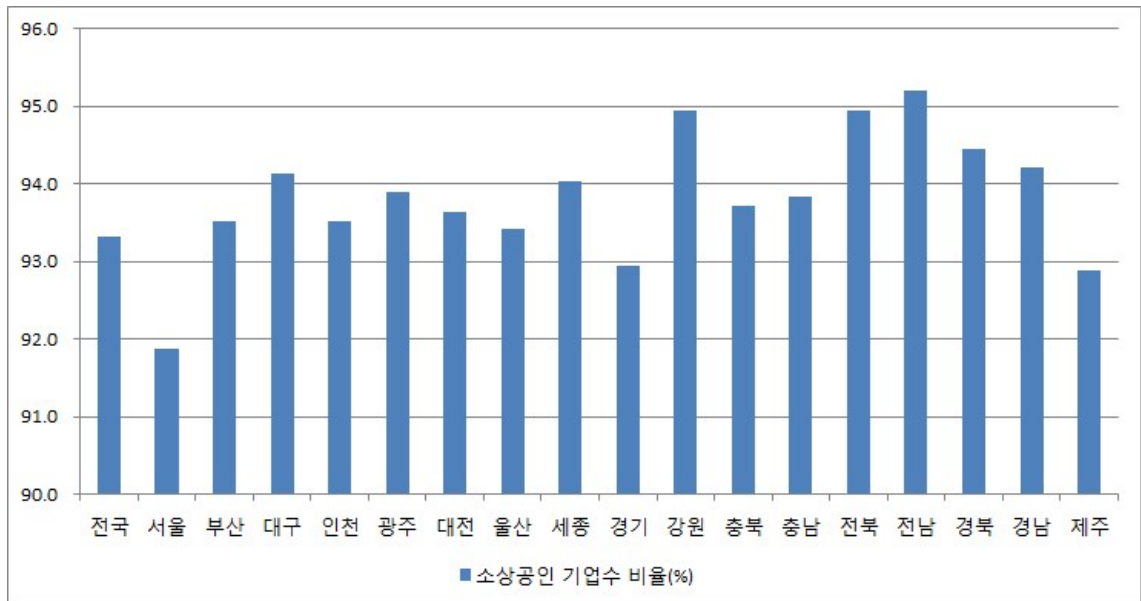
<표 3-1> 2018년도 시도별·기업규모별 기업 수(단위: 개)

지역별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전국	6,643,756	6,199,980	340,885	97,829	5,062
서울	1,436,350	1,319,534	83,420	31,092	2,304
부산	431,469	403,490	21,300	6,412	267
대구	303,792	285,964	14,017	3,707	104
인천	340,339	318,288	16,991	4,878	182
광주	175,322	164,637	8,186	2,391	108
대전	172,594	161,610	8,876	2,046	62
울산	125,446	117,201	6,556	1,595	94
세종	31,094	29,239	1,438	390	27
경기	1,615,256	1,501,152	88,035	25,068	1,001
강원	203,605	193,309	8,759	1,482	55
충북	196,844	184,487	9,778	2,458	121
충남	266,537	250,133	13,028	3,180	196
전북	238,455	226,394	9,911	2,063	87
전남	247,029	235,200	9,717	2,024	88
경북	337,055	318,365	15,246	3,297	147
경남	417,518	393,398	19,483	4,450	187
제주	105,051	97,579	6,144	1,296	32

*출처 : 중소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시도별·산업별·기업규모별 기업수’

- 이러한 인천의 소상공인 기업 수 비율은 전국 비율(93.3%)보다 약간 높으며, 특히 수도권을 이루는 서울(91.9%), 경기(92.9%)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2018년도 전산업 시도별 소상공인 기업 수 비율(단위: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시도별·산업별·기업규모별 기업수’

② 인천의 소상공인 기업 수 변화 및 산업별 분포

- 인천의 소상공인 기업 수 비율은 전체 기업 수 가운데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최근 몇 년간 거의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2015~2018년도 인천의 전산업 기업규모별 기업 수 비율을 보면, 인천의 대기업과 중기업 기업 수 비율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며, 소기업 기업 수는 약 5%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으며, 소상공인 기업 수는 약 93.5%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2〉 2015~2018 인천의 전산업 기업규모별 기업 수 비율(단위: 명, %)

연도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기업수 (개)	비율 (%)	기업수 (개)	비율 (%)	기업수 (개)	비율 (%)	기업수 (개)	비율 (%)
2015	299,803	280,070	93.4	15,635	5.2	3,931	1.3	167	0.06
2016	311,006	290,843	93.5	15,764	5.1	4,229	1.4	170	0.05
2017	321,871	300,933	93.5	16,198	5.0	4,561	1.4	179	0.06
2018	340,339	318,288	93.5	16,991	5.0	4,878	1.4	182	0.05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시도별·산업별·기업규모별 기업수’, 재구성									

② 인천의 소상공인 기업 수 변화 및 산업별 분포

□ 또한, 아래의 인천 소상공인 기업 수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인천 소상공인 기업 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24.9%)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부동산업(18.8%), 운수 및 창고업(11.4%), 숙박 및 음식점업(10.8%), 제조업(8.9%), 건설업(6.8%)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소상공인 기업 수 비중이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인천 산업 전체가 소상공인 기업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됨.

〈표 3-3〉 2018년도 인천 소상공인 기업 수의 산업별 분포

지역별	산업별(10차)대분류	2018			
		전체	소상공인 기업수 (개)	소상공인 기업수의 산업별 비율(%)	산업별 소상공인 기업수 비율(%)
인천	전산업	340,339	318,288		93.5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1,800	1,760	0.6	97.8
	B. 광업(05~08)	34	24	0.0	70.6
	C. 제조업(10~34)	33,295	28,207	8.9	84.7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309	297	0.1	96.1
	E.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36~39)	599	345	0.1	57.6
	F. 건설업(41~42)	22,940	21,509	6.8	93.8
	G. 도매 및 소매업(45~47)	84,682	79,372	24.9	93.7
	H. 운수 및 창고업(49~52)	36,912	36,368	11.4	98.5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37,414	34,450	10.8	92.1
	J. 정보통신업(58~63)	4,202	3,912	1.2	93.1

	K. 금융 및 보험업(64~66)	1,834	1,729	0.5	94.3
	L. 부동산업(68)	60,595	59,839	18.8	98.8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X	6,800	2.1	#VALUE!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X	7,033	2.2	#VALUE!
	P. 교육 서비스업(85)	X	9,644	3.0	#VALUE!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X	1,740	0.5	#VALUE!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7,842	7,635	2.4	97.4
	S.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18,364	17,624	5.5	96.0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 시도별 · 산업별 · 기업규모별 기업수 ’, 재구성					

(2) 소상공인 종사자수 현황

① 시도별 소상공인 종사자수

- 2018년 기준으로 산업별 대분류(10차)에 따른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 종사자 수는 20,591,641명이며, 이중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8,969,291명(43.6%)임. 이를 시도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인천은 전체 종사자 950,728명 중 소상공인 종사자수가 461,459명(48.5%)임.

〈표 3-4〉 2018년도 시도별 · 기업규모별 종사자수(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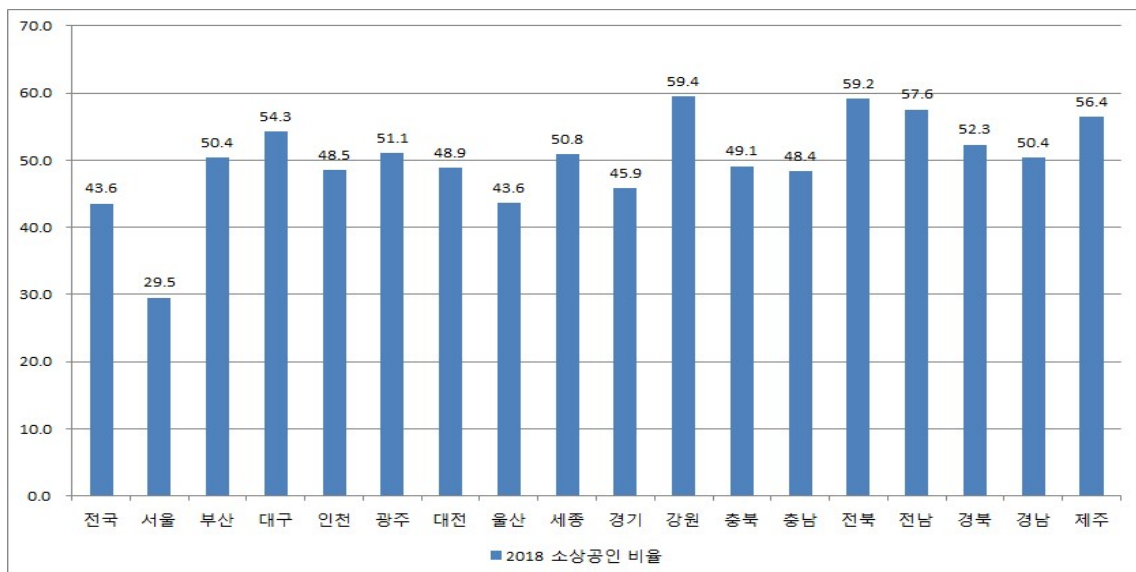
시도별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전국	20,591,641	8,969,291	4,278,394	3,856,253	3,487,703
서울	6,285,940	1,855,681	928,500	1,348,499	2,153,260
부산	1,173,936	591,432	261,383	237,369	83,752
대구	777,392	421,806	174,968	137,027	43,591
인천	950,728	461,459	224,199	172,395	92,675
광주	463,052	236,452	100,129	96,199	30,272
대전	473,667	231,706	106,607	92,039	43,315
울산	383,478	167,316	106,509	63,416	46,237
세종	78,148	39,730	16,597	12,929	8,892
경기	4,840,947	2,220,307	1,129,169	896,227	595,244
강원	468,785	278,658	100,678	57,015	32,434
충북	548,806	269,427	138,281	105,673	35,425

충남	747,333	361,430	183,468	133,891	68,544
전북	537,014	317,890	125,690	72,553	20,881
전남	576,629	331,904	129,300	80,294	35,131
경북	893,772	467,526	211,011	129,444	85,791
경남	1,145,747	577,591	279,165	188,923	100,068
제주	246,267	138,976	62,740	32,360	12,191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시도별·산업별·기업규모별 종사자수’

□ 이러한 인천의 소상공인 종사자수 비율은 전국 비율(43.6%)보다 높으며, 특히 수도권을 이루는 서울(29.5%), 경기(45.9%)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3-2> 2018년도 전 산업 시도별 소상공인 종사자 비율(단위: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시도별·산업별·기업규모별 종사자수’

② 인천의 소상공인 종사자수 변화 및 산업별 분포

□ 인천의 소상공인 종사자수 비율은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음. 아래의 2015~2018년도 인천의 전 산업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비율을 보면, 인천의 대기업 종사자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중기업 종사자수는 미세하게 증가한 반면 소기업 종사자수는 약 2%p 감소하고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약 2%p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3-5> 2015~2018 인천의 전산업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비율(단위: 명, %)

연도	전체 규모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종사자수 (명)	종사자수 (명)	비율 (%)	종사자수 (명)	비율 (%)	종사자수 (명)	비율 (%)	종사자수 (명)	비율 (%)
2015	878,954	412,167	46.9	227,033	25.8	153,195	17.4	86,559	9.8
2016	894,555	423,244	47.3	224,606	25.1	161,536	18.1	85,169	9.5
2017	919,822	438,348	47.7	224,329	24.4	165,972	18.0	91,173	9.9
2018	950,728	461,459	48.5	224,199	23.6	172,395	18.1	92,675	9.7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 시도별 · 산업별 ·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									

□ 또한, 아래의 인천 소상공인 종사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인천 소상공인 종사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 (24.0%)이었으며, 다음으로 제조업(15.9%), 부동산업(13.8%), 숙박 및 음식점업(12.7%), 운수 및 창고업(9.1%), 건설업(8.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산업별로 부동산업, 농림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및 창고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 소상공인 종사자수 비중이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산업의 영세성을 짐작케 함.

<표 3-6> 2018년도 인천 소상공인 종사자의 산업별 분포

지역별	산업별(10차)대분류	2018			
		전체	소상공인 종사자수(명)	소상공인 종사자의 산업별 비율(%)	산업별 소상공인 종사자 비율(%)
인천	전산업	950,728	461,459	100.0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2,319	1,927	0.4	83.1
	B. 광업(05~08)	339	39	0.0	11.5
	C. 제조업(10~34)	281,998	73,190	15.9	26.0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926	317	0.1	34.2
	E. 수도,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36~39)	5,454	619	0.1	11.3
	F. 건설업(41~42)	81,287	36,742	8.0	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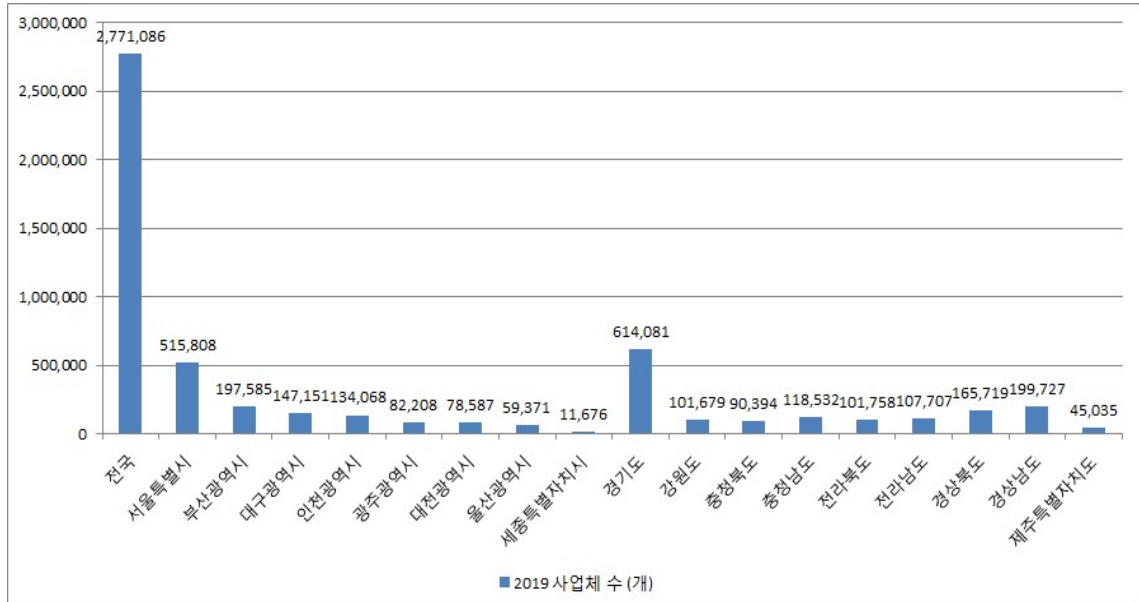
	G. 도매 및 소매업(45~47)	160,813	110,524	24.0	68.7
	H. 운수 및 창고업(49~52)	76,445	42,041	9.1	55.0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87,073	58,633	12.7	67.3
	J. 정보통신업(58~63)	10,540	4,816	1.0	45.7
	K. 금융 및 보험업(64~66)	5,089	1,996	0.4	39.2
	L. 부동산업(68)	70,260	63,467	13.8	90.3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X	9,752	2.1	#VALUE!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X	9,034	2.0	#VALUE!
	P. 교육 서비스업(85)	X	12,059	2.6	#VALUE!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X	5,008	1.1	#VALUE!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13,745	9,947	2.2	72.4
	S.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30,272	21,348	4.6	70.5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 시도별 · 산업별 ·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					

2) 인천시의 소상공인 경영환경

(1) 산업중분류별 소상공인 사업체 수 및 매출액

- 2019년 기준으로 산업중분류별에 따른 전국의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약 277만개이며, 경기도 614천개, 서울 515천개, 경남 199천개, 부산 197천개, 경북 165천개, 대구 147천개, 인천 134천개 순으로 지역에 분포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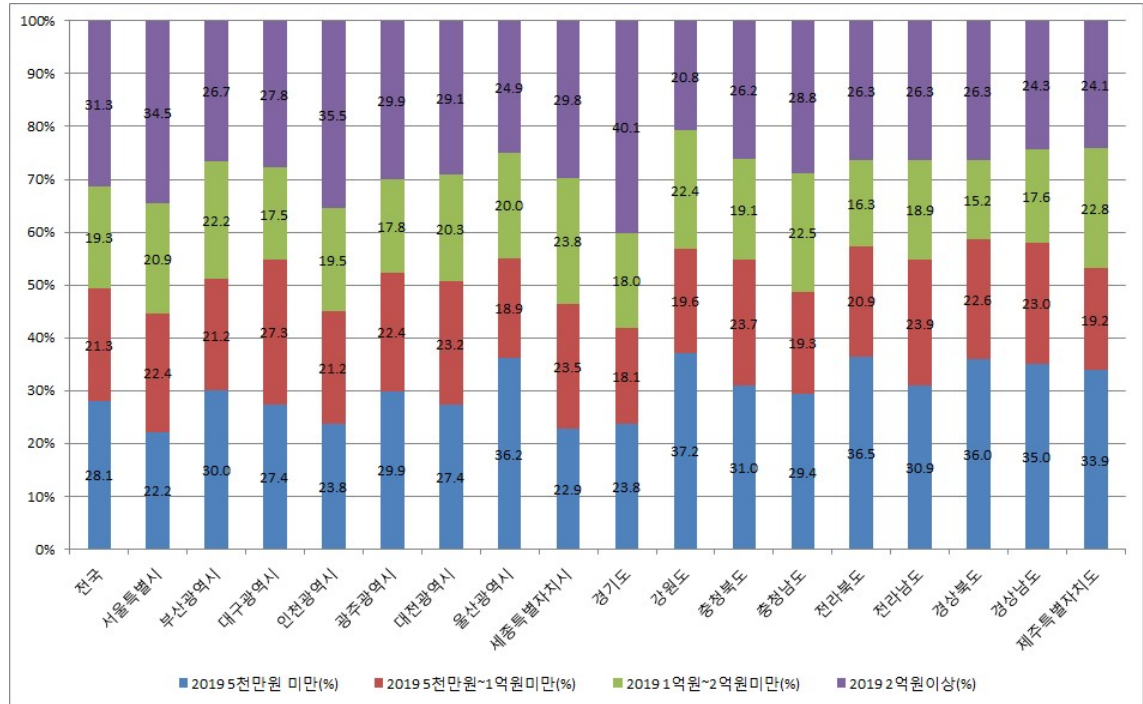
<그림 3-3> 2019년도 시도별, 산업중분류별 소상공인 사업체 수(단위: 개)



*출처 : 통계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실태조사」

- 2019년 기준으로 산업중분류별에 따른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의 매출 구간별의 비율을 보면, 연 매출 2억원 이상이 31.3%, 5천만원 미만이 28.1%, 5천만원~1억원미만(%)이 21.3%, 1억원~2억원미만(%)이 19.3%으로 나타남.
- 인천의 경우 연 매출 2억원 이상이 35.5%로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높고, 5천만원 미만이 23.8%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그리고 5천만원~1억원미만(%)이 21.2%, 1억원~2억원미만(%)이 19.5%로 이들 두 매출액 구간은 전국 평균과 거의 비슷함.

<그림 3-4> 2019년도 시도별 산업중분류별 소상공인 사업체 매출구간 비율



*출처 : 통계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실태조사」

□ 2018~2019년도 인천의 산업중분류별 소상공인 매출액을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순으로 매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전국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인천은 도매 및 소매업의 매출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제조업의 매출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3-7> 2019년도 인천 산업중분류별 소상공인 매출액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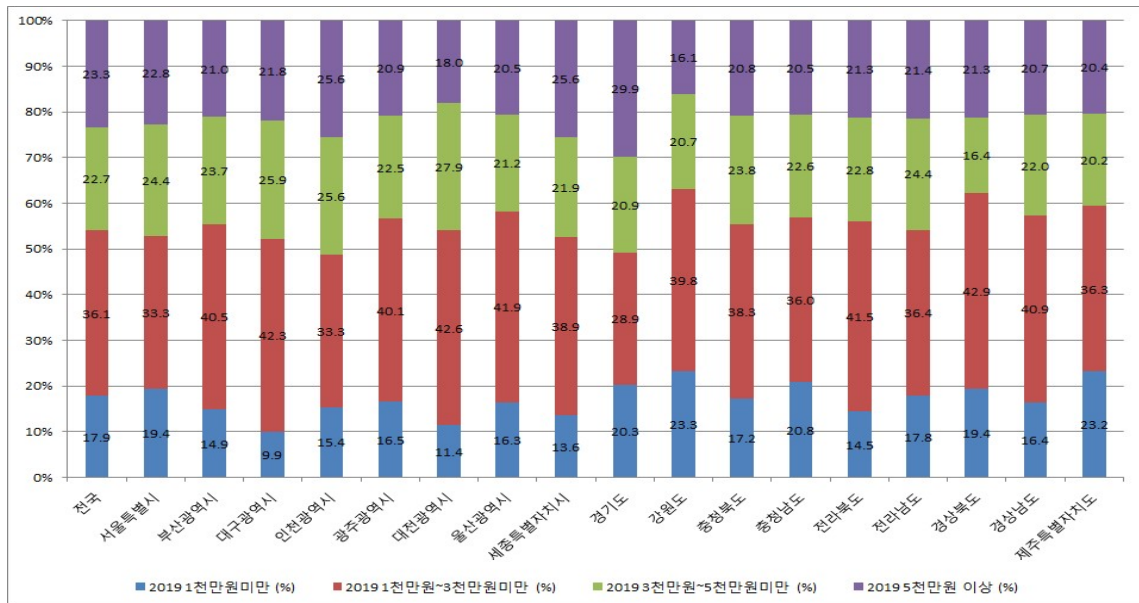
산업별	2019(전국)		2019(인천)	
	총 매출액 (백만원)	비율(%)	총 매출액 (백만원)	비율(%)
전산업	650,424,913	100	34,338,575	100
제조업	154,005,356	23.7	9,846,495	28.7
건설업	51,874,146	8.0	2,523,907	7.4
도매 및 소매업	306,428,325	47.1	15,108,189	44.0
숙박 및 음식점업	79,882,616	12.3	4,147,288	12.1

정보통신업	4,765,506	0.7	98,182	0.3
부동산업	8,112,978	1.2	380,031	1.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8,391,360	1.3	271,586	0.8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350,832	1.1	346,824	1.0
교육 서비스업	8,669,054	1.3	457,642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678,569	1.0	414,928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4,266,171	2.2	743,503	2.2
*출처 : 통계청,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실태조사」				

(2) 산업중분류별 소상공인 영업이익

- 2019년 기준으로 산업중분류별에 따른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의 영업이익 구간의 비율을 보면, 연간 영업이익 1천만원~3천만원미만(%)이 36.1%, 5천만원 이상(%)이 23.3%, 3천만원~5천만원미만(%)이 22.7%, 1천만원 미만(%)이 17.9%였음.
- 인천의 경우 연간 영업이익 1천만원~3천만원미만(%)이 33.3%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며, 5천만원 이상(%)과 3천만원~5천만원미만(%)은 25.6%였고, 1천만원 미만(%)이 15.4%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음. 특히, 연간 영업이익 5천만원 이상의 비중은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높았으며, 1천만원 미만(%)의 경우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비중이 낮았음.

〈그림 3-5〉 2019년도 시도별 산업중분류별 소상공인 사업체 영업이익
구간 비율(단위: %)



*출처 : 통계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실태조사」

□ 2018~2019년도 인천의 산업중분류별 소상공인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건설업 순으로 영업이익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전국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인천은 제조업의 영업이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숙박 및 음식점업의 영업이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3-8〉 2019년도 인천 산업중분류별 소상공인 영업이익 및 비율

산업별		2019(전국)		2019(인천)	
		영업이익 (백만원)	비율(%)	영업이익 (백만원)	비율(%)
전산업		90,993,305	100	4,638,302	100
제조업		18,844,219	20.7	1,221,075	26.3
	식료품 제조업	1,486,456	1.6	36,754	0.8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940,980	1.0	19,879	0.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768,642	0.8	15,353	0.3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82,493	0.2	4,530	0.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293,640	0.3	24,138	0.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70,326	0.5	16,568	0.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741,241	0.8	26,499	0.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438,628	0.5	22,090	0.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362,585	1.5	80,865	1.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80,140	0.6	11,961	0.3
	1차 금속 제조업	510,741	0.6	47,37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4,170,180	4.6	357,964	7.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69,239	0.5	97,854	2.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707,293	0.8	38,721	0.8
	전기장비 제조업	1,334,003	1.5	93,504	2.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400,752	2.6	222,096	4.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89,826	0.5	22,206	0.5
	가구 제조업	401,661	0.4	37,560	0.8
	기타 제품 제조업	652,195	0.7	24,648	0.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443,200	0.5	20,511	0.4
건설업		3,465,768	3.8	218,946	4.7
	종합건설업	327,060			
	전문직별 공사업	3,138,709			
도매 및 소매업		35,245,359	38.7	1,716,825	37.0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397,269	1.5	77,270	1.7
	도매 및 상품중개업	14,406,650	15.8	639,281	13.8
	소매업; 자동차제외	19,441,440	21.4	1,000,274	21.6
숙박 및 음식점업		19,041,204	20.9	817,225	17.6
	숙박업	418,726	0.5	15,015	0.3
	음식점 및 주점업	18,622,479	20.5	802,210	17.3
정보통신업		248,497	0.3	5,793	0.1
	출판업	183,72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0,406			
	정보서비스업	14,362			

부동산업		2,536,997	2.8	97,956	2.1
	부동산업	2,536,997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1,325,780	1.5	42,929	0.9
	전문서비스업	308,44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05,541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11,79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863,492	0.9	30,619	0.7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34,467			
	사업지원 서비스업	351,352			
	임대업; 부동산 제외	377,674			
교육 서비스업		2,975,600	3.3	131,733	2.8
	교육 서비스업	2,975,6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66,854	2.2	130,937	2.8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69,972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1,796,88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4,479,534	4.9	224,264	4.8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1,717,866			
	기타 개인 서비스업	2,761,667			
*출처 : 통계청,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실태조사」					

(3) 인천 소상공인의 부채현황

- ☐ 중소기업부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인천의 소상공인중 부채가 없는 사업체는 49.1%로 나타남. 즉, 인천 소상공인의 약 51%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금액별로 살펴보면 5천만원 미만이 41.3%, 1억원 이상이 35.2%,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23.5%이었음.
- ☐ 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이 4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총부채액이 가장 큰 제조업의 경우 1

억원 이상이 65.2%를 차지했음. 5천만원 미만 부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산업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63.7%, 교육 서비스 62.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1.8%, 숙박 및 음식점업 47.6% 순이었음.

〈표 3-9〉 2019년도 인천 소상공인 부채 실태

산업별(1)	2019							
	합계	부채없음		부채있음				
	소계	소계	비율 (%)	소계	총부채액 (백만원)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전국 전산업	2,771,086	1,332,963	48.1	1,438,123	246,697,131	41.4	21.2	37.4
인천 전산업	134,068	65,853	49.1	68,215	12,101,038	41.3	23.5	35.2
제조업	20,147	6,108	30.3	14,039	5,662,861	17.6	17.0	65.4
건설업	5,228	2,002	38.3	3,226	1,946,529	28.6	10.1	61.3
도매 및 소매업	40,901	17,104	41.8	23,797	2,462,842	44.9	24.1	31.0
숙박 및 음식점업	31,487	19,730	62.7	11,757	570,712	47.6	36.6	15.9
정보통신업	575	105	18.3	470	46,036	42.9	13.5	43.6
부동산업	5,931	3,522	59.4	2,409	627,947	43.8	16.7	39.4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565	688	44.0	877	82,237	39.0	29.3	31.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016	788	39.1	1,228	214,890	45.4	17.1	37.5
교육 서비스업	5,814	3,069	52.8	2,745	127,601	62.0	20.2	17.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758	3,585	62.3	2,173	144,757	51.8	11.3	36.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4,646	9,153	62.5	5,493	214,626	63.7	28.2	8.1
*출처 : 통계청,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실태조사」								

3) 인천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현황

- ☐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발행한 「2019 소상공인 금융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창업동기에 대해 소상공인 응답자 3001명 중 39.3%가 생계유지라고 답했으며, 52.4%가 창업과정시 자금조달이 어려웠다고 답변했음.
- ☐ 또한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29%가 자금조달이라고 답변했으며, 자금운용이 어렵다는 답변이 36%였음. 자금운용이 어려운 이유 중 5.5%가 대출곤란, 3.1%가 금융비용 증가라고 답변했음.
- ☐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거절 경험에 대해 1회 거절 12.1%, 2회 2.8%였으며, 대출 거절 사유로는 낮은 신용도 34.4%, 담보부족 32.8%, 대출한도 18.1%, 높은 금리 10.1%, 구속성 예금 2.3% 순이었음.
- ☐ 자금차입 원천별 비중의 평균은 정부정책자금이 69.9%로 가장 높았으며, 은행 16.1%, 친인척자금 5.9%, 비은행금융기관 4.7%, 카드대출 3.2%, 사채 0.2% 순으로 응답했음.
- ☐ 이러한 현실은 인천 소상공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추정됨.

(1) 인천 금융기관의 경제활동 지원 기본 금융현황 및 특징

① 최근 3년간 인천지역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현황 및 특징

- ☐ 한국은행 인천본부의 2021.2.24.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의 증가규모가 줄면서 전월대비 감소”했음. 또한, 인천지역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규모가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감소했음.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10월 이후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시기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급격하게 감소한 점과 대비됨.

□ 따라서 이 시기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대출수요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에 의해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표 3-10〉 인천지역 금융기관의 기업규모별 대출현황(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0.12 말 잔액
				연 중	10월	11월	12월	
대기업	예금은행	351	432	8,554	1,103	681	-745	41,606
	비은행 금융기관	758	1,160	1,212	1,441	-236	-63	6,703
중소 기업	예금은행	29,103	31,073	52,944	6,612	3,450	182	465,153
	비은행 금융기관	23,643	25,100	18,324	234	1,829	1,735	113,173

*출처 : 한국은행 인천본부 보도자료(2021.2.24.), 「2020년 12월중 인천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2) 지역별 금융기관별 금융 역외유출률¹⁾

① 예금은행 역외유출률

□ 한국은행 경제시스템의 지역별 여수신 자료를 활용해 ‘2015~2020 예금은행 지역별 역외유출률’을 산출한 결과, 세종, 서울, 전북, 강원 순으로 역외유출률이 크게 나타났음. 인천의 경우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역외유출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었음.

1) 역외유출률((수신액-여신액)/수신액)은 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자금 중에서 대출로 운용되지 않은 비율로 정의되는데 대출로 운용되지 않은 부분은 통상 동 자금이 본점에 집중되어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투자로 운용되므로 직접금융 조달이 미약한 지역기업으로 환류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한 것임.(한국은행)

<표 3-11> 2015~2020 예금은행 지역별 역외유출률(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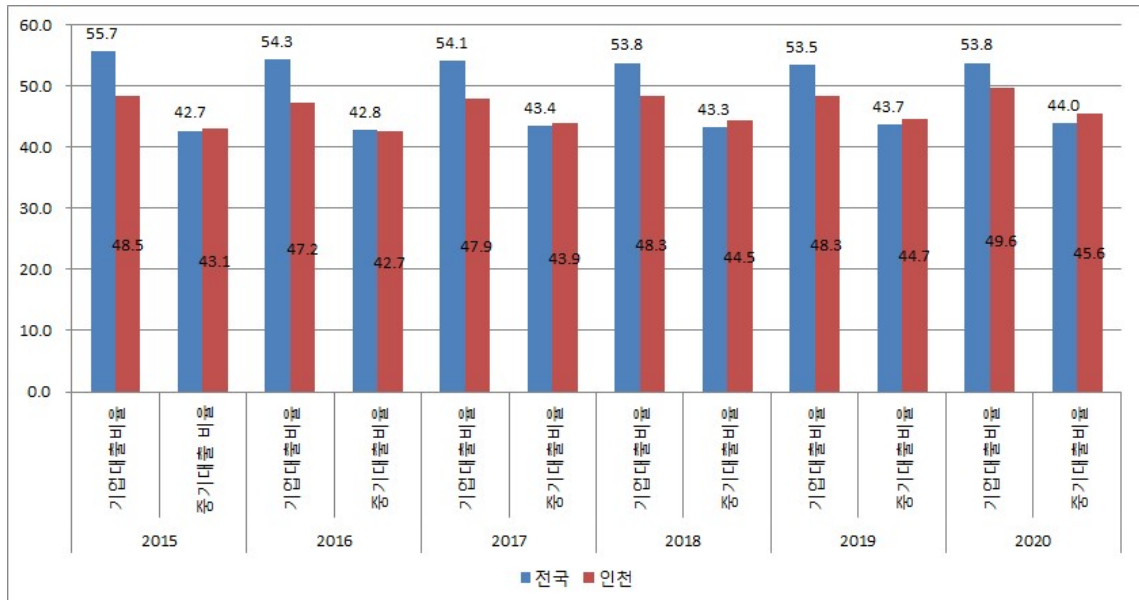
지역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역외유출률	역외유출률	역외유출률	역외유출률	역외유출률	역외유출률
전국	-15.7	-14.8	-15.2	-14.7	-12.1	-11.5
서울	12.5	13.3	14.3	16.7	18.9	19.2
부산	-25.9	-24.0	-30.6	-40.3	-33.3	-30.8
대구	-31.5	-42.0	-47.0	-53.7	-53.6	-55.3
인천	-93.6	-83.3	-86.4	-93.2	-97.1	-96.5
광주	-31.9	-26.1	-28.1	-38.9	-46.0	-47.6
대전	0.8	-3.4	-1.5	-7.6	-4.2	-1.6
울산	-55.2	-57.7	-69.5	-73.9	-71.2	-67.3
세종	-105.9	-18.2	1.9	29.6	24.4	29.7
경기	-68.1	-65.6	-67.0	-69.5	-68.8	-66.8
강원	1.3	27.6	26.0	18.9	17.7	8.5
충북	-29.2	-26.0	-23.9	-28.9	-22.3	-21.3
충남	-43.6	-49.6	-48.1	-47.3	-46.2	-48.5
전북	-30.9	-30.0	-24.8	-5.6	16.5	13.4
전남	2.5	0.3	-1.2	-0.3	-0.4	-6.9
경북	-26.1	-22.3	-26.6	-26.6	-24.0	-28.4
경남	-73.0	-70.4	-72.1	-74.6	-65.1	-61.5
제주	-14.7	-30.9	-48.6	-78.7	-85.6	-95.8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지역별 여수신

□ 이와 관련해서는 인천의 예금은행이 이러한 역외유입률을 토대로 큰 예대마진을 얻었음을 반증한다고도 해석됨. 아래의 ‘2015~2020 인천 예금은행의 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 비중’에서 알 수 있듯이 인천 예금은행의 기업대출은 40% 초,중반의 비중을 차지해 가계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음. 이는 기업대출이 50% 초,중반의 비중을 차지한 전국 평균과 대비됨.

□ 또한, 인천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금 중 중소기업 대출 비중도 전국 평균 수준에 그쳐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 비중이 큰 인천지역 산업의 특성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음.

〈그림 3-6〉 2015~2020 인천 예금은행의 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 비중
(단위: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지역별 여수신

② 비은행 금융기관 역외유출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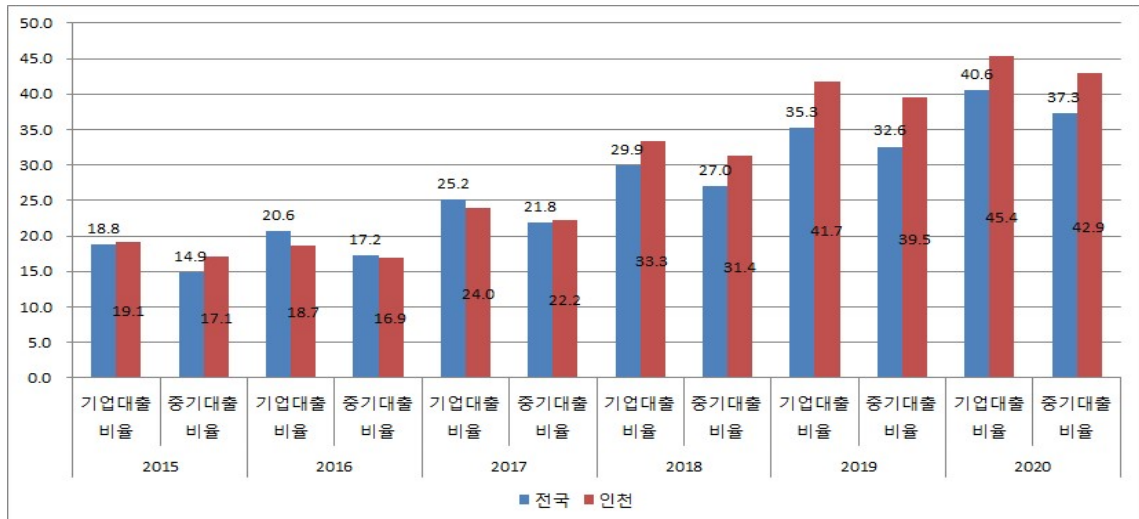
- 한국은행 경제시스템의 지역별 여수신 자료를 활용해 ‘2015~2020 비은행 금융기관 지역별 역외유출률’을 산출한 결과, 전 지역에서 역외유출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20년의 경우 서울, 대전, 부산, 강원 순으로 역외유출률이 크게 나타났음. 인천의 경우 2015년 이후 2020년까지 40%대의 역외유출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2> 2015~2020 비은행 금융기관 지역별 역외유출률(단위: %)

지역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역외유출률	역외유출률	역외유출률	역외유출률	역외유출률	역외유출률
전국	68.7	67.6	66.5	67.5	69.1	67.2
서울	84.8	84.9	85.1	86.4	86.9	85.0
부산	59.7	55.0	52.7	53.5	55.2	51.6
대구	51.3	48.0	46.8	46.5	48.1	45.0
인천	47.7	43.9	43.3	44.8	46.1	43.0
광주	48.8	47.0	44.9	45.8	48.5	45.1
대전	56.8	56.2	53.5	53.5	54.9	53.4
울산	45.9	43.1	40.7	43.3	46.5	44.8
세종	31.4	29.8	33.6	38.3	34.5	45.1
경기	53.1	49.8	46.7	47.7	49.2	45.7
강원	52.6	52.1	47.7	48.6	49.3	47.1
충북	45.0	42.6	39.4	39.1	42.5	40.5
충남	46.3	42.6	38.9	38.6	42.1	40.3
전북	49.6	46.5	43.9	42.9	41.1	39.9
전남	57.1	51.9	48.5	48.7	49.3	47.5
경북	50.7	45.8	42.6	42.4	45.0	44.3
경남	44.9	41.1	38.5	38.9	41.5	40.6
제주	43.3	34.5	27.7	28.0	36.6	32.1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지역별 여수신						

□ 이처럼 전국적으로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역별 역외유출률이 높은 가운데 인천의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및 중소기업대출 비율이 계속 증가했음. 이러한 상황은 인천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및 중소기업대출 비율 정체와 대비되는데, 결국 기업 및 중소기업의 늘어나는 대출수요를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충족시켜주고 있고, 기업 및 중소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추정됨.

<그림 3-7> 2015~2020 인천 비은행 금융기관의 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 비중(단위: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지역별 여수신

③ 인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부담 현황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업경영분석(지역)에 따르면, 인천 중소기업 전산업의 2017년 기준 2019년의 이자비용 부담이 13.4% 늘어나는 등 2017년~2019년의 인천 중소기업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
-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이자비용은 2017년 기준 2019년에 18.7% 늘어났으며,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03.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9.7%, 교육서비스업 129.0%, 건설업 97.6%,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8.4, 운수 창고업 23.2%, 도매 및 소매업 21.7% 순으로 이자비용이 높게 증가했다. 인천 중소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천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부담도 이러한 실태를 보일 것으로 판단됨.

〈표 3-13〉 인천 중소기업 산업별 이자비용(단위: 백만원, %)

	2017	2018	2019	2017대비2019 증가율(%)
전산업	1,126,414	1,145,861	1,277,241	13.4
A01 농업	1,231	1,460	1,451	17.9
A03 어업	407	387	463	13.8
B 광업	3,337	1,187	1,249	-62.6
C 제조업	411,575	467,682	488,394	18.7
비제조업	714,839	678,178	788,846	10.4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2,711	23,276	21,847	-3.8
F 건설업	60,996	85,112	120,526	97.6
E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9,809	22,728	25,428	28.4
G 도매 및 소매업	128,819	148,441	156,745	21.7
H 운수 및 창고업	49,717	61,133	61,269	23.2
I 숙박 및 음식점업	15,116	14,547	13,207	-12.6
J 정보통신업	5,292	7,443	9,395	77.5
L 부동산업	376,383	276,802	319,328	-15.2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342	14,493	14,944	179.7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5,646	8,028	17,119	203.2
P 교육 서비스업	535	829	1,225	129.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4,315	6,470	18,624	30.1

④ 인천시 주관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 2021.3.18.에 개최된 「인천지역의 금융불평등 해결방안 토론회」의 인천시 토론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주관 서민금융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음.

- 일자리 창출 고용우수기업 특례보증(소상공인 대상 최대 5천만원, 금리 1~2%,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청년창업 일자리 특례보증(청년 사업체 대상, 5천만원 이내, 금리 1.5%,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소상공인 대상, 5천만원 이내, 금리 1.5%,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금융소외자 등 업체에 2천만원 이내, 금리 1.5%,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재개발지역 상권활성화 특례보증(해당 지역 소상공인에 2천만원 이내, 금리 1.5%,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지하도 상가 활성화 특례보증(지하도 소상공인에 5천만원 이내, 금리 1.5%, 1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소상공인 시장진흥 자금 융자(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0.8% 변동 금리)
- 또한, 인천시는 소상공인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해 아래의 사업을 펼치고 있음.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소상공인 대상, 130개 업체, 2억 7천만원)
 - 금융소외계층 경제적 재기지원 및 예방교육 강화
- 이러한 인천시의 서민금융 지원사업은 금융소외계층이나 경제적 약자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됨. 다만 지원사업의 경제적 목적을 너무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보다는 금융소외계층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적 금융을 제공한다는 목적 하에 포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융지원이나 보증액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거치기간의 확대 등 인내자본으로써 서민금융이 기능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인천 소상공인 위기 대응 금융 현황

① ‘인천형 재난지원금 지원’

- ☐ 대표적인 소상공인 위기 대응 금융지원은 2021년 1월 20일 인천시가 발표한 금융지원 포함 5,700억원 규모의 ‘인천형 재난지원금 지원’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음.
- ☐ 정부 버팀목 자금 지급대상인 집합금지·제한 업종 7만5천명 소상공인에 대해 150/100/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함.
- ☐ 충분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문화예술인, 관광업체,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종사자, 청년 등 피해계층과 업종에 대한 포용적 지원으로 ‘안전망강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함.
- ☐ 지역경제활력 소비지원금 역할을 하는 인천e음 캐시백 지원 3,101억원으로 확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2,025억원, 중소기업 경영자금 등 2,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함.
- ☐ 인천시의 이러한 위기 대응 금융지원은 금융소외계층 및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공공금융 지원의 대표적 모범사례임. 향후 공공부문에 의한 공적 금융지원의 보다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공공재원의 확보, 공공금융 지원체계 구축 등의 보완되어야 할 과제임.

5) 인천 소상공인 사회적 가치창출 금융 현황

① 사회적금융의 개념과 유형

- ☐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주체에게 대출이나 투자 등의 형태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임. 사회적금융이 일반적인 금융과 다른 점은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우선시한다는 점임.

- 사회적금융의 유형은 ▲마이크로 파이낸스 ▲임팩트 투자 ▲크라우드 펀딩 ▲사회성과 연계 채권(SIB) ▲지역공동체 개발 금융 ▲사회적은행 등 매우 다양함.

② 인천 사회적금융 관련 현황

- 인천은 지역의 인천항만공사등 3개의 공기업이 참여해서 인천사회적경제활성화 공동기금(I-SELF)을 조성했으며 (사)사회연대은행이 기금 조성에 협력하고 운용에 참여한 바 있음.¹⁾
- 현재 인천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인천서구법인) ▲(사)함께일하는인천사람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본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 남부, 북부센터 ▲신용보증기금 인천 사회적경제팀 ▲인천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인천본부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음.

1) 「사회적금융 현황과 과제 국회토론회 자료집」, p17

4. 금융배제 현상에 관한 개념적/이론적 논의

1) 금융배제(Financial Exclusion)의 정의

- 금융배제(financial exclusion)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93년으로 은행의 지점폐쇄에 따라 은행 서비스에 물리적 제한을 받게 되는데 관심을 가진 지리학자에 의해서였음.²⁾ 이들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의 시기에 글로벌 및 국가적 차원의 금융시스템 구조조정으로 금융기관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 벌어진 결과의 하나로써 특정 사회 집단과 특정 지역에서 금융기관의 서비스와 운영이 철회되는 ‘금융 기반 시설 철수’ 과정이 나타났고, 위험감소 방침과 ‘고 신용등급 선호현상’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이 과정은 선진국 내 금융 시스템 운영의 폐쇄와 배제 요소를 들여왔음.³⁾
- 이렇게 원래 ‘금융배제’ 개념은 저소득층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적절한 금융서비스가 공급되지 않거나 이러한 지역으로부터 제도권 금융기관이 철수하여 발생하는, 즉 지리적인 배제의 문제로서 제기되었음.⁴⁾
- 이후 ‘금융배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사회적 배제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 차원에서 강조되었음. 앤서니 B. 앳킨슨은 “고리대금을 쓰는 이들이 물어야 하는 천문학적인 이자와 학자금 대출로 늘어나는 부채에 관한 문제는, 가게가 돈을 빌릴 수 있는 조건에 관한 문제 전반에 대해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호들이며 “가게가 주택을 담보로 잡히지 않는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시장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를 실행해야 한다”⁵⁾고 주장했음. 또한, 영국에서는 “금융서비스는 일상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배제된 금융소외 계층은

2) 김문길, 「유럽의 금융소외 관련 논의와 대응 방식」, 『보건복지포럼』, 2010.2

3) Leyshon, A., Thrift, N., 「The restructuring of the UK financial services industry in the 1990s: a reversal of fortune?」, 『Journal of Rural Studies』(Vol. 9 No.3, pp.223~241), 1993

4) 양준호·윤효중, 「‘금융배제(financial exclusion)’ 현상과 대안-서민금융시장에 대한 ‘국가적 조정’의 필요성」, 2013.2

5) 앤서니 B. 앳킨슨, 『INEQUALITY-What Can Be Done(불평등을 넘어-정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2015)』, (장경덕 옮김, 글항아리, 2015)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금융배제가 종국적으로 또 다른 사회적 배제를 유발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음.”⁶⁾ 이러한 차원의 금융배제 현상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일 것으로 예상됨.

- 구체적으로 국내의 대표적인 사회경제적 약자계층인 소상공인들의 금융접근성 실태가 국내 금융배제 현상을 잘 나타냄.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발행한 「2019 소상공인 금융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창업동기에 대해 소상공인 응답자 3001명 중 39.3%가 생계유지라고 답했으며, 52.4%가 창업과정시 자금조달이 어려웠다고 답변했음.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거절 경험에 대해 1회 거절 12.1%, 2회 2.8%였으며, 대출 거절 사유로는 낮은 신용도 34.4%, 담보부족 32.8%, 대출 한도 18.1%, 높은 금리 10.1%, 구속성 예금 2.3% 순이었음.
- 따라서 아래에서는 국내외의 ‘금융배제’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국제사회의 금융배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한편, 역사적, 이론적 검토를 통해 ‘금융배제’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금융배제 개선의 정책적·실천적 의미를 조명해 보고자함.

(1) 선행연구 검토

- 박종현(2005.7)은 미국의 CDFI 지원제도를 소개하며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업용 부동산, 공공시설, 주택 등의 건설에 투입될 다양한 형태의 신용공급이 요구됨. 고용과 발전의 원천인 기업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신용과 지분 자본을 필요로 한다.”며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을 ‘낙후지역의 금융배제’ 상황이라고 설명했음.
- 조복현(2006.4)은 “금융차별과 금융소외 현상으로 나타나는 금융배제”라고 규정했으며, 김용선·전봉걸(2020.11)은 조복현의 금융배제 정의에 대해 “제도 금융권으로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금융소외’로 보면서, 접근은 되나 금융서비스의 종류, 규모, 가격 등에서

6) 금융감독원 런던사무소, 「영국의 포용적 금융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19.12

차별받는 것을 ‘금융차별(Financial Discrimination)’이라고 정의하였다.”고 설명했다.

□ 양준호·윤효중(2013.2)은 ‘금융배제’에 대해 보다 풍부한 논의를 전개했음. 양준호·윤효중은 지리적 배제의 문제로 제기되었던 금융배제 논의의 배경을 설명하고 “금융배제(Financial Exclusion)란, 일반적으로 지리적 요인, 숙인적 요인, 나아가 사회적인 조건 등에 의해 금융 수요자가 제도권 금융서비스 체계에 접근하기 어려운 현상을 의미한다.”는 유럽위원회의 견해(2008)를 소개한 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금융배제’ 문제를 사회적 배제 또는 사회양극화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소개했음. 또한, “일본의 福光(2001)은 ‘금융배제’ 개념을 ‘금융수요자가 실질적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으로부터 배제됨으로써 이들이 다양한 손실을 입거나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의 의욕을 상실한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소개했음.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양준호·윤효중은 “‘금융배제’ 문제는 금융수요자가 자신이 소속된 사회에서 보편적인 사회적 삶을 위해 필요한 제도권 금융시장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또 이로 인해 겪게 되는 불이익을 동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정의한 뒤,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특징과 경향을 고려하면, ‘금융배제’ 개념은 “금융수요자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제도 및 환경에 의해 은행 등과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를 위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금융거래 자체가 통제되어 있는 현상으로 보다 현실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금융배제’는 구체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신용등급과 소득 및 재산 수준이 낮고 직업적 신분이 불안정한 계층의 금융수요자가 제도권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여 사금융 등의 고금리 대출기관에 대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는 현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음.

□ 김용선·전봉걸(2020.11)은 “금융소외는 은행에 거래계좌가 없어 기본적인 금융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unbanked)와 금융서비스(특히 신용)를 적정한 가격으로 필요한 규모만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underbanked)를 모두 포함하는데 후자의 경우 신용제약이라는 용어가 의미상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우리나라의 금융발전 정

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은행 거래계좌 자체가 없는 상태를 일컫는 일반적인 금융소외보다는 신용을 적정한 가격으로 원하는 규모만큼 이용할 수 없는 신용제약에 대한 논의가 훨씬 더 의미 있고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 설명했다.

(2) UN, 각국 정부 및 NGO의 금융배제에 대한 인식

-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핵심원칙에서는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이란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이 저축, 결제, 송금, 대출, 보험 등 금융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문제를 개선하는 개발 협력 분야의 한 영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포용의 반대개념을 ‘금융배제(Financial Exclusion)’로 표현하고 있음.
- 최진배·권오혁(2017.6)에 따르면 “영국 재무성은 금융배제를 ‘소외된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면서 매우 곤궁한 다수의 주민들이 다른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고 그 결과 더욱 빈곤해지는 것’이라고” 정의함.
- 금융감독원(2019.12)에 따르면, 영국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은, “육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3백 만 명에 대한 보험상품 거절 또는 보험 가입시 추가 비용 청구, 8백 만 명 과대채무 상태, 31만 가구 불법 대출 이용”을 ‘취약계층이 겪는 금융소외 사례’로 설명함.
- 1984년 금융적 포용을 통해 빈곤을 완화하는 것을 임무로 설립된 FINCA는 “금융배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직면하는 어려움이다. 금융자원이 없어서 저소득층은 더 건강하고, 더 지속가능하며,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과정에서 고난에 직면한다”는 인식하에 “금융배제는 일반적인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개인과 국민에게 적용된다. 여기에는 저축 계좌, 대출, 무현금 거래, 신용 및 기타 전통적인 은행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지위 때문에 그리고 제도권 은행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배제된다. 궁극적으로 금융배제는 이들이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원, 고등교육 비용 또는 더 나은 삶의 질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타 조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⁷⁾고 정의하고 있음.

7) FINCA, 「What Is Financial Exclusion?」, FINCA 홈페이지(<https://finca.org/blogs/what-i>)

2) 금융배제(Financial Exclusion)의 역사적, 이론적 검토

(1) 역사적 검토

- 위에서 서술한 ‘금융배제’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와 국제사회의 인식의 배경에는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이 있음. 하나는 금융배제 현상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구조적 결과물중 하나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배제 현상의 유발주체가 금융기관의 최고 의사결정자들과 금융 산업을 감독하고 규제해야 할 정부 당국이라는 점임. 금융배제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두 가지를 분명하게 규명함으로써 보다 더 명료하게 금융배제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금융배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우선, 금융배제 현상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구조적 결과물중 하나라는 점에 대해 살펴봄. “1980년대 이후 선후진국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금융활동에 가해졌던, 정부개입과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금융자유화의 전개를 통해 변화된 금융활동의 주요내용은 이자율 자유화, 자본시장 규제완화, 업무영역 구분 해제, 부채의 증권화, 단기 금융상품의 개발 등임. 또한, (금융자유화의 결과로) 금융자본은 산업자본에 대한 지배를 넘어서서 노동과 정부에 대해서도 지배력을 행사함. 노동에 대해서는 금융적 수익 원리에 복종하도록 노동시장 유연화를 요구하고 생산조직의 슬림화를 요구했다.” 그리고 금융자유화에 따른 금융자본의 경영행태도 변화했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금융자본의 지배 하에서는 경영자의 자율성은 사라지며, 주주의 이익에 따라 장기성장보다는 단기적 이익의 극대화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는 투자전략을 취하게 된” 것이었음.⁸⁾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역사적 전개를 좀 더 살펴보면, 1970년대 초 달러 위기 등 1970년대에 다양한 혼란이 발생한 이후, “(금융시장의) 규제 완화를 향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음. 미국에서는 1974년, 영국에서는 1979년, 그리고 일본에서는 1980년대에 자본통제가 철폐되었음. 미국에서는 1980년에 ‘예금기관 규제완화와 통화통

s-financial-exclusion), 2020.8.5

8) 조복현,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한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구축」, 『사회경제평론 제26호』 (2006)

제법'이 입법되어 이자율 상한을 철폐했고, 1982년에 '예금금융기관법'이 입법되어 예금기관에 대한 연준의 통제권을 확대해 전 예금기관을 지원하게 되었음. 그 결과 서브프라임 대출은 고리대금 규제의 틀이 깨지면서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해 대출자는 신용 위험도가 높은 차입자에게 더 높은 이자율을 부여할 수 있었음. 이러한 기준들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거대한 금융위기에서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파산하는데 일조했음.”⁹⁾ 이러한 “1990년대 초 금융서비스 부문 산업이 직면한 위기는 본질적으로 구조적이었음. 그것은 부채 문제와 자산 가격 하락의 문제로 나타났고, 1980년대에 전개된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의 구성요소였음.”¹⁰⁾ 이후 금융기관들은 국내적 차원에서 경영합리와 이익증대를 위한 변화된 전략을 시도했음.

- 1990년대 금융들의 경영합리화와 금융배제 경영행태의 사례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음. 영국에서는 “1989년과 1991년 사이에 4개의 대형 은행(clearing bank)은 이전 8년 동안 문을 닫았던 지점과 거의 같은 수의 지점을 폐쇄했으며, 지역 차원의 은행합리화 과정은 상대적으로 경기침체가 심했던 영국 남부에 집중되었음. 동시에 외딴 지역, 특히 농촌 지역에 위치한 지점이 폐쇄되었음.”¹¹⁾ 1980년대의 소매시장 경쟁에 따른 과다비용 및 수익성 저하에 대응했던 영국 은행들의 장기적인 해결책은 ‘고 신용등급 선호현상’ (flight to quality)으로 나타났던 것임. “은행들은 고객 기반을 ‘상류층’으로 이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고액순자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음. Barclays, Midland 및 National Westminster의 4개 주요 은행(clearing bank) 중 3개는 전국 평균을 훨씬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고객에게만 독점적으로 제공되는 자체 ‘프리미어’ 또는 ‘프라임’ बैं킹 서비스를 도입했음.” 영국에서 금융배제는 이렇게 전개되었음.

9) 제라르 뒤메닐·도미니크 레비, 『The Crisis of Neoliberalism(신자유주의의 위기, 2011)』(김덕민 옮김, 후마니타스, 2014)

10) Leyshon, A., Thrift, N., 『The restructuring of the UK financial services industry in the 1990s: a reversal of fortune?』, 『Journal of Rural Studies』(Vol. 9 No.3, pp.223~241), 1993

11) 상동

(2) 이론적 검토

- 금융배제 현상의 유발주체가 금융기관의 최고 의사결정자들과 금융 산업을 감독하고 규제해야 할 정부 당국이라는 점은, 화폐와 금융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재(merit goods)¹²⁾이자 공공재라는 사실을 전제로 금융배제 현상이 금융 시장의 자율적 조정으로 해소될 수 없는 ‘시장실패’ 현상이자 정부 금융 감독 당국의 규제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정부실패’ 현상임을 나타냄.
- 금융배제 현상에 대한 이론적 검토는 화폐와 금융이 가치재, 공공재라는 것에 대한 검토로부터 출발해야 함. “화폐는 그 자체에 신뢰를 체화하고 있는 신뢰의 대용물이다. 이런 경우 화폐가 제공하는 교환매개 및 지급 수단으로서의 서비스는 공공재가 된다. 어떤 사람들이 화폐에 대한 접근성을 통해 교환과 경제활동의 촉진이라는 공공적 편익을 얻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와 같은 편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화폐의 비경합성) 또한, 화폐공급자가 화폐의 공공적 편익을 어떤 특정인이 누리지 못하도록 배제시킬 수도 없다.(화폐의 비배제성)”¹³⁾ 그리고 “금융은 화폐와 약정(부채증서)의 자발적 교환을 의미한다. 사실상 금융은, 화폐의 교환매개 및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시간적·공간적으로 증폭시킴으로써 화폐의 공공재적 역할을 강화한다. 보편적 수용성을 갖는 화폐가 공공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활동도 보편화되면 공공재가 됨.”¹⁴⁾
- 화폐와 금융이 공공재임을 전제할 때, 선행연구 검토와 역사적 검토를 통해 확인된 금융배제 현상과 그것의 역사적 전개는 금융 자본과 금융규제 당국에 의해 금융자본의 수익추구를 보장할 목적으로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을 불안정한 금융 환경에 처하도록 한 결과이며, 이 결과는 시장의 자기조정 메카니즘을 통해 조정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 현상이라고 규정할 수 있음. 나아가 금융배제 현상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보면 금융자본과 금융규제 당국의 행위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행위라고 할 수 있음.

12) 머스그레이브(Musgrave)는 정부가 시장균형점 이상으로 소비(공급)을 유도하는 재화로서 예방 의료, 의무 교육 등 시장에 맡겨둘 경우 과소소비의 가능성이 있는 재화를 가치재로 정의했다.

13) 정운찬·김홍범, 『화폐와 금융시장(제3판)』(2007)

14) 상동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노동시장에서 대규모의 기업 인수합병과 정리해고를 낳았고, 비정규직 확대 등 불안정노동을 확대시켜 결국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음. 그 결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저소득층, 농촌지역 등 낙후지역의 사업자금 및 생계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서비스 접근 필요성을 확대시켰음. 반면에 “금융자유화는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에 제약을 가하던 모든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그리고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을 증대시켜 은행의 대형화를 초래함으로써, 그리고 또 자금순환의 흐름을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크게 이동시킴으로써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을 어렵게 만들었음. 이자율이 자유화되고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게 되면,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은 높은 이자율을 부담할 수 없어서, 그리고 신용할당에 의한 배제로 인해 금융접근이 더욱 어려워짐. 또한 은행이 대형화될 수록 소액의 대출에서는 비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임.”¹⁵⁾
- 결국, 금융서비스의 수요측면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저소득층, 낙후지역의 금융 서비스 수요는 증가된 반면, 금융 서비스 공급측면에서 금융기관들의 ‘고 신용등급 선호현상’ 등 경영행태로 인해 공공재인 금융 서비스의 공급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고, 이러한 시장실패에 대한 금융규제 당국의 조정 역할이 미미한 결과 금융배제 현상은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 지속되고 있는 것임.

3) 소결

- 위에서 서술한 국내외의 ‘금융배제’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와 국제사회의 금융배제에 대한 인식, 금융배제 현상에 대한 역사적, 이론적 검토를 통해 ‘금융배제’의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음.
- 금융배제는 경제활동 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또는 경제적 약자 계층 또는 개인인 금융 서비스 수요자(지역성 또는 계층성)가 공공재인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거나(접근성),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자신이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하게(충분성), 적정한 비용지불을 통해 제공받지 못하거나(수용성), 현재 제공받고 있는 금융서비스를 본인의 의사와 달리 유지할 수 없게 되는(지속성) 현상이자 그로 인해 금융 서비스 수요자가 경제적 불이익

15) 조복현,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한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구축」, 『사회경제평론 제 26호』(2006)

과 사회적 배제를 겪게 되는 현상임.

- 금융배제는 글로벌 차원과 국가 차원에서 전개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결과물 중 하나로써 금융자유화와 금융산업의 경쟁심화, 금융위기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경영행태 변화로 나타난 현상임.

□ 위와 같은 금융배제 개념의 정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금융배제 해소 방향을 도출할 수 있음.

- 금융배제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증거이며, 정부의 새로운 금융규제 도입과 공공금융기관 및 비영리 금융기관 설립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입과 시민역량의 강화에 의해 해소될 수밖에 없는 현상임.

5. 인천시 소상공인 금융배제 실태조사 결과

1) 소상공인 대상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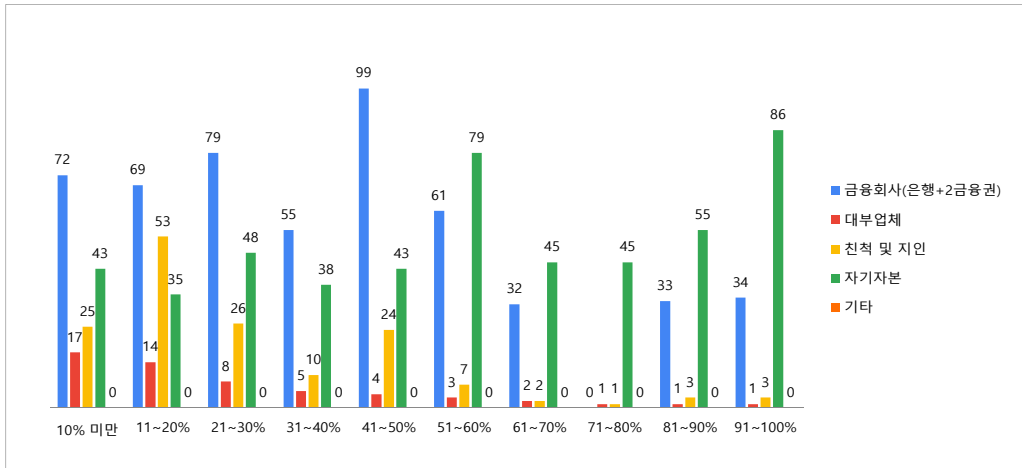
☐ 조사개요

참가자 수		
인원 수	1,019명	
성별	남성	627
	여성	392
연령	20~29세	23
	30~39세	85
	40~49세	251
	50~59세	416
	60세 이상	244
업종별	제조업	78
	도매업	51
	소매업	277
	음식료업(식당, 카페 등)	295
	개인서비스업(미용실 등)	68
	숙박업	8
	부동산업	7
	건설업	14
	운수업	12
	정보통신업	2
	수리업	93
	보건업	6
	사회복지 서비스업	17
	예술, 스포츠, 여가 등 서비스업	0
	기타	36
사업체 형태	단독 운영	841
	가맹점	92
	대리점	40
	기타	22
창업이후 영업기간	1년 이내	74
	3년 이내	136
	5년 이내	164
	10년 이내	271
	20년 이내	284
	20년 초과	88
사업장 소유형태	자가 건물	168
	전세	59
	월세	753
	기타	21
사업장의 전세 또는 월세보증금	1천만원 이하	217
	3천만원 이하	361
	5천만원 이하	183
	1억원 이하	90
	3억원 이하	14
	3억원 초과	3

사업장의 위치	중심상가지역	57
	일반상가지역	334
	전통시장	270
	골목상가지역	204
	기타	109
사업장 주소	계양구	139
	부평구	207
	남동구	89
	연수구	156
	미추홀구	124
	동구	30
	서구	165
	중구	56
	강화군	10
	옹진군	29
	기타	5
연간 매출액규모	3천만원 이내	160
	5천만원 이내	170
	1억원 이내	314
	3억원 이내	232
	5억원 이내	54
	5억원 초과	67
연간 순이익규모	1천만원 이내	175
	3천만원 이내	224
	5천만원 이내	136
	7천만원 이내	37
	1억원 이내	44
	2억원 이내	18
	2억원 초과	9
매월 지출되는 자금의 용도별 순위(1순위)	원자재 구입비사업장 임차료	591
	사업장 임차료	191
	직원 급여	155
	전기료 등 공과금(관리비)	16
	카드수수료 등 각종 서비스 이용료	10
	가맹본부 납부금	6
	차입금(대출금) 이자(보증료 포함)	21
	차입금(대출금) 원금 상환금	28
	기타	4
매월 지출되는 자금의 용도별 순위(2순위)	원자재 구입비사업장 임차료	161
	사업장 임차료	307
	직원 급여	280
	전기료 등 공과금(관리비)	89
	카드수수료 등 각종 서비스 이용료	51
	가맹본부 납부금	9
	차입금(대출금) 이자(보증료 포함)	52
	차입금(대출금) 원금 상환금	55
	기타	0
매월 지출되는 자금의 용도별 순위(3순위)	원자재 구입비사업장 임차료	79
	사업장 임차료	204
	직원 급여	109
	전기료 등 공과금(관리비)	279
	카드수수료 등 각종 서비스 이용료	120
	가맹본부 납부금	13
	차입금(대출금) 이자(보증료 포함)	85
	차입금(대출금) 원금 상환금	84
	기타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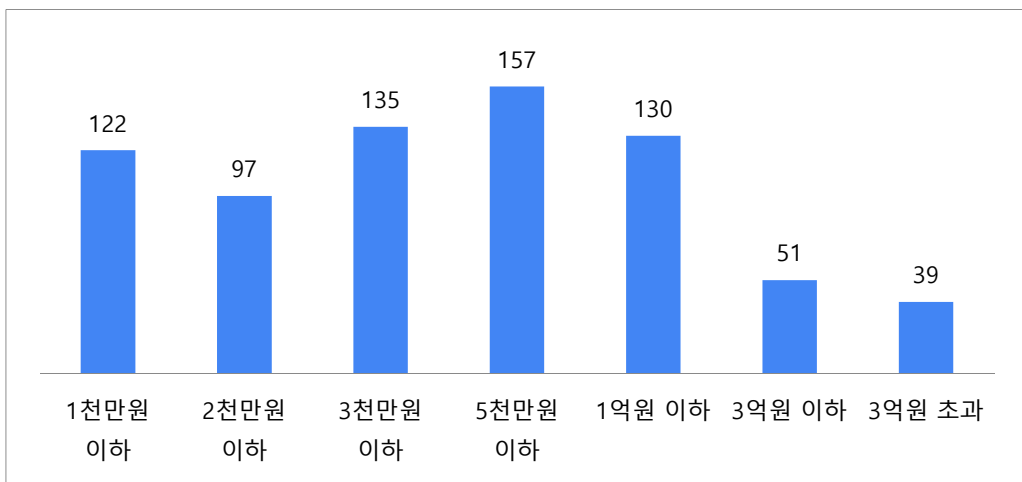
(1) 사업자금의 조달처별 비중

□ 사업자금의 조달처별 비중을 살펴보면, ‘10% 미만’의 경우 ‘금융회사’ 비율이 45.9%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자기자본’ (27.4%), ‘친척 및 지인’ (15.9%), ‘대부업체’ (10.8%)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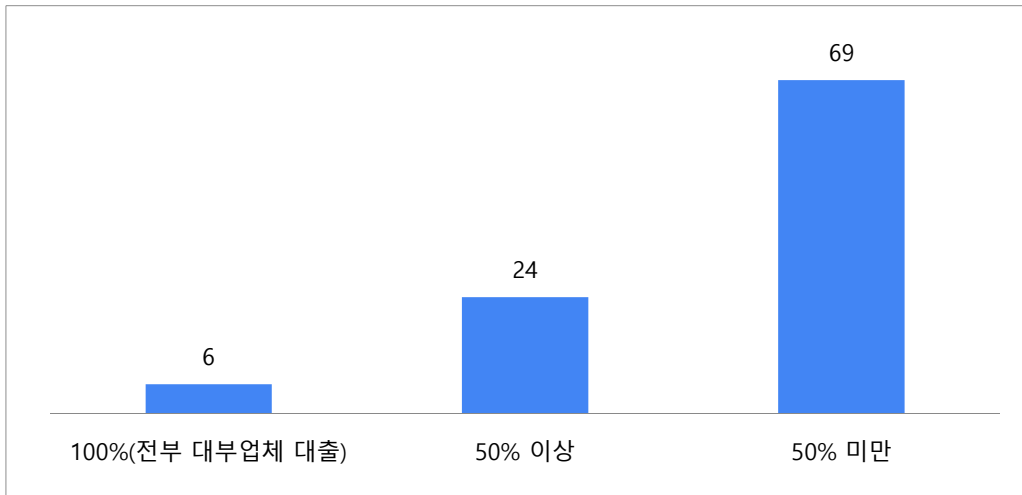
(2) 사업자금에서 금융권과 대부업체의 대출금액 규모

□ 사업자금의 회사’ 비전체 사업자금 중에서 금융권과 대부업체의 대출금액 규모를 보면, ‘5천만원 이하’가 21.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천만원 이하’ (18.5%), ‘1억원 이하’ (1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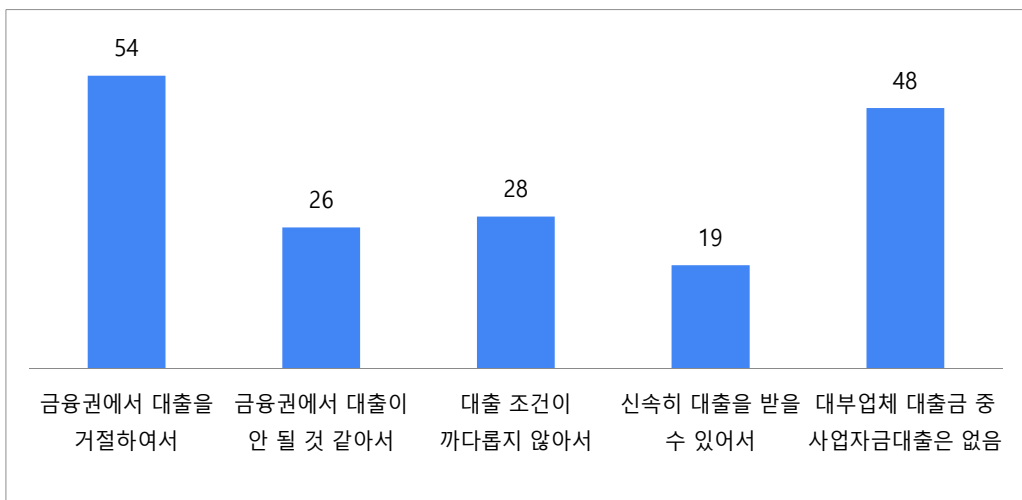
(3) 총 사업자금대출 대출에서 대부업체의 비중

- 사업전체의 사업자금대출 중 대부업체의 사업자금대출 비중을 보면, ‘50% 미만’의 경우가 69.7%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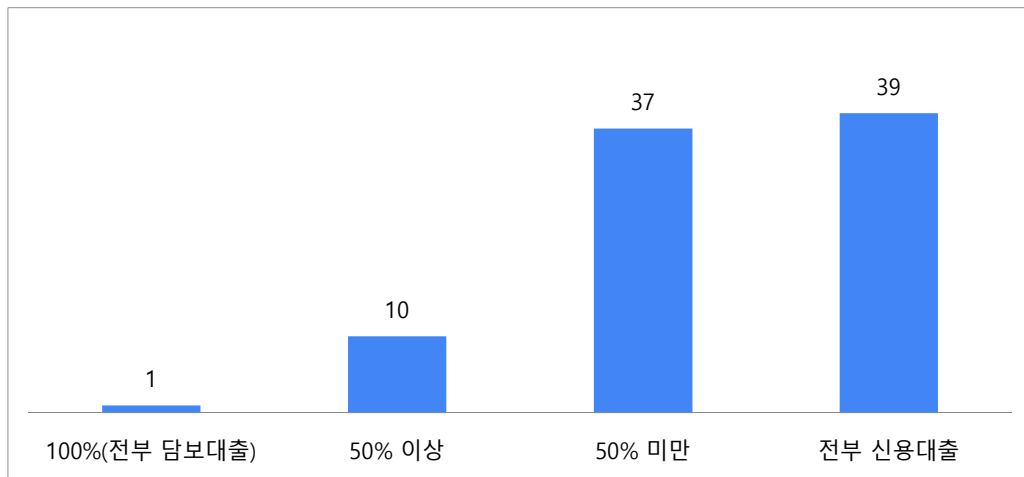
(4) 대부업체에서 사업자금대출을 받는 이유

- 사업대부업체에서 사업자금대출을 받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서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하여서’ (30.9%)라고 응답한 비율이 30.9%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부업체 대출금 중 사업자금대출 없음’ (27.4%)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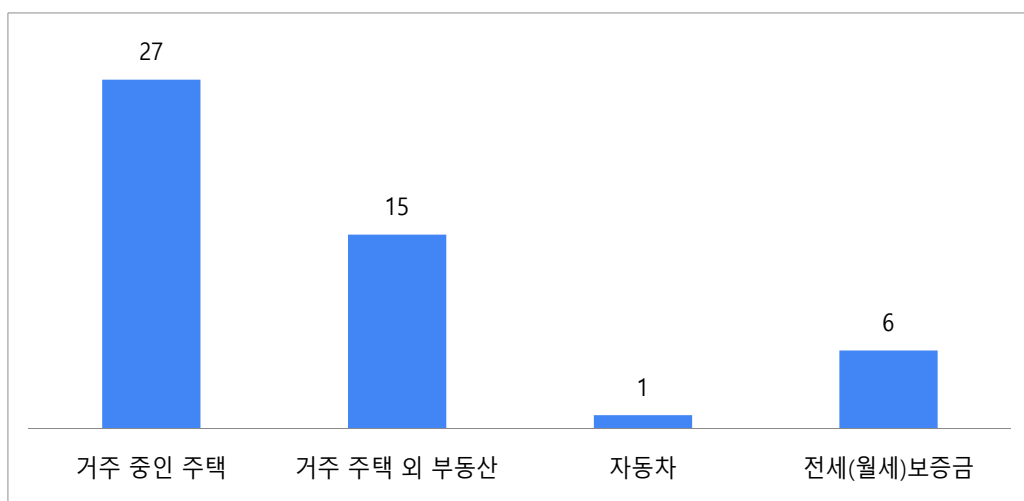
(5) 대부업체 대출 중 담보대출의 비중

□ 대부업체 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을 보면, ‘전부 신용대출’ 이 44.8%였으며, ‘50% 미만’ 이 42.5%로 그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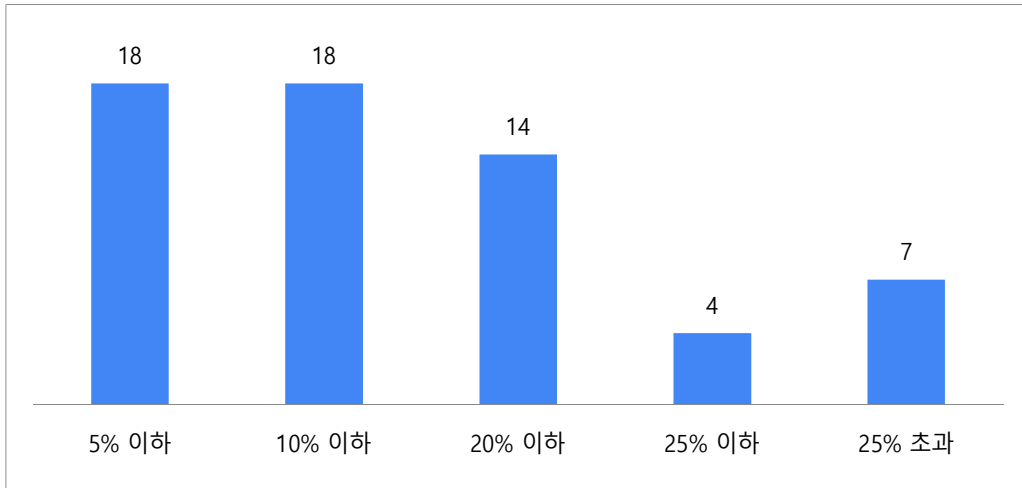
(6) 담보의 종류

□ 담보 종류를 묻는 질의에서는 ‘거주 중인 주택’ 이라 응답한 비율이 51.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거주 주택 외 부동산’ (30.6%), ‘전세 보증금’ (12.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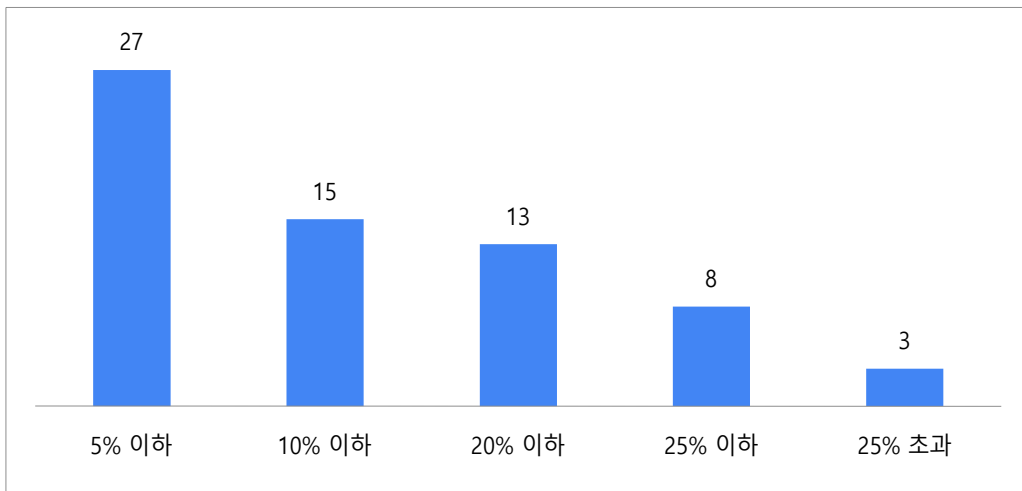
(7) 대부업체의 대출 이자율(담보대출)

- 대부업체 대출의 이자율(담보대출)은 ‘10% 이하’와 ‘5% 이하’가 각각 29.5%로 동률로 나타났으며, 이어 ‘20% 이하’ (23.0%), ‘25% 초과’ (11.5%)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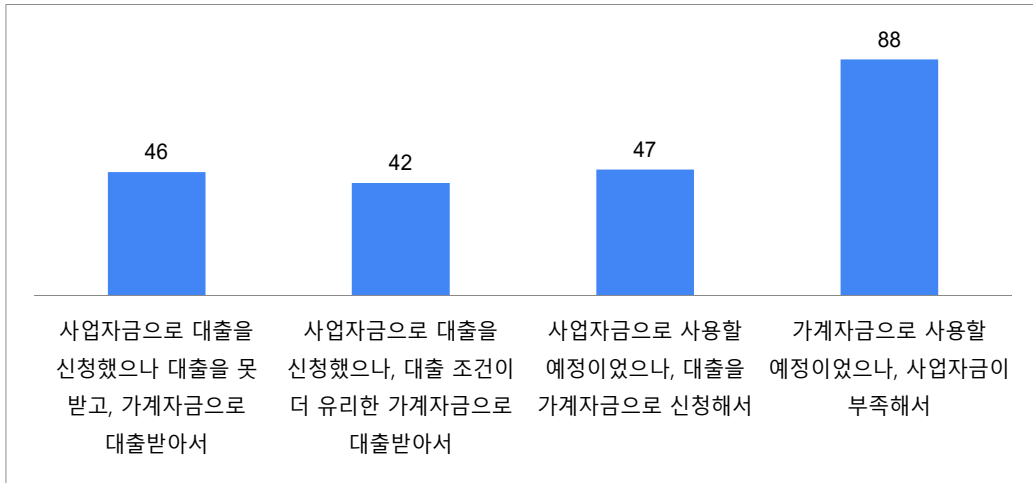
(8) 대부업체의 대출 이자율(신용대출)

- 대부업체 대출의 이자율(신용대출)은 ‘5% 이하’가 40.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0% 이하’ (22.7%), ‘20% 이하’ (19.7%)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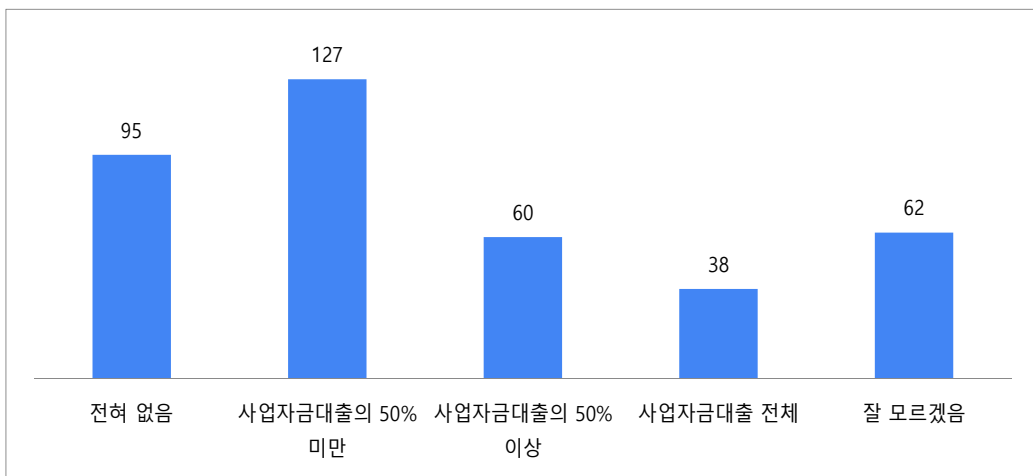
(9) 당초의 가계자금에서 사업자금으로 활용 이유

- 금융권에서 당초 가계자금으로 대출받았으나 현재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는 이유로는 ‘가계자금으로 사용 예정이었으나 사업자금이 부족해서’가 39.5%로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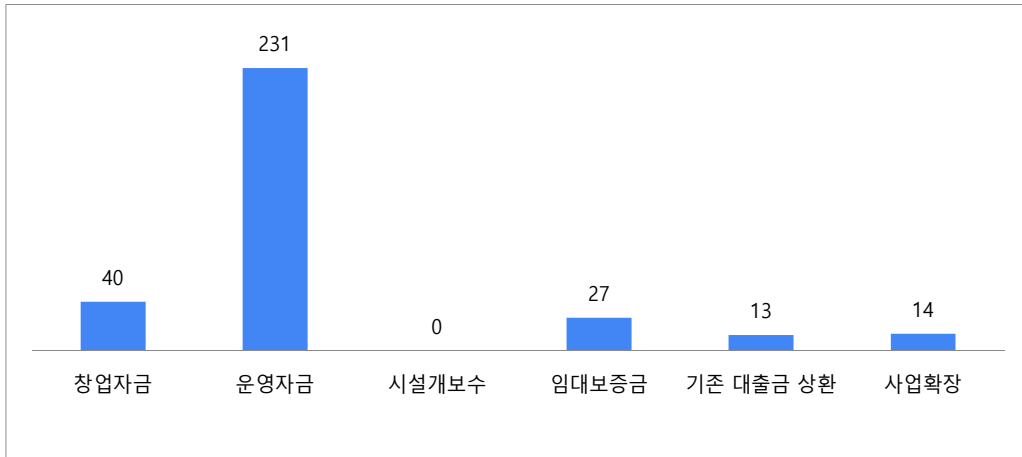
(10) 당초 가계자금에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대출금액 비중

- 전체 사업자금 중 당초 가계자금으로 대출 받았다가 현재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대출금액 비중을 보면, ‘사업자금대출 50% 미만’이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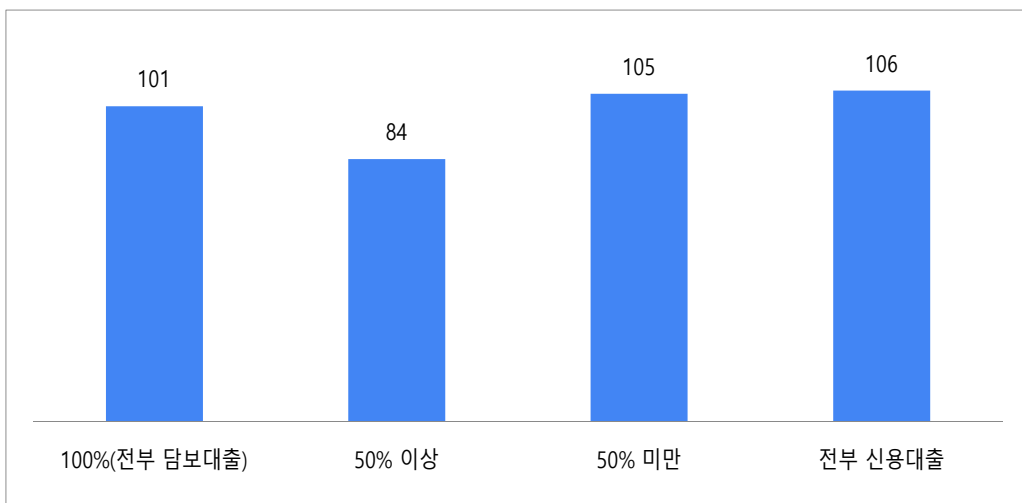
(11) 금융권 사업자금대출의 사용 용도

- 금융권 사업자금대출을 실제로 사용한 용도로는 ‘운영자금’ 이 71.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창업자금’ (12.3%), ‘임대보증금’ (8.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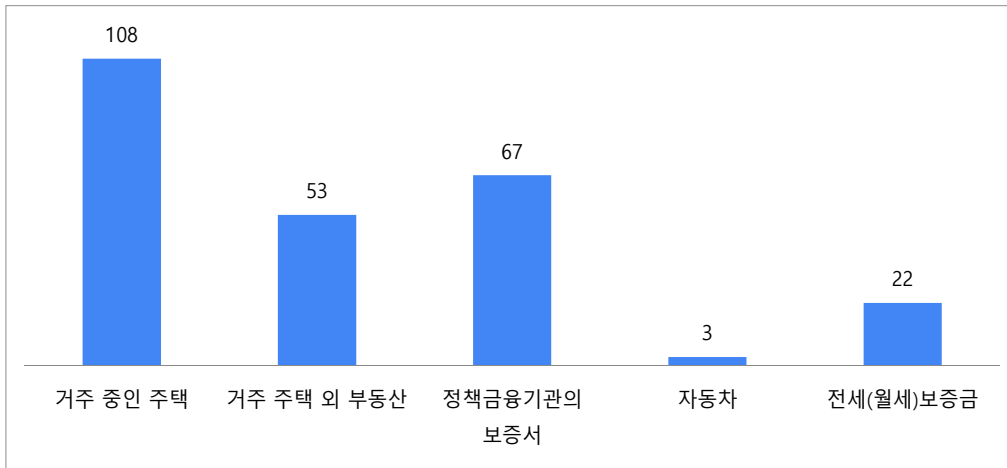
(12) 금융권 사업자금대출 중 담보대출의 비중

- 금융권의 사업자금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을 보면 ‘전부 신용대출’ 이 26.8%로 나타났으며, 이어 ‘50% 미만’ 이 26.5%, ‘100%(전부 담보대출)’ 25.5%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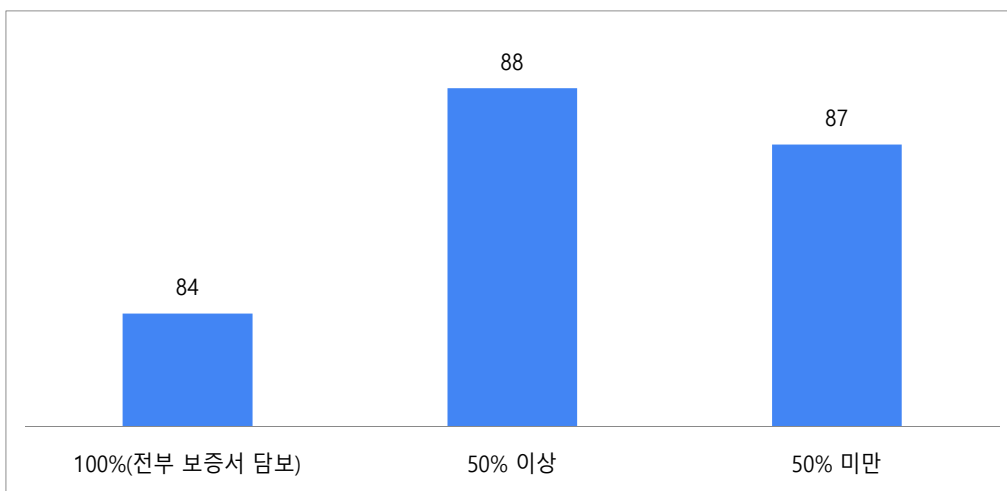
(13) 금융권 사업자금대출 중 담보대출의 담보 종류

□ 위 담보대출의 담보 종류로는 ‘거주 중인 주택’이 42.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서’ (26.5%)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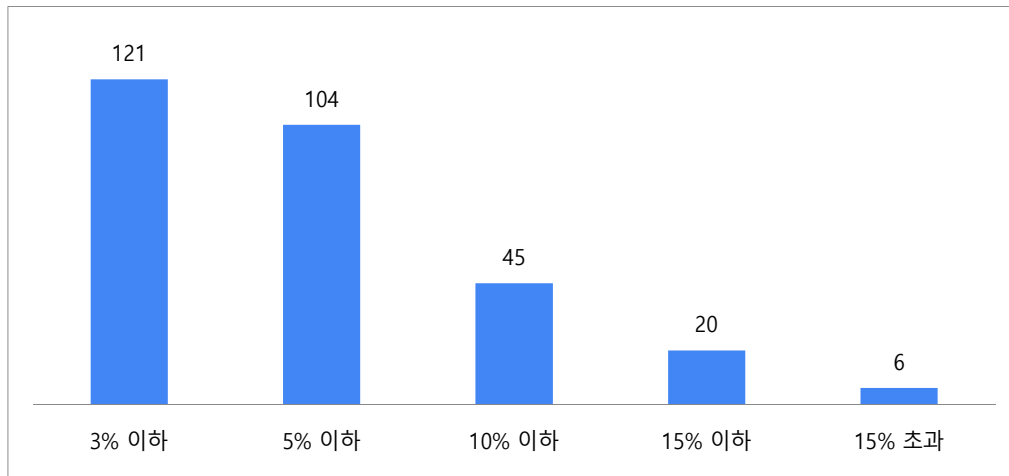
(14) 담보대출에서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서 담보대출 비중

□ 금융권 담보대출에서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서담보대출 비중을 보면, ‘50% 이상’이 34.0%로 나타났으며, 이어 ‘50% 미만’이 33.6%, ‘100%(전부 보증서 담보)’이 32.4%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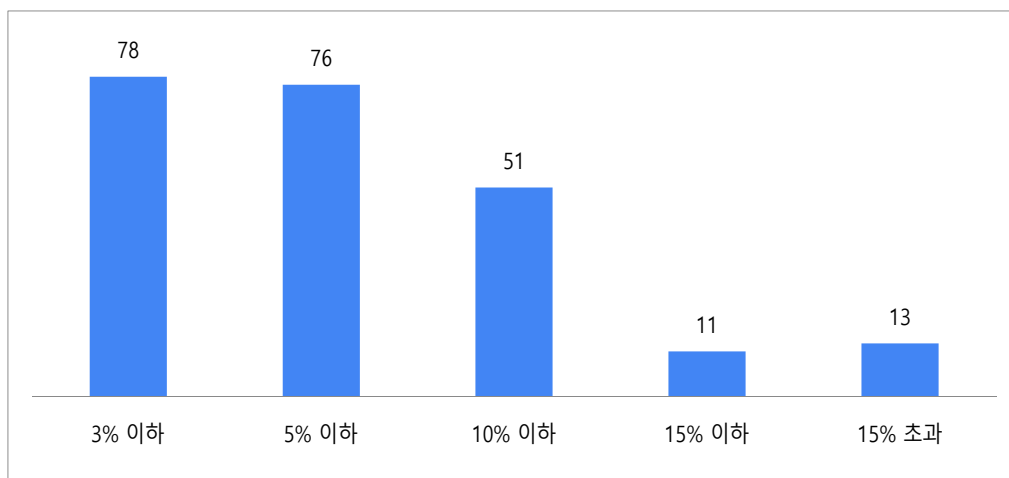
(15) 금융권 사업자금대출의 이자율(담보대출)

- 금융권 사업자금대출의 이자율(담보대출) 비중을 보면, ‘3% 이하’가 40.9%로 높게 나타났으며, ‘5% 이하’ (35.1%), ‘10% 이하’ (15.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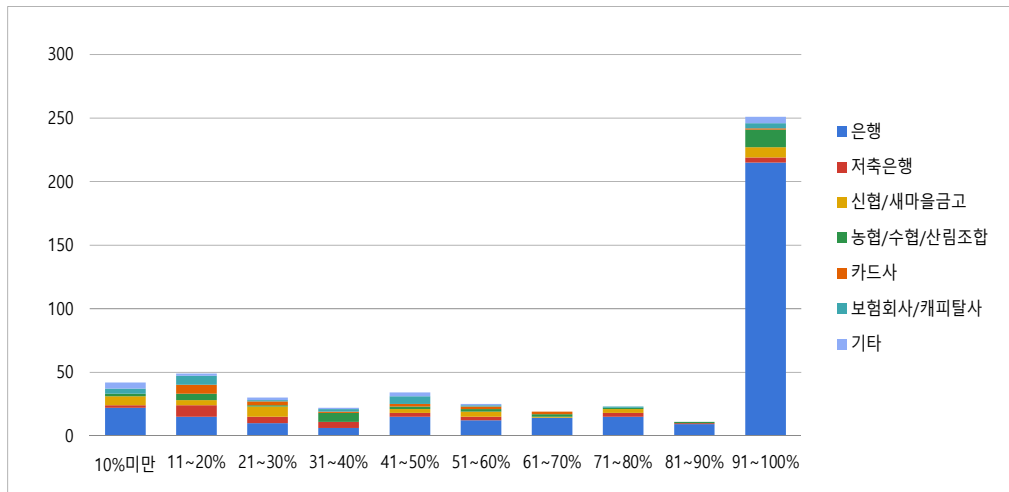
(16) 금융권 사업자금대출의 이자율(신용대출)

- 금융권 사업자금대출의 이자율(신용대출) 비중을 보면, ‘3% 이하’가 34.1%로 나타났으며, 이어 ‘5% 이하’ (33.2%), ‘10% 이하’ (22.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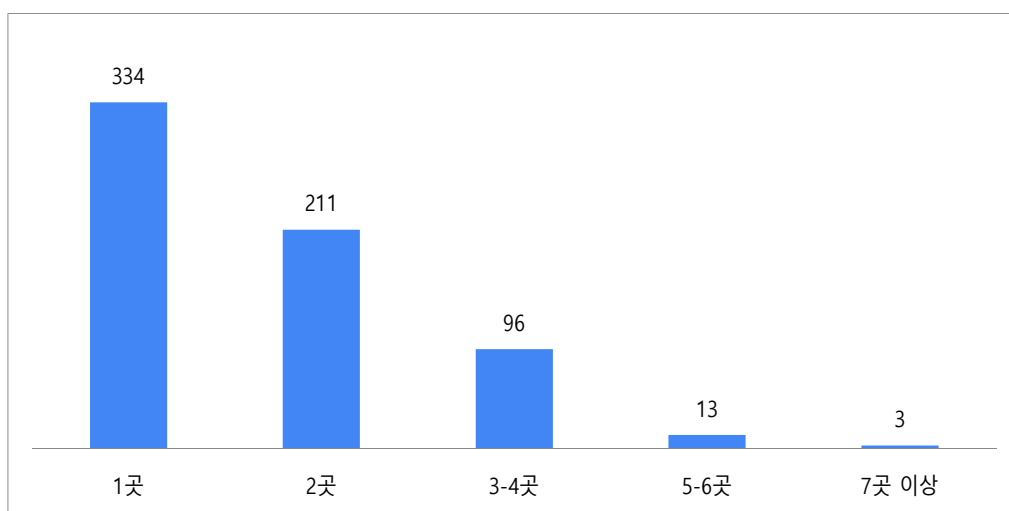
(17) 사업자금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의 형태별 비중

- 사업자금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의 형태별 비중을 보면, 91~100%의 경우 ‘은행’ 비율이 85.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농협/수협/산림조합’ (5.6%), ‘신협/새마을금고’ (3.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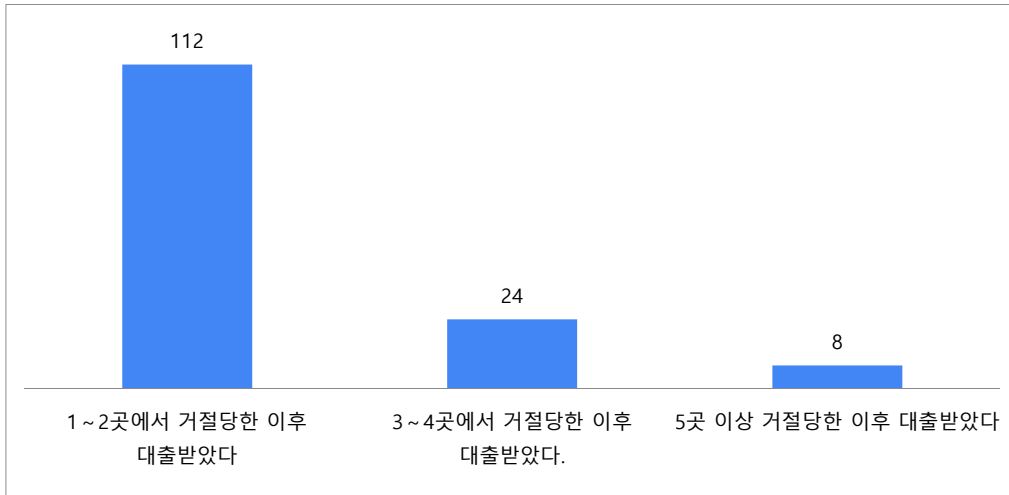
(18) 사업자금대출을 받은 금융회사 수

- 사업자금대출을 받은 금융회사 수를 보면, ‘1곳’이 50.8%로 가장 많았으며, ‘2곳’이 32.1%로 그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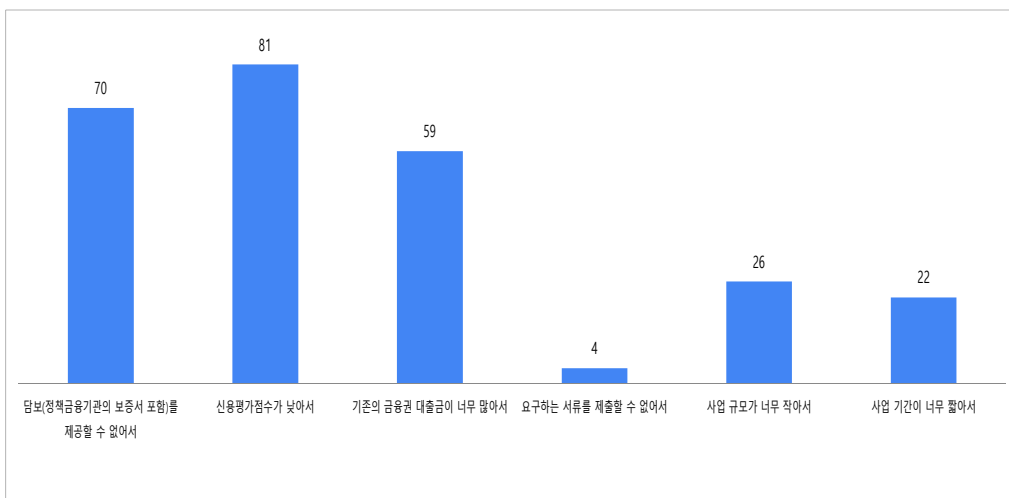
(19) 금융권 사업자금대출을 거절당한 횟수

- 금융권에서 사업자금대출을 거절당한 횟수를 보면, ‘1~2곳에서 거절당한 후 대출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7.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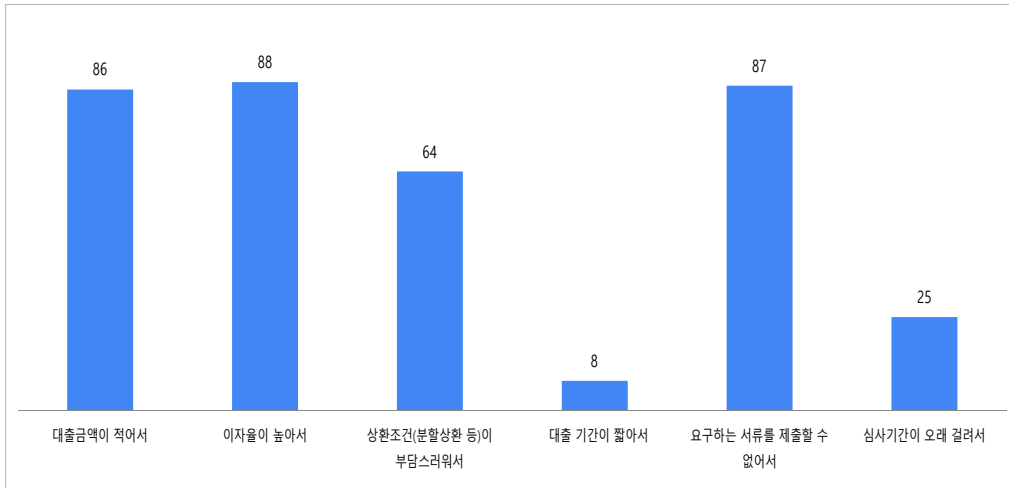
(20) 금융권에서 사업자금대출을 거절당한 사유

- 금융권에서 사업자금대출을 거절당한 이유를 보면, ‘신용평가점수가 낮아서’ (30.9%), ‘담보를 제공할 수 없어서’ (26.7%), ‘기존의 금융권 대출금이 너무 많아서’ (22.5%)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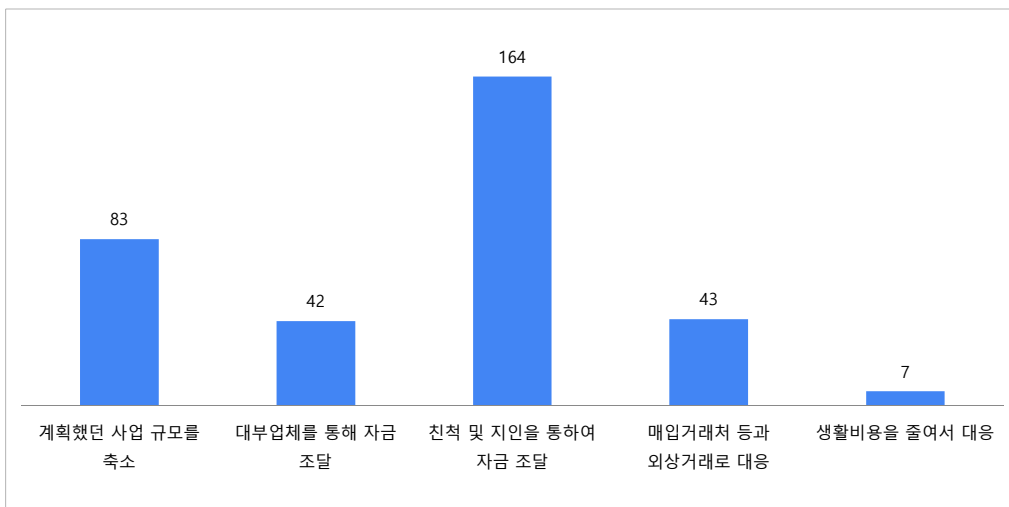
(21) 사업자금대출 상담과정에서 스스로 대출을 포기한 사유

- 사업자금대출 상담과정에서 스스로 대출받기를 포기한 이유로는 ‘이자율이 높아서’ (24.6%),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서’ (24.3%), ‘대출금액이 적어서’ (24.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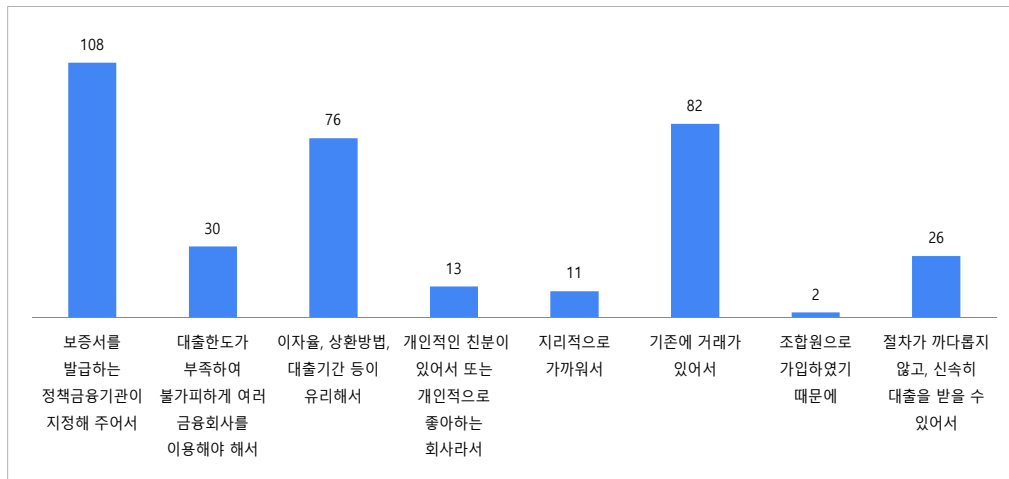
(22) 금융권에서 사업자금대출을 못 받은 경우 대응방법

- 금융권에서 사업자금대출을 못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묻는 질의에서는 ‘친척 및 지인을 통하여 자금 조달’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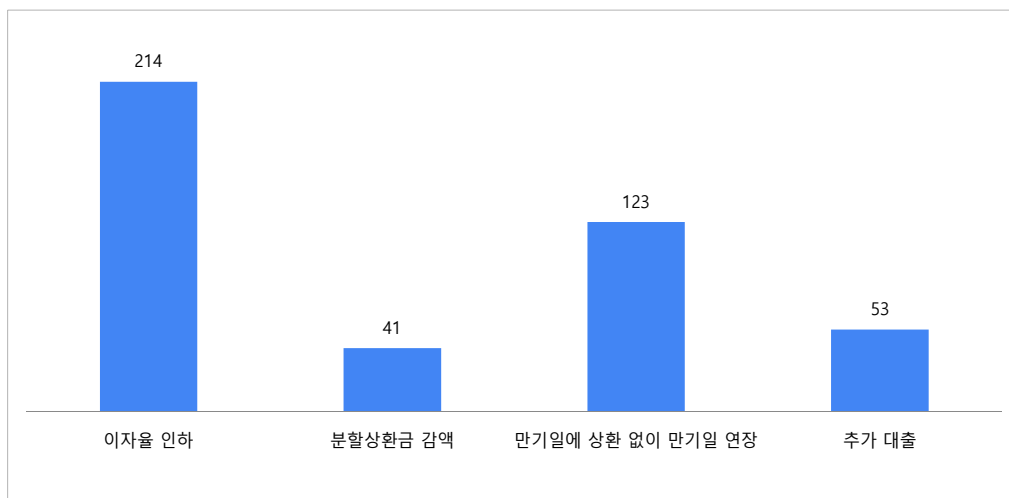
(23) 사업자금대출 받을 시 금융회사의 선택 기준

- 금융권에서 사업자금대출을 받을 때 금융회사의 선택 기준으로는 ‘보증서를 발급하는 정책금융기관이 지정해 주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31.0%로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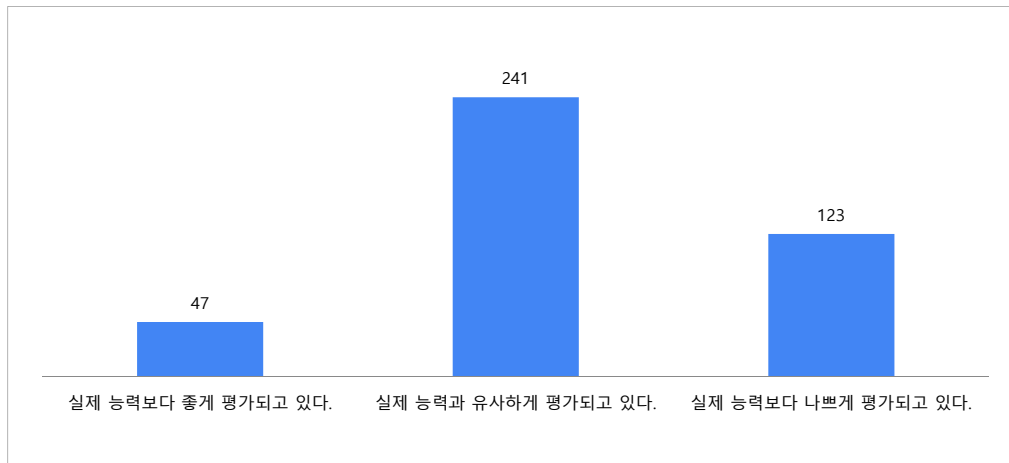
(24) 금융권 사업자금대출 관련 희망사항

- 금융권 사업자금대출 관련 희망사항을 묻는 질의에서는 ‘이자율 인하’ 라고 응답한 비율이 49.7%로 가장 높았으며, ‘만기일에 상환 없이 만기일 연장’ 이 28.5%로 그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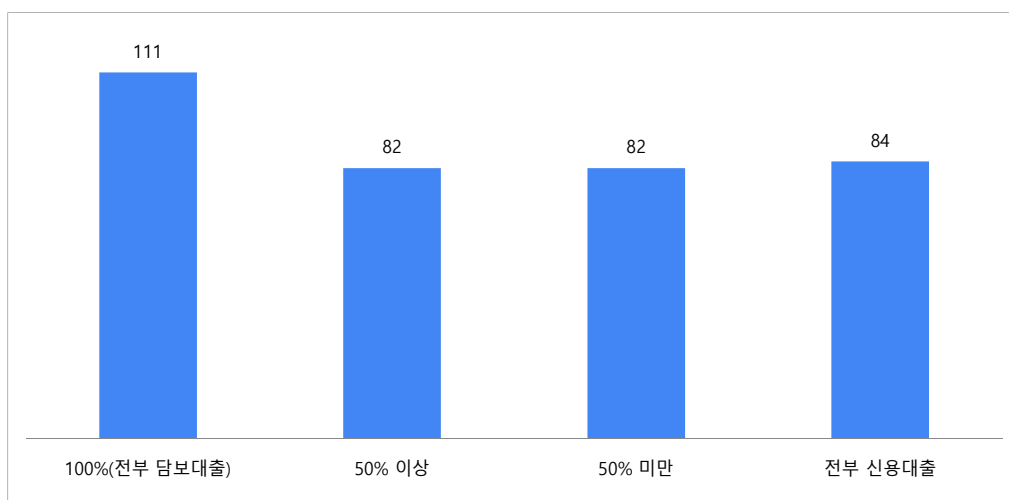
(25) 신용평가점수의 대출금 상환능력 반영 여부

- 신용평가점수가 대출금 상환능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서는 ‘실제 능력과 유사하게 평가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8.6%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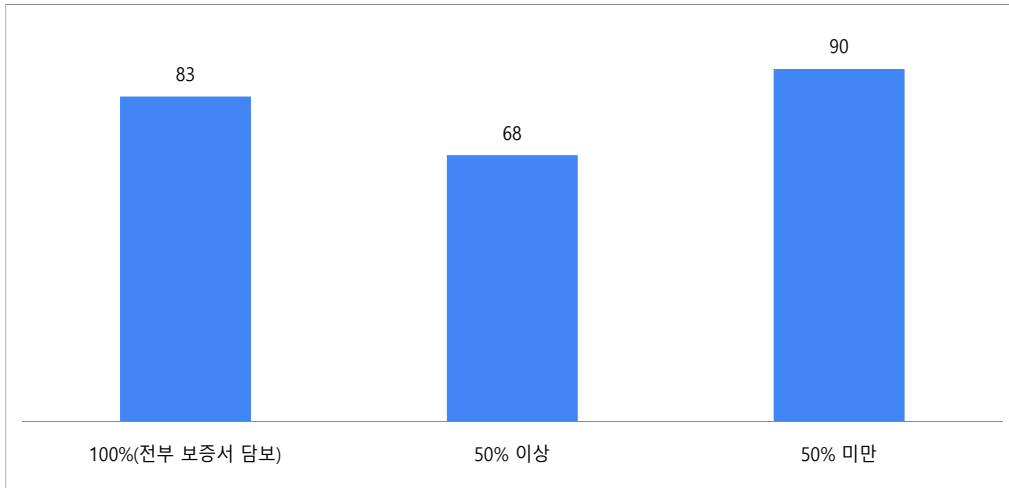
(26) 금융권 사업자금대출 중 담보대출(정책금융기관의 보증서담보 포함) 비중

- 금융권 사업자금대출 중 담보대출(정책금융기관의 보증서담보 포함) 비중을 보면, ‘100%(전부 담보대출)’가 30.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부 신용대출’ (23.4%), ‘50% 이상’ (22.8%)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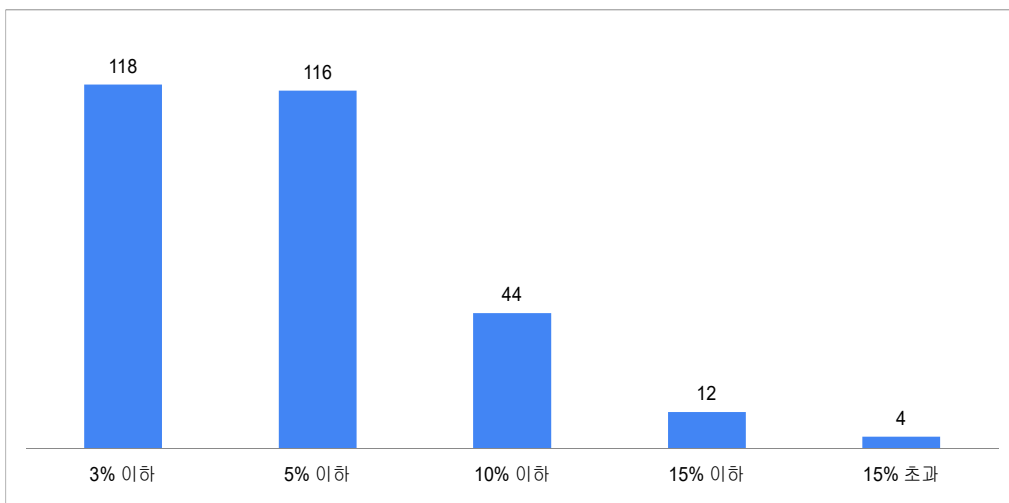
(27) 담보대출 중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서담보대출 비중

- 담보대출 중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서담보대출 비중을 보면, ‘50% 미만’이 37.3%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100%(전부 보증서 담보)’는 34.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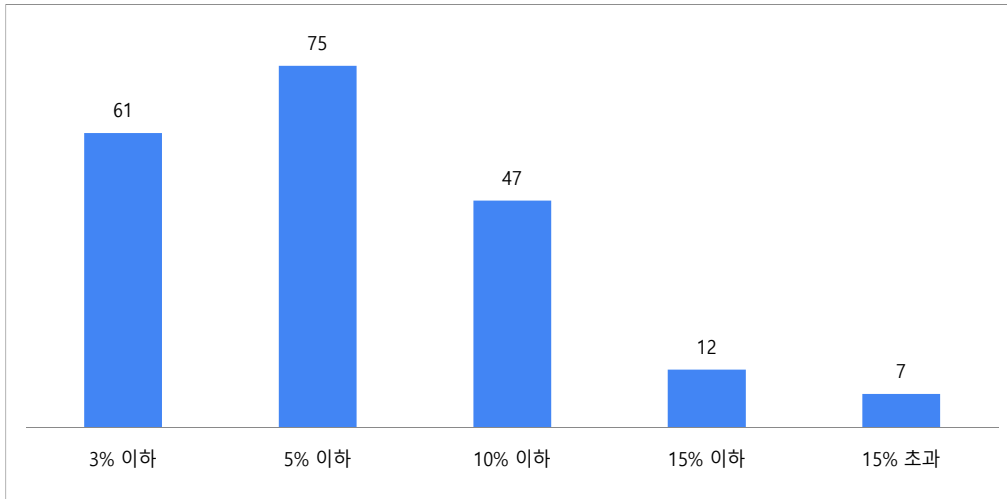
(28) 금융권 사업자금대출의 이자율 (담보대출)

- 금융권의 사업자금대출의 이자율(담보대출) 비중을 보면, ‘3% 이하’가 40.1%로 나타났으며, 이어 ‘5% 이하’ (39.5%), ‘10% 이하’ (15.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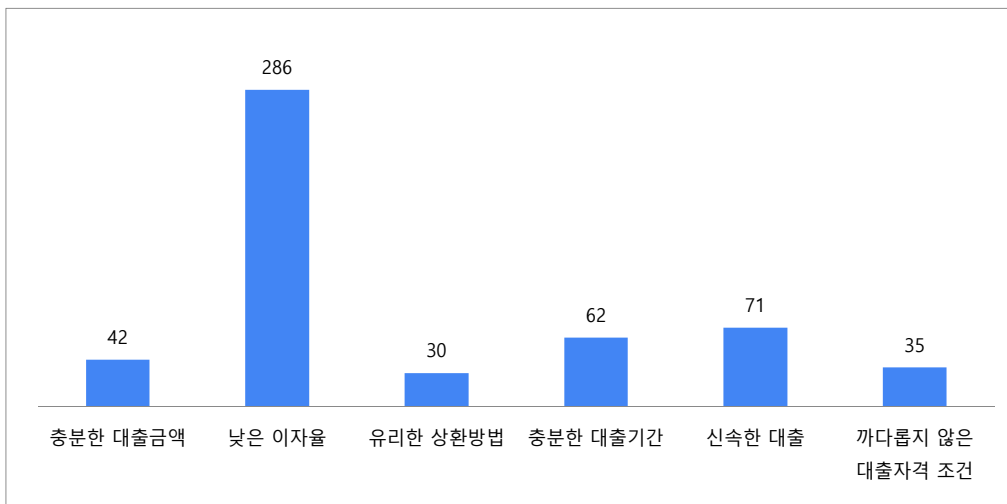
(29) 은행권 사업자금대출의 이자율 (신용대출)

- 금융권 사업자금대출의 이자율(신용대출) 비중을 보면, ‘5% 이하’가 37.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3% 이하’ (30.2%), ‘10% 이하’ (23.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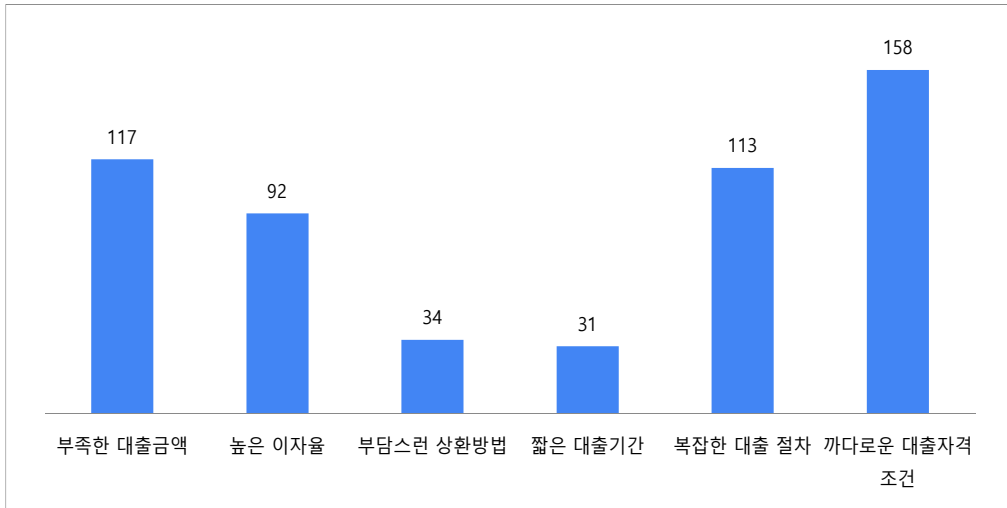
(30) 금융권 사업자금대출에서 만족하는 항목

- 금융권 사업자금대출에 대해 만족하는 항목을 보면, ‘낮은 이자율’이 54.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신속한 대출’ (13.5%), ‘충분한 대출기간’ (11.8%)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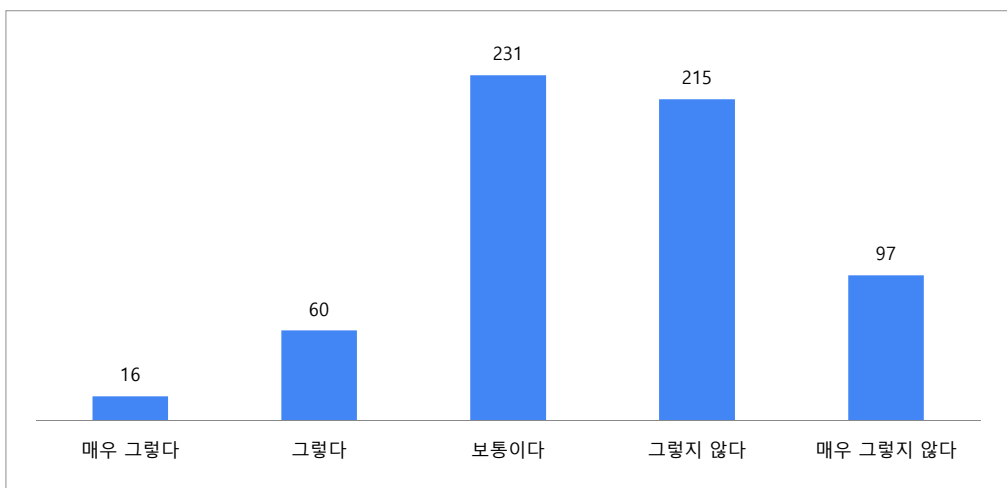
(31) 금융권 사업자금대출에서 불만족하는 항목

□ 금융권 사업자금대출에 대해 불만족하는 항목을 보면, ‘까다로운 대출 자격조건’이 29.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족한 대출금액’ (21.5%), ‘복잡한 대출 절차’ (20.7%)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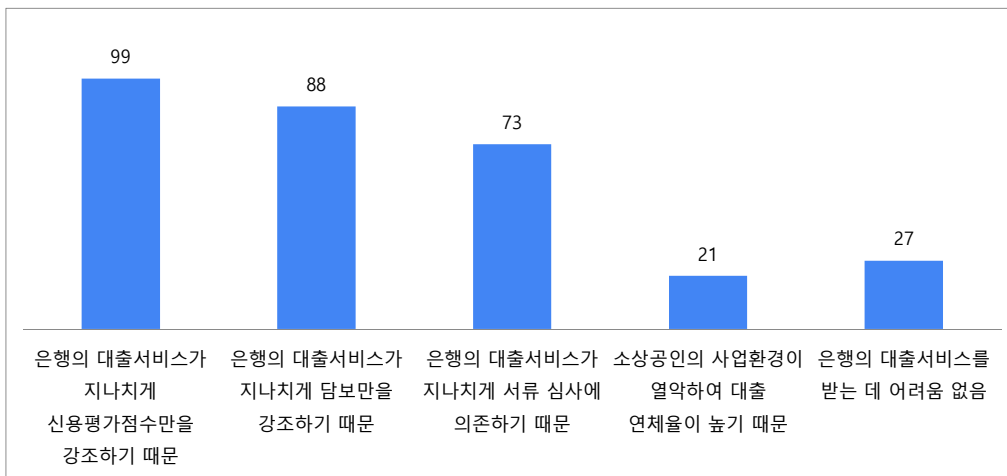
(32) 은행의 소상공인 대상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서 담보대출 외에 일반 사업자금대출 승인 여부

□ 은행이 소상공인에게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서담보대출 외에 일반적인 사업자금대출을 잘 해주고 있는가라는 질의에서는 ‘보통이다’가 37.3%로, ‘그렇지 않다’가 34.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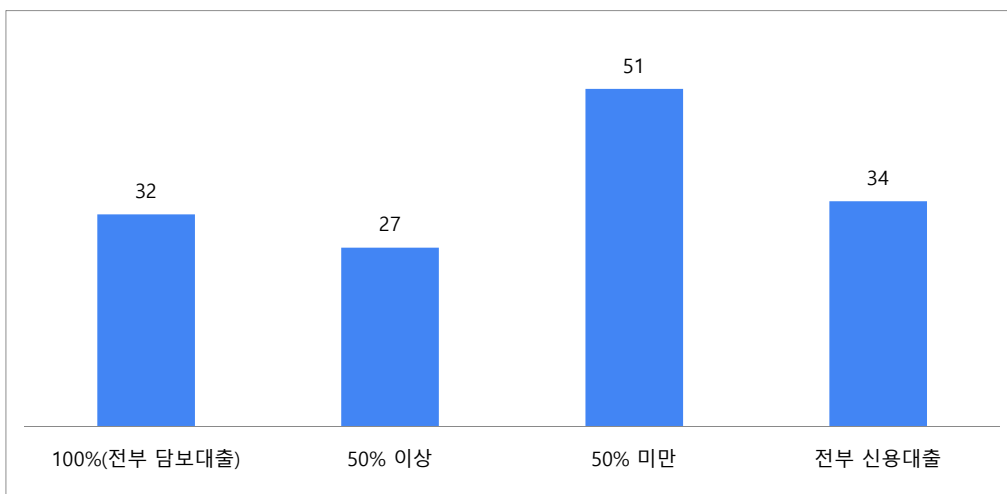
(33)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정책금융기관의 담보대출 외에 사업자금대출 받기가 어려운 이유

□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서담보대출 외에 일반적인 사업자금대출 받기가 어려운 이유로는 ‘은행의 대출서비스가 신용평가 점수만을 강조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2.1%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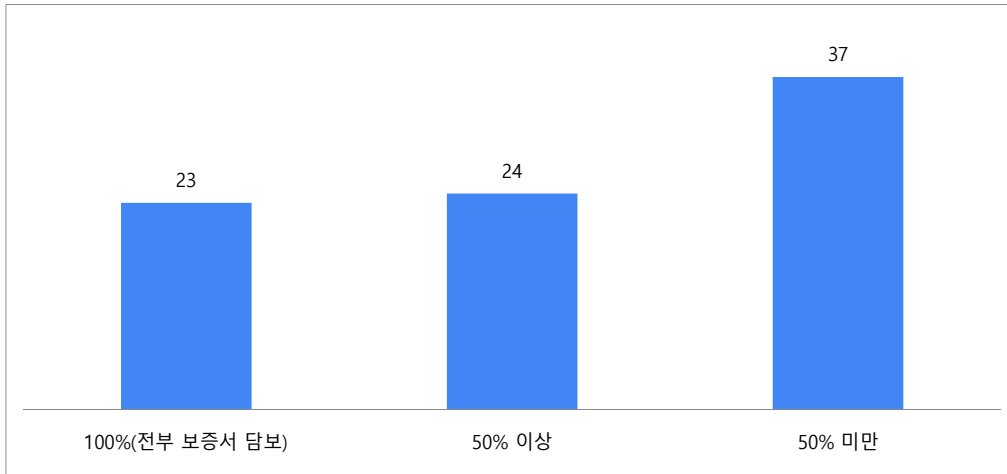
(34) 2금융권 사업자금대출에서 담보대출의 비중

□ 2금융권 사업자금대출에서 담보대출 비중을 보면, ‘50% 미만’이 35.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부 신용대출’ (23.6%), ‘100%(전부 담보대출)’ (22.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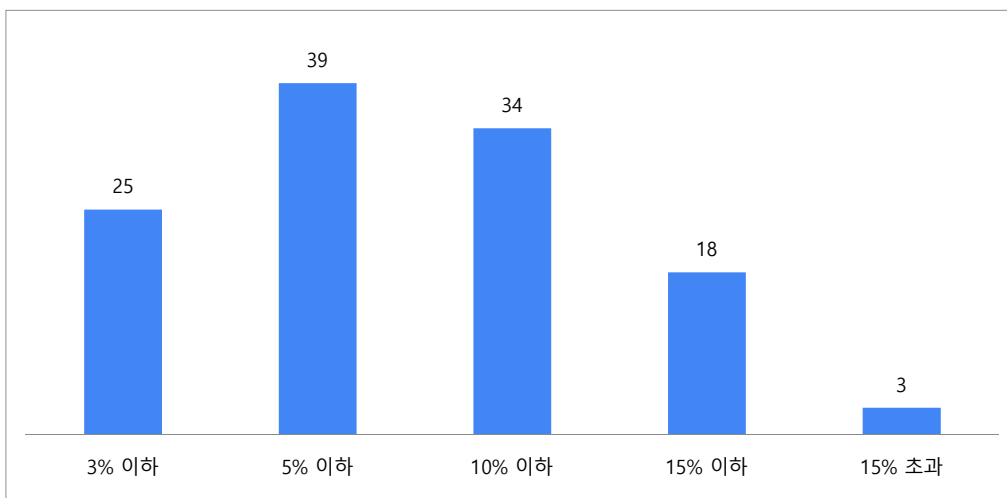
(35) 담보대출 중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서담보대출 비중

- 2금융권 담보대출 중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서담보대출 비중을 보면, ‘50% 미만’ 이 44.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50% 이상’ (28.6%), ‘100%(전부 보증서담보)’ (27.4%)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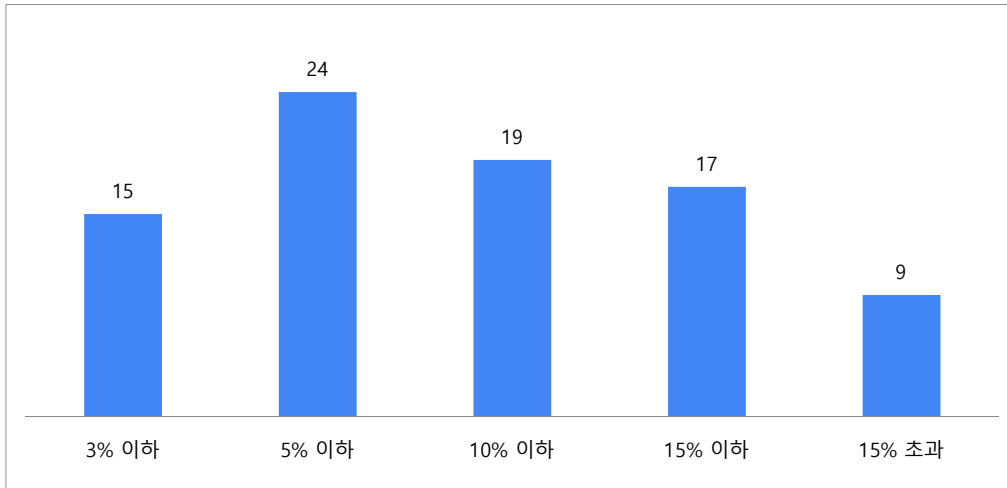
(36) 2금융권 사업자금대출의 이자율 비중 (담보대출)

- 2금융권 사업자금대출의 이자율(담보대출) 비중을 보면 ‘5% 이하’ 가 32.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10% 이하’ (28.6%), ‘3% 이하’ (21.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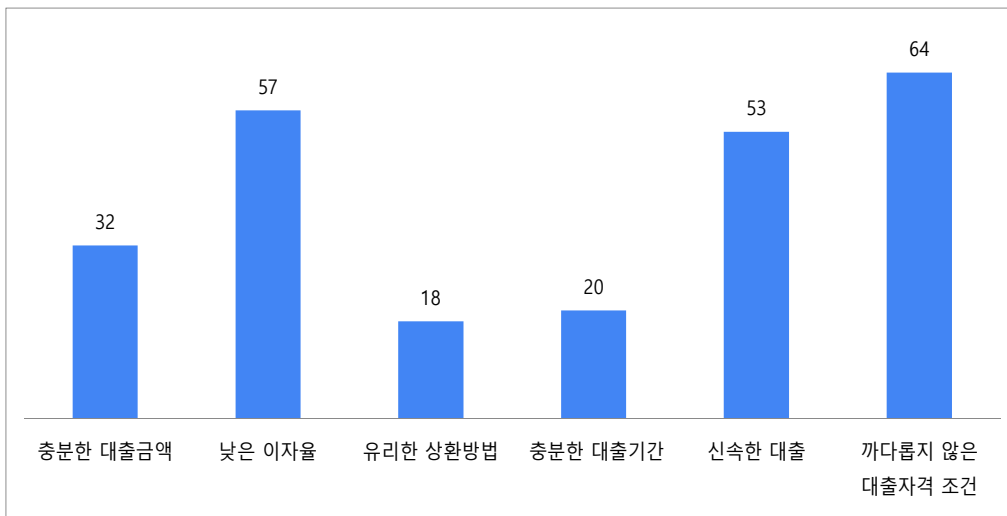
(37) 2금융권 사업자금대출의 이자율 (신용대출)

- 2금융권 사업자금대출의 이자율(신용대출) 비중을 보면 ‘5% 이하’가 28.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10% 이하’ (22.6%), ‘15% 이하’ (20.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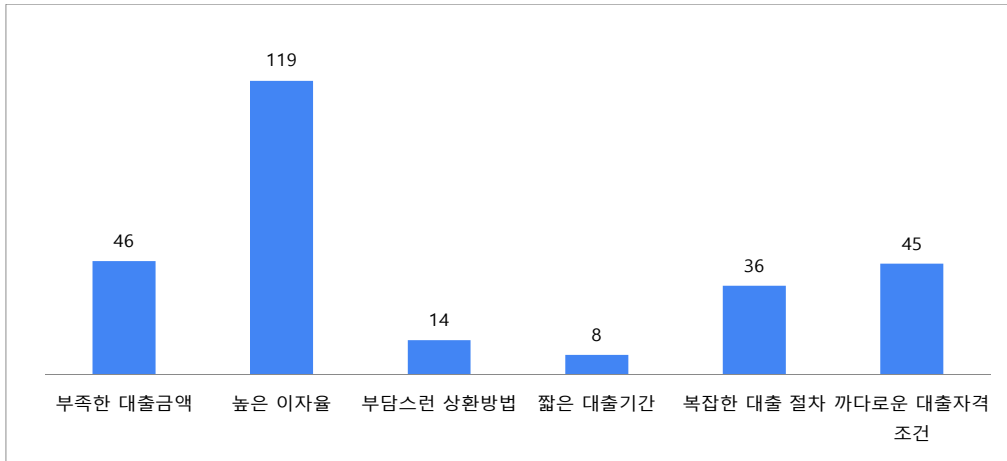
(38) 2금융권 사업자금대출에서 만족하는 항목

- 2금융권 사업자금대출에 대해 만족하는 항목을 보면, ‘까다롭지 않은 대출자격 조건’이 26.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낮은 이자율’ (23.4%), ‘신속한 대출’ (21.7%)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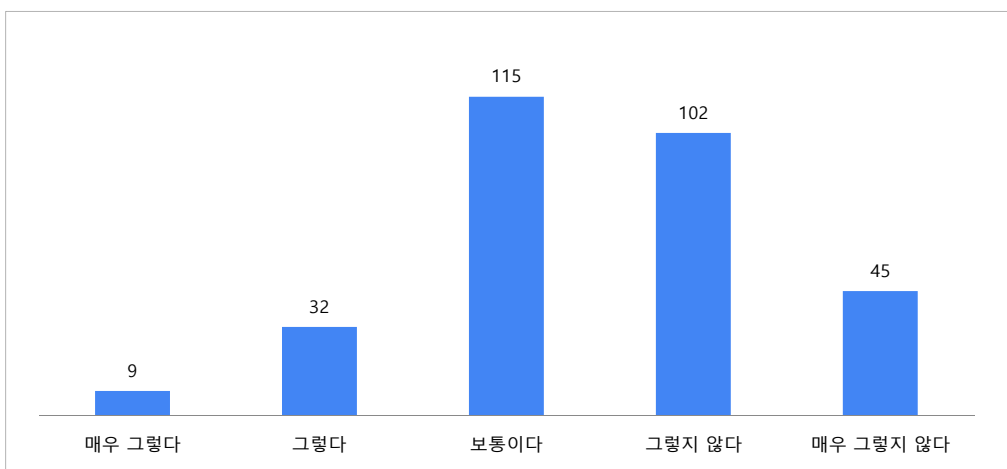
(39) 2금융권 사업자금대출에서 불만족 하는 항목

□ 2금융권 사업자금대출에 대해 불만족 하는 항목을 보면 ‘높은 이자율’이 44.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까다로운 대출자격 조건’ (17.2%), ‘부족한 대출금액’ (1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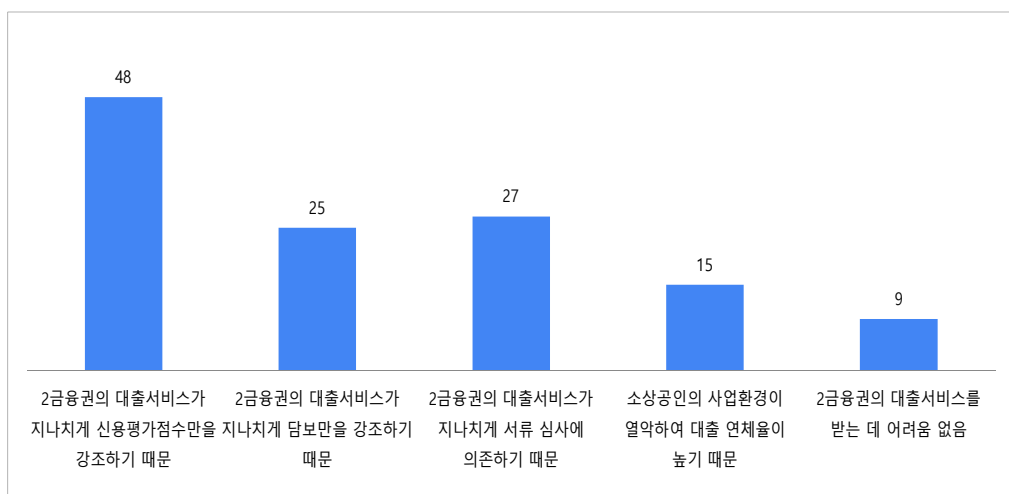
(40) 2금융권 금융회사가 소상공인 대상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서 담보대출 외에 일반 사업자금대출 승인

□ 2금융권 금융회사가 소상공인에게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서담보대출 외에 일반적인 사업자금대출을 잘 해주고 있는가라는 질의에서는 ‘보통이다’가 38.0%, ‘그렇지 않다’가 33.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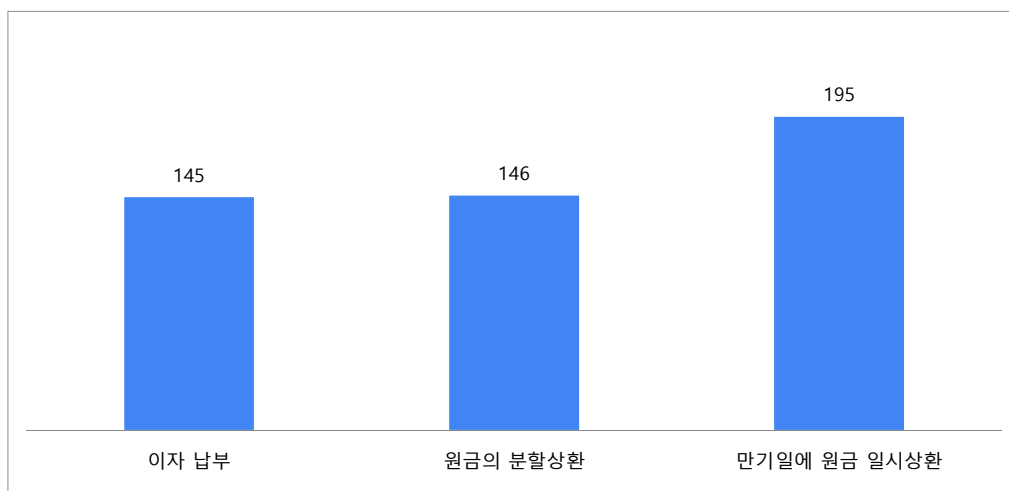
(41) 소상공인이 2금융권에서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서 담보대출 외에 일반 사업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유

- 소상공인이 2금융권에서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서담보대출 외에 일반적인 사업자금대출을 받는 데 어려운 이유로는 ‘2금융권의 대출서비스가 지나치게 신용평가점수만을 강조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8.7%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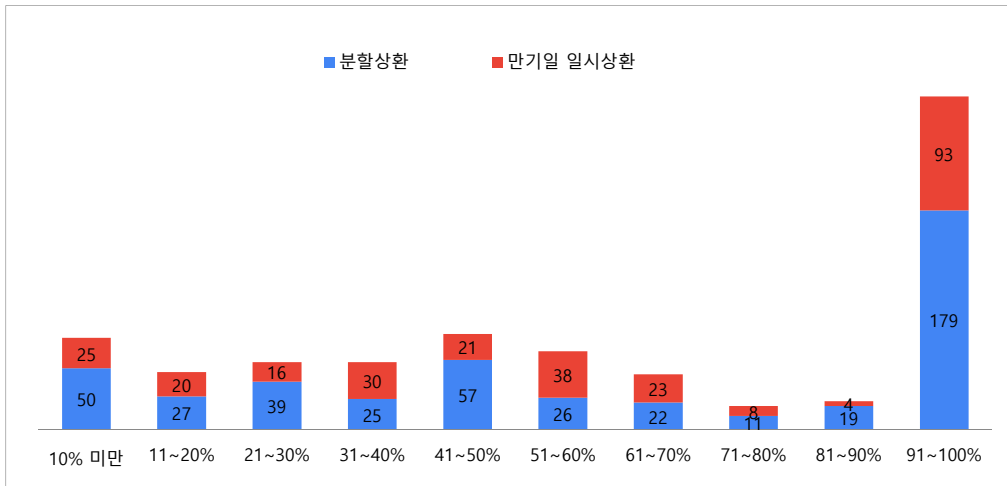
(42) 금융권 사업자금대출 상환 관련하여 부담스러운 항목

- 금융권 사업자금대출 상환과 관련해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만기일에 원금 일시상환’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1%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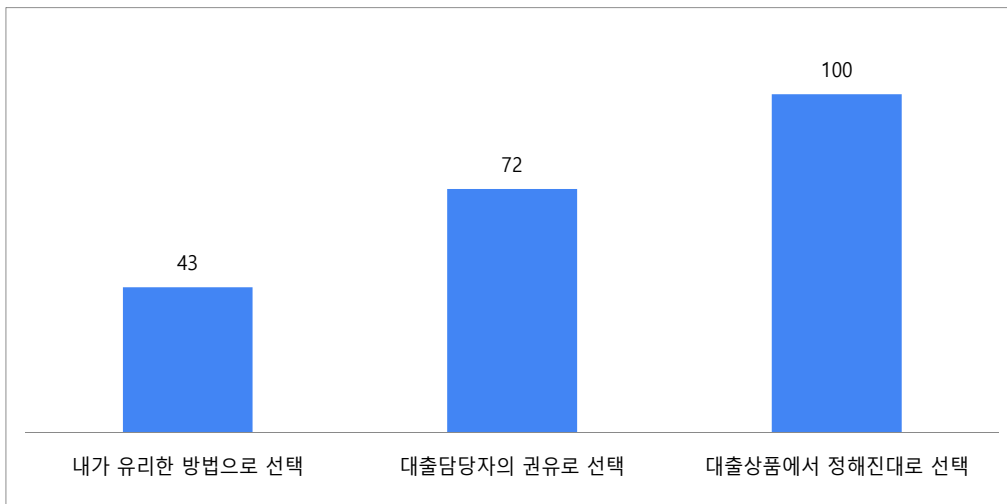
(43) 금융권 사업자금대출 원금의 상환방법 비중

□ 금융권 사업자금대출 원금의 상환방법 비중을 보면, 91~100%의 경우 ‘분할 상환’이 65.8%로, ‘만기일 일시상환’이 34.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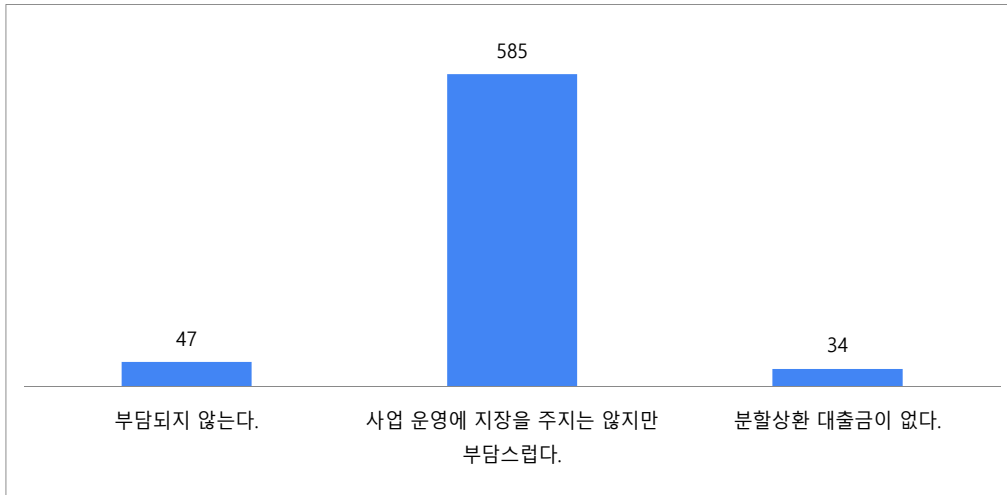
(44) 금융권 사업자금대출의 상환방법

□ 금융권 사업자금대출의 상환방법을 묻는 질의에서는 ‘대출상품에서 정해진 대로 선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6.5%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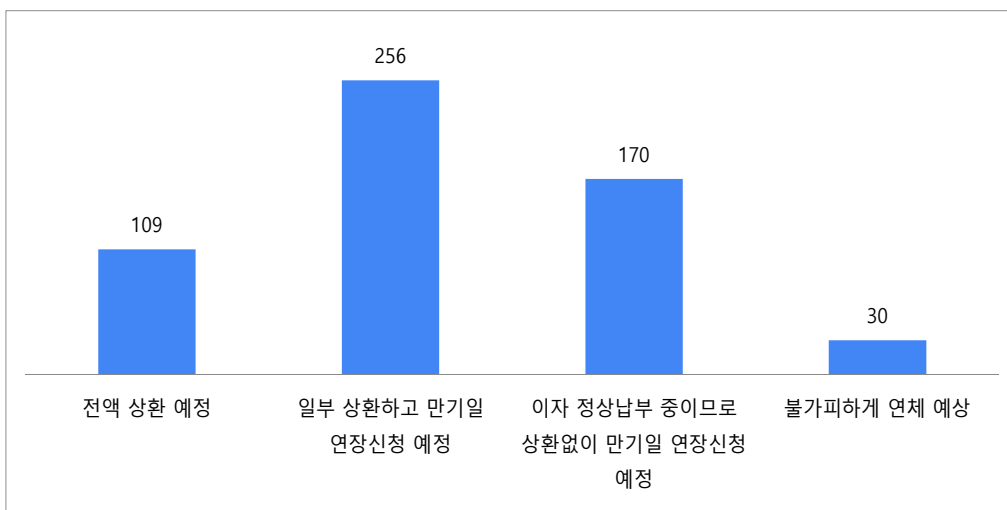
(45) 원금의 분할상환금 마련에 대한 부담 정도

- 원금의 분할상환금 마련에 대한 부담 정도를 묻는 질의에서는 ‘사업 운용에 지장을 주진 않지만 부담스럽다’ 고 응답한 비율이 87.8%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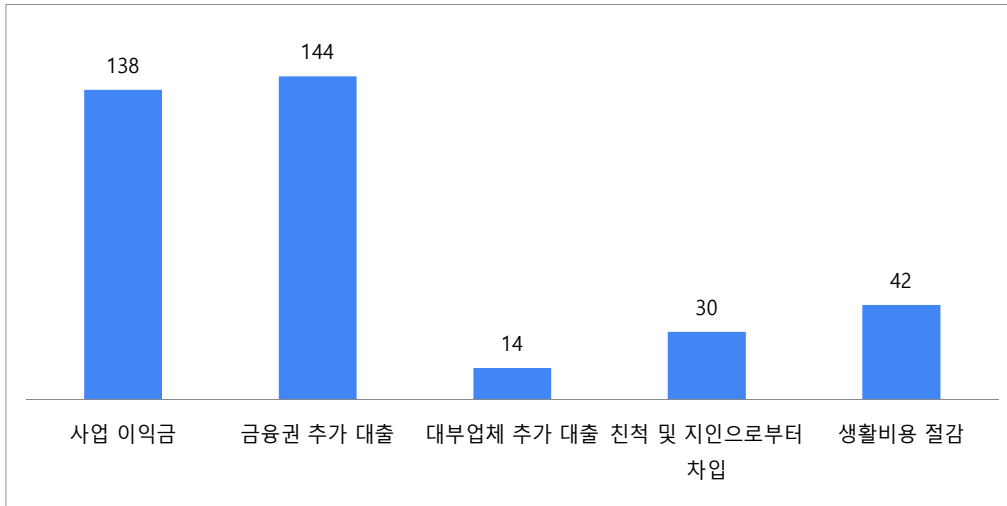
(46) 원금의 만기일 일시상환대출의 상환대책

- 원금의 만기일 일시상환대출의 상환대책으로 ‘일부 상환하고 만기일 연장신청’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3%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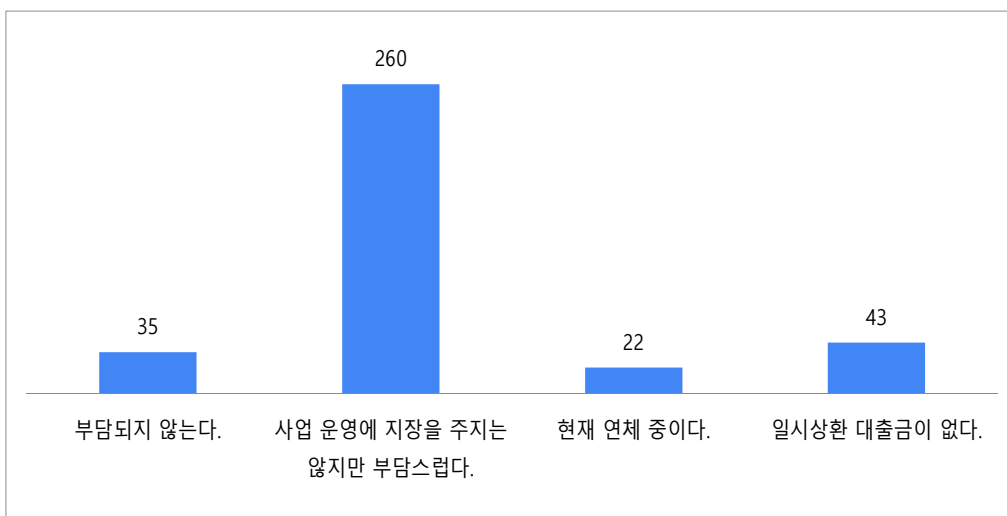
(47) 일시상환대출 만기일의 상환금 마련방법

- 일시상환대출의 만기일에 전액 또는 일부 상환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질의에서는 ‘금융권 추가 대출’ 39.1%, ‘사업 이익금’ 37.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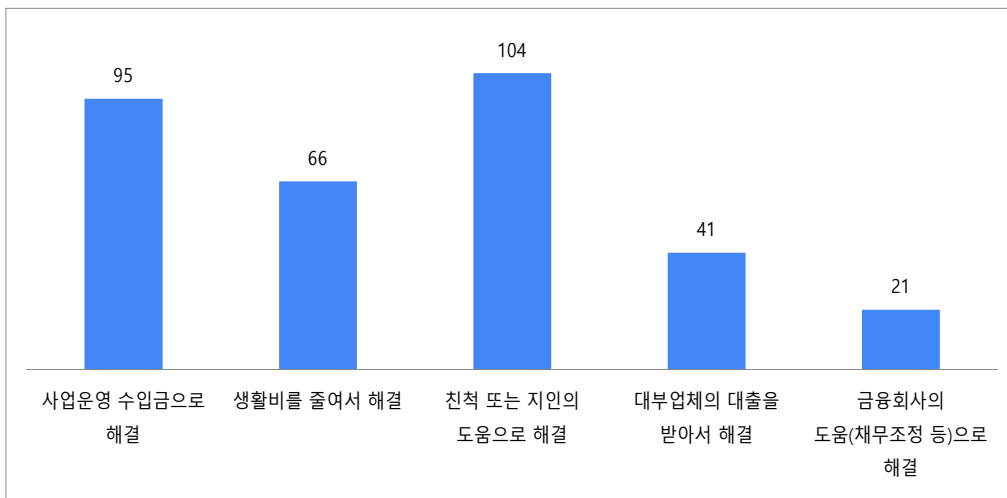
(48) 원금의 만기일 일시상환대출 상환금 마련 부담 정도

- 원금의 만기일 일시상환대출의 상환금 마련에 대한 부담 정도를 묻는 질의에서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진 않지만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72.2%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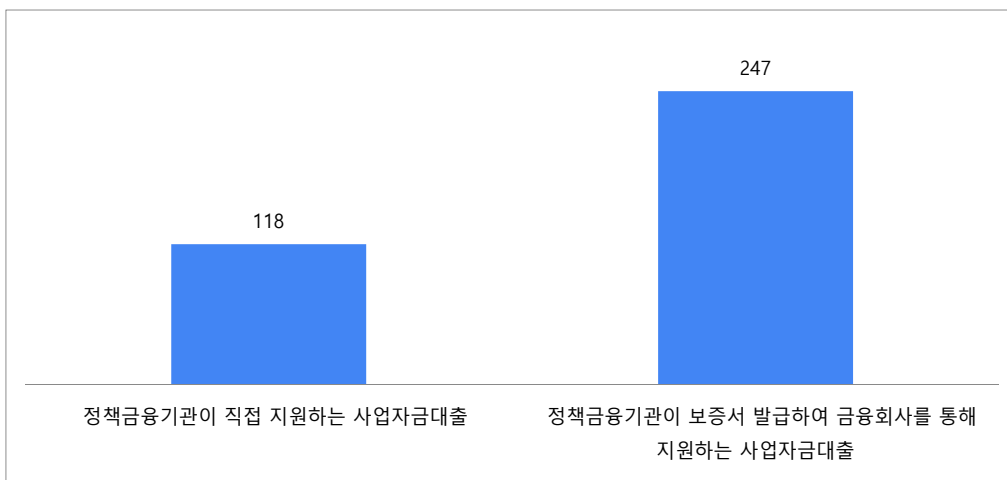
(49) 금융권 사업자금대출 이용에서 이자/ 원금 연체경험 여부

- 금융권 사업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자 또는 원금을 연체한 경험이 있는 경우 해결책으로는 ‘친척 또는 지인의 도움으로 해결’ 했다는 응답이 31.8%, ‘사업운영 수익금으로 해결’ 응답이 29.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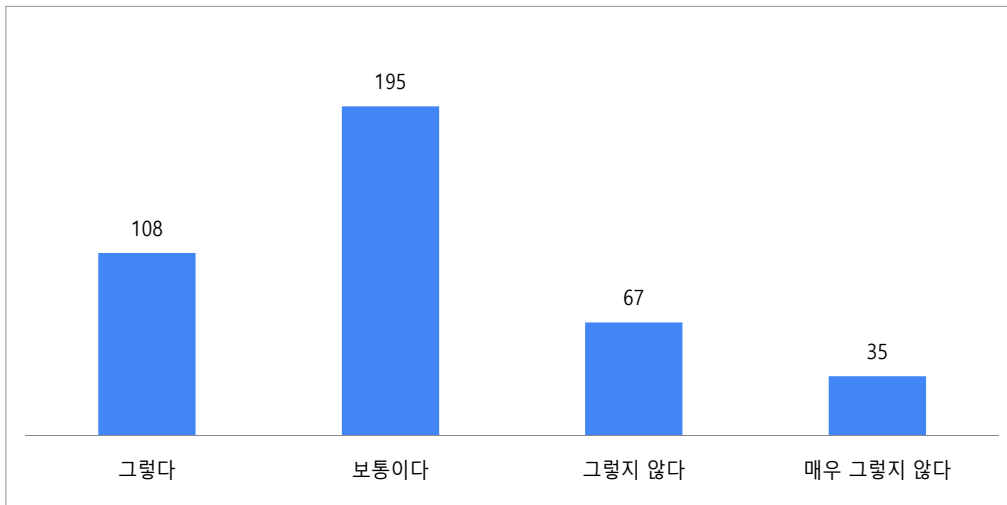
(50) 정책금융기관의 서비스 이용

- 정책금융기관의 서비스 이용경험을 묻는 질의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이 보증서 발급하여 금융회사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자금대출’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7.7%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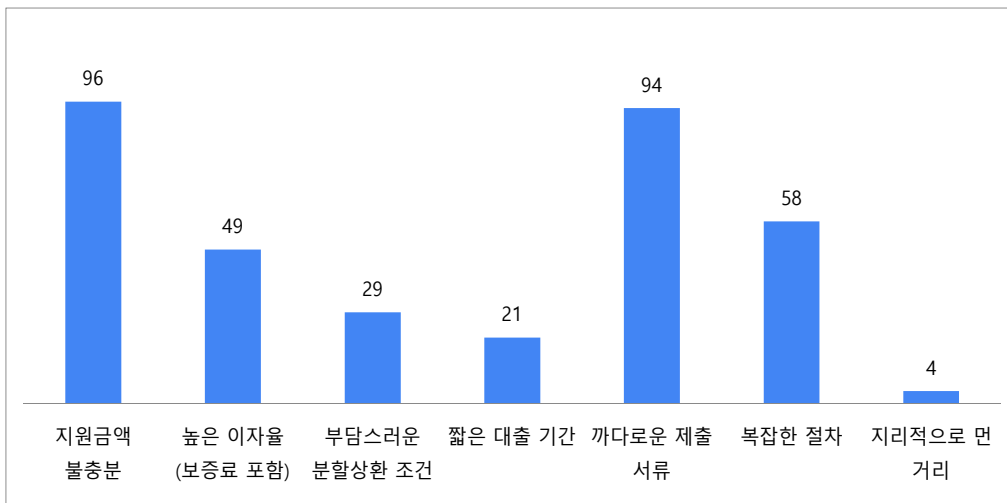
(51) 사업자금대출 관련 정책금융기관의 서비스(직접 대출, 보증서 발급)
만족 정도

□ 사업자금대출 관련 정책금융기관의 서비스(직접대출, 보증서 발급)에 만족하는가라는 질의에서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26.7%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는 48.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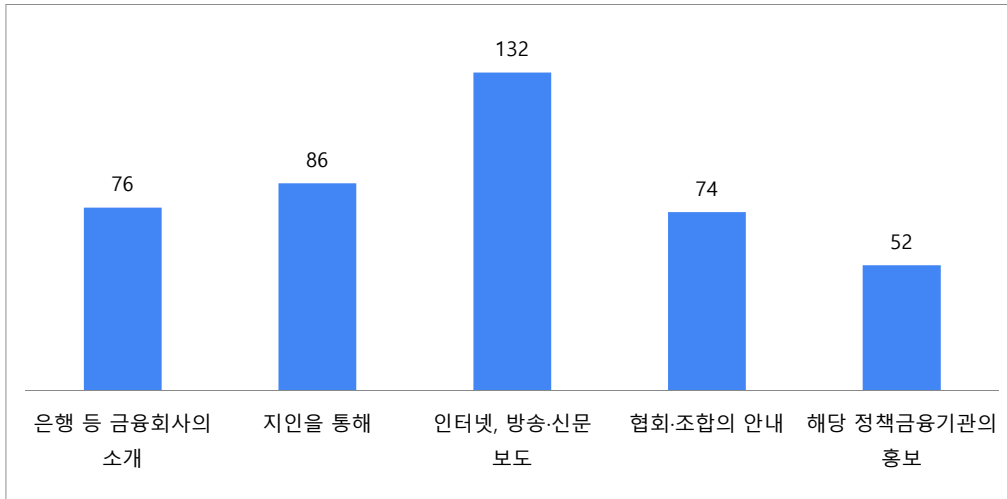
(52) 사업자금대출 관련 정책금융기관 서비스의 불만족 항목

□ 사업자금대출 관련 정책금융기관의 서비스에 불만족 하는 이유로는 ‘지원금액 불충분’ 이 27.4%로, ‘까다로운 제출서류’ 가 26.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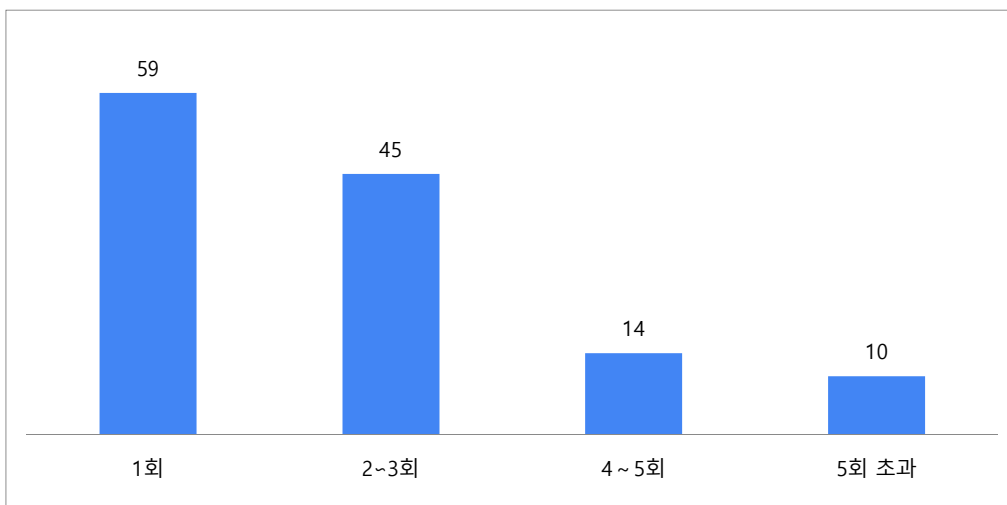
(53) 사업자금대출 관련 정책금융기관 서비스를 알게 된 경로

- 사업자금대출 관련 정책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알게 된 경로로는 ‘인터넷, 방송신문 보도’가 31.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인을 통해’ (20.5%), ‘지인을 통해’ (18.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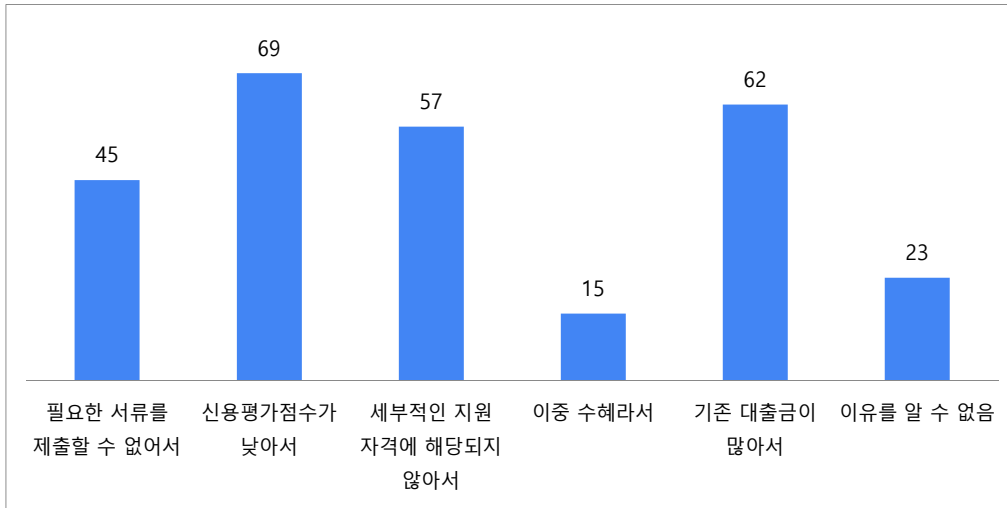
(54) 정책금융기관의 서비스 이용 시 거절당한 경험

- 정책금융기관의 서비스 이용 시 거절당한 경험을 묻는 질의에서는 ‘1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46.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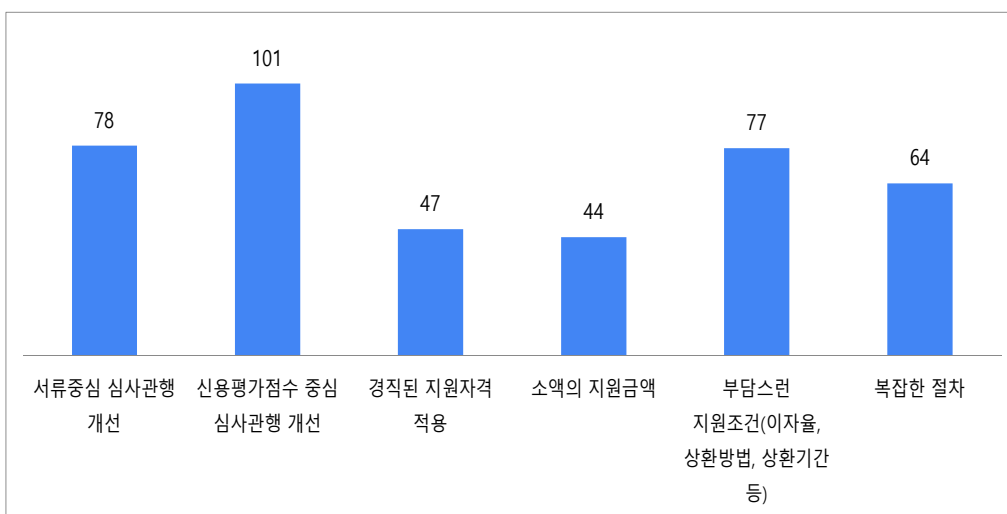
(55) 정책금융기관의 서비스 이용 시 거절당한 사유

- 정책금융기관의 서비스 이용 시 거절당한 이유로는 ‘신용평가점수가 낮아서’가 25.5%로 가장 많았고, ‘기존 대출금이 많아서’ (22.9%), ‘세부적인 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서’ (21.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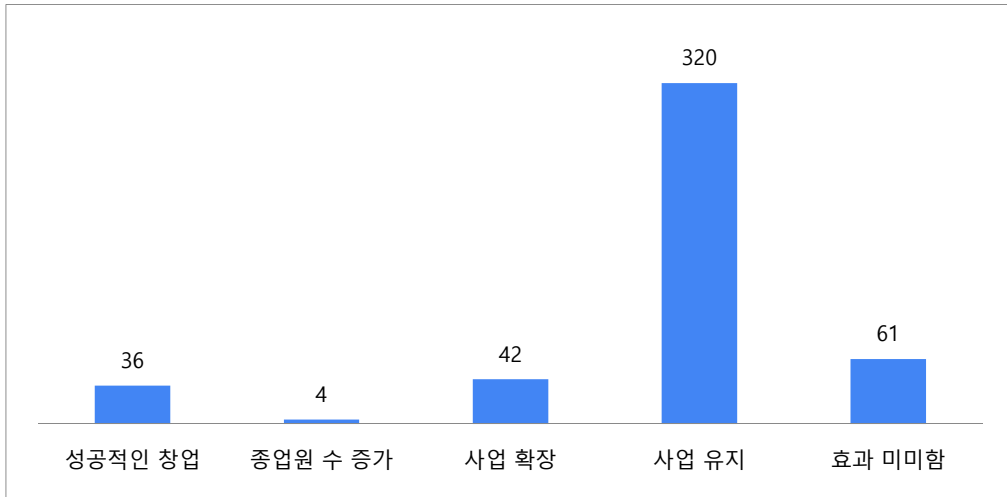
(56) 소상공인 지원확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개선사항

-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개선할 사항으로는 ‘신용평가점수 중심의 심사관행 개선’이 24.6%로, ‘서류중심의 심사관행 개선’이 19.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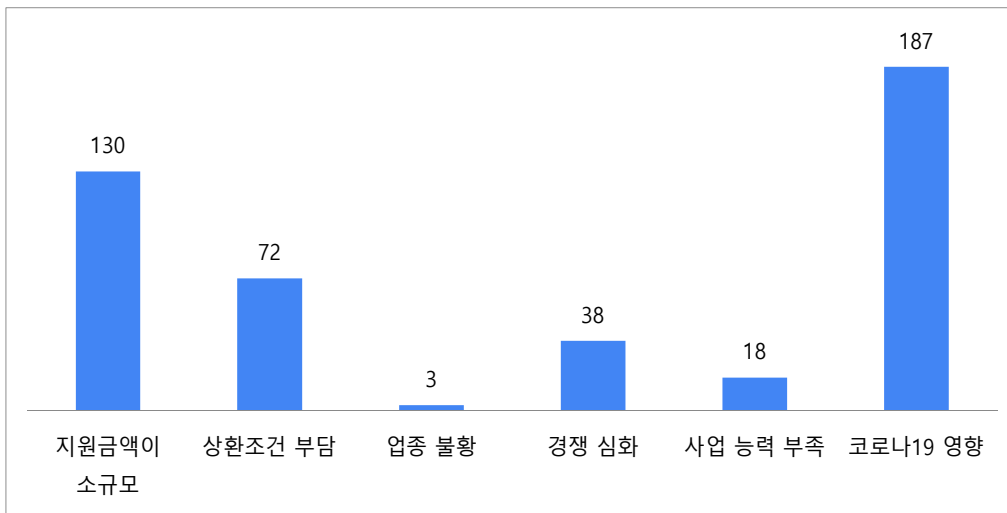
(57)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권 사업자금대출 지원 효과

-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권의 사업자금대출을 지원받은 효과를 묻는 질의에서는 ‘사업 유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69.1%로 매우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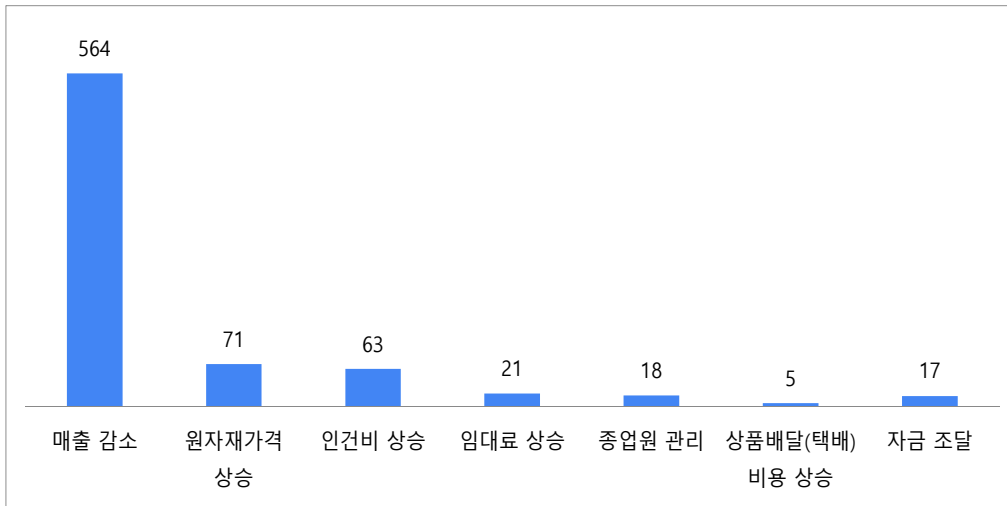
(58) 금융권의 사업자금대출 지원효과가 미미한 이유

- 금융권의 사업자금대출 지원효과가 미미한 이유로는 ‘코로나19 영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지원금액이 소규모’ (29.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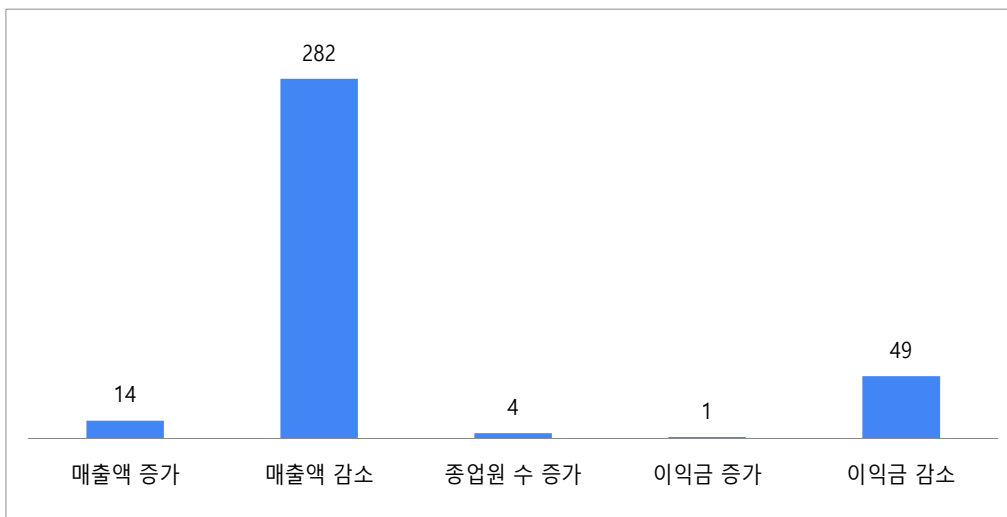
(59) 현재 경영상의 애로사항

□ 현재 상황에서의 경영 애로사항을 묻는 질의에서 ‘매출액 감소’라고 응답한 비율이 74.3%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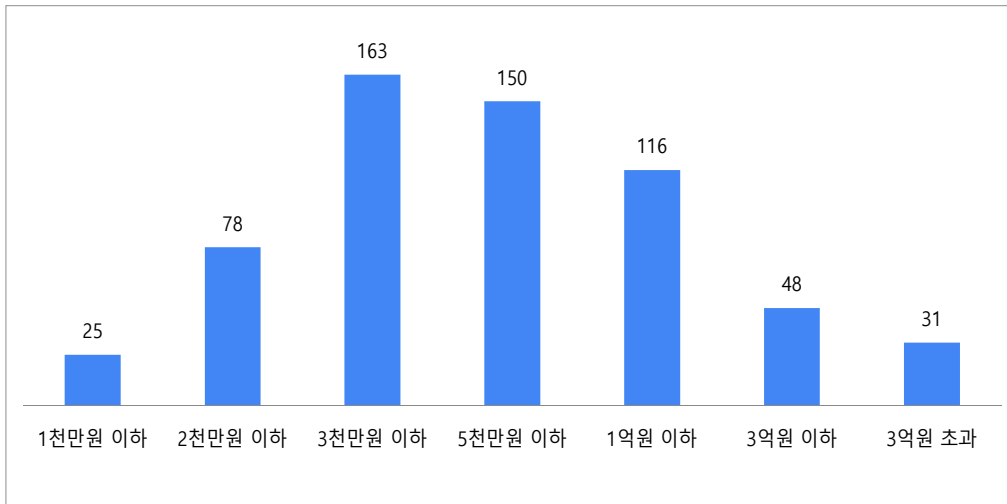
(60) 코로나19가 사업에 미친 영향

□ 코로나19가 사업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의에서 ‘매출액 감소’라고 응답한 비율이 80.6%로 매우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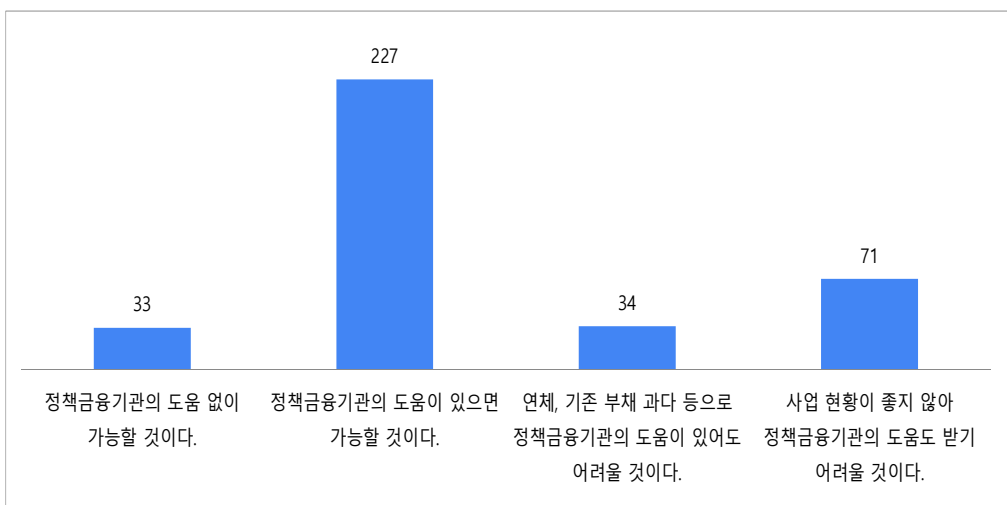
(61) 사업자금 용도로 추가대출 시 희망금액

□ 사업자금 용도로 추가대출 시 희망하는 금액으로 ‘3천만원 이하’가 26.7%, ‘5천만원 이하’가 24.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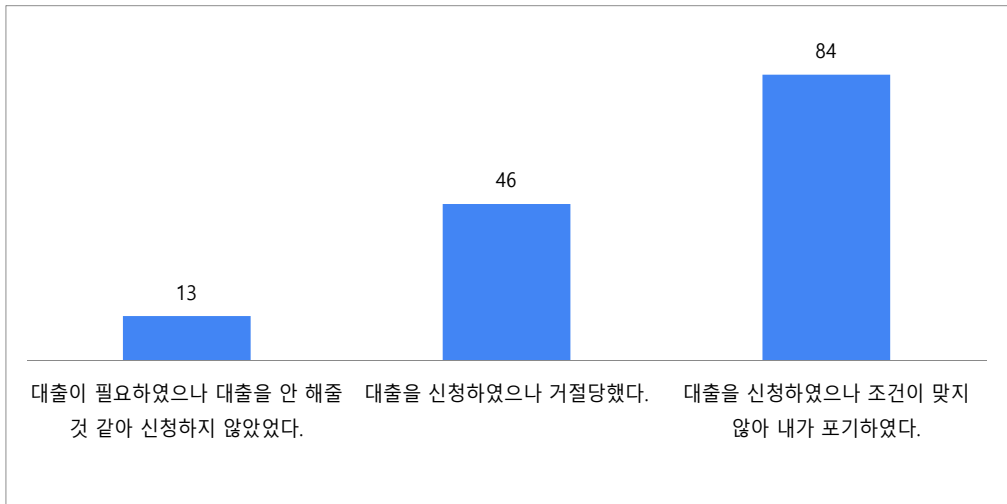
(62) 추가대출을 금융권 사업자금대출로 지원 가능여부

□ 희망하는 추가대출을 금융권에서 사업자금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의에서 ‘정책금융기관의 도움이 있으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2.2%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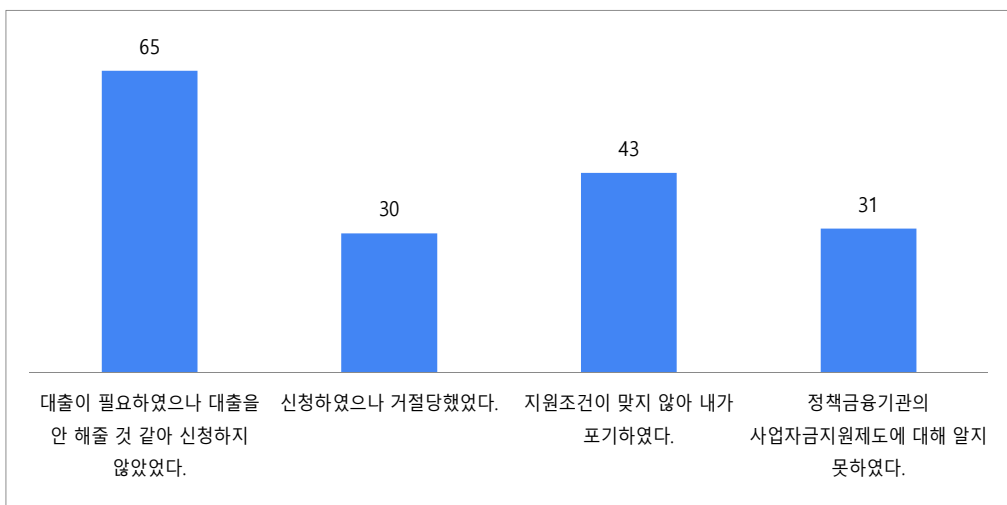
(63) 금융권의 사업자금대출이 없는 이유

- ☐ 금융권의 사업자금대출이 없는 이유로는 ‘대출을 신청했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스스로 포기하였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58.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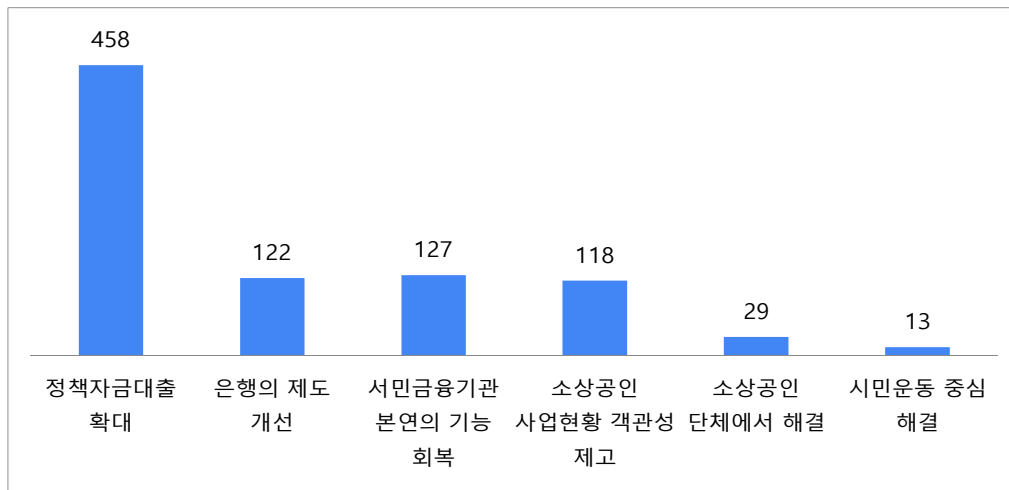
(64) 정책금융기관의 소상공인 사업지원제도 미활용 이유

- ☐ 정책금융기관의 소상공인 사업자금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대출이 필요했으나 대출을 안 해줄 것 같아 신청하지 않았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38.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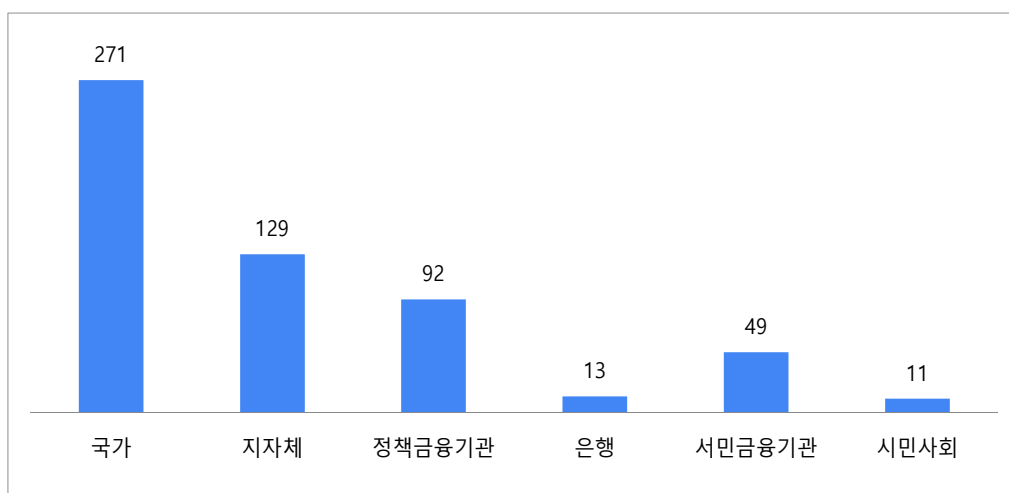
(65) 소상공인 금융소외 현상 해결의 기본방향

- 소상공인 금융소외 현상 해결의 기본방향으로서 ‘정책자금대출 확대’ 라고 응답한 비율이 52.8%로 매우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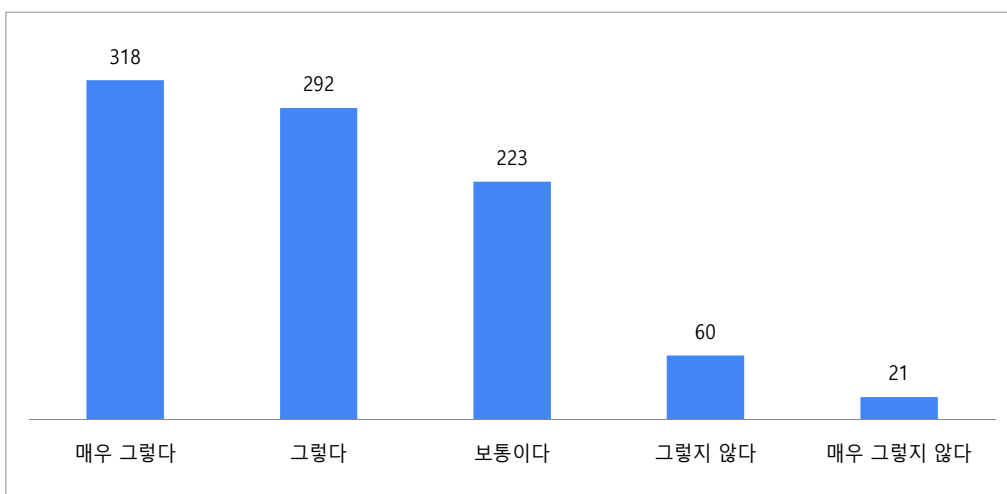
(66) 소상공인 금융소외 현상 해결의 주체

- 소상공인 금융소외 현상 해결의 주체로 ‘국가’ 라고 응답한 비율이 48.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지자체’ (22.8%), ‘정책금융기’ (16.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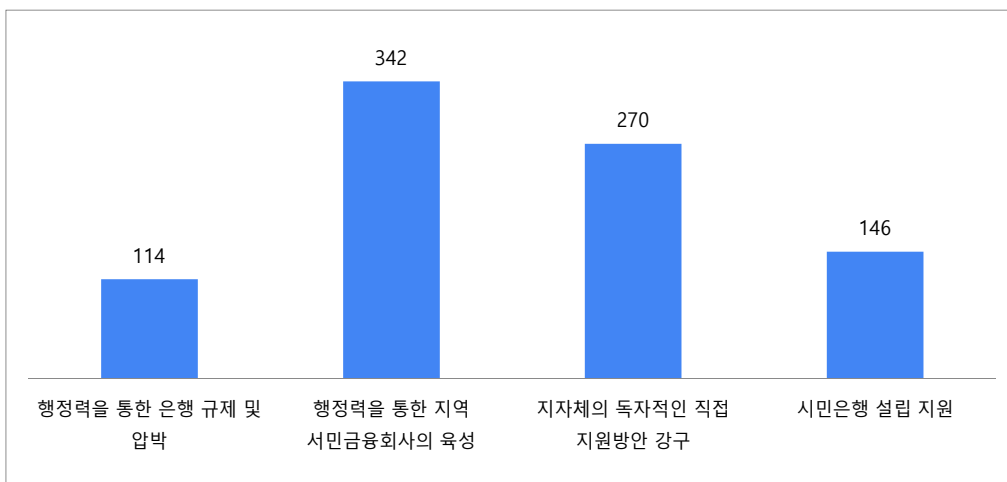
(67) 소상공인 금융소외계층의 소외 현상 해결을 위한 시민은행의 필요성

□ 인천 내의 소상공인 금융소외계층의 소외 현상 해결을 위해 인천 시민만을 위한 시민은행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서는 ‘매우 그렇다’ (34.8%)와 ‘그렇다’ (31.9%)를 합한 비율은 66.7%로 매우 높게 나타남.



(68) 지자체에 소상공인 금융소외 현상 해결을 위해 바라는 점

□ 소상공인 금융소외 현상 해결을 위해 지자체에 바라는 점으로는 ‘행정력을 통한 지역 서민금융회사의 육성’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2%로 나타남.



2) 금융기관(신협) 대상 실태조사 결과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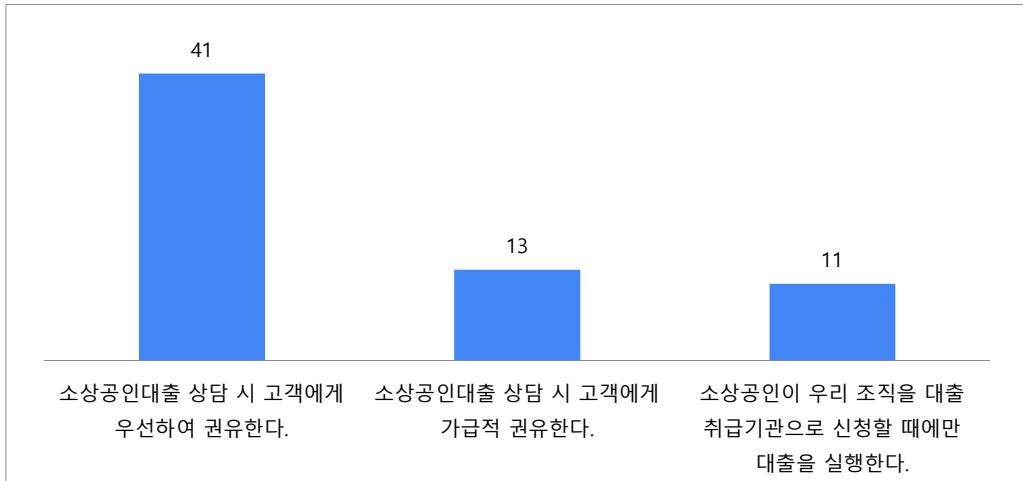
□ 조사개요

참가자 수		
인원 수	79명	
성별	남성	58
	여성	21
연령	20~29세	14
	30~39세	24
	40~49세	18
	50~59세	22
	60세 이상	1
금융회사 형태	은행	0
	저축은행	0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	79
	보험회사, 카드사, 캐피탈사	0
	대부업체	0
금융회사 근무기간	5년 이내	18
	10년 이내	8
	15년 이내	18
	20년 이내	6
	20년 초과	29
조사자의 직위	실무자(차장 이하)	46
	관리자	23
	경영진	5
	기타	4
조사자의 직무 내용	상담업무	19
	심사업무	0
	상담 및 심사업무 겸직	27
	결재(승인)업무	19
	추심업무	2
	기타	10

16) 금융기관(신협) 설문조사는 인천의 단위신협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로 이뤄졌음(응답율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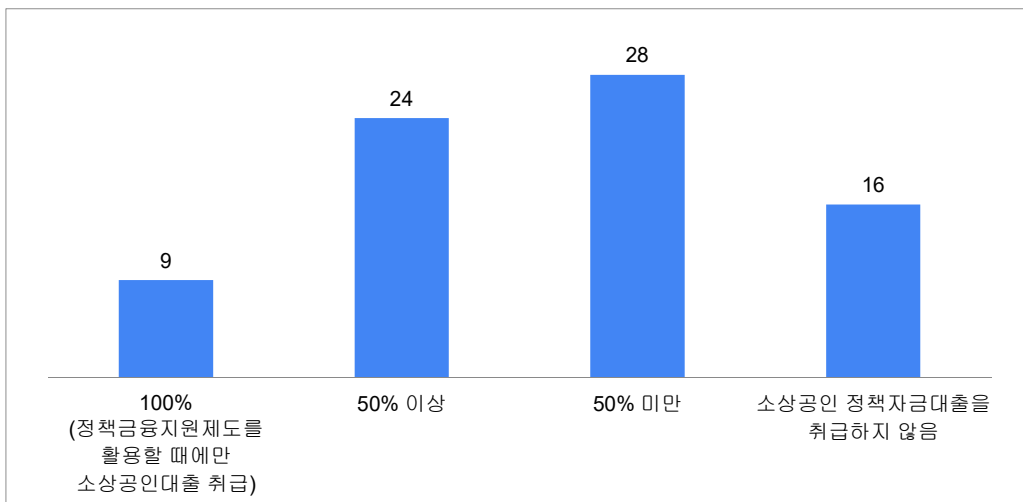
(1) 소상공인 대출 관련 정책금융기관 지원제도 활용 이유

□ 소상공인 대출 관련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제도 활용에서는 ‘소상공인 대출 상담 시 고객에게 우선 권유’가 63.1%, ‘소상공인 대출 상담 시 고객에게 가급적 권유’가 20.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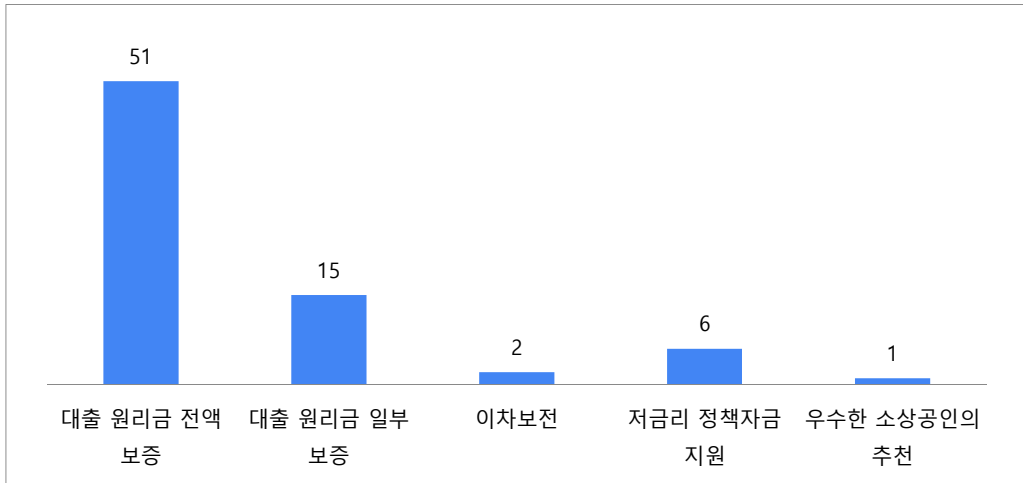
(2) 소상공인 대출 관련 정책금융지원 제도 활용 비중

□ 소상공인 대출 관련 정책금융지원 제도의 활용 비중을 보면, ‘50% 미만’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0% 이상’ (31.2%),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음’ (20.8%)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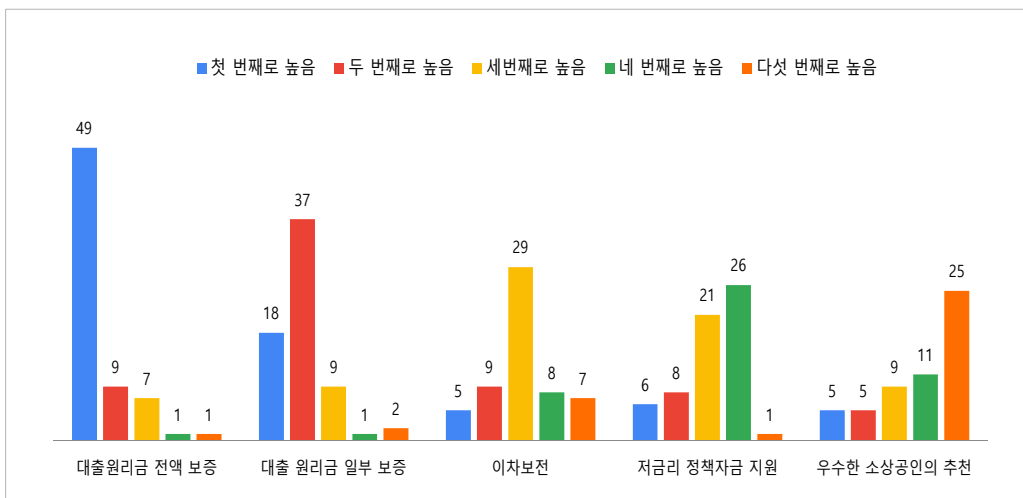
(3) 소상공인 정책금융제도의 선호도

- 소상공인 정책금융제도의 선호도를 보면, ‘대출원리금 전액 보증’ 68.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출원리금 일부 보증’ (20.0%),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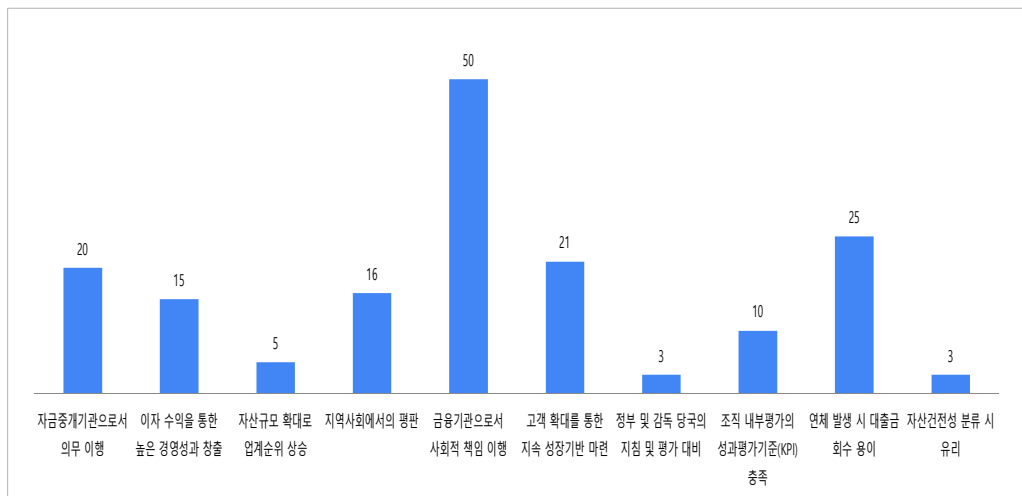
(4)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내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내용을 보면, ‘대출원리금 전액 보증’ 이 59.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출원리금 일부 보증’ (21.7%),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7.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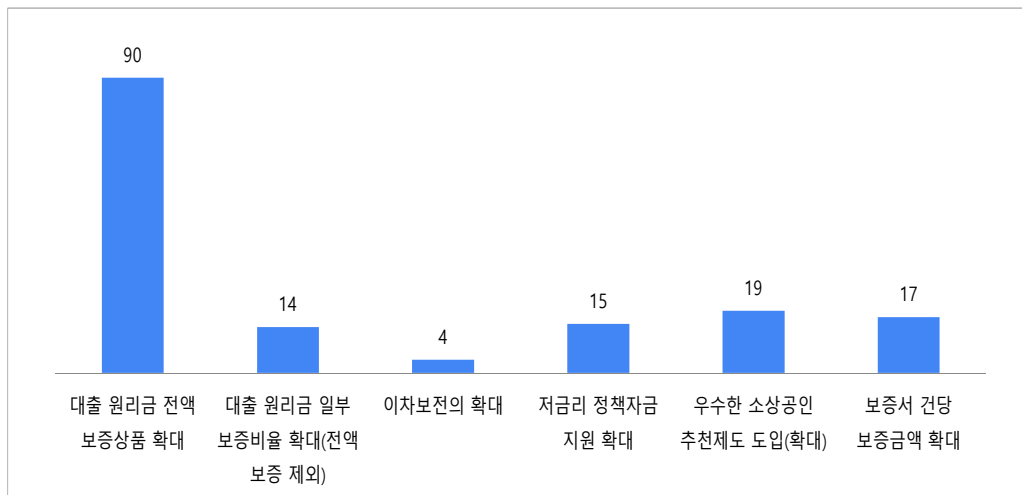
(5)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의 지원 목적

-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의 지원목적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책임 이행’이 29.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연체 발생 시 대출금 회수 용이’ (14.9%), ‘고객 확대를 위한 지속 성장기반 마련’ (12.5%)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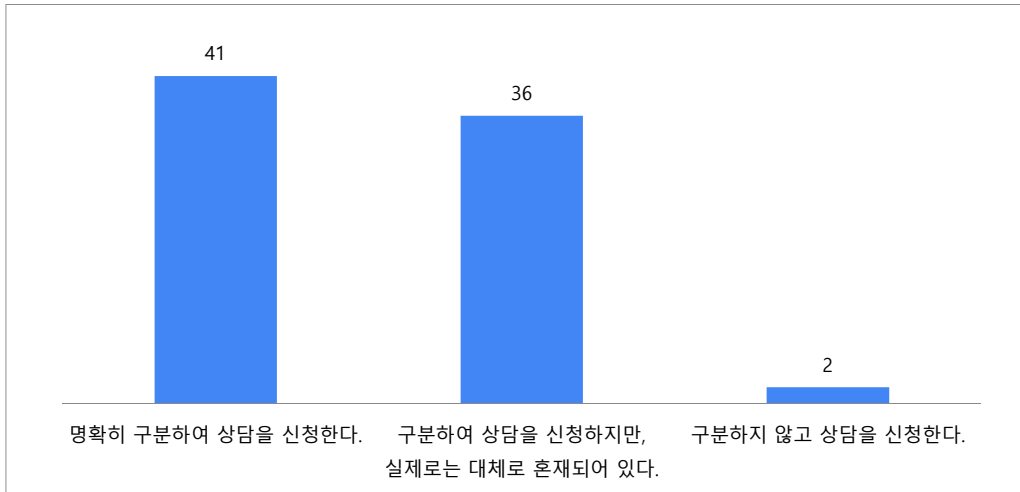
(6) 소상공인 대출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금융지원제도의 개선사항

- 소상공인 대출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지원 제도의 개선사항으로는 ‘대출원리금 전액 보증상품 확대’가 56.6%로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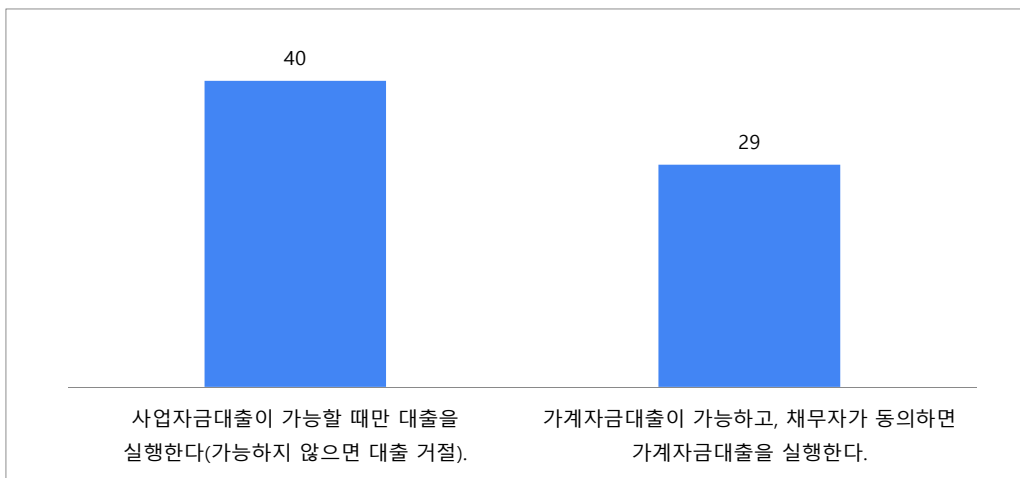
(7) 소상공인 대출 상담 시 자금용도 구분

- 소상공인 대출 상담 시 자금용도 구분을 묻는 질의에서는 ‘명확히 구분해 상담 신청’이 51.9%로 가장 높았으며, ‘구분하여 상담을 신청하지만, 실제로는 혼재돼 있음’이 45.6%로 그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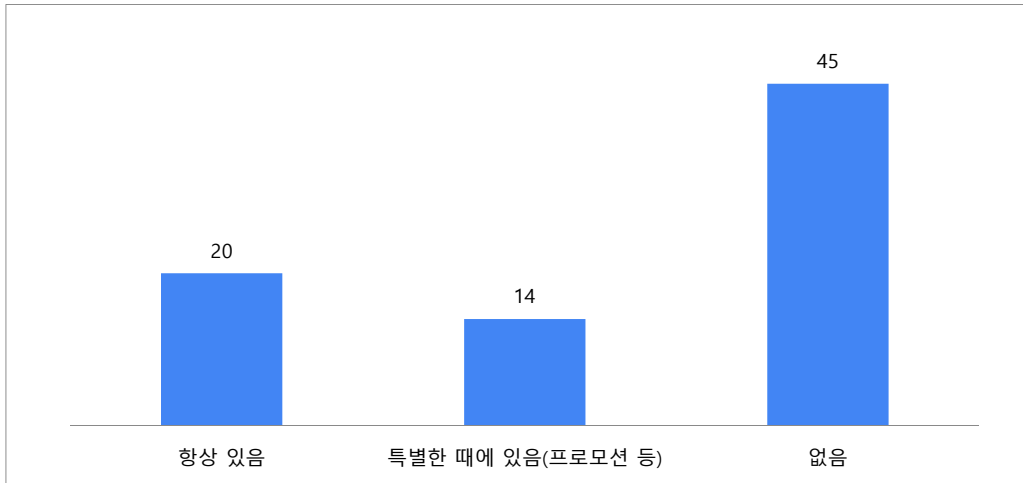
(8) 소상공인 사업자금대출 상담 시 대응방법

- 소상공인 사업자금 대출 상담 시 대응방법으로는 ‘사업자금 대출이 가능할 때만 대출 실행’이 58.0로 나타났으며, ‘가계자금대출이 가능하고 채무자 동의 하에 가계자금대출 실행’ (42.0%)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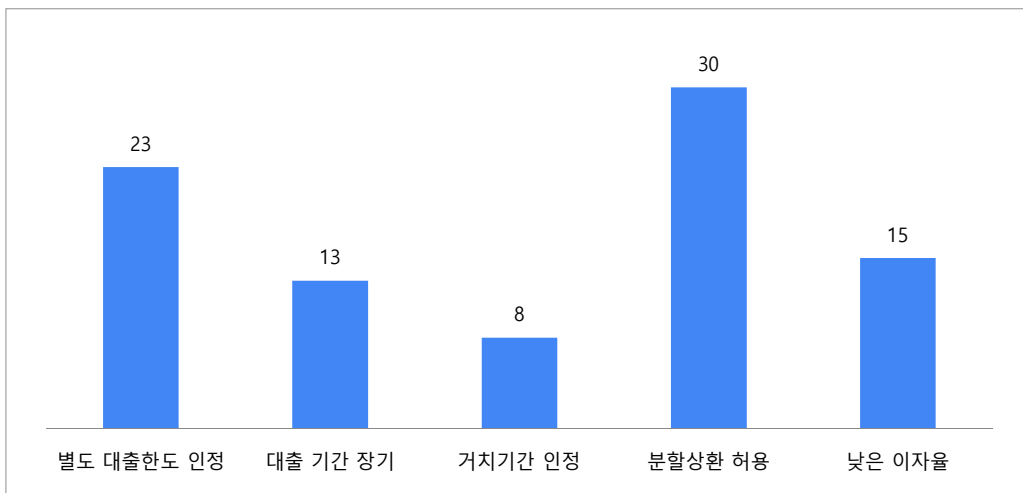
(9) 사업자금 용도별 대출조건이 다른 대출상품 여부

- 사업자금 용도별 대출조건이 다른 대출상품 여부를 묻는 질의에서는 ‘없다’ 라는 응답이 57.0%로 나타났으며, ‘항상 있다’ 라는 응답은 25.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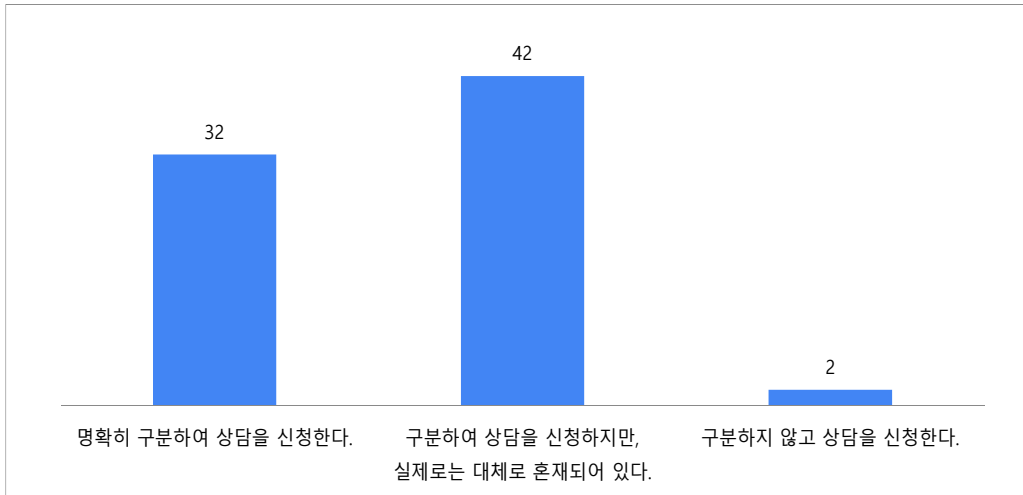
(10) 자금의 용도에 따라 대출조건이 다른 항목

- 사업자금 용도에 따라 대출조건이 다른 항목을 묻는 질의에서는 ‘분할상환 허용’ 이 33.7%로 가장 높았고, 이어 ‘별도 대출한도 인정’ (25.8%), ‘낮은 이자율’ (16.9%), ‘대출 기간 장기’ (14.6%)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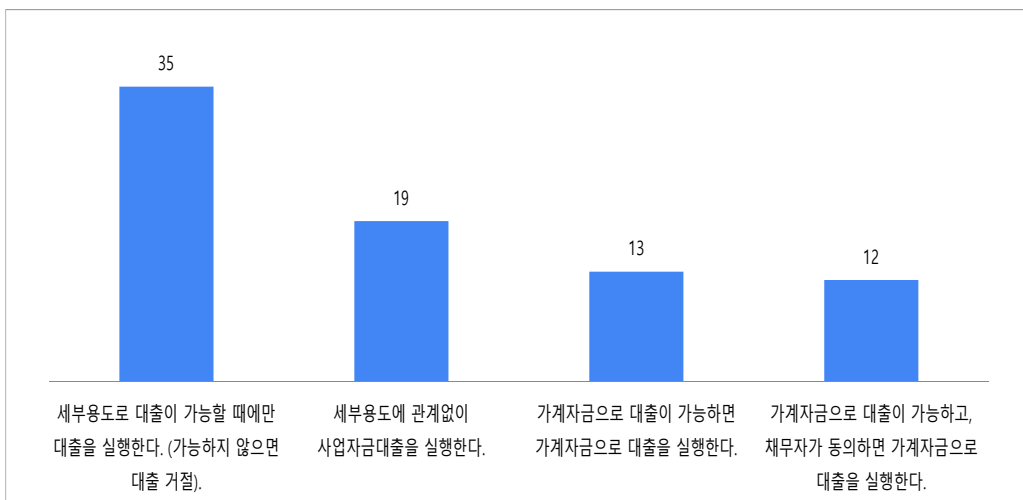
(11) 소상공인 사업자금대출 상담 시 자금의 용도 구분

- 소상공인의 사업자금대출 상담 시 자금용도를 명확히 구분하는가 라는 질의에서는 ‘구분하여 상담을 신청하지만, 실제로는 대체로 혼재돼 있다’ 라는 응답이 55.3%로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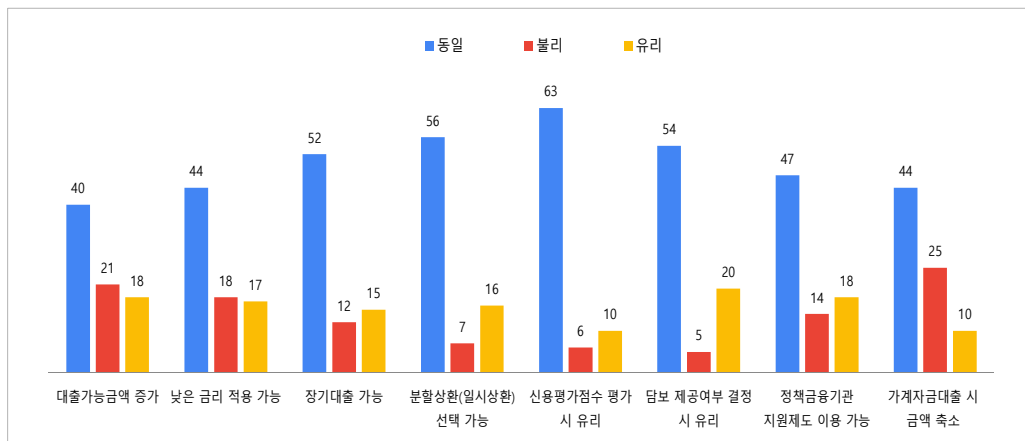
(12) 사업자금의 용도에 따른 대출 신청 시 대응

- 사업자금 용도에 따른 대출 신청 시 대응으로는 ‘세부용도로 대출이 가능 시에만 대출 실행’ 이 44.3%로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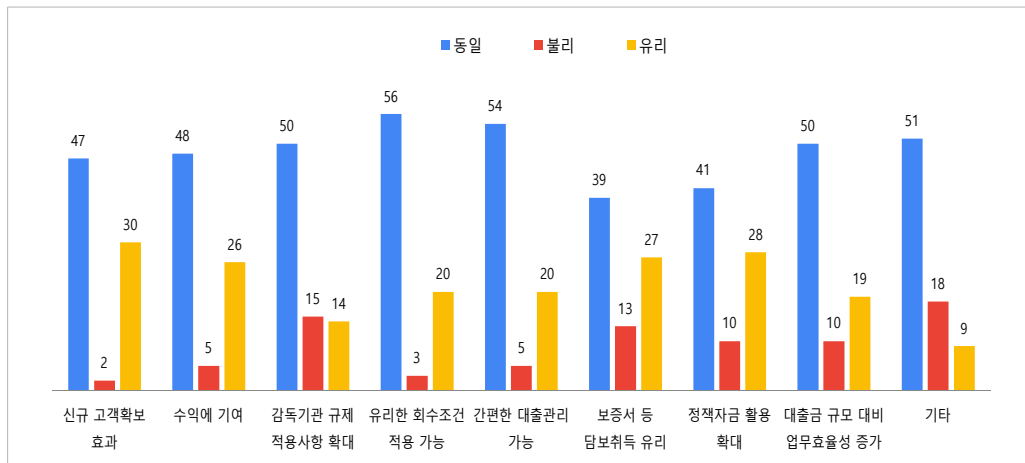
(13) 소상공인이 사업자금을 가계자금대출로 받는 경우 대출 조건의
유불리

□ 소상공인이 사업자금을 가계자금대출로 받을 시 대출조건의 유불리를 보면, ‘담보 제공여부 결정’, ‘정책금융기관 지원제도 이용 가능’, ‘낮은 금리 적용’ 등에서 ‘유리’하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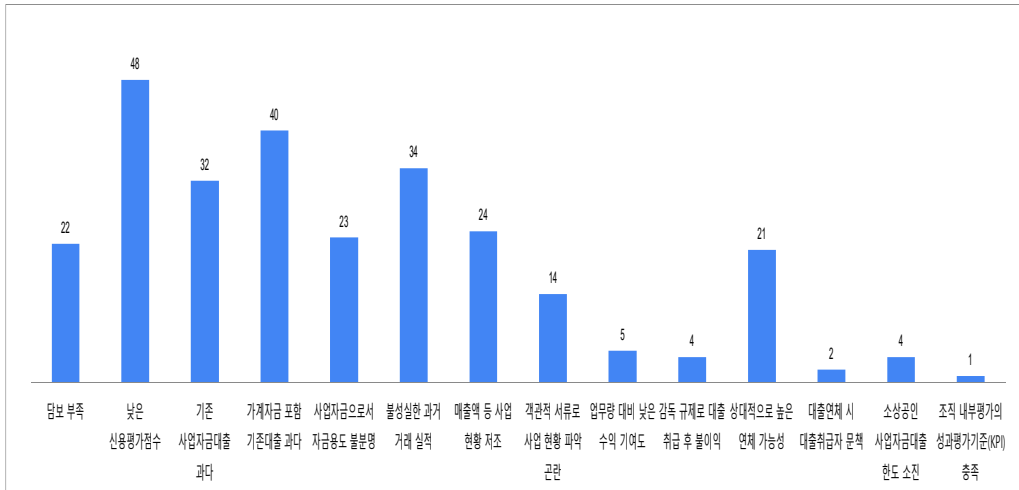
(14) 소상공인이 사업자금대출을 가계자금대출로 받는 경우 경영목표
달성 및 사후관리 면에서의 유불리

□ 소상공인이 사업자금을 가계자금대출로 받는 경우 귀 조직의 경영목표 달성 및 사후관리 면에서의 유불리를 보면, ‘신규 고객확보 효과’, ‘정책자금 활용 확대’, ‘보증서 담보취득 유리’ 등으로 응답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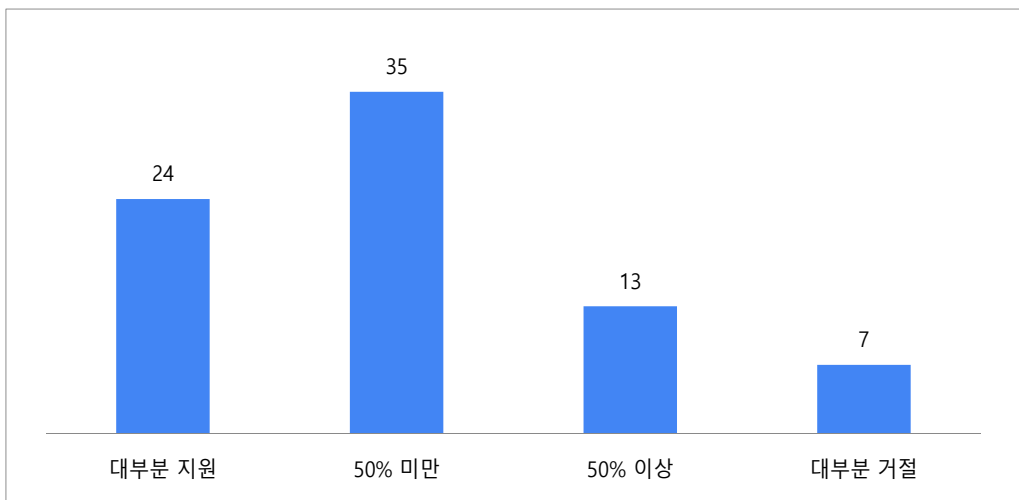
(15) 소상공인이 신청한 사업자금대출 거절사유

- 소상공인이 신청한 사업자금대출 거절사유로는 ‘낮은 신용평가점수’가 17.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가계자금 포함 기존대출 과다’ (14.6%), ‘불성실한 과거 거래실적’ (12.4%)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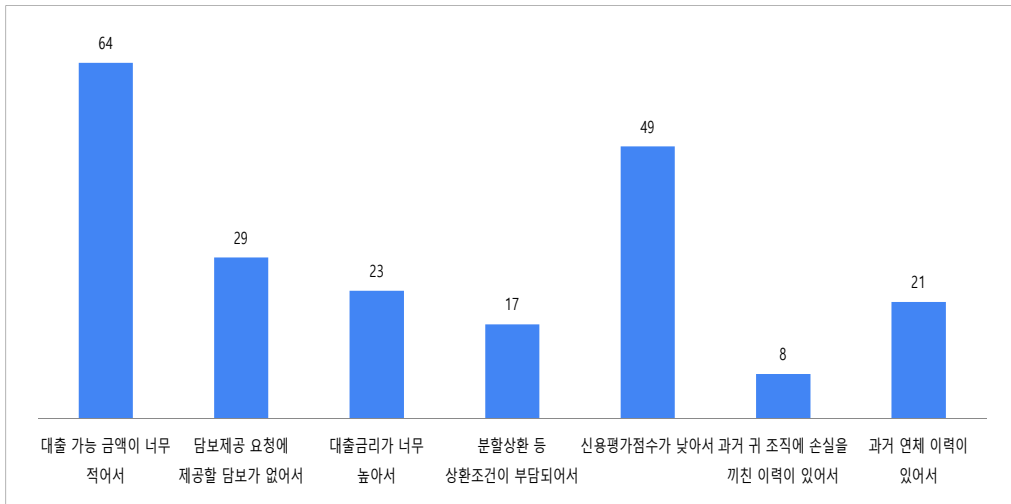
(16) 소상공인의 사업자금대출 신청 시 거절 정도

- 소상공인이 사업자금대출 신청 시 거절 정도를 묻는 질의에서는 ‘50% 미만’이 44.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부분 지원’ (30.4%), ‘50% 이상’ (16.5%)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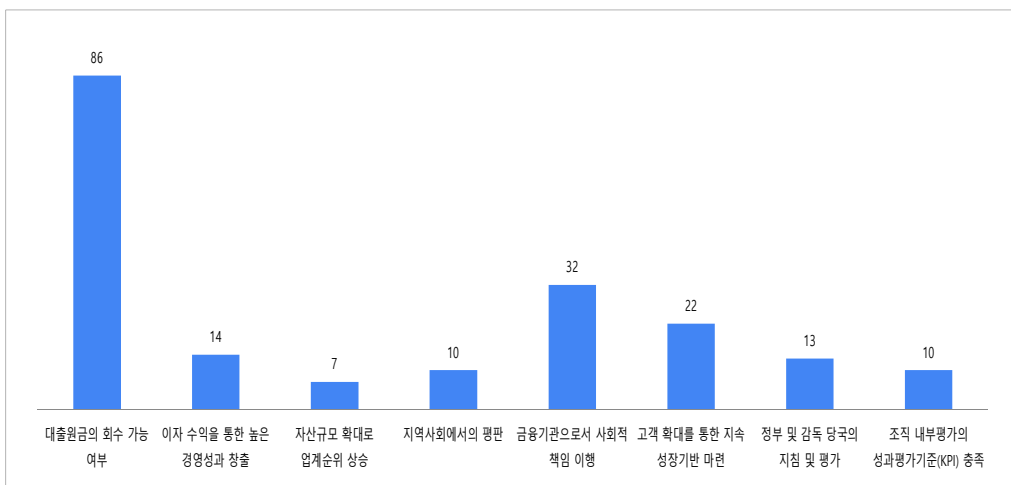
(17) 대출상담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대출포기 사유

□ 대출상담 과정에서 소상공인 스스로의 대출포기 사유로는 ‘대출가능 금액이 너무 적어서’가 30.3%로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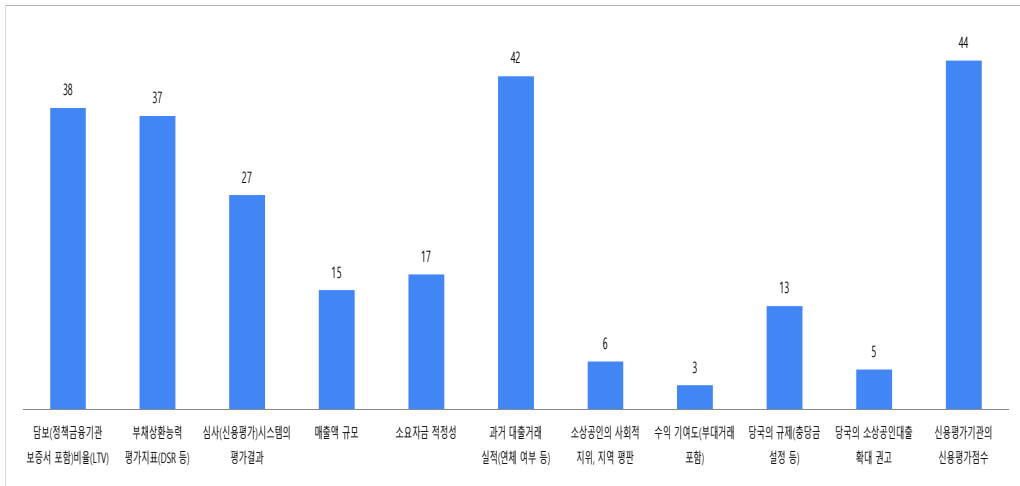
(18) 소상공인대출 실행 여부 결정시 주요 관심사항

□ 소상공인대출 실행 결정 시 주요 관심사항으로는 ‘대출원금의 회수 가능 여부’가 44.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수행’ (16.5%)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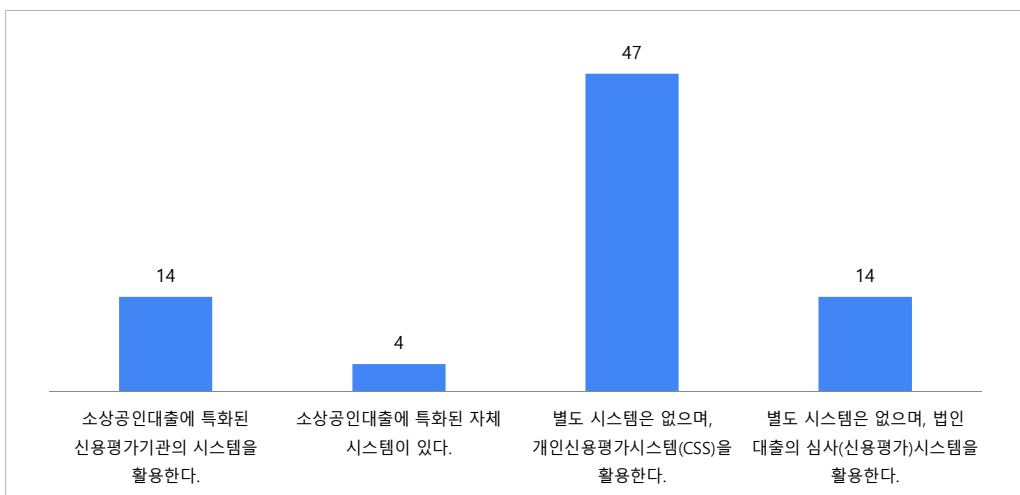
(19) 소상공인의 대출실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소상공인의 대출실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과거 대출 거래 실적(연체 여부 등)’ 이 17.8%로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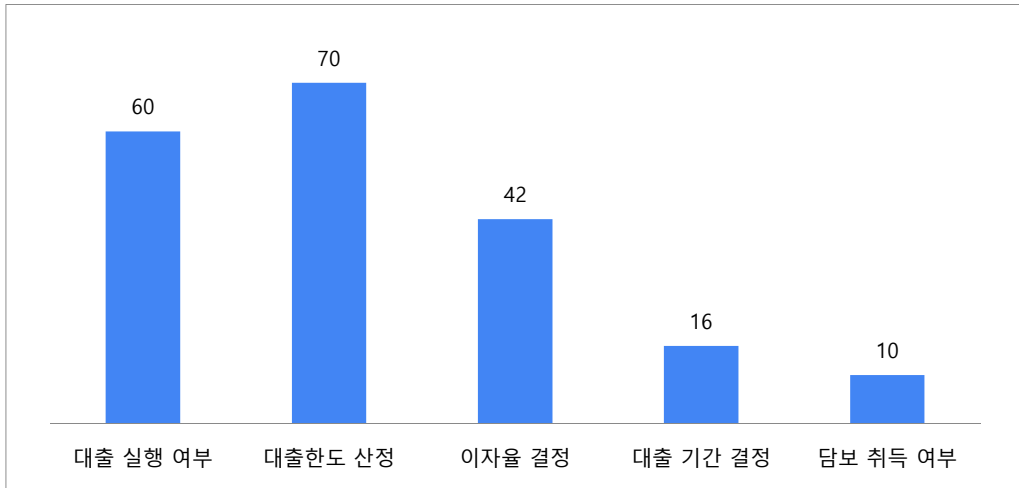
(20) 소상공인 대출 관련 신용평가시스템의 활용

- 소상공인 대출에 특화된 대출심사 시스템이 있느냐는 질의에서는 ‘별도 시스템은 없으며,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사용’ 이 59.5%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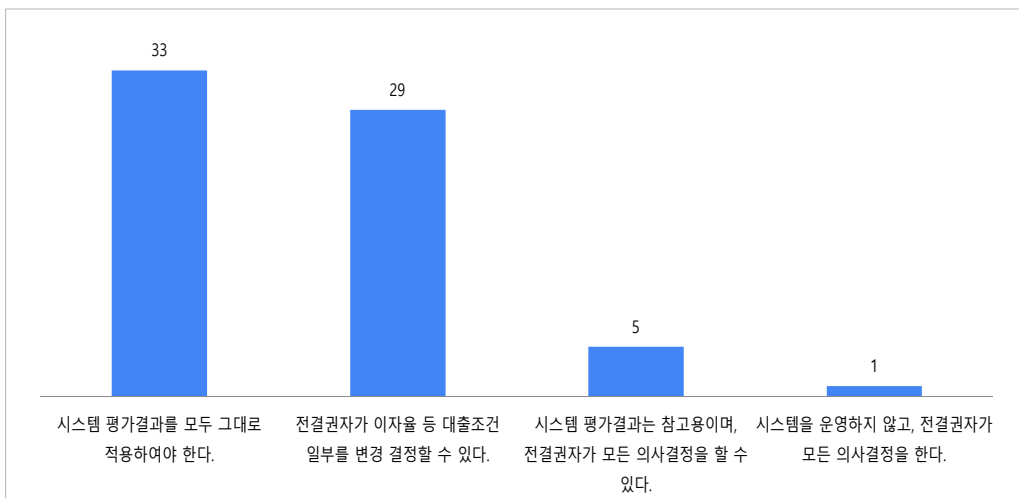
(21) 신용평가시스템 결과의 대출조건 결정 시 활용

- 신용평가시스템의 평가결과가 대출조건 결정 시 활용되는지를 묻는 질의에서는 ‘대출한도 산정’이 35.4%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출 실행 여부’ (30.3%), ‘이자율 결정’ (21.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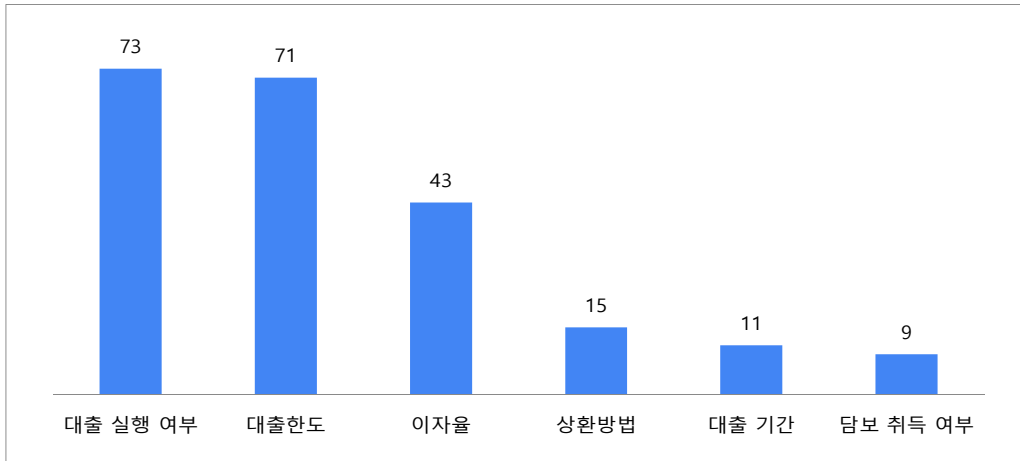
(22) 소상공인 대출 관련 신용평가시스템의 평가결과 운영

- 소상공인 대출 심사 시 신용평가시스템의 평가결과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묻는 질의에서는 ‘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를 그대로 적용한다’라는 응답이 48.5%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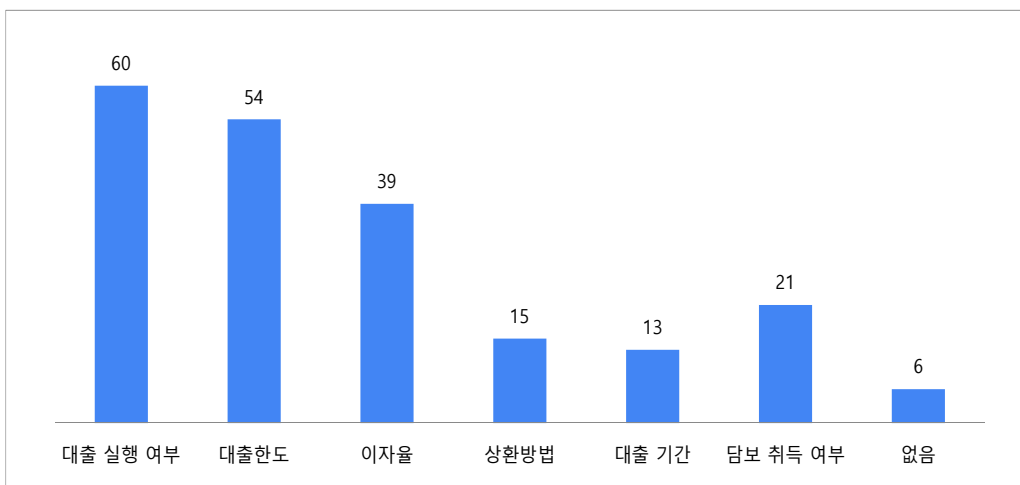
(23) 신용평가점수에 의한 대출조건에의 영향

- 소상공인 대출 시 신용평가점수가 대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의에서는 ‘대출 실행 여부’ (32.9%), ‘대출한도 결정’ (32.0%)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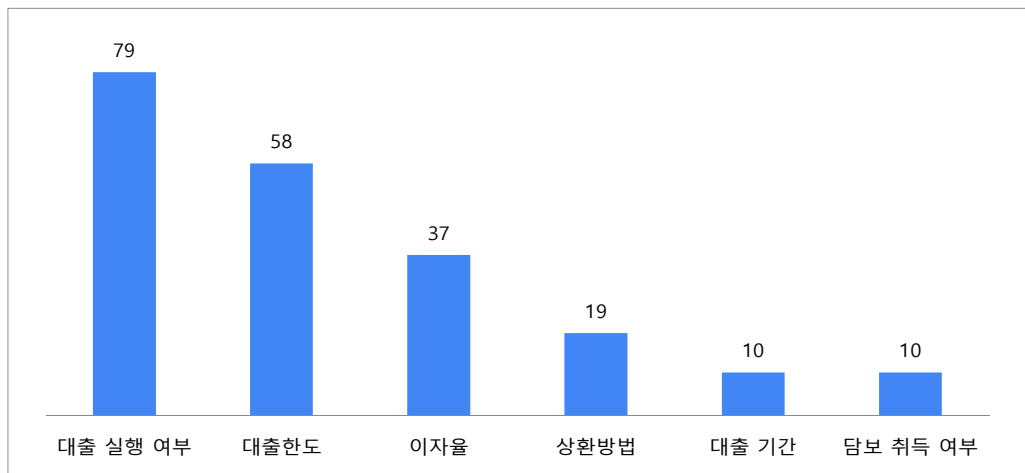
(24) 소상공인 대출 관련 담보 유무가 대출조건에 미치는 영향

- 소상공인 대출 시 담보(정책금융기관 보증서 제외) 유무가 대출조건에 미치는 영향 관련 질문에서는 ‘대출 실행 여부’ (28.8%), ‘대출한도 결정’ (26.0%), ‘이자율’ (1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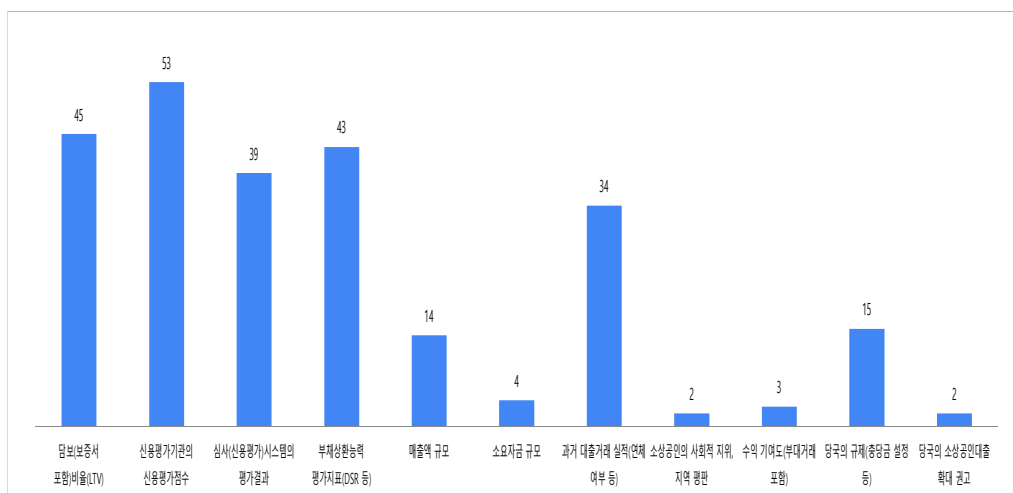
(25) 소상공인 대출 관련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서담보 유무가 대출조건에 미치는 영향

□ 소상공인 대출 시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서 담보 유무가 대출조건에 미치는 영향 관련해서는 ‘대출 실행 여부’ (37.1%), ‘대출한도 결정’ (27.2%), ‘이자율’ (17.4%)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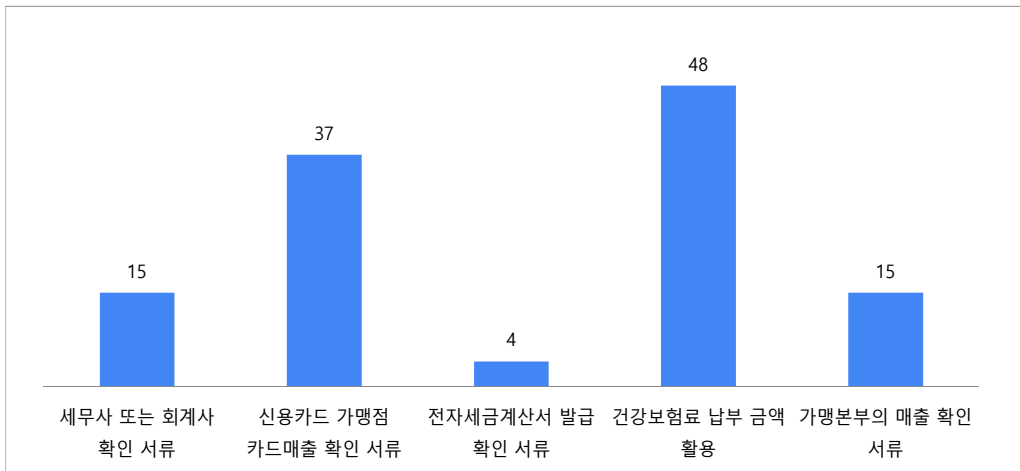
(26) 소상공인의 대출한도 결정 시 중요한 요인

□ 소상공인의 대출한도 결정 시 중요한 요인으로서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점수’가 20.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담보비율’ (17.7%), ‘부채상환능력 평가지표’ (16.9%)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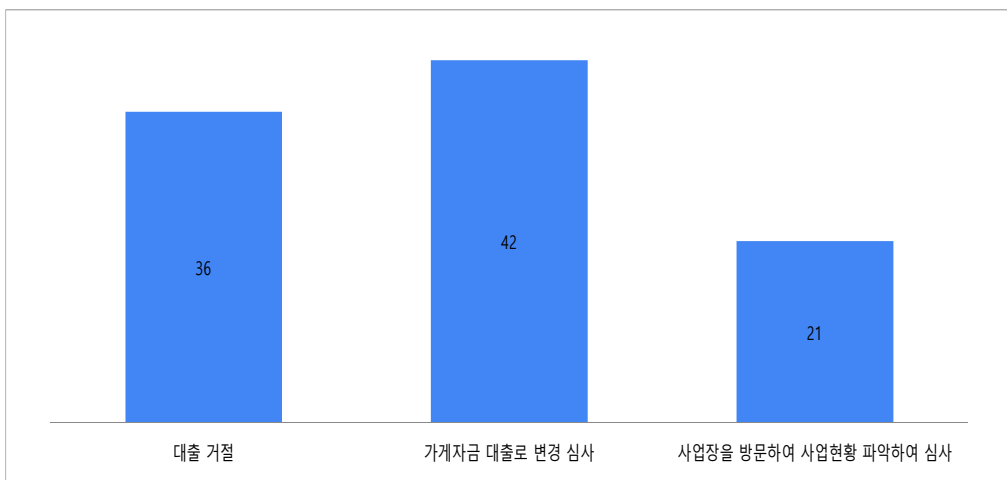
(27) 소상공인의 대출심사 시 상환능력 평가지표

- 소상공인의 대출심사 시 상환능력 평가 방법으로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활용’이 40.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신용카드 가맹점 카드매출 확인서류’ (31.1%), ‘가맹본부의 매출 확인서류’ (12.6%)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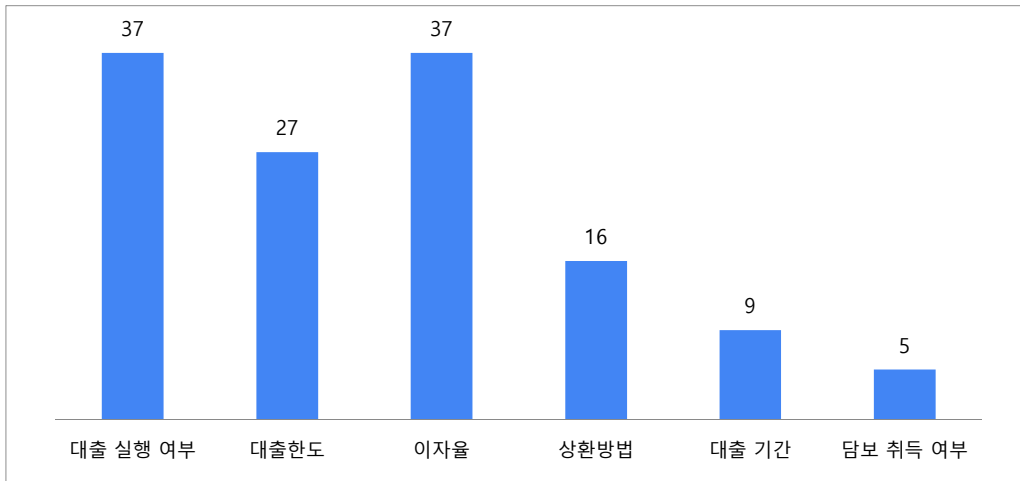
(28) 소상공인의 대출심사 시 상환능력 평가자료 없을 시 대응

- 소상공인의 대출심사 시 상환능력 평가 자료가 없을 시 대응으로는 ‘가계자금 대출로 변경 심사’가 42.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출 거절’ (36.4%)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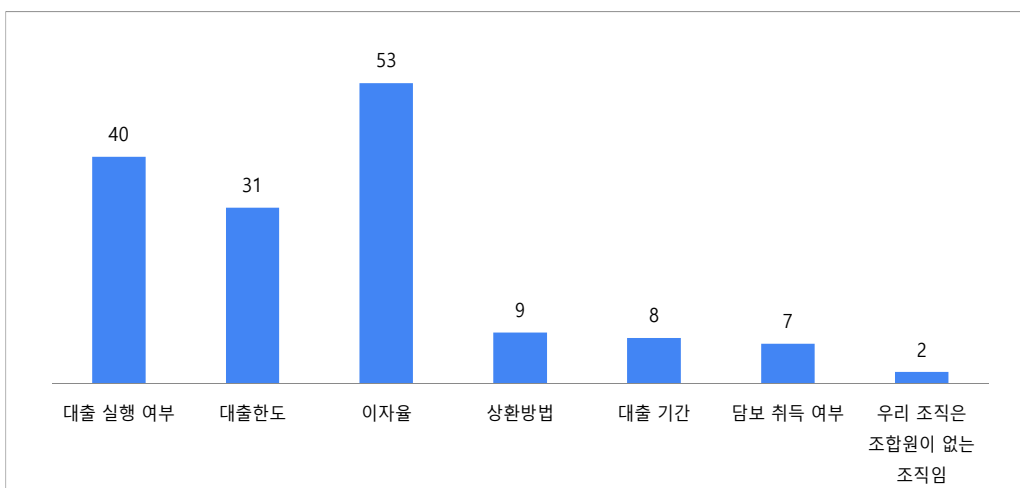
(29) 소상공인의 대출심사 시 우대사항 여부

□ 소상공인의 대출심사 시 우대사항을 묻는 질의에서는 ‘이자율’ 과 ‘대출 실행 여부’ 가 각각 28.2%로 동률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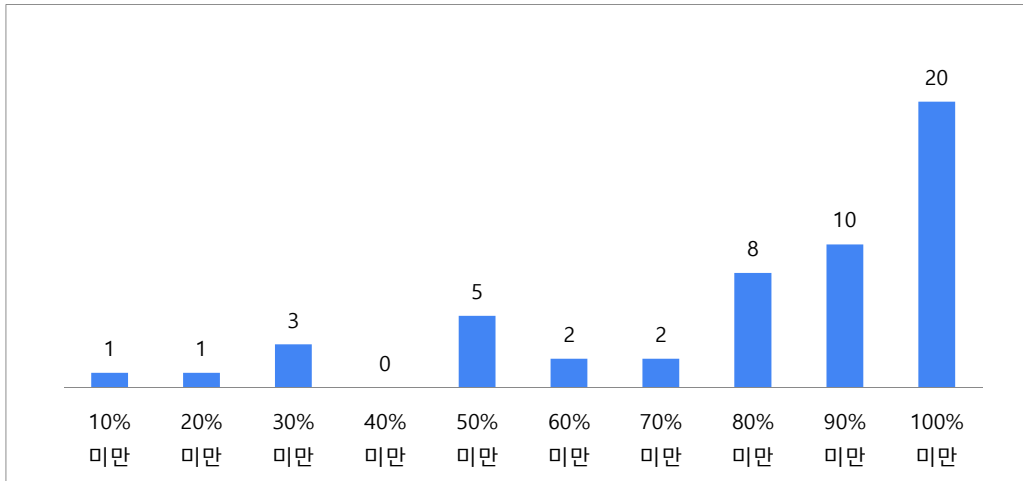
(30) 조합원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심사 시 우대사항

□ 조합원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심사 시 우대사항을 묻는 질의에서는 ‘이자율’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2%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출 실행 여부’ (21.3%), “없음” (2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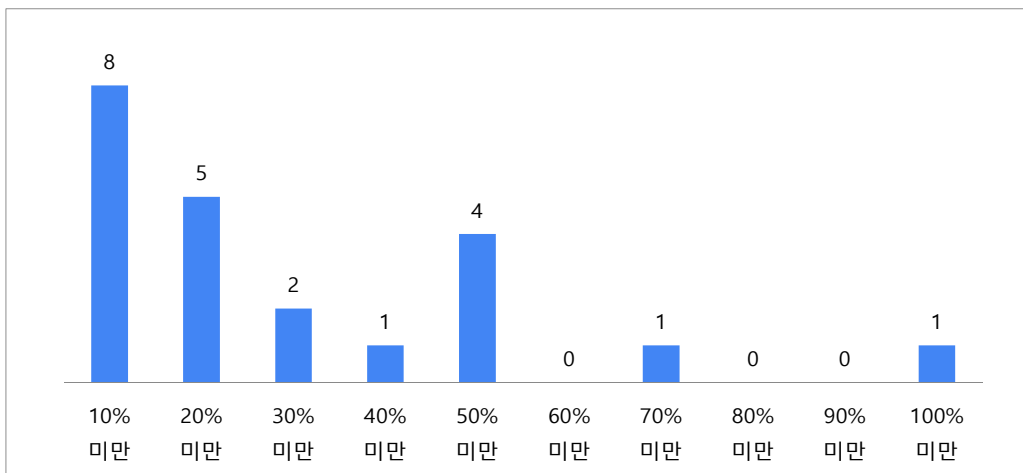
(31) 소상공인 대출 원금의 상환방법 중 분할상환 비중

□ 소상공인대출 원금의 상환방법 중 분할상환 비중을 보면, ‘100% 미만’이 38.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90% 미만’ (19.2%), ‘80% 미만’ (15.4%), ‘50% 미만’ (9.6%)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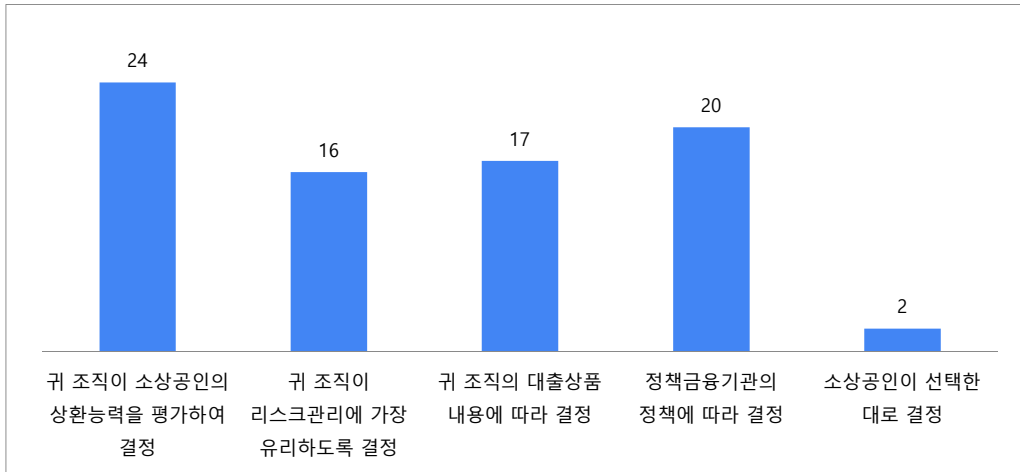
(32) 소상공인대출 원금의 상환방법 중 일시상환 비중

□ 소상공인대출 원금의 상환방법 중 일시상환 비중을 보면 ‘10% 미만’이 36.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 미만’ (22.7%), ‘50% 미만’ (18.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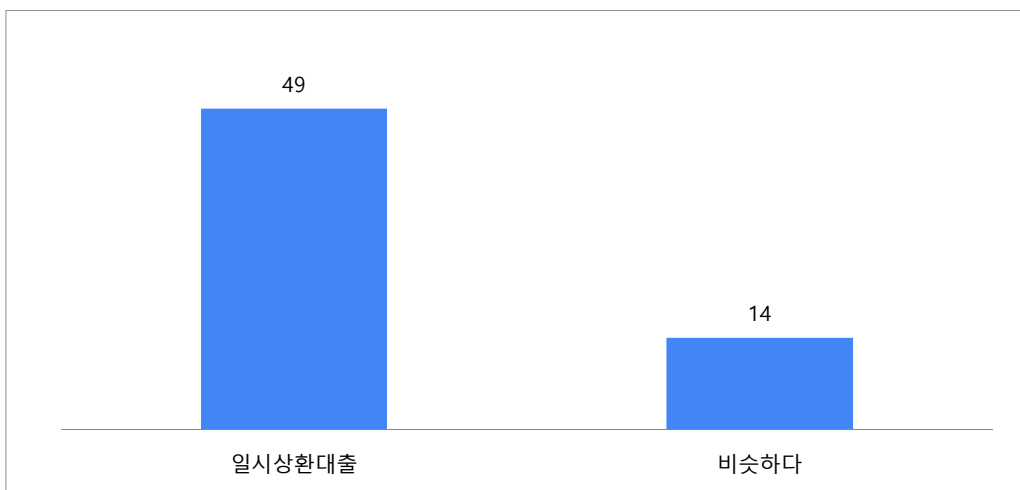
(33) 소상공인대출 원금의 상환방법 결정

- 소상공인대출 원금의 상환방법을 누가 결정하는지를 묻는 질의에서는 ‘소상공인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결정’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0.4%로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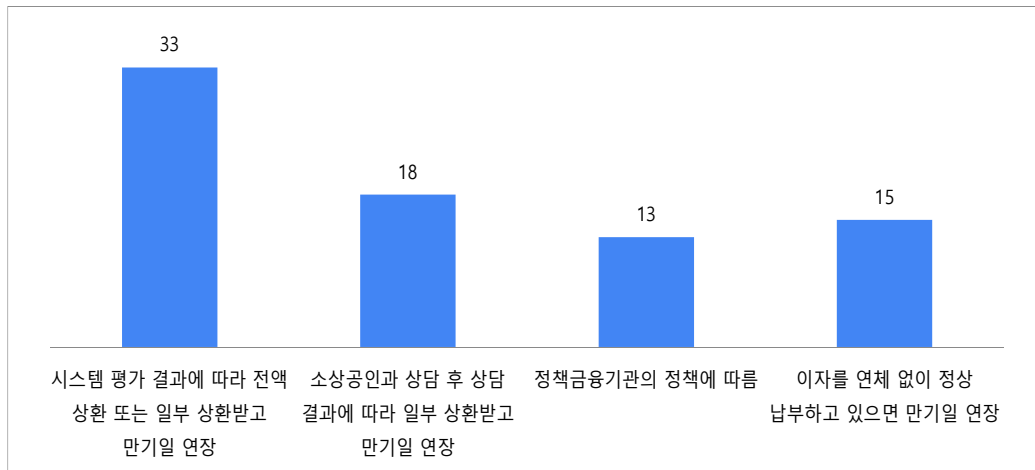
(34) 소상공인대출 원금의 분할상환과 일시상환 중 부실률이 높은 대출

- 소상공인대출 원금의 분할상환과 일시상환 중 부실률이 높은 대출을 묻는 질의에서는 ‘일시상환 대출’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7.8%로 매우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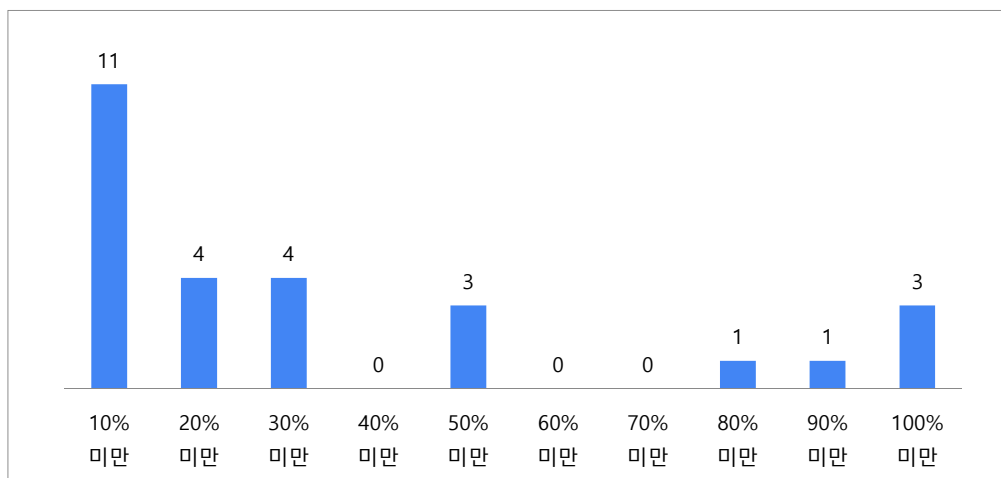
(35) 소상공인대출 중 일시상환의 대출만기 시 대응방향

- 소상공인대출 중 일시상환대출의 대출 만기 시 대응으로는 ‘시스템 평가결과에 따라 전액 상환 또는 일부 상환 받고 만기일 연장’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8%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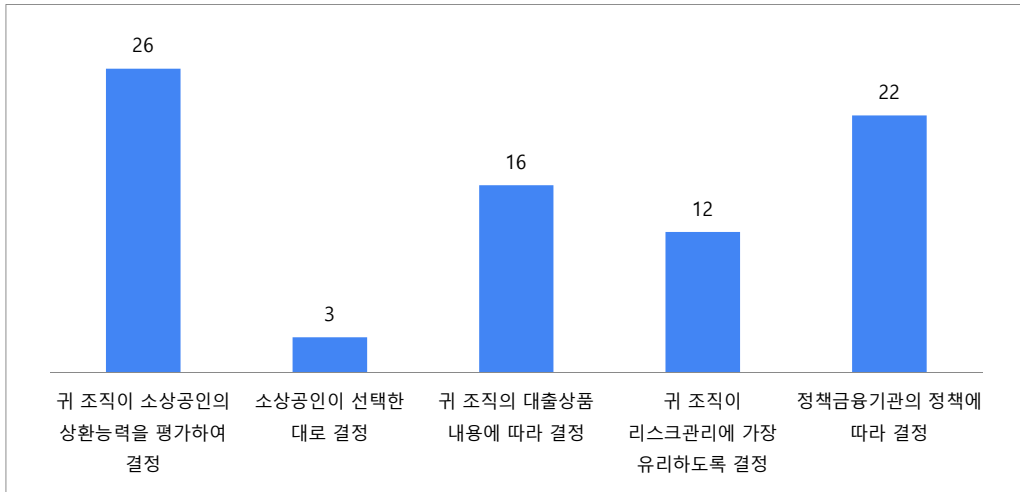
(36) 소상공인대출 중 원금상환 거치기간이 있는 대출금과 없는 대출금 간 비율

- 소상공인대출 중 원금상환 거치기간이 있는 대출금과 없는 대출금의 비율을 묻는 질의에서는 ‘10% 미만’ 이 40.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 미만’ (14.8%), ‘30% 미만’ (14.8%)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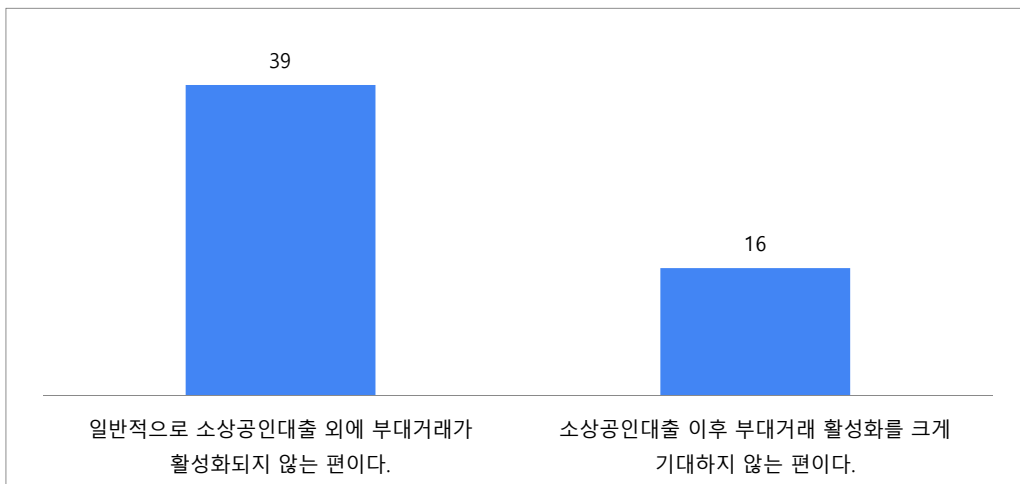
(37) 대출금의 원금상환 거치기간 설정

- 대출금의 원금상환 거치기간 설정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결정’ 한다는 응답이 32.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책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결정’ (27.8%)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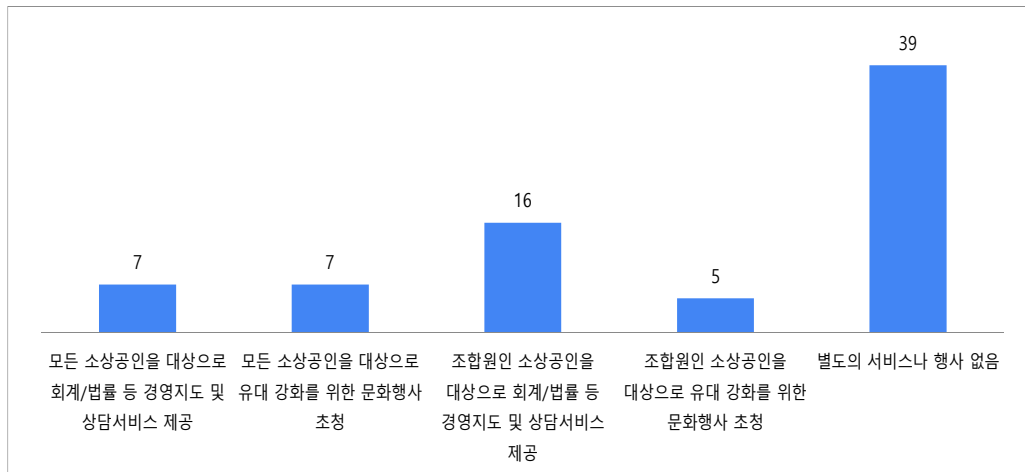
(38) 소상공인대출 고객과 대출거래 외의 부대거래

- 소상공인대출 고객과 대출거래 외의 부대거래를 묻는 질의에서는 ‘소상공인대출 외에 부대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편이다’ 라는 응답이 70.9%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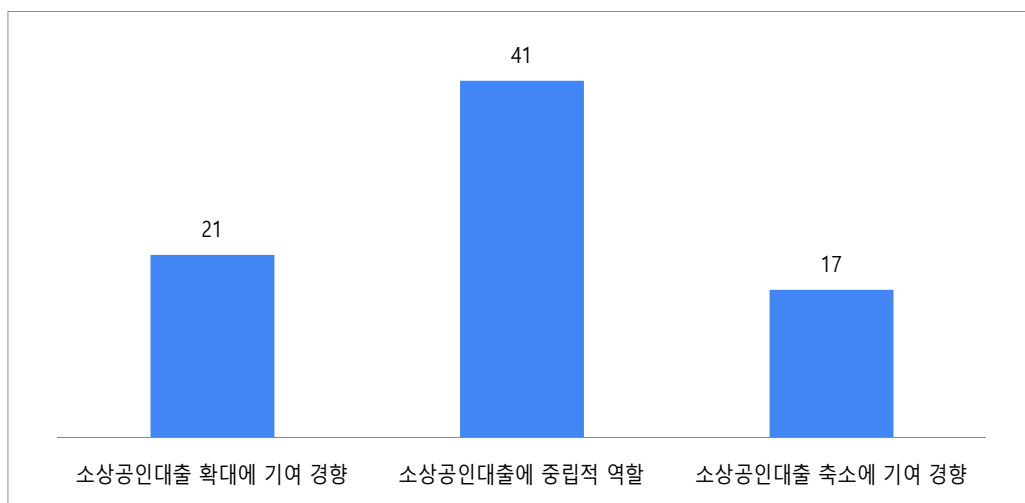
(39) 소상공인대출 실행 이후 소상공인과의 유대 강화 노력

□ 소상공인대출 실행 이후 소상공인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노력을 묻는 질의에서는 ‘별도의 서비스나 행사 없음’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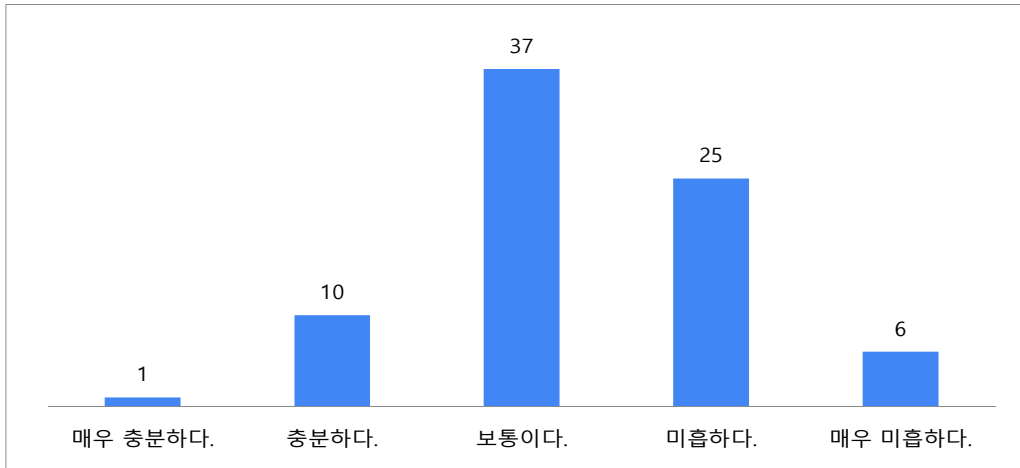
(40) 소상공인 대출 관련 정부의 규제감독의 역할

□ 소상공인 대출 관련 정부의 규제감독의 역할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대출에 중립적 역할’ 이 51.9%로 가장 높았으며, ‘소상공인 대출 확대에 기여 경향’ 이 26.6%로 그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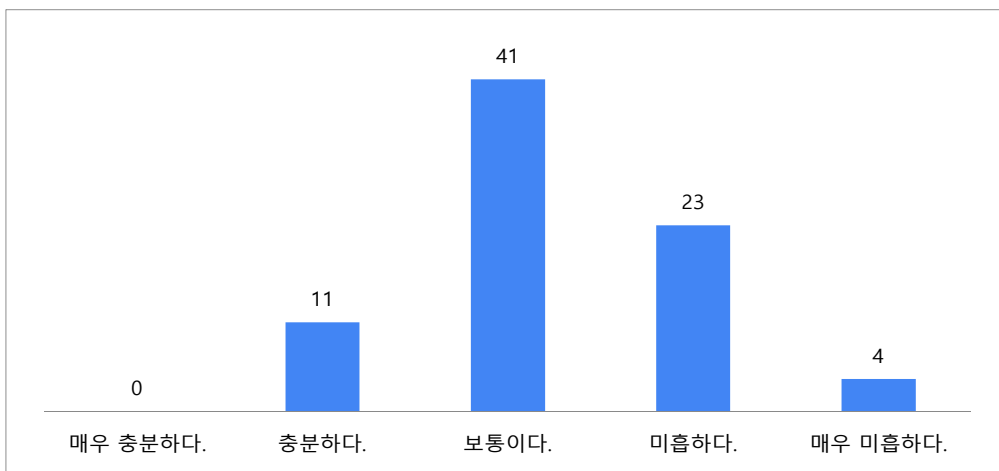
(41)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서비스의 수준

-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서비스 수준을 묻는 질의에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6.8%로 나타났으며, 이어 ‘미흡하다’가 31.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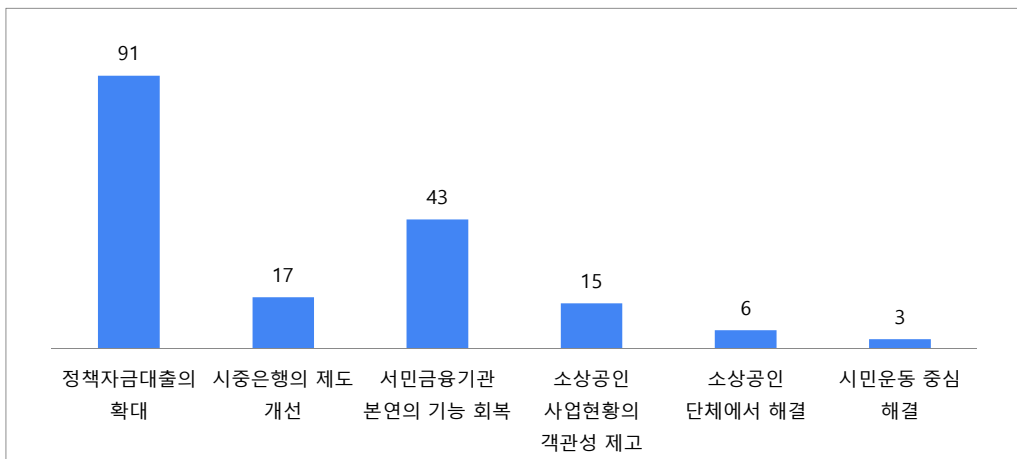
(42) 금융권 전체에서 소상공인 대출서비스의 수준 정도

- 금융권 전체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서비스의 수준을 묻는 질의에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1.9%로 나타났으며, 이어 ‘미흡하다’라는 응답이 29.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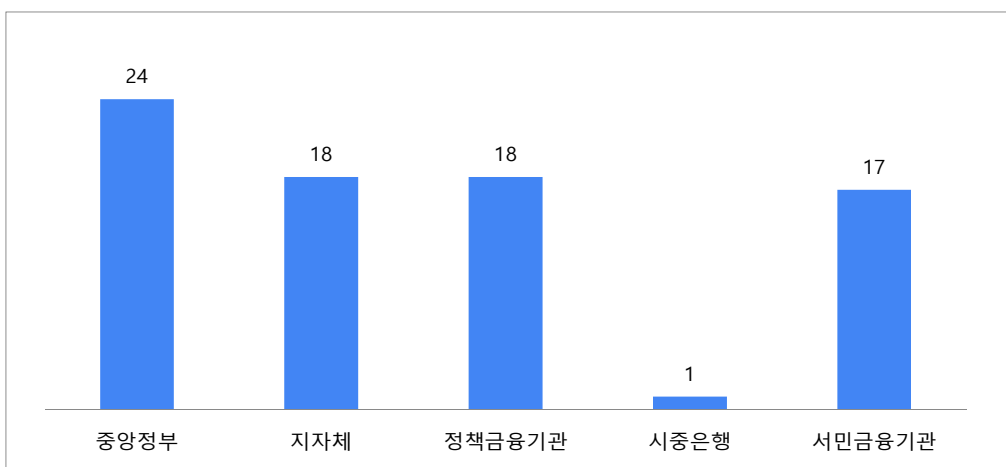
(43) 소상공인 금융소외 현상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

- 소상공인 금융소외 현상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정책자금대출 확대’가 52.0%로 가장 높았으며,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기능 회복’ (24.6%), ‘소상공인 사업현황이 객관성 제고’ (9.7%) 순으로 나타남.



(44) 소상공인 금융소외 현상 해결의 주체

- 소상공인 금융소외 현상을 해결하는 주체로는 ‘중앙정부’로 응답한 비율이 30.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자체’ (23.1%), ‘정책금융기관’ (23.1%), ‘서민금융기관’ (21.8%)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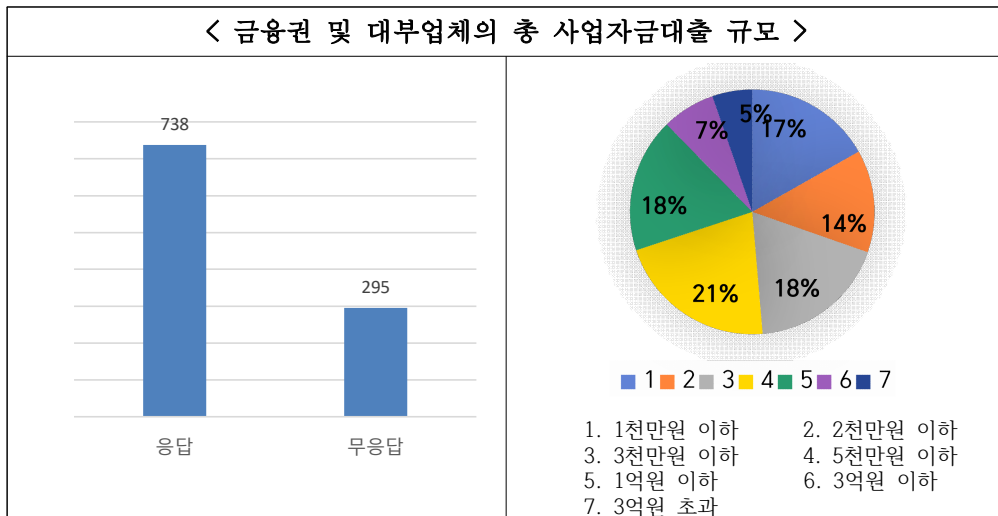
3) 인천시 소상공인 및 금융기관 대상 실태조사 결과 요약

(1)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요약

□ 소상공인 4명 중 3명은 금융권 및 대부업체에 사업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함.

○ 설문 응답자 1,033명 중 71%인 738명이 금융권과 대부업체에 사업자금대출금이 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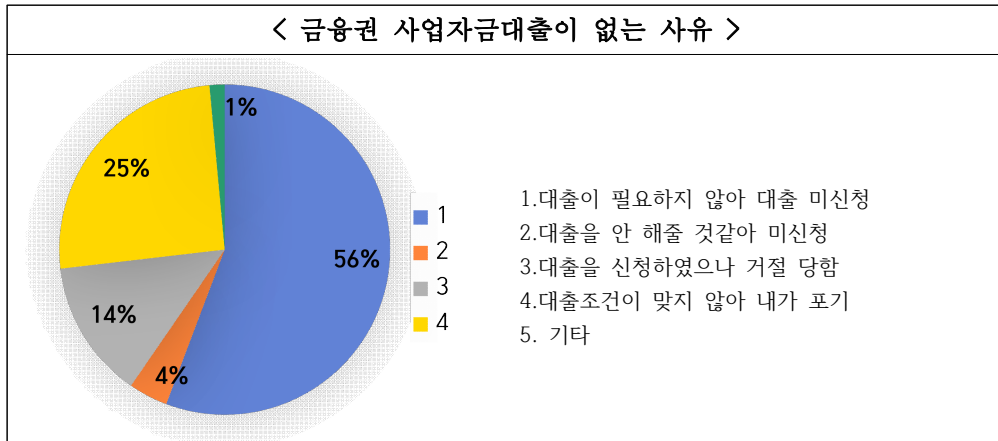
- 대출금 규모는 5천 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로 답변함.
- 세부 구간별로는 1천만원 이하 17%,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2%,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21%,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8%,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7%, 3억원 초과 5%로 나타남.



○ 금융권 사업자금대출이 없는 소상공인 중 56%는 대출이 필요하지 않아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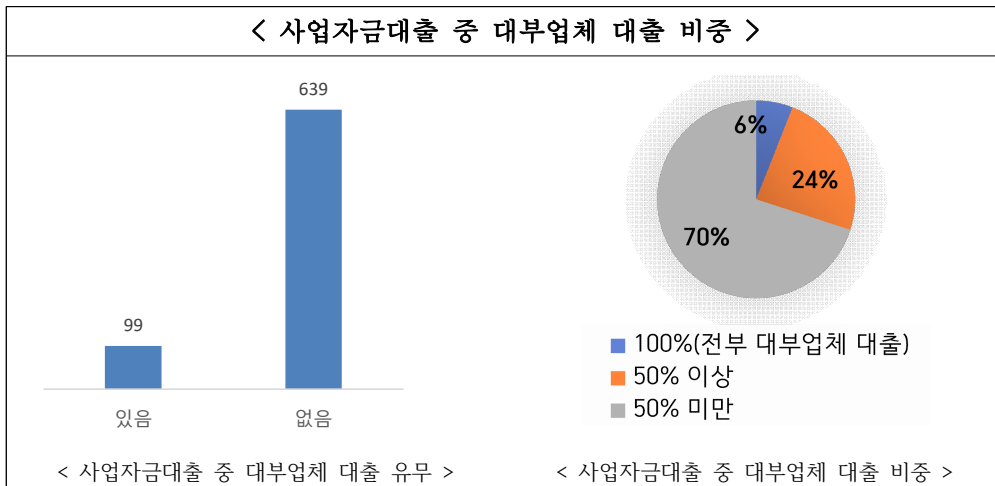
- 나머지 44%는 대출이 필요하였으나 대출 조건이 맞지 않아 대출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 25%,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 14%, 대출을 안 해줄 것 같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1%로 답변함.

- 즉, 금융권 사업자금대출이 없는 소상공인 중 43%는 금융소외 현상으로 대출이 없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 사업자금대출이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 13%는 대부업체에 사업자금대출이 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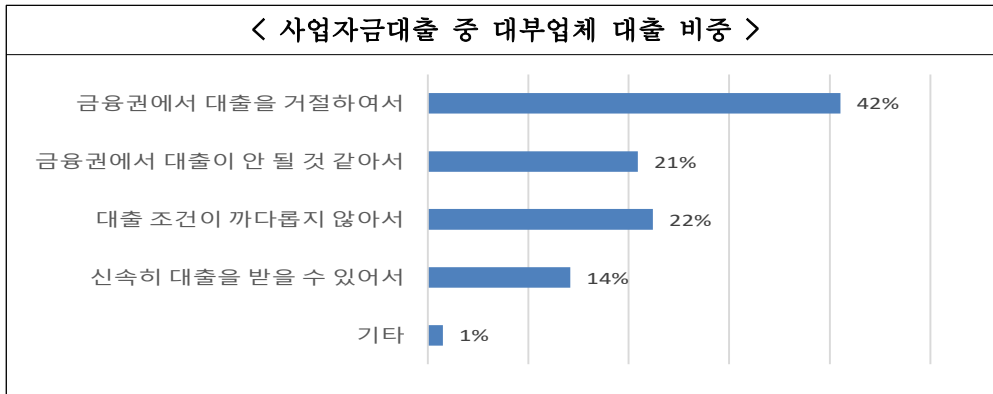
- 이들 중 사업자금대출 전부를 대부업체에서 받았다는 비중은 6%, 50% 이상 비중은 24%, 50% 미만 비중은 70%로 나타남.



- 대부업체에서 사업자금대출을 받은 사유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하였거나(42%), 대출이 안 될 것 같아(21%) 이용하였다는 답변이 63%로 주를 이루었으며,

- 그 외에 대출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22%), 신속히 대출을 받을 수 있어(14%) 이용하였다는 순으로 답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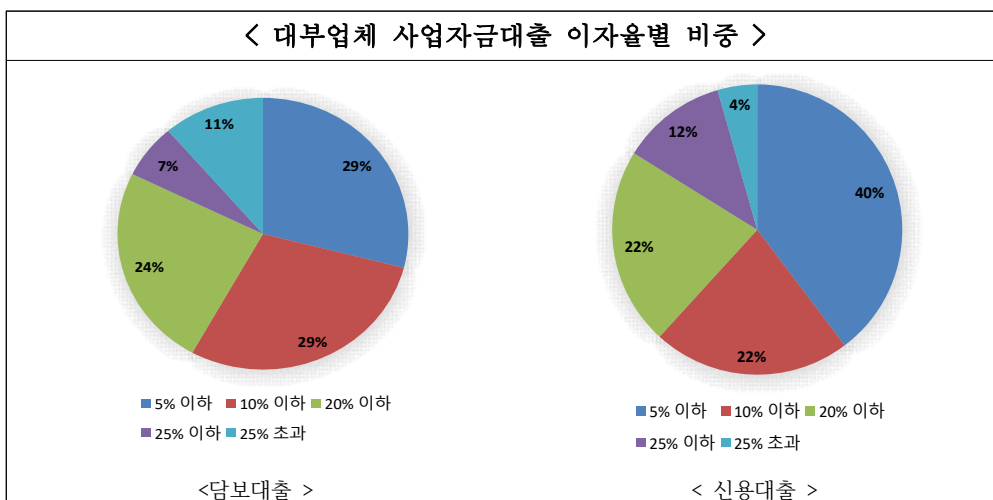
- 소상공인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이해됨.



-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중 담보대출만 있는 경우는 1%에 불과하고, 54%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같이 이용하며, 신용대출만 이용하는 경우도 45% 수준임.

- 담보대출 있는 소상공인이 제공하는 담보 종류는 79%가 부동산이냐, 전세(월세)보증금(13%)이나 자동차(3%)를 담보로 제공 사례도 적지 않았음(기타 5%).

- 대부업체 사업자금대출의 이자율은 10% 이하인 비중이 담보대출은 58%, 신용대출은 62%로 수준으로 조사됨.



□ 금융권 사업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중 대부분은 사업자금대출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가계자금대출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권에서 가계자금용으로 대출받아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없다는 소상공인은 26%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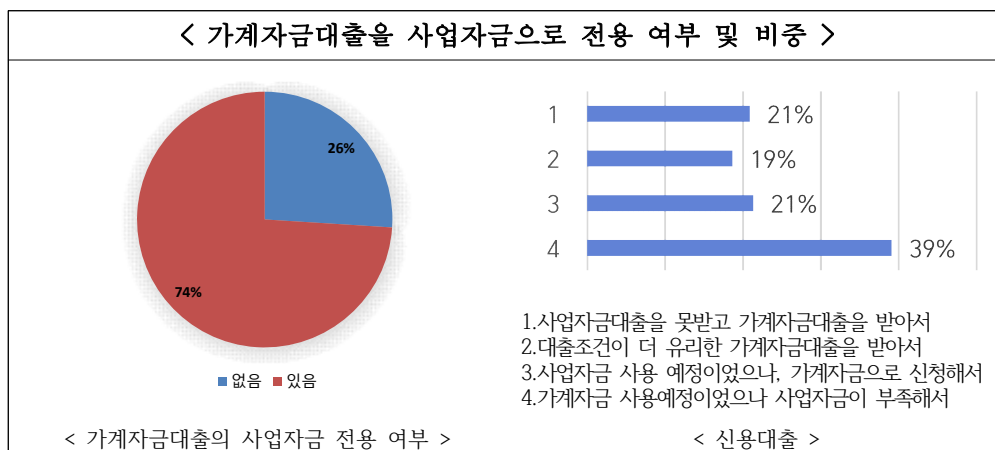
○ 나머지 74%는 가계자금용 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함.

- 당초 가계자금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사유는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을 못 받고, 가계자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답변이 21%,

-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신청했으나 대출 조건이 더 유리한 가계자금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답변이 19%,

- 그밖에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대출 신청 시 가계자금으로 신청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답변은 21%이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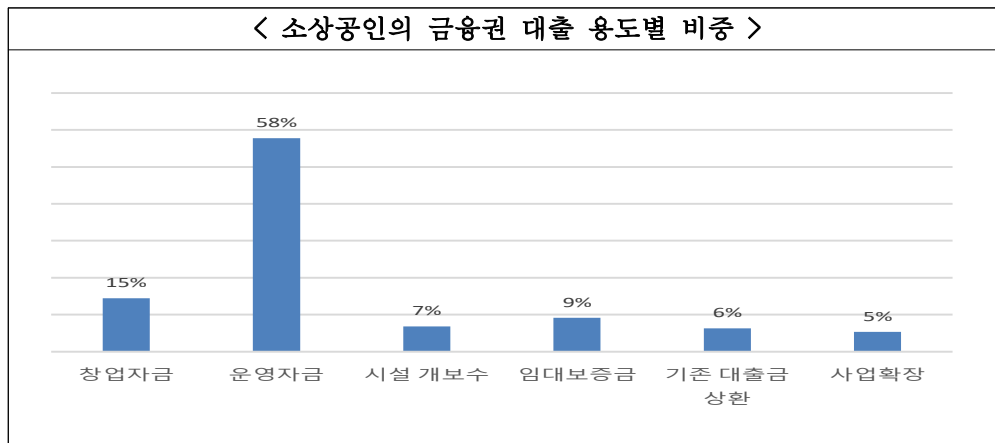
-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사업자금융도로 사용한다는 답변은 39%로 가장 많았음.



○ 가계자금대출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 중 당초에 가계자금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대출금액의 비중이 사업자금대출 전체에 해당한다는 답변은 10%,

- 50% 이상 16%, 50% 미만 33%라고 답변(그 밖에 잘 모르겠음 16%, 전혀 없음 25%)

○ 금융권 대출 용도는 운영자금 58%, 창업자금 15%, 임대보증금 9%, 시설개보수 7%, 기존대출 상환 6%, 사업확장 5% 순으로 답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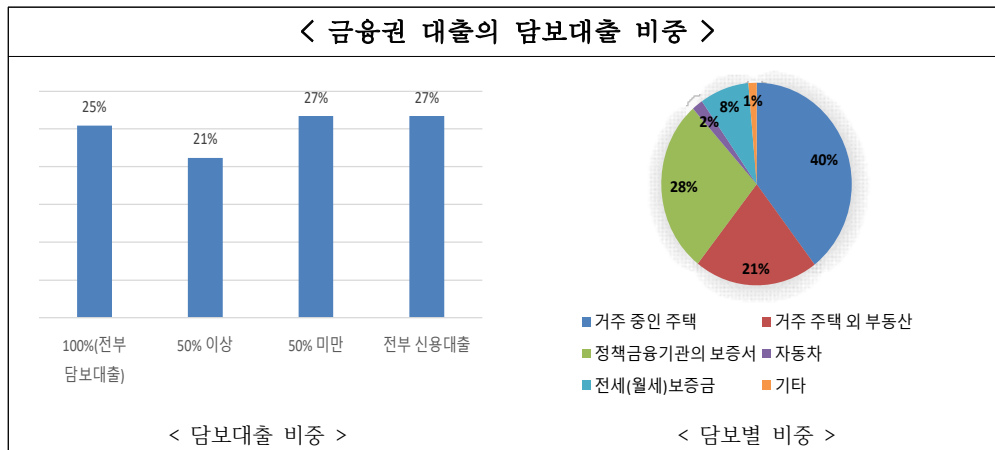
○ 전반적으로 적지 않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대출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고, 가계자금 용도의 대출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됨(대출 조건이 유리하여 가계자금으로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

□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중 27%는 신용대출만 이용하고, 나머지 73%는 담보대출만 이용하거나,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혼용하여 이용한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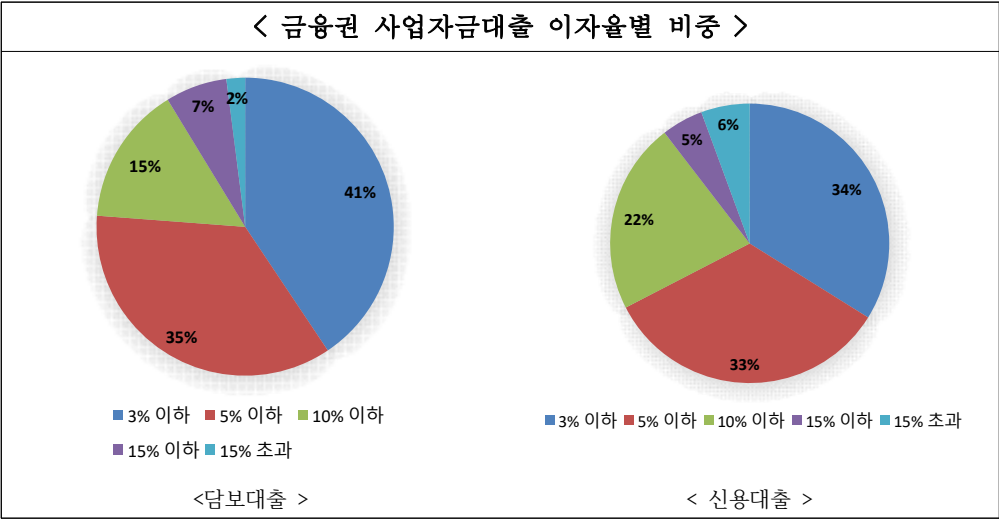
○ 담보대출(정책금융기관의 보증서 포함)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담보대출 비중은 100%(전부 담보대출)인 경우가 25%, 50% 이상 21%, 50% 미만 27% 순으로 답변함.

- 담보 종류는 거주 중인 주택과 거주 주택 외의 부동산이 61%로 가장 높았고,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서 28%, 전(월)세보증금 8%, 자동차 등 기타 3%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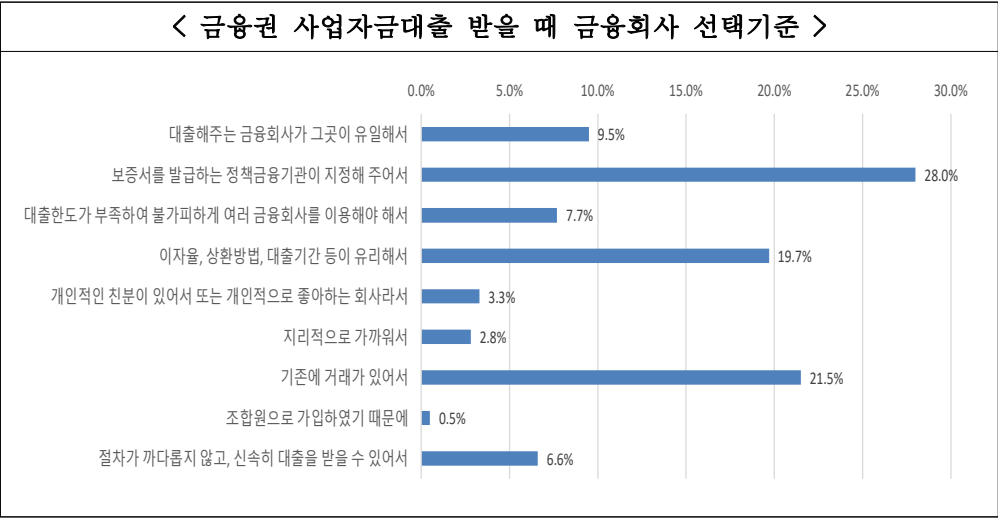
- 담보대출 중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0%(전부 보증서 담보)인 경우가 32%, 50% 이상 34%, 50% 미만 34% 순으로 답변함.



- 전반적으로 금융권의 소상공인 대출은 4명 중 3명이 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담보대출 비중이 높았고,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서 담보대출 비중도 적지 않아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지원은 소상공인 금융소외 해소에 유용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 정책금융기관의 담보력 보강 지원방안이 소상공인의 금융소외 현상 해소를 위한 현실적 유력한 대안 될 수 있음을 시사
- 금융권 담보대출의 이자율은 3% 이하인 경우가 41%로 가장 많고, 3% 초과~5% 이하 35%, 5% 초과~10% 이하 15%, 10% 초과 9% 순으로 답변함.
- 신용대출은 3% 이하 34%, 3% 초과~5% 이하 33%, 5% 초과~10% 이하 22%, 10% 초과 11% 순으로 답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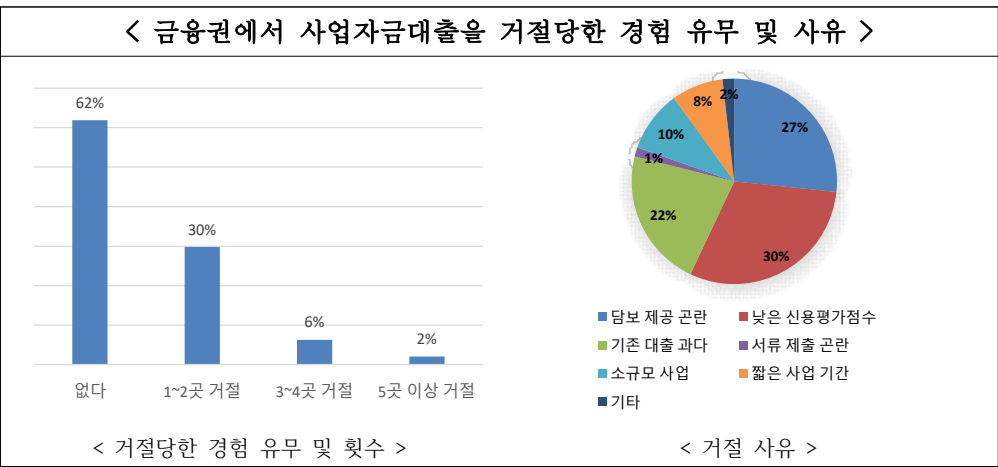
- 사업자금대출을 가장 많이 받은 금융회사(사업자금대출의 90%~100%을 차지하는 금융회사)의 형태별 비중은 은행이 86%로 가장 높고,
- 이어서 농협 등 협동조합 6%, 신협/새마을금고 3%이고, 저축은행 2%, 보험사/캐피탈사 2%, 기타 2%로 답변하여,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금융회사 지점을 기준으로 사업자금대출을 받은 금융회사 수는 1곳인 경우가 51%로 가장 많았고, 2곳 32%, 3~4곳 15%, 5곳 이상이 2% 순으로 답하여 복수 거래가 절반을 넘는 수준으로 나타남.
- 소상공인이 금융권에서 사업자금대출을 받을 때 금융회사 선택기준은 대출 조건의 유불리나 거래의 편의성보다 대출 실행 가능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선택 폭이 넓지 않은 것으로 이해됨.
 - 소상공인이 사업자금대출을 받을 때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해당 금융회사가 유일하게 대출해주거나(10%),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서에 지정되었거나(28%), 대출한도가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여러 금융회사를 이용하여(8%) 선택한다는 답변 비중이 46% 수준임.
 - 대출조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의 유불리(20%), 절차의 용이성 및 신속성이나(7%), 기존 거래 여부(22%), 지리적 접근성(3%), 개인적 선호(3%) 등 대출 조건의 유불리나 거래의 편의성 및 개인의 선호와 관련된 답변은 54% 수준으로 답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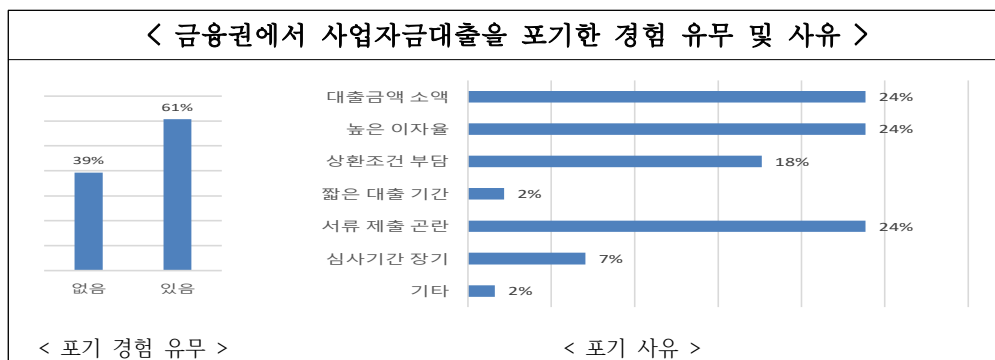
□ 소상공인 중 38%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며, 주요 거절 사유는 신용평가점수가 낮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로 답변함.

○ 거절 사유는 신용평가점수가 낮은 경우 30%,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7%, 기존 대출금이 너무 많은 경우 22% 등 대출금 상환능력과 관련성이 높은 사유가 79%로 높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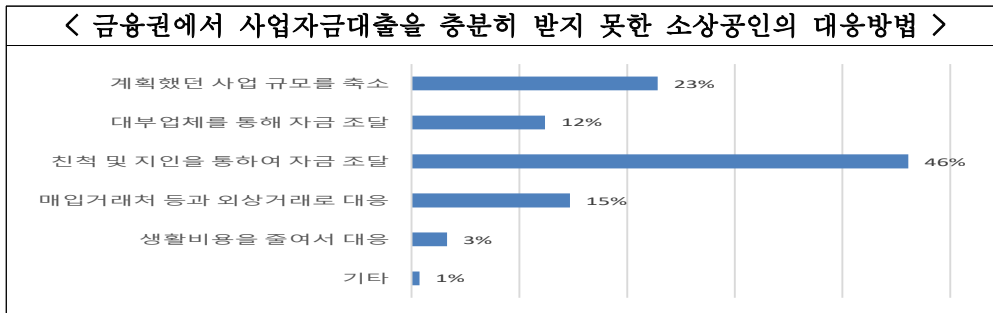
- 사업 규모가 작은 경우 10%, 사업기간이 짧은 경우 8%, 요구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1% 등으로 답변함(그 밖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 2%).



- 소상공인이 금융권에서 사업자금대출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대출받기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대출 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주요한 포기 요인으로 답변함.
- 관련 설문에 응답한 소상공인 중에서 대출받기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비중은 61% 수준임.
- 포기 사유는 이자율이 높거나(25%) 분할상환 등 상환조건이 부담스러운 경우(18%), 대출 기간이 짧은 경우(2%) 등 대출 조건과 관련된 경우가 45%,
- 요구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24%),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7%) 등 대출 절차와 밀접한 사유가 31%,
- 그 밖에 대출금액이 적어서 대출을 포기한 경우가 24%로 답변함.



- 금융권에서 사업자금대출을 충분히 받지 못한 소상공인의 대응방법은 친척 및 지인(46%), 대부업체(12%)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58%,
- 계획했던 사업규모 축소(23%), 매입거래처 등과 외상거래로 대응(15%) 등 사업수행 과정에서 대응하는 경우가 38%, 생활비 절감으로 대응하는 경우 3%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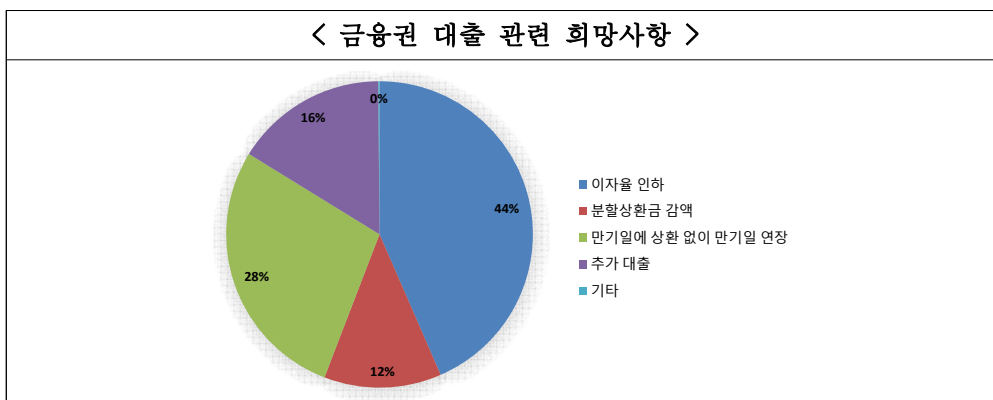


○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은 금융권 대출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유를

- 낮은 신용점수, 담보제공 곤란 등 상환능력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 금융회사 대출상품의 대출금액, 이자율, 상환조건이 소상공인의 수요와 부합하지 않거나,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스스로 대출받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됨.
- 이러한 결과로 소상공인은 지인 등 사적 금융거래에 의지하여 사업 자금을 조달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 관련 희망사항은 이자율 인하 44%, 만기일에 상환 없이 만기일 연장 28%, 추가대출 16%, 분할상환금 감액 12% 순으로 답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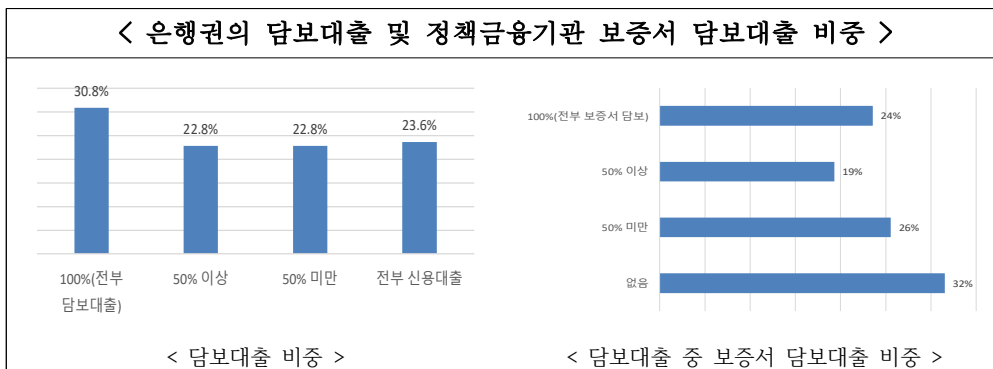
○ 금융권 담보대출 이자율이 5% 이하인 비중이 76%인데도 이자율 인하를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향후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상승 시 이자율 인하 욕구는 매우 클 것으로 이해됨.



□ 은행권 대출 이용자 중 31%는 담보대출만 이용하고, 46%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같이 이용하며, 23%는 신용대출만 이용한다고 답변함.

○ 위 담보대출 이용자의 69%가 정책금융기관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하고 있어, 정책금융기관 보증서가 소상공인이 은행권 대출을 받는 데 유용한 것으로 이해됨.

- 전부 신용대출 이용자를 제외한 담보대출 이용자 중 정책금융기관 보증서 담보대출 비중은 100%(전부 보증서 담보)인 경우는 24%, 50% 이상~100% 미만인 경우 19%, 50% 미만인 경우 26%로 답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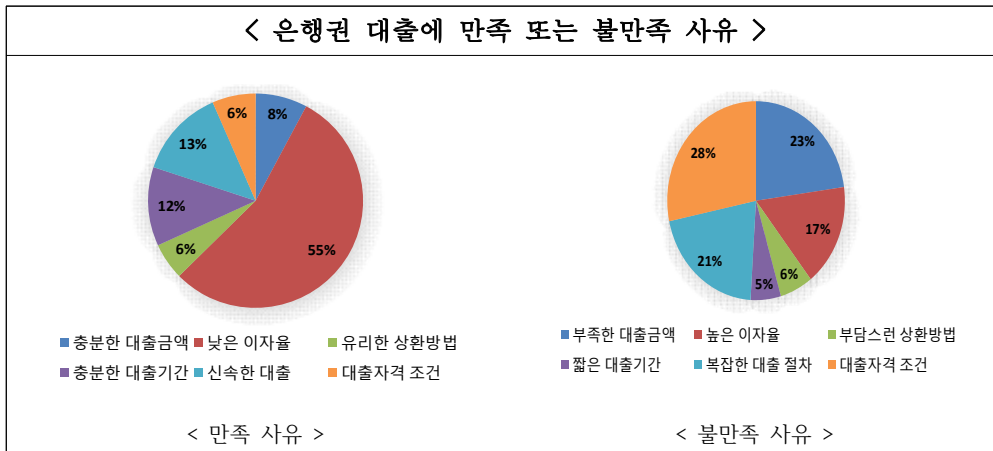


□ 소상공인은 은행권 대출에 대해 낮은 이자율(55%)이 가장 만족스럽고,

○ 신속성 13%, 대출 기간 12%, 충분한 대출금액 8%, 유리한 상환방법 6%, 대출자격 조건 6% 순으로 만족한다고 답변함.

○ 반면, 까다로운 대출자격 조건(28%)에 가장 불만족하였으며,

- 부족한 대출금액 23%, 복잡한 대출 절차 21%, 높은 이자율 17%, 상환방법 6%, 짧은 대출 기간 5% 순으로 불만족하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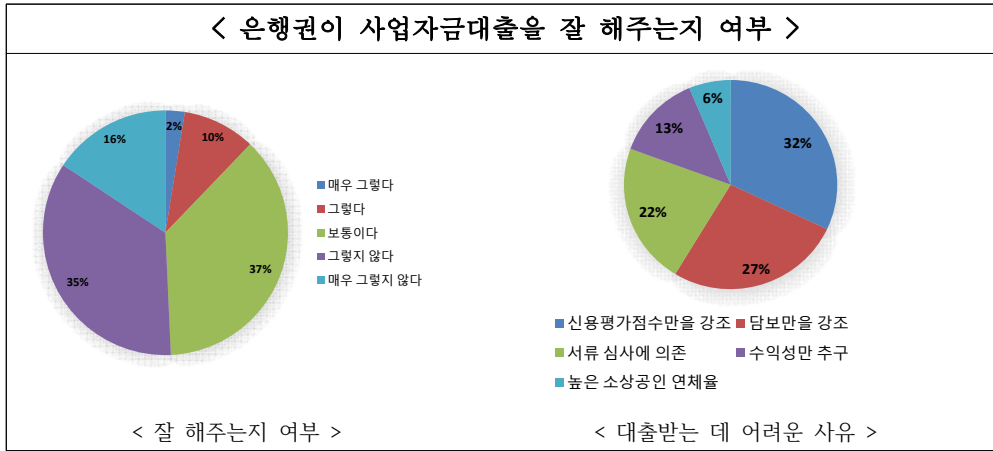
□ 은행이 정책금융기관 보증서 담보대출 외에 일반적인 사업자금대출을 잘해 주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51%의 소상공인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함(그렇지 않다 35%, 매우 그렇지 않다 16%).

○ 반면, 잘해 준다는 답변은 12%에 불과함(매우 그렇다 2%, 그렇다 10%).

○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정책금융기관 보증서 담보대출 외에 일반적인 사업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운 주요 이유로 신용평가점수 및 담보 위주의 대출서비스 관행을 지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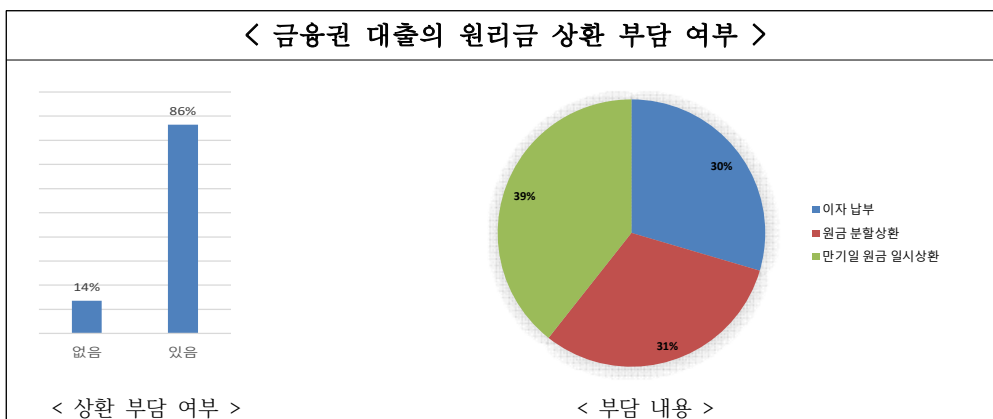
-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유로 은행이 지나치게 신용평가점수만 강조한다는 답변 32%, 담보만 강조한다는 답변이 27% 수준임.

- 이어서, 서류심사에 의존하기 때문(22%), 지역에 대한 기여보다 은행의 수익성을 높이려 하기 때문(13%), 소상공인의 높은 연체율(6%) 순으로 답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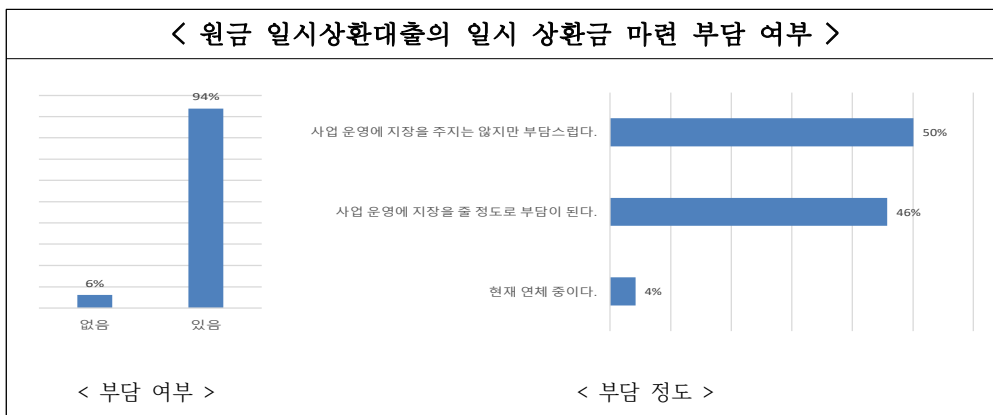
- 한편,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의 30%는 본인의 상환능력보다 나쁘게 평가된다고 응답하였으며, 59%는 실제 능력과 유사하고, 11% 실제 능력보다 좋게 평가되고 있다고 응답함.
- 소상공인이 약 1/3은 본인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은 신용평가제도, 담보 및 서류 중심의 대출 관행을 충족시킬 수 없어 은행 대출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으로 보임.
- 2금융권 대출 이용자 중 담보대출 이용자 비중이 76%로 은행권(76%)에 버금가고, 신용대출만 이용한다는 답변은 24%에 불과함.
- 담보대출 이용자 중 58%가 정책금융기관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함.
- 다만, 담보대출 이용자 중 보증서가 담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인 경우는 27%로 은행권(42%)보다 낮은 수준임.
- 2금융권 대출서비스 중 까다롭지 않은 대출자격 조건이 만족스럽다는 답변이 26%로 가장 높았으며,
- 낮은 이자율 24%, 신속한 대출 22%, 충분한 대출금액 13%, 대출 기간 8%, 상환방법 8% 순으로 만족한다고 답변함.

- 반면, 불만족 사유는 높은 이자율(44%)이 가장 높고, 부족한 대출금액 18%, 까다로운 대출 자격 조건 17%, 복잡한 대출절차 13%, 상환 방법 5%, 짧은 대출기간 3% 순으로 불만족하다고 답변함.
- 2금융권이 정책금융기관 보증서 담보대출 외에 일반적인 사업자금대출을 잘해 주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49%의 소상공인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여, 은행권(50%)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잘해 준다는 답변은 14%에 불과함(37%는 보통이라고 답변).
- 2금융권에서 일반적인 사업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운 주요 이유로 35%가 신용평가점수 위주의 대출서비스 관행 때문이라고 답변함.
 - 그밖에 서류 위주 대출 심사 19%, 담보 위주 대출 관행 18%, 지역에 대한 기여보다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높이려 하기 때문 11%, 소상공인의 높은 연체율 11% 순으로 응답함(대출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 없음 6%).
- 소상공인의 86%는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14%만 부담이 없다고 답변함.
- 부담이 되는 분야는 원금상환 부담 70%(분할상환 31%, 만기일 일시상환 39%), 이자 납부 부담 30%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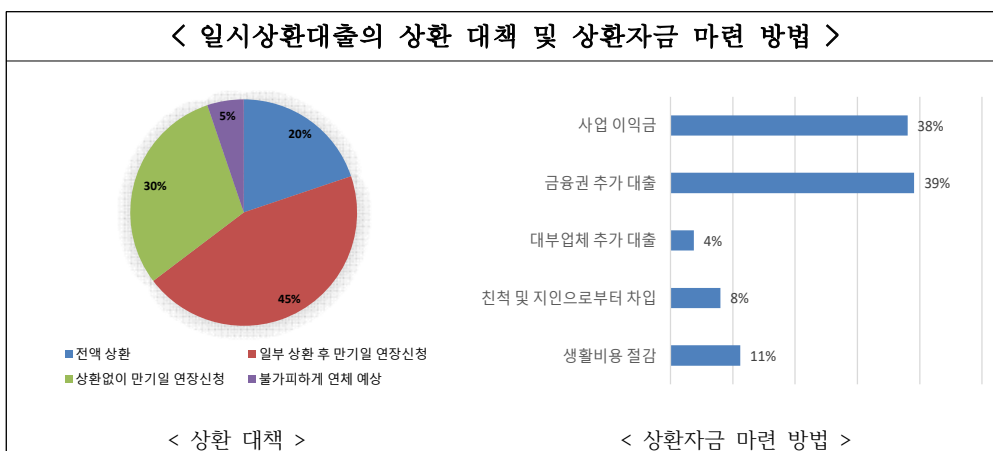
○ 원금 일시상환대출의 상환금 마련에 대해 응답자의 94%가 부담스럽고, 6%만이 부담스럽지 않다고 답변함.

- 부담 정도는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지만 부담스럽다는 답변 50%, 사업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로 부담스럽다는 답변이 46%였으며, 현재 이미 연체 중이라는 답변도 4%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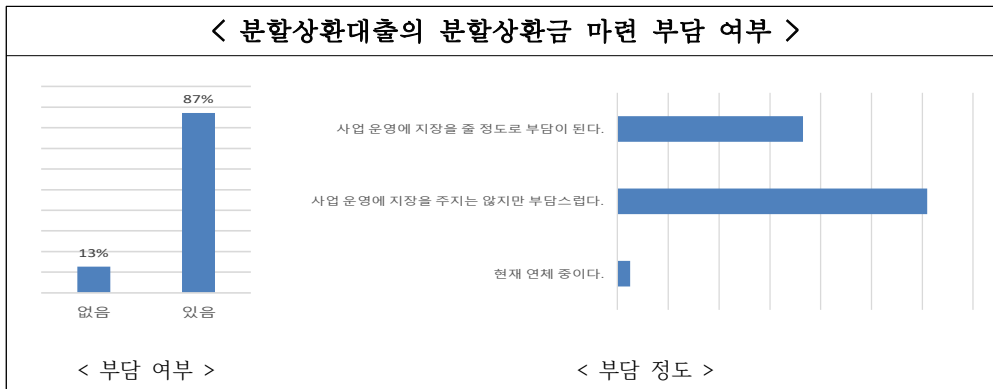
- 원금 일시상환대출의 상환 대책으로 일부 상환(45%) 또는 이자 정상 납부 중이므로 상환 없이(30%) 만기일 연장신청 예정이 75%, 전액 상환 예정 20%, 불가피하게 연체가 예상된다고 답변 5% 순임.

- 상환자금 마련방법은 사업이익으로 마련 예정은 38%에 불과하고, 추가 차입 예정 51%, 생활비 절감으로 마련 예정 11%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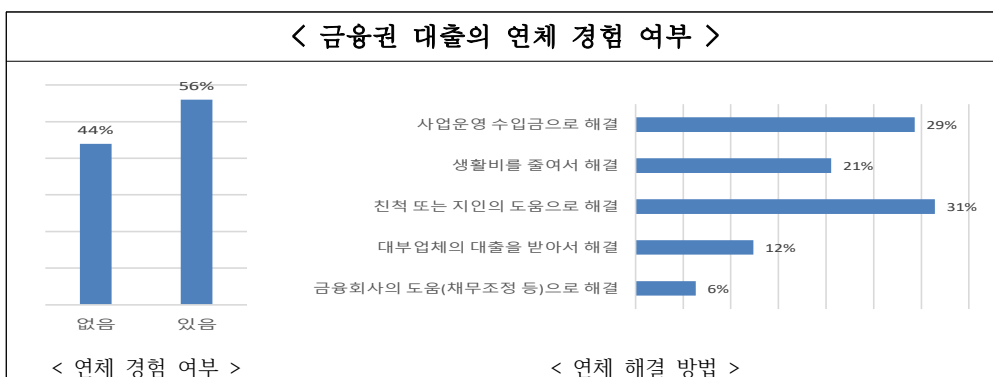
○ 원금 분할상환금 마련에 응답자의 87%는 부담스럽다고 답변하였으며, 부담스럽지 않다는 답변은 13% 수준임.

- 부담스럽다는 응답자의 부담 정도는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지만 부담스럽다는 답변 61%, 사업에 지장을 줄 정도라는 답변이 37%, 현재 연체 중이라는 답변 2% 순임.



○ 이러한 상환 부담으로 소상공인의 56%는 금융권 대출 이용과정에서 이자 또는 원금 연체 경험이 있다고 답변함.

- 이자 또는 원금의 연체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수익금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29%에 불과하고, 43%는 추가 차입으로, 21%는 생활비 절감으로, 6%만이 금융회사 도움(채무조정 등)으로 해결한다고 답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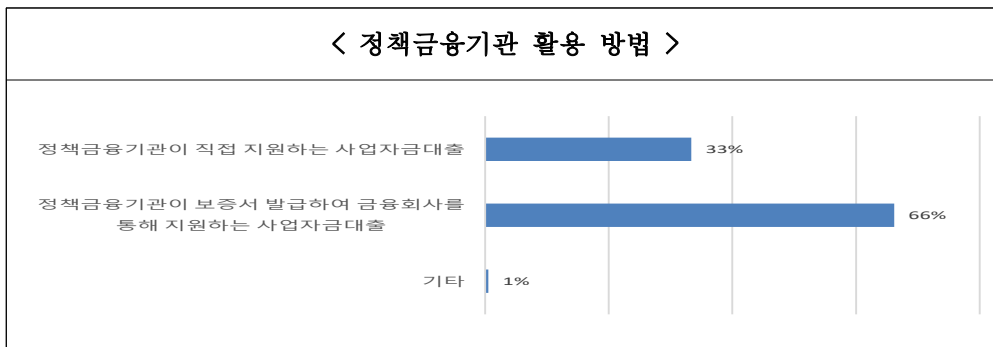
○ 대출금 상환방법은 대출상품에 정해진 대로 선택하는 경우 50%, 정책금융기관 보증서에 정해진 대로 선택 31%, 대출담당자 권유 23%, 소상공인이 선택 14% 순임.

- 소상공인의 사업 현황에 적합한 상환방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됨.

○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대부분은 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절반 이상은 원리금 상환 연체를 경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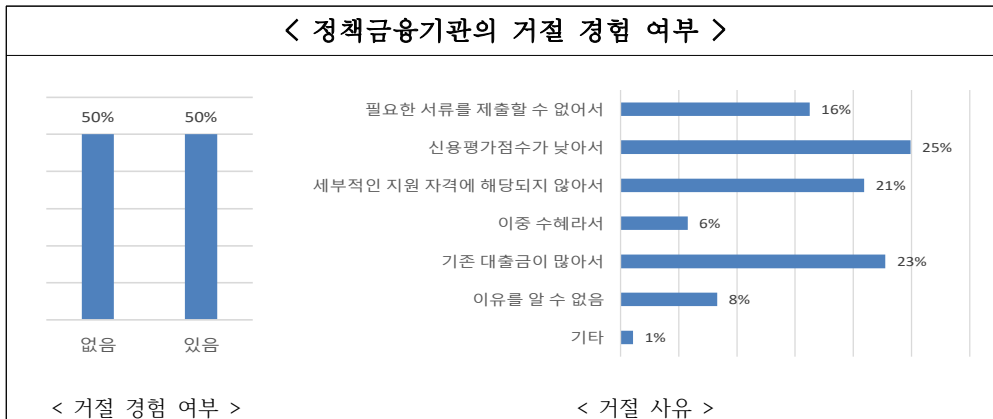
- 원금 일시상환대출 이용자의 76%는 만기일 연장으로 대응 예정이고, 상환자금은 사업수익금보다 추가 차입에 의존하고 있어 만기일 연장 및 분할상환금 마련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됨.

□ 소상공인이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은 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66%, 정책금융기관이 직접 지원하는 대출을 이용한다는 답변은 33%라고 답변함.



□ 소상공인의 서비스 이용 요청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이 거절하는 경우는 50% 수준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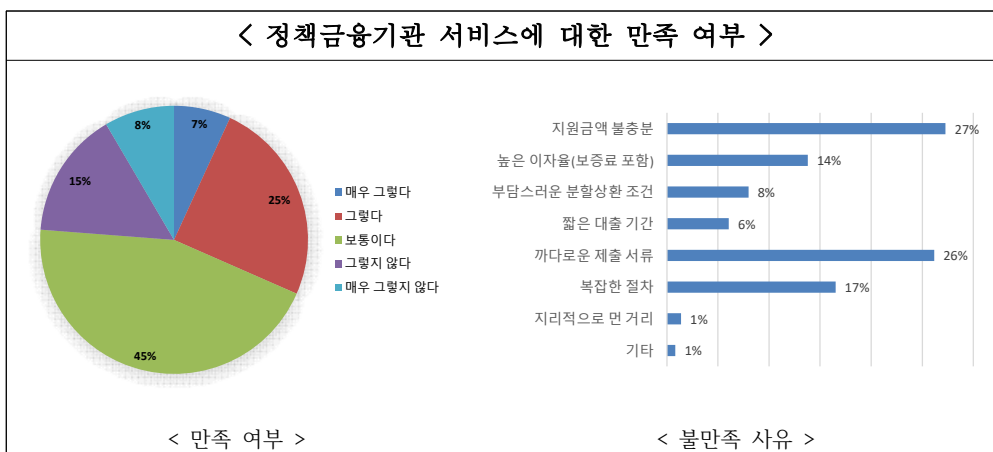
○ 거절 사유는 신용평가점수 관련 25%, 기존 대출 규모 관련 23%, 세부 자격 관련 21%, 서류제출 관련 16%, 이중 수혜 관련 6%, 기타 1% 순임(8%는 이유를 알 수 없음).



○ 거절당하는 횟수는 1회 46%, 2~3회 35%, 4~5회 11%, 5회 초과 8% 순으로 답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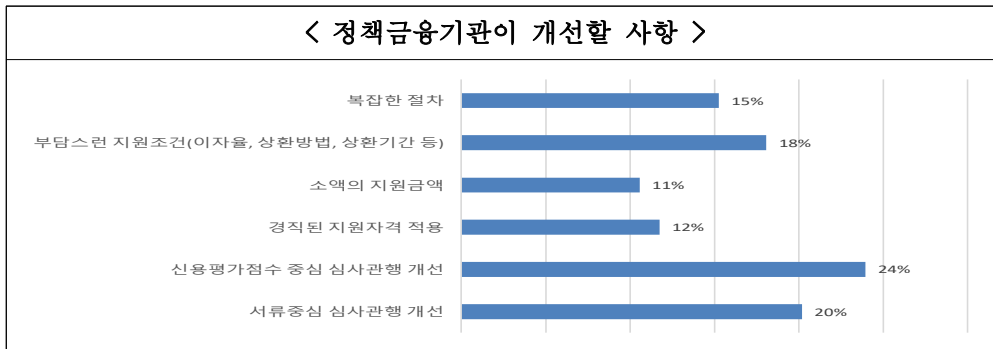
□ 정책금융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32%, 보통 비율은 45%, 불만족 비율은 23% 수준임.

○ 불만족 사유는 지원절차(까다로운 제출서류, 복잡한 절차) 관련 43%, 지원 조건(높은 이자율, 부담스런 상환조건, 짧은 대출기간) 관련 28%, 지원금액 불충분 27%, 지리적으로 먼 거리 1%, 기타 1%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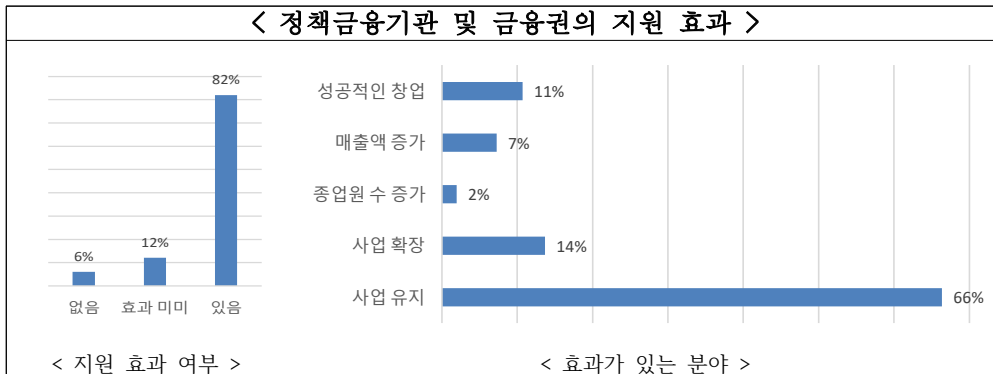


○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개선할 사항은 지원심사 관행에 대한 지적이 44%로 많았으며, (세부적으로는 신용평가점수 중심 심사관행 24%, 서류중심 심사 관행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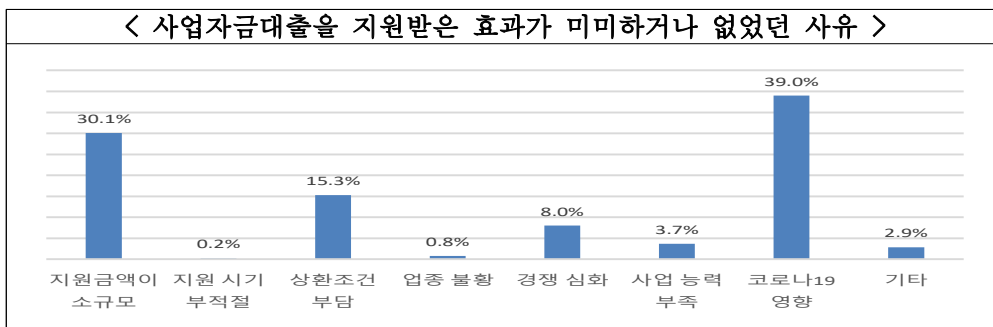
- 상환조건(이자율, 상환방법, 상환기간) 18%, 복잡한 절차 15%, 경직된 지원 자격 12%, 지원금액 확대 11% 순으로 응답함.



-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은 정책금융기관이 은행 등 금융권과 유사하게 실시하는 지원심사 관행(또는 지원절차)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이의 개선을 희망하는 것으로 이해됨.
-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지 않은 소상공인도 있었는데, 활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의 51%는 대출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나,
 - 대출이 필요하였으나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지 못한 답변도 48%임.
 -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지 않은 사유는 지원신청을 거절당할 것으로 예상하거나(38%), 지원조건이 맞지 않아 포기한 경우(25%),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18%), 지원제도를 알지 못한 경우(18%)로 답변함.
- 전반적으로 대출이 필요한데도 금융권 대출이나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아,
 -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때 금융권 대출이 없는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실태조사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소상공인의 94%(효과가 미미한 경우 12% 포함)는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권의 지원이 사업운영에 효과가 있으며, 주로 사업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함.
 - 지원 효과가 없었다는 답변은 6% 수준임.
 - 효과가 있었던 분야별로는 사업 유지 66%, 사업확장 14%, 성공적 창업 11%, 매출 증가 7%, 종업원 수 증가 2% 순으로 답변함.



-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었던 사유는 코로나19 영향이 39%로 가장 높았으며, 지원금액 소규모 30%, 상환조건 부담 15%, 경쟁 심화 8%, 사업 능력 부족 4%, 업종불황 1%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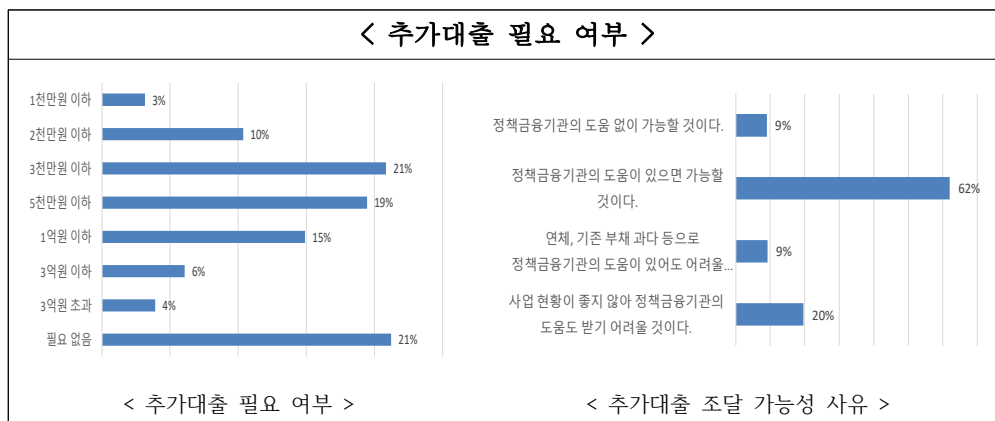
- 전반적으로 현재에도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권의 대출 지원 효과는 있지만, 이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대출금액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이해됨.
- 현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애로사항은 매출 감소 75%, 원자재가격 상승 9%, 인건비 상승 8%, 임대료 상승 3%, 자금조달 및 종업원 관리 각 2%, 택배비용 상승 1% 순으로 답변함.
- 코로나19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매출액 감소 59%, 이익금 감소 30%, 종업원 수 감소 6%, 매출액 증가 2%, 종업원 증가 1%, 변화 없음 3%로 답변함.
-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매출 감소와 이익금 감소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소상공인의 79%는 현 시점에서 추가대출을 희망함.

○ 희망하는 추가대출 규모는 1천만원 이하 3%, 2천만원 이하 10%, 3천만원 이하 21%, 5천만원 이하 19%, 1억원 이하 15%, 1억원 초과 10% 순임.

○ 희망하는 추가대출을 지원받을 가능성에 대해 9%만 정책금융기관의 도움 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62%는 정책금융기관의 도움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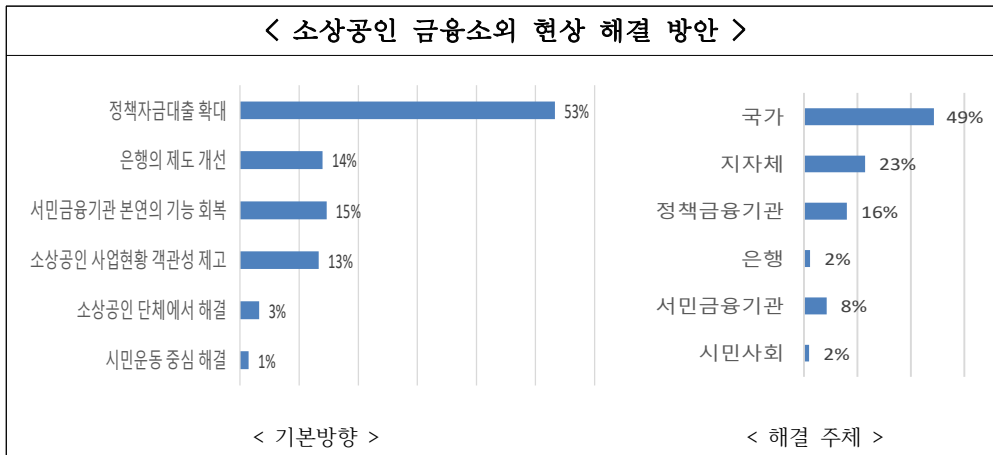
- 29%는 사업현황이 좋지 않거나(20%), 연체·기존부채 과다 등(9%)으로 정책금융기관의 도움이 있어도 지원받기 어려울 것으로 답변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됨.



□ 소상공인의 금융소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 소상공인 53%가 정책자금대출 확대를 선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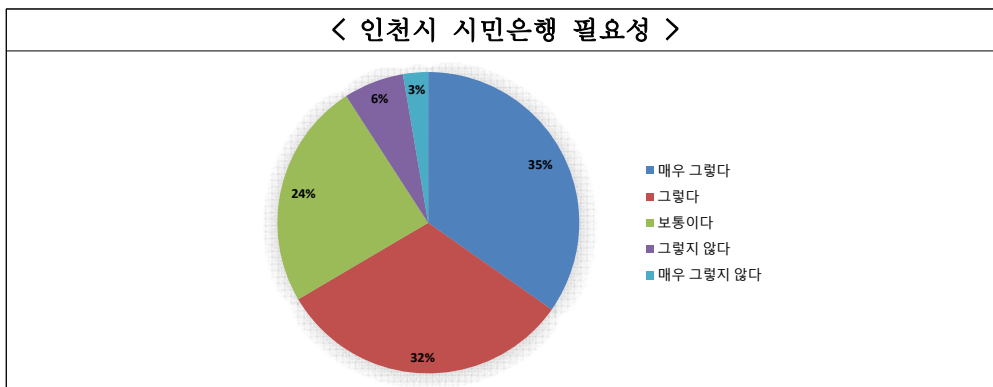
○ 그밖에 서민금융기관 기능 회복 15%, 은행의 제도 개선 14%, 소상공인 사업현황 객관성 제고 13%, 소상공인 단체에서 해결 3%, 시민운동 중심 1% 순임.

○ 금융소외 현상 해결 주체는 정부 49%, 지자체 23%, 정책금융기관 16%, 서민금융기관 8%, 은행 2%, 시민사회 2% 순으로 답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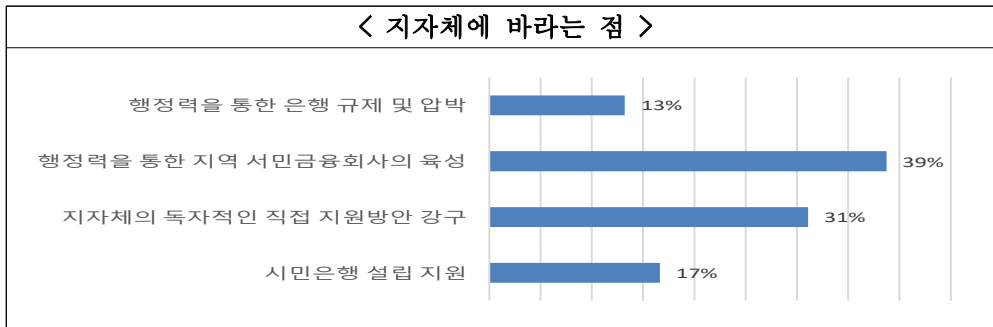
□ 인천지역 소상공인 및 개인 금융소외계층의 소외 현상 해결을 위해 인천 시민만을 위한 시민은행의 필요성에 대해 67%가 공감한다고 답변함.

○ 공감 여부 질문에 매우 그렇다 35%, 그렇다 32%, 보통이다 24%,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지 않다 3%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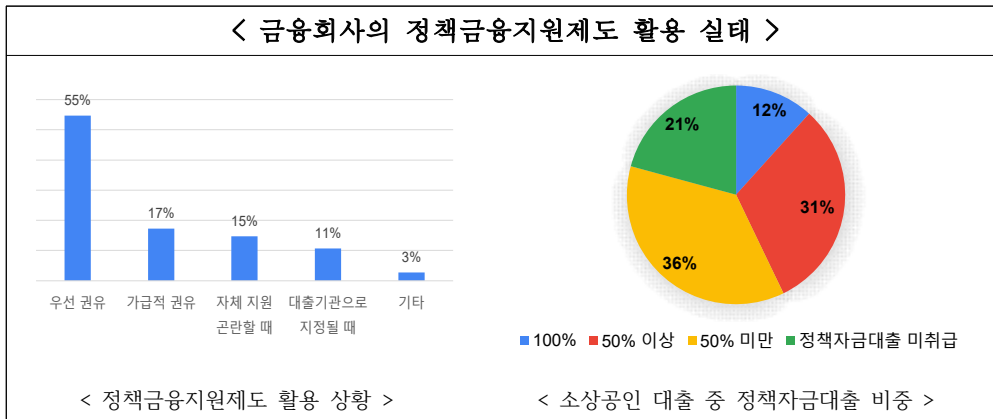
□ 소상공인 금융소외 현상 해결을 위해 지자체에 바라는 점은, 행정력을 통한 지역 서민금융회사 육성 39%, 독자적인 직접 지원방안 강구 31%, 시민은행 설립 지원 17%, 은행 규제 및 압박 13% 등의 순으로 답변함.

○ 전반적으로 지자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이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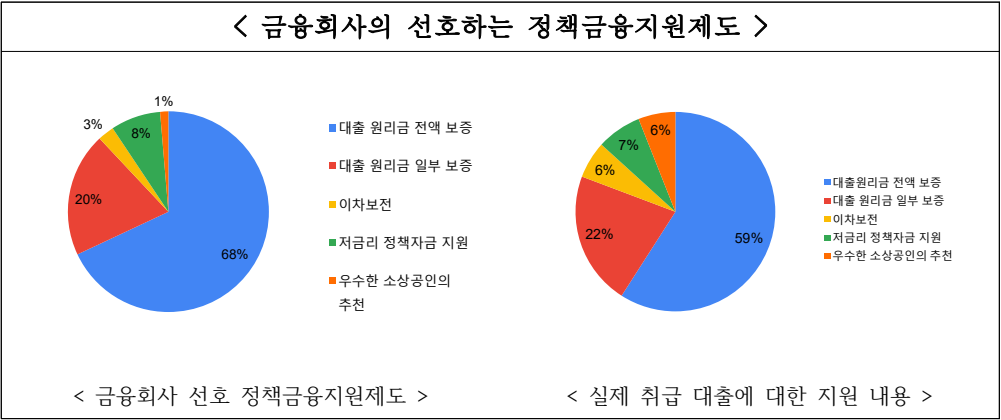


(2) 금융회사(신협)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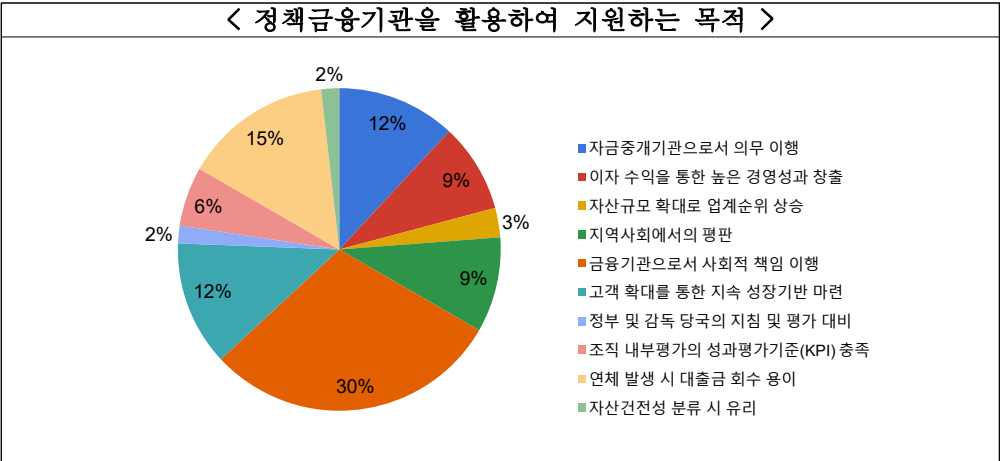
- 인천지역 금융회사는 소상공인의 사업자금대출 신청에 대해 대체로 정책금융지원제도를 활용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보임.
- 금융회사의 72%는 소상공인과 사업자금대출 상담 시 금융회사 자체 대출상품을 권유하기보다 정책금융지원제도를 우선 권유(55%)하거나 가급적 권유(17%)한다고 답변함.
 - 금융회사의 자체 대출상품으로 대출 실행이 곤란할 때에 권유한다는 비율(15%)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 소상공인이 해당 금융회사를 정책금융지원제도의 대출 취급기관으로 신청할 때에만 대출을 실행한다는 답변은 11%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금융회사의 79%는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자금대출을 정책금융기관 지원과 연계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해당 금융회사가 취급한 소상공인대출 중 정책자금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인 금융회사가 12%, 50% 이상인 금융회사가 31%, 50% 미만을 정책자금대출로 지원하는 금융회사가 36% 수준임.
 - 반면, 금융회사의 21%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해당 금융회사 인근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불편 등의 다른 문제점 발생 요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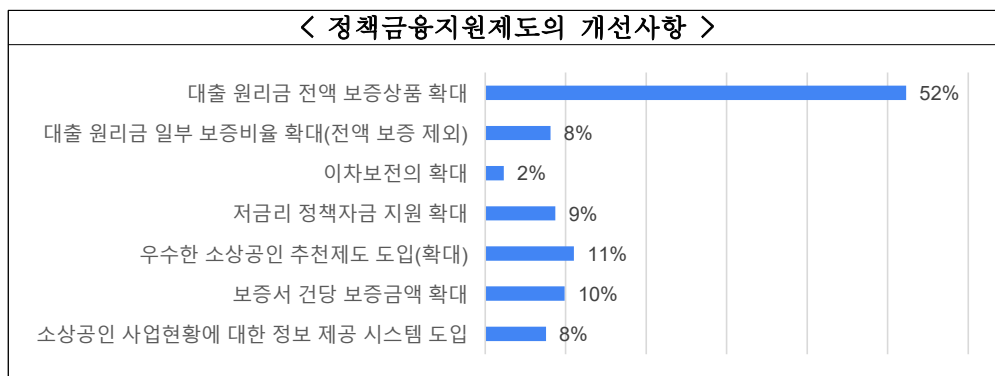
- 금융회사는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계기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모색하기보다,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을 토대로 대출을 단순히 집행하는 수준의 역할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금융회사는 소상공인 정책금융지원제도 중 대출실행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출 원리금 전액 보증(68%)을 주로 선호함.
- 대출 원리금 일부 보증(20%), 저금리 정책자금지원(8%), 이차보전(3%) 및 우수한 소상공인 추천(1%) 등 대출실행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의사결정 개입 정도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제도는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실제 금융회사가 취급한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이 지원하는 내용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로 대출 원리금에 대한 전액 보증(59%)이나 일부 보증(22%)이 주를 이루고,
-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7%), 이차보전(6%) 및 우수한 소상공인 추천(6%) 등 금융회사의 능동적 역할이 전제되는 지원제도는 모두 합하여도 절반 이하임.



-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금융회사가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자금대출을 지원하는 목적에서도 나타남.
- 금융회사의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지원목적은 사회적 책임 이행(30%), 자금중개기관으로서 의무(12%), 지역사회 평판(9%) 등의 비중이 높고,
 - 고객 확대를 통한 지속성장기반 마련(12%), 이자수익 향유(9%), 자산규모 확대(3%) 등 경영성과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동기는 낮았음.
 - 그밖에 지원목적도 연체 시 대출금 회수 용이(15%), 조직 내부평가의 성과평가기준(KPI) 충족(6%), 감독당국의 지침 및 평가 대비(2%), 자산건전성 분류 유리(2%) 등 경영성과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경영활동과는 거리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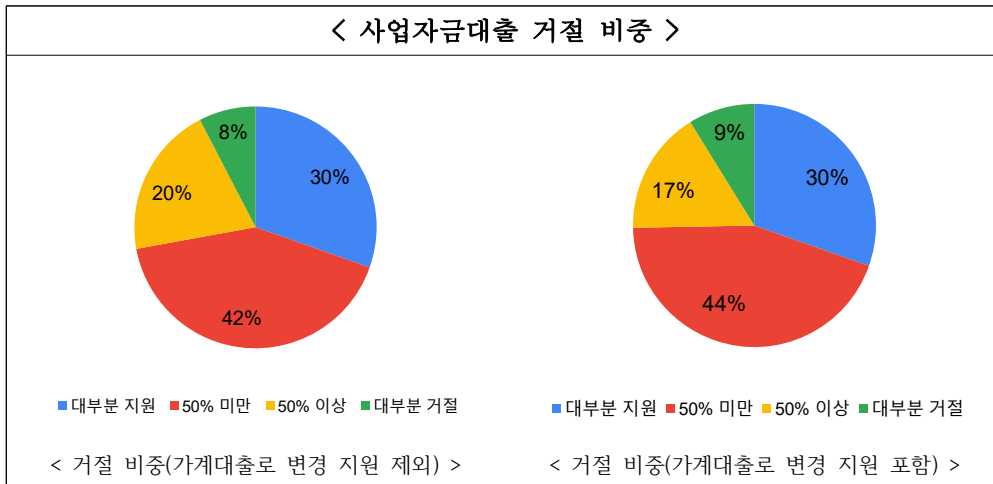
- 금융회사는 소상공인대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소상공인 정책금융지원제도의 개선사항으로 대출 원리금 보증상품 확대를 요청함.
- 금융회사 요청사항은 대출 원리금 전액 보증상품 확대(52%), 대출 원리금 일부 보증비율 확대(8%) 등 원리금 보증 확대에 집중함.
- 금융회사의 능동적 역할이 필요한 항목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나, 현재의 제도하에서 동 항목에 대한 선호 비중보다 높은 점은 긍정적임.
- 즉, 우수 소상공인 추천제도 도입(11%), 보증서 건당 보증금액 확대(10%),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9%), 소상공인 사업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 도입(8%), 이차보전 확대(2%) 등 대출 지원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능동적 역할 수행에 필요한 항목에 대한 개선요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소상공인의 사업자금대출 신청에 대해 대출 신청을 거절하거나 가계자금대출로 변경하여 지원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금융회사는 소상공인의 사업자금대출 신청에 대해 대부분 지원(30%)하거나, 50% 미만으로 거절(42%)하는 비중이 72%이었으나,
 - 대출신청에 대해 50% 이상을 거절(20%)하거나, 대부분 거절(8%)하는 금융회사 비중도 28%로 적지 않은 수준임.
- 소상공인의 사업자금대출 신청을 가계자금대출로 변경하여 지원하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대부분 지원(30%)하거나, 50% 미만으로 거절

(44%)하는 비중이 74%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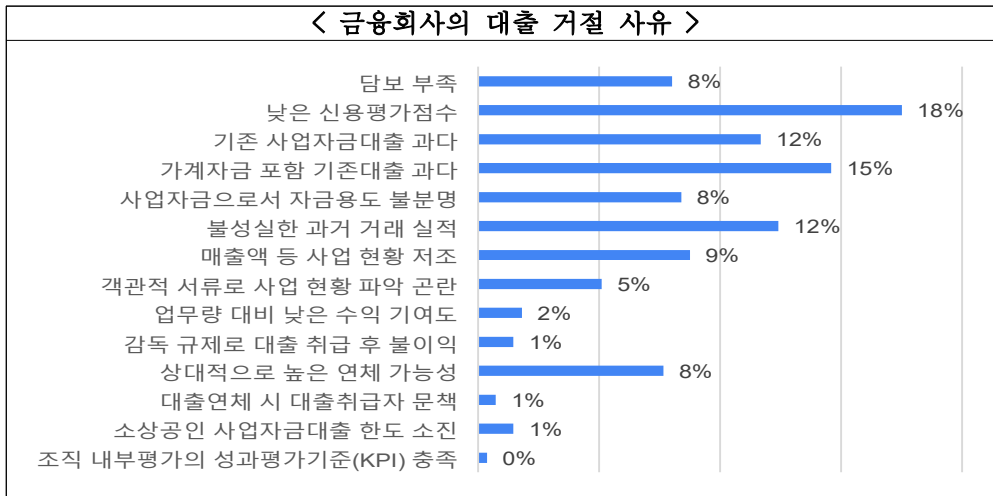
- 50% 이상을 거절(17%)하거나, 대부분 거절(9%)하는 금융회사가 26%로 사업자금대출을 거절하는 비중과 유사함.



□ 금융회사의 대출 거절 사유는 다양한데, 주로 대출원금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대출원금 회수 우려와 연관된 항목의 응답률이 73%에 육박함.

○ 세부적 항목으로는 낮은 신용평가점수 18%, 담보 부족 8%, 기존대출 과다(가계자금대출 포함) 27%, 불성실한 과거 거래실적 12%, 상대적으로 높은 연체 가능성 8%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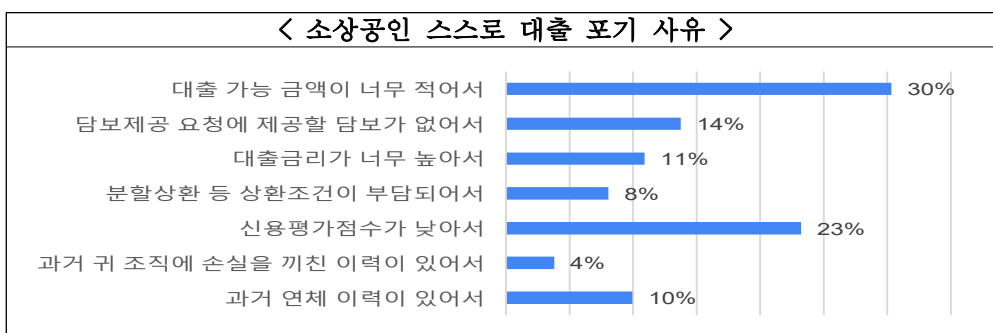
- 그밖에 매출액 등 소상공인의 사업 현황 저조(9%), 사업자금으로 용도 불분명(8%), 업무량 대비 낮은 수익기여도(2%) 등 순임.



□ 금융회사가 대출을 거절하는 외에 소상공인 스스로 대출받는 것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이때 포기하는 사유도 대출원금 회수를 우려하는 금융회사의 태도 때문으로 이해됨.

○ 소상공인이 스스로 대출받는 것을 포기하는 사유는 대출금액이 너무 적은 경우(30%), 낮은 신용평가 점수(23%), 제공할 담보가 없는 경우(14%), 과거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10%)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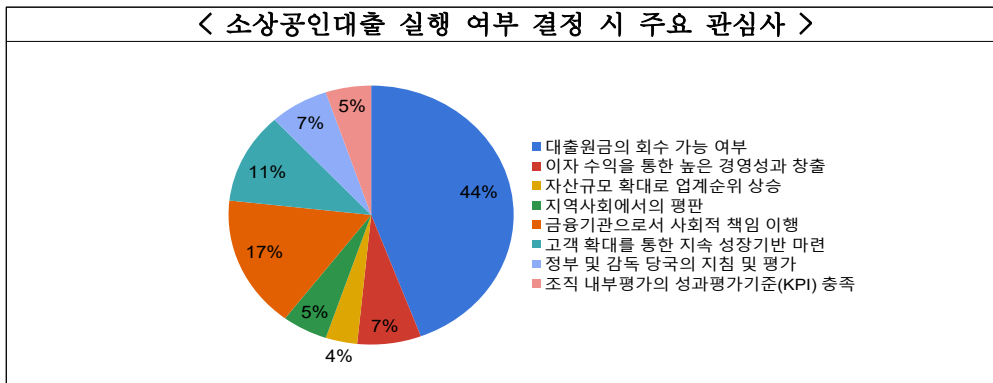
- 그밖에 높은 대출금리(11%), 분할상환 등 상환조건 부담(8%), 과거 금융회사에 손실을 끼친 이력(4%) 순임.



□ 금융회사의 대출원금 회수를 우려하는 태도는 다른 여러 설문항목에서 지속적으로 견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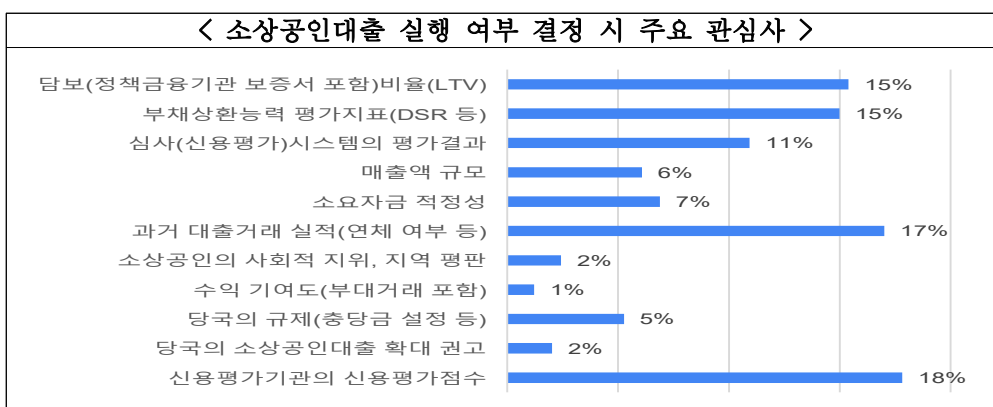
○ 금융회사는 소상공인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할 때, 주요 관심사 중 대출원금 회수 가능 여부가 44%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 지역사회 평판 항목이나, 이자수익 향유, 고객 및 자산규모 확대 등 경영성과 창출 항목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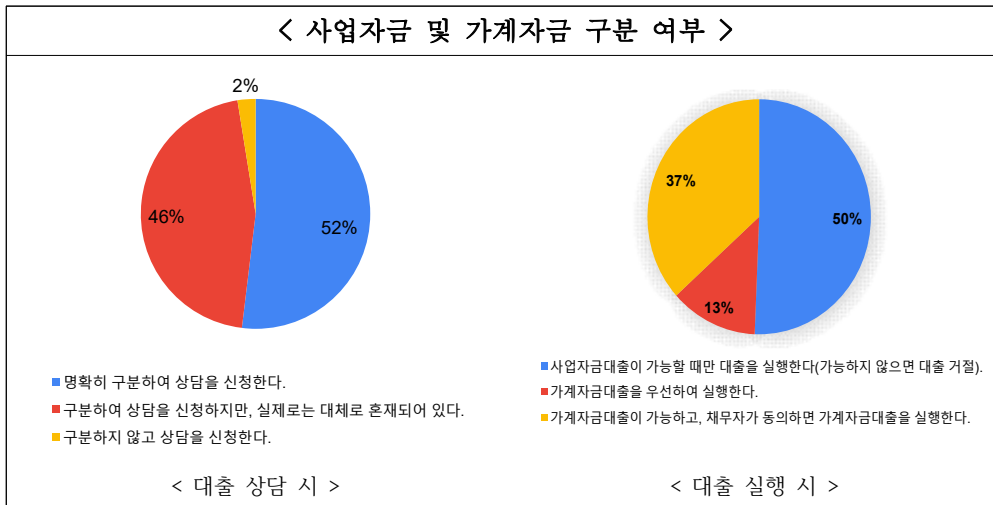
○ 금융회사가 실제 소상공인대출 실행 여부 결정할 때에 주요 결정요인은 신용도, 담보 등 상환능력 중심으로 조사되어, 신용도 및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요 요인으로 이해됨.

- 주요 결정요인으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점수(18%), 담보비율(15%) DSR 등 부채상환능력 평가지표(15%), 심사평가시스템의 평가결과(11%) 등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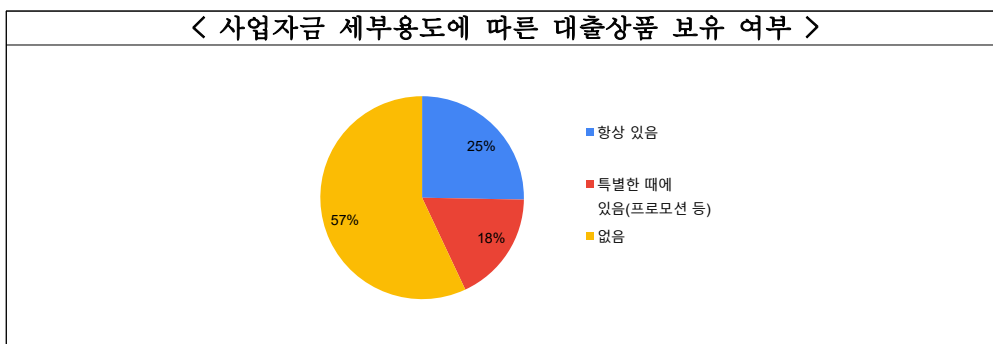
- 그중 신용평가점수는 금융회사의 92%가 대출 실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대출한도 결정(90%)과 이자율 결정(54%)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함.

- 담보(정책금융기관 보증서 제외) 유무는 금융회사의 76%가 대출 실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대출한도 결정(68%)과 이자율 결정(49%)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함.
-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서 담보 유무는 금융회사의 100%가 대출 실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대출한도 결정(73%)과 이자율 결정(47%)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함.
- 금융회사는 소상공인 금융소외 현상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금융회사 대출원리금을 보증해주는 정책자금대출 확대를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답변(52%)하여 대출금 원리금 회수 우려에 대한 일관된 태도를 반영함.
- 정책금융지원제도 개선사항도 대출 원리금 전액 보증상품 확대(52%), 원리금 보증비율 확대(8%) 등을 주요 개선사항을 지목함.
- 인천지역 금융회사는 소상공인 사업자금대출 지원을 위한 대출상품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
- 소상공인이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 시 사업자금과 가계자금을 구분하여 상담하지만, 실제 대출은 사업자금대출도 사업자금대출이 아닌 가계자금대출로 실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대출 상담 시 자금용도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는 2%에 불과하고, 대부분 자금 용도를 사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상담하나,
- 대출이 실행되는 사례 중 50%만 사업자금대출로 실행하고, 50%는 가계자금대출로 실행함.



○ 나아가, 금융회사가 창업·시설개선·전월세보증금·운영자금 등 사업자금의 세부용도에 따라 대출상품을 상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25% 수준이고,

- 특별한 때에 프로모션 상품으로 구비하는 18%를 포함하더라도 소상공인 사업자금의 세부용도에 따른 상품 구비율은 43% 수준에 불과하며, 57%는 세부용도의 대출상품이 없다고 응답함.



○ 운영자금대출을 자금용도에 따라 세부화한 대출상품이 있다면, 소상공인의 사업 상황에 더 적합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예를 들어, 세부용도의 대출상품은 운전자금용 대출과 비교하여, 분할상환 허용(34%), 별도 대출한도 인정(26%), 이자율 유리(17%), 대출 기간 장기(14%), 거치기간 인정(9%) 등에 차이가 있다고 답변함.

- 이는 소상공인이 필요한 자금 수요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용도의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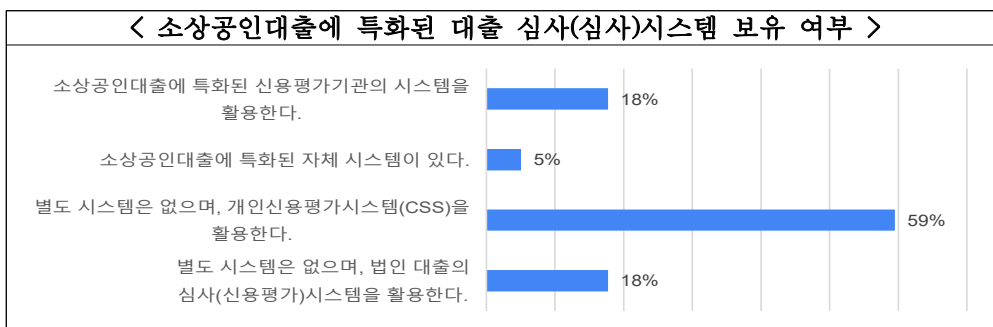
출상품이 있다면 소상공인이 금융회사의 대출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더 유리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전반적으로 소상공인 사업자금지원을 위한 금융회사의 다양한 대출상품이 미흡하여 사업자금을 가계자금대출로 지원하는 비중 높은데, 소상공인이 사업자금을 가계자금대출로 지원 대출받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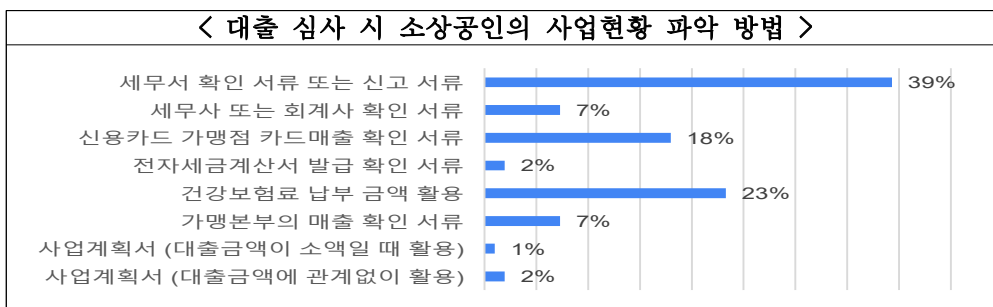
- 소상공인은 주택구입자금대출 등 가계자금대출을 받을 때에 대출한도가 축소되어 불리하나, 분할상환이 가능하거나, 담보제공 여부 결정 시에는 유리하고
- 금융회사는 신규고객 확보, 수익 기여, 대출 회수조건, 간편한 대출관리, 담보 취득 등에서 유리하고, 특별히 불리한 사항은 없어, 상대적으로 소상공인보다 금융회사에 유리한 것으로 답변

○ 소상공인 대출에 특화된 대출 심사시스템을 활용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여 낮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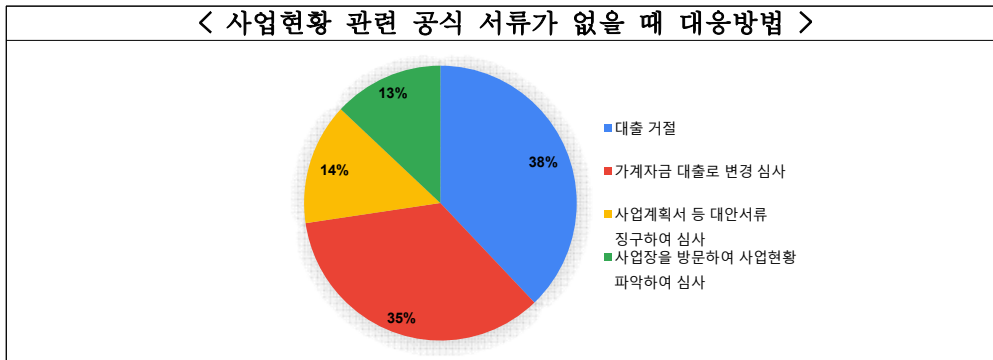
- 소상공인 대출에 특화된 자체 시스템(5%)이나, 신용평가기관의 시스템(18%)을 활용하기보다,
- 개인신용평가시스템(59%) 또는 법인대출 심사시스템(18%)을 활용하는 금융회사 비중이 월등히 높음.



- 소상공인 대출을 심사할 때 소상공인의 재무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비중이 낮아 소상공인의 상환능력 평가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이해됨.
- 금융회사가 소상공인의 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세무사 확인 또는 세무사 확인 서류 등으로 파악하는 비중은 46%이고,
- 54%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23%),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서류(18%), 가맹본부 매출 확인 서류(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확인 서류(2%), 사업계획서(3%) 등 간접자료를 통해 평가받는 것으로 조사됨.
- 재무제표를 구비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배려한 대안으로 이해되나, 신용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예상됨.



- 실제로 금융회사는 공식적인 서류로 사업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38%의 금융회사는 대출 신청을 거절하고, 35%는 가계대출로 변경하여 심사하며,
- 사업계획서 등 대안서류를 징구하는 경우 14%,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현황을 파악하는 경우는 13%로 답변함.



□ 금융회사의 소상공인대출 상환조건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의사나 상환능력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대출금 상환방법을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으로 결정 시 채무자인 소상공인이 선택한 대로 결정하는 경우는 3%에 불과함.

- 소상공인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경우는 30%,
- 대출상품 내용에 따르거나(정책자금대출을 포함하여 47%),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에 유리하게 결정하는(20%) 등 대부분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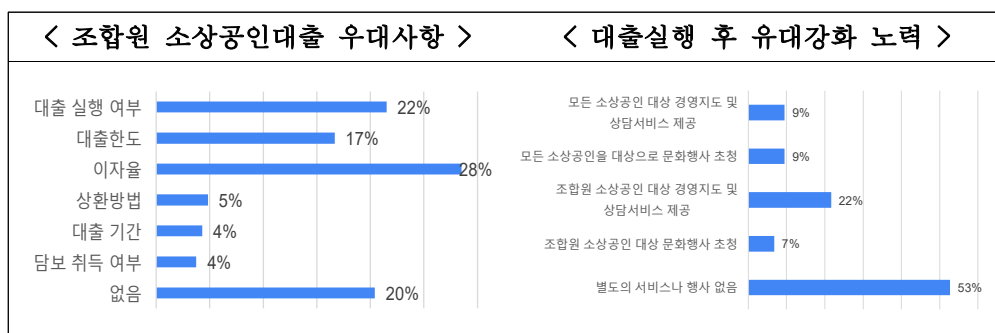
○ 거치기간을 둘 것인지, 둔다면 얼마나 둘 것인지 여부도 소상공인이 선택하는 경우는 4%에 불과하고

- 소상공인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경우는 33%,
- 대출상품 내용에 따르거나(정책자금대출을 포함하여 48%),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에 유리하게 결정하는(15%) 등 대부분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응답함.

□ 금융회사는 소상공인과 거래 활성화나 소상공인의 금융소외 현상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 의지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소상공인의 사업현황 파악 시 공식적인 서류로 파악되지 않았을 때 사업계획서 등 대안서류를 징구하여 심사(14%)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심사(13%)하기보다, 대부분 대출 거절(38%)이나, 가계대출로 변경(35%)하여 심사함.

- 금융회사의 조합원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심사 시 대출 실행 여부, 대출한도 등 대출 조건 결정 시 우대하는 사례가 80%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어떠한 우대사항도 없다는 실험도 20%에 해당함.
- 조합원인 소상공인에 대해 회계/법률 등 경영지도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22%)하기도 하지만, 소상공인과 유대 강화를 위한 별도의 서비스나 행사가 전혀 없는 금융회사의 비중이 53%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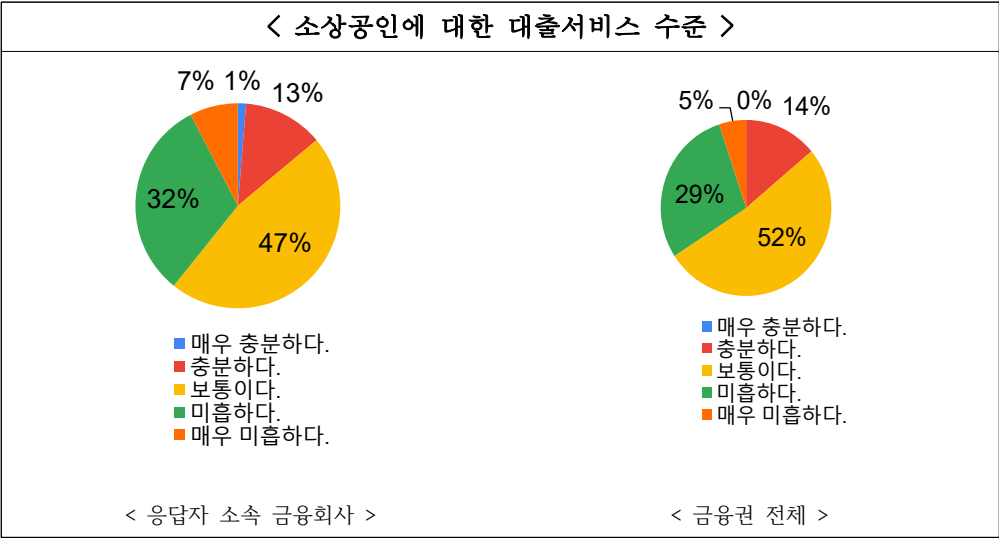


○ 이러한 현상은 금융회사는 소상공인 대출 고객과 대출거래 시 대출 거래 외 부대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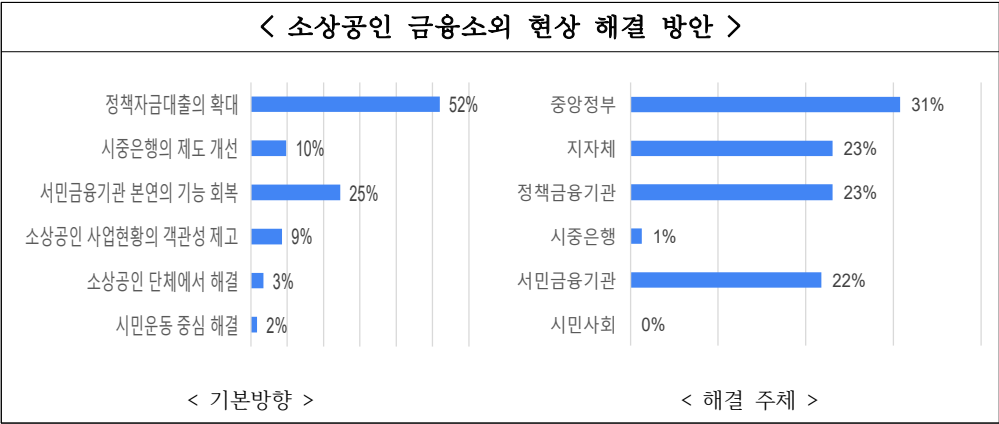
- 금융회사의 49%는 소상공인과 대출거래 시 부대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20%는 부대거래 활성화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며, 31%만이 부대거래가 활성화되는 편이라고 답변함.

□ 결국 인천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서비스 수준이 전체적으로 미흡한 결과로 귀착됨.

- 설문 응답자가 소속된 개별 금융회사의 소상공인 대출서비스 수준에 대해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하다는 부정적 응답률(39%)이 충분하거나 매우 충분하다는 긍정적 응답률(14%)의 2.8배 수준임.
- 금융권 전체의 대출서비스 수준도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하다는 부정적 응답률(34%)이 충분하다는 긍정적 응답률(14%)의 2.4배 수준임.



- 금융회사는 소상공인 금융소외 현상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다소 피동적인 입장을 견지함.
- 금융회사는 소상공인 금융소외 현상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정책자금대출 확대(52%)를 가장 선호하고, 그 외 서민금융기관 기능 회복(25%), 시중은행 제도 개선(10%), 소상공인 사업현황 객관성 제고(9%) 순으로 응답함.
 - 소상공인 금융소외 현상 해결을 주도해야 할 주체도 중앙정부(31%), 지자체(23%), 정책금융기관(23%)을 선호하고, 서민금융기관(22%) 및 시중은행(1%)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음.



- 전반적으로 인천지역 소상공인의 금융소외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한 금융회사의 의지 및 노력은 낮은 것으로 이해됨.
- 금융회사는 소상공인과 적극적인 거래형성을 통해 경영성과 창출, 고객 확보 등 내부 동기 유인이 낮으며,
 - 소상공인의 금융소외 현상 개선과 관련하여 지역평판, 감독 당국의 평가 등 외부 동기 유인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금융회사의 소상공인 지원현황은 금융회사로서 사회적 책임감 또는 자금중개기관으로서 의무감에서 최소한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임.
 -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서비스가 대출원금 회수를 보증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런 상황은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 심사시스템 및 대출상품 등 인프라의 부족으로 고착되는 것으로 보임.
 - 소상공인의 자금수요 및 사업현황에 최적화되지 못하고, 개인 또는 법인을 위한 심사시스템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조합원을 보유한 서민금융회사가 조합원과 유대강화를 통한 관계형금융 형성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미흡함.
- 향후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금융회사를 경유하지 않는 획기적인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임.
- 지역 자원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가 금융회사를 적극 감시·독려 필요함.
 - 인천지역 금융회사의 소상공인 지원현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발표하는 등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캠페인과,
 - 시금고 유치기관 선정 시 소상공인 지원실적 반영 항목을 신설하는 등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통제 노력 병행도 유효할 것으로 예상됨.

- 예금을 유치하는 금융회사는 특성상 보수적 대출 운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므로,
-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심사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대상이 아닌 별도 기관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등 금융회사를 배제한 지원방안 마련도 효과적으로 기대됨.

6. 인천시 소상공인 금융배제 실태에 관한 통계분석¹⁷⁾

1)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선형회귀분석)

(1) 인천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본 추정은 선형회귀분석(OLS)을 통해 인천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임. 따라서 본 추정은 성별, 연령별, 창업 이후 영업기간, 연간 매출액 규모, 연간 순이익 규모 등 5개의 독립변수를 사용해 검증 가능한 임의적 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했음.

- 인천 소상공인은 남성일수록 사업자금 대출 규모가 커짐.
- 인천 소상공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사업자금 대출 규모가 커짐.
- 인천 소상공인은 창업이후 영업기간이 짧을수록 사업자금 대출 규모가 커짐.
- 인천 소상공인은 연간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사업자금 대출 규모가 커짐.
- 인천 소상공인은 연간 순이익 규모가 클수록 사업자금 대출 규모가 커짐.

□ 본 추정의 모형을 함수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Y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X_5 + u$$

- 종속변수(Y) : 인천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대출규모
- 독립변수(X)
 - ① 인천 소상공인의 성(性)
 - ② 인천 소상공인의 연령
 - ③ 인천 소상공인의 창업이후 영업기간
 - ④ 인천 소상공인의 연간 매출액 규모
 - ⑤ 인천 소상공인의 연간 순이익 규모

17) 본 통계분석은 STATA 12을 이용해 분석함.

- 아래 <추정결과표>는 본 추정모형인 ‘인천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대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인 ① 인천 소상공인의 성(性) ② 인천 소상공인의 연령 ③ 인천 소상공인의 창업이후 영업기간 ④ 인천 소상공인의 연간 매출액 규모 ⑤ 인천 소상공인의 연간 순이익 규모에 대한 추정결과임.

<사업자금 대출 영향 요인에 대한 추정결과표>

인천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대출규모	선형회귀분석(OLS)		
	추정계수 (표준오차)	t값	p> t
성(性)	614.0793 (665.5145)	0.92	0.357
연령	19.26436 (35.08036)	0.55	0.583
창업이후 영업기간	-0.8235654 (45.55958)	-0.02	0.986
연간 매출액 규모	0.1703135** (0.0241973)	7.04	0.000
연간 순이익 규모	0.0656534 (0.0844538)	0.78	0.437
상수항	757.9033 (1596.787)	0.47	0.635
표본수	636		
R-sq/Adj R-sq	0.1403/0.1334		
F(5,630)	20.56		
Prob > F	0.0000		

주 : **은 5% 유의수준임.

- 추정결과 독립변수인 ④ 인천 소상공인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종속변수인 ‘인천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대출규모’와 유의적으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 소상공인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인천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대출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로, 본 추정에 사용된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분산팽창계수(VIF)가 10을 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독립변수	VIF	1/VIF
연간 매출액 규모	1.70	0.588654
연간 순이익 규모	1.60	0.625881
창업이후 영업기간	1.33	0.752881
연령	1.29	0.772578
성(性)	1.09	0.921324
Mean VIF	1.40	

2)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1) 인천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대출 규모 결정요인 분석

□ 본 추정은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t)’ 을 통해 인천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대출 규모별로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임. 본 추정은 성별, 연령별, 창업 이후 영업기간, 연간 매출액 규모, 연간 순이익 규모 등 5개의 독립변수를 사용했음.

□ 설문조사 결과 금융권과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사업자금 규모는 7개 범주의 집단변수로 구분되어 있음. 따라서 본 추정의 분석모형에서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는 아래와 같음.

종속변수		독립변수
금융권과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사업자금 규모	1천만원 이하	① 성(gender) ② 나이 ③ 창업이후 영업기간 ④ 연간 매출액 ⑤ 연간 순이익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 아래 <추정결과표>는 본 추정모형인 ‘인천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대출 규모’ 별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인 ① 인천 소상공인의 성(性) ② 인천 소상공인의 연령 ③ 인천 소상공인의 창업이후 영업기간 ④ 인천 소상공인의 연간 매출액 규모 ⑤ 인천 소상공인의 연간 순이익 규모에 대한 추정결과임.

<사업자금 대출 규모 결정요인 추정결과표>

	구분	추정계수 (표준오차)	z값	$p> z $	승산비 (Odd Ratio)
1천만원 이하	성별(남성=1)	0.3180039 (0.2847596)	1.12	0.264	1.374382
	연령	-0.011473 (0.0152569)	-0.75	0.452	0.9885926
	창업이후 영업기간	-0.0028213 (0.0199352)	-0.14	0.887	0.9971827
	연간 매출액 규모	9.07e-06 (0.0000116)	0.78	0.433	1.000009
	연간 순이익 규모	-0.0001285** (0.0000613)	-2.10	0.036	0.9998715
	상수항	-0.095856 (0.7132475)	-0.13	0.893	0.9085949
2천만원 이하	성별(남성=1)	-0.1109302 (0.2869455)	-0.39	0.699	0.8950012
	연령	-0.0100288 (0.0158187)	-0.63	0.526	0.9900213
	창업이후 영업기간	0.0290528 (0.0196501)	1.48	0.139	1.029479
	연간 매출액 규모	-0.0000311 (0.0000163)	-1.90	0.057	0.9999689
	연간 순이익 규모	-0.0000224 (0.0000643)	-0.35	0.727	0.9999776
	상수항	-0.2140373 (0.7349018)	-0.29	0.771	0.8073182
3천만원 이하	성별(남성=1)	0.4101857 (0.2765094)	1.48	0.138	1.507098
	연령	-0.0311309** (0.0144223)	-2.16	0.031	0.9693487
	창업이후 영업기간	-0.0004895 (0.0199187)	-0.02	0.980	0.9995107
	연간 매출액 규모	-9.70e-06 (0.0000123)	-0.79	0.431	0.9999903
	연간 순이익 규모	0.0000603 (0.0000392)	1.54	0.124	1.00006
	상수항	0.3990345 (0.6332994)	0.63	0.529	1.490385
5천만원 이하	성별(남성=1)	0.2894317 (0.2658228)	1.09	0.276	1.335668
	연령	-0.0126693 (0.0142443)	-0.89	0.374	0.9874107
	창업이후 영업기간	-0.0013177	-0.07	0.944	0.9986832

		(0.0186491)			
	연간 매출액 규모	5.29e-06 (0.0000108)	0.49	0.625	1.000005
	연간 순이익 규모	0.0000364 (0.0000361)	1.01	0.313	1.000036
	상수항	-0.3903753 (0.645353)	-0.60	0.545	0.6768028
1억원 이하	성별(남성=1)	1.076365** (0.3128229)	3.44	0.001	2.933996
	연령	0.0154252 (0.0157036)	0.98	0.326	1.015545
	창업이후 영업기간	-0.027195 (0.0197413)	-1.38	0.168	0.9731714
	연간 매출액 규모	0.0000331** (9.89e-06)	3.35	0.001	1.000033
	연간 순이익 규모	-0.0000306 (0.0000372)	-0.82	0.411	0.9999694
	상수항	-2.362296** (0.7629813)	-3.10	0.002	0.0942037
3억원 이하	성별(남성=1)	-0.273292 (0.4160312)	-0.66	0.511	0.7608706
	연령	-0.0177603 (0.0228213)	-0.78	0.436	0.9823965
	창업이후 영업기간	0.0152206 (0.0285103)	0.53	0.593	1.015337
	연간 매출액 규모	0.0000557** (0.0000124)	4.48	0.000	1.000056
	연간 순이익 규모	-0.0000476 (0.0000464)	-1.03	0.305	0.9999524
	상수항	-1.877373 (1.039696)	-1.81	0.071	0.1529915
3억원 초과	성별(남성=1)	1.841689 (1.075888)	1.71	0.087	6.307184
	연령	0.025015 (0.0356766)	0.70	0.483	1.02533
	창업이후 영업기간	-0.0074797 (0.0393197)	-0.19	0.849	0.9925482
	연간 매출액 규모	0.0000722** (0.0000197)	3.66	0.000	1.000072
	연간 순이익 규모	0.0000388 (0.000042)	0.92	0.356	1.000039
	상수항	-7.415391** (2.043459)	-3.63	0.000	0.0006019
X ² / Prob>chi2		148.55 / 0.0000			
표본수		636			

주1 : **은 5% 유의수준임.

- 추정결과 ‘연간순이익’ 이 작을수록 ‘1천만원 이하’ 사업자금 대출보유 확률이 증가하고, ‘연령’ 이 젊을수록 ‘2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 사업자금 대출보유 확률이 증가하며, ‘연간 매출액 규모’ 가 클수록 ‘5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 , ‘1억원 이상~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의 사업자금 대출이 증가할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1천만원 이하’ 사업자금 대출 보유는 ‘연간 순이익’ 이 유의적인 음(-)의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승산비(Odd Ratio)가 0.999이므로 연간 순이익이 증가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 대출 보유 승산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 사업자금 대출 보유는 유의적인 결정요인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2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 사업자금 대출 보유는 연령(age)이 유의적인 음(-)의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음. 승산비(Odd Ratio)가 0.969이므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3천만원 이하’ 대출 승산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3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 사업자금 대출 보유는 유의적인 결정요인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5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 사업자금 대출 보유는 ‘남성’ , ‘연간 매출액 규모’ 가 유의적인 양(+)의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음. 각각 승산비(Odd Ratio)가 2.93, 1.00이므로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1억원 이하’ 대출의 승산이 증가하고, 연간 매출액이 증가하면 ‘1억원 이하 대출’ 의 승산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1억원 이상~3억원 이하’ 사업자금 대출보유는 ‘연간 매출액 규모’ 가 유의적인 양(+)의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음. 승산비(Odd Ratio)도 1.000이므로 ‘연간 매출액 규모’ 가 증가하면 ‘3억원 이

하' 대출 보유의 승산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3억원 초과' 사업자금 대출보유는 '연간 매출액(sale)' 이 유의적인 양(+)의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음. 승산비(Odd Ratio)가 1.000 이므로 '연간 매출액 규모'가 증가하면 '3억원 초과' 대출 보유의 승산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2) 인천 소상공인의 대부업 대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본 추정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t)' 을 통해 인천 소상공인의 대부업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임. 따라서 본 추정은 성별, 연령별, 창업 이후 영업기간, 연간 매출액 규모, 연간 순이익 규모, 대출건당 금융권의 대출 거절 경험 횟수 등 6개의 독립변수를 사용해 검증 가능한 임의적 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했음.

- 인천 소상공인은 남성일수록 대부업 대출이 있을 확률이 높음.
- 인천 소상공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대부업 대출이 있을 확률이 높음.
- 인천 소상공인은 창업이후 영업기간이 짧을수록 대부업 대출이 있을 확률이 높음.
- 인천 소상공인은 연간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대부업 대출이 있을 확률이 높음.
- 인천 소상공인은 연간 순이익 규모가 작을수록 대부업 대출이 있을 확률이 높음.
- 인천 소상공인은 대출건당 금융권의 대출 거절 경험 횟수가 많을수록 대부업 대출이 있을 확률이 높음.

□ 본 추정모형의 분석모형에서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는 아래와 같음.

종속변수	독립변수
인천 소상공인의 대부업 대출 유무 (대출=1, 대출없음 =0)	① 인천 소상공인의 성(性)
	② 인천 소상공인의 연령
	③ 인천 소상공인의 창업이후 영업기간
	④ 인천 소상공인의 연간 매출액 규모
	⑤ 인천 소상공인의 연간 순이익 규모
	⑥ 인천 소상공인의 대출건당 금융권의 대출 거절 경험 횟수

□ 아래 <추정결과표>는 본 추정모형인 ‘인천 소상공인의 대부업 대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인 ① 인천 소상공인의 성(性) ② 인천 소상공인의 연령 ③ 인천 소상공인의 창업이후 영업기간 ④ 인천 소상공인의 연간 매출액 규모 ⑤ 인천 소상공인의 연간 순이익 규모 ⑥ 인천 소상공인의 대출건당 금융권의 대출 거절 경험 횟수에 대한 추정결과임.

<대부업 대출 여부 결정요인에 추정결과표>

구분	추정계수 (표준오차)	z값	p> z	승산비 (Odd Ratio)	dy/dx
성별(남성=1)	0.0026452 (0.2711586)	0.01	0.992	1.002649	0.0004125
연령	0.0265444 (0.0153597)	1.73	0.084	1.0269	0.0041397
창업이후 영업기간	-0.0480904** (0.0197256)	-2.44	0.015	0.9530476	-0.0074998**
연간 매출액 규모	-0.0000115 (9.92e-06)	-1.16	0.245	0.9999885	-1.80e-06
연간 순이익 규모	0.0000402 (0.0000314)	1.28	0.202	1.00004	6.26e-06
대출거절 경험횟수	0.4084876** (0.112143)	3.64	0.000	1.504541	0.0637048**
상수항	-2.300277 (0.683952)	-3.36	0.001	0.100231	-
X ² / Prob>chi2	23.71 / 0.0006				
표본수	370				

주1 : dy/dx=Marginal Effect(한계 효과)

주2 : **은 5% 유의수준임.

□ <추정결과 1> 독립변수인 ‘⑥ 인천 소상공인의 대출건당 금융권의 대출 거절 경험 횟수’가 종속변수인 ‘인천 소상공인의 대부업 대출 여부’에 유의적인 양(+)의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음. 즉 ‘인천 소상공인의 대출건당 금융권의 대출 거절 경험 횟수’가 1번 늘어날수록 대부업 대출이 있을 승산이 50.5% 증가하며, 인천 소상공인의 대부업 대출 여부에 대한 결정요인의 한계효과를 추정하면 인천 소상공인의 대출건당 금융권의 대출 거절 경험 횟수’가 1번 늘어날 때 대부업 대출이 있을 확률이 6.4%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추정결과 2> 독립변수인 ‘③ 인천 소상공인의 창업이후 영업기간’이 종속변수인 ‘인천 소상공인의 대부업 대출 여부’에 유의적인 음(-)의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음. 즉 ‘인천 소상공인의 창업 이후 영업 기간’이 1년 늘어날수록 대부업 대출이 있을 승산이 4.7% 감소하며, 인천 소상공인의 대부업 대출 여부에 대한 결정요인의 한계효과를 추정하면 창업이후 영업기간이 1년 증가할 때 대부업 대출이 있을 확률이 0.75%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3) 현재 인천 소상공인의 추가대출 희망금액 규모 결정요인 분석

□ 본 추정은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t)’을 통해 인천 소상공인의 현재 사업자금 추가 대출 희망금액 규모별로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임. 본 추정은 성별, 연령별, 창업 이후 영업기간, 연간 매출액 규모, 연간 순이익 규모 등 5개의 독립변수를 사용했음.

□ 설문조사 결과 금융권과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사업자금 규모는 7개 범주의 집단변수로 구분되어 있음. 따라서 본 추정의 분석모형에서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는 아래와 같음.

종속변수		독립변수
현재 추가대출 희망금액 규모	1천만원 이하	① 성(gender) ② 나이 ③ 창업이후 영업기간 ④ 연간 매출액 ⑤ 연간 순이익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추가대출 필요 없음	

□ 아래 <추정결과표>는 본 추정모형인 ‘인천 소상공인의 현재 사업자금 추가대출 희망금액 규모’ 별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인 ① 인천 소상공인의 성(性) ② 인천 소상공인의 연령 ③ 인천 소상공인의 창업이후 영업기간 ④ 인천 소상공인의 연간 매출액 규모 ⑤ 인천 소상공인의 연간 순이익 규모에 대한 추정결과임.

<사업자금 대출 규모 결정요인 추정결과표>

구분		추정계수 (표준오차)	z값	p> z	승산비 (Odd Ratio)
1천만원 이하	성별(남성=1)	-0.1189207 (0.7055567)	-0.17	0.866	0.8878782
	연령	-0.0005884 (0.0479083)	-0.01	0.990	0.9994118
	창업이후 영업기간	0.0380389 (0.0451176)	0.84	0.399	1.038772
	연간 매출액 규모	-1.13e-06 (0.0000345)	-0.03	0.974	0.9999989
	연간 순이익 규모	-0.0003129 (0.0002159)	-1.45	0.147	0.9996871
	상수항	-1.528434 (2.316712)	-0.66	0.509	0.216875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성별(남성=1)	0.2110192 (0.3710024)	0.57	0.570	1.234936
	연령	-0.0544214** (0.0225534)	-2.41	0.016	0.9470329
	창업이후 영업기간	-0.0005642 (0.0256267)	-0.02	0.982	0.999436
	연간 매출액 규모	0.0000162	1.07	0.283	1.000016

		(0.0000151)			
	연간 순이익 규모	-0.0002498** (0.0000843)	-2.96	0.003	0.9997502
	상수항	2.777824** (1.028649)	2.70	0.007	16.08399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성별(남성=1)	0.1361883 (0.3044427)	0.45	0.655	1.145898
	연령	-0.0423668** (0.0187547)	-2.26	0.024	0.9585182
	창업이후 영업기간	-0.0202073 (0.0210469)	-0.96	0.337	0.9799955
	연간 매출액 규모	5.94e-06 (0.0000131)	0.45	0.650	1.000006
	연간 순이익 규모	-0.0000853 (0.0000465)	-1.83	0.067	0.9999147
	상수항	2.827914** (0.8624229)	3.28	0.001	16.91016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성별(남성=1)	0.4863308 (0.3298522)	1.47	0.140	1.626338
	연령	-0.0370871 (0.020199)	-1.84	0.066	0.9635922
	창업이후 영업기간	-0.0018724 (0.022231)	-0.08	0.933	0.9981293
	연간 매출액 규모	7.35e-06 (0.0000135)	0.54	0.586	1.000007
	연간 순이익 규모	-0.0000175 (0.0000401)	-0.44	0.663	0.9999825
	상수항	1.513604 (0.9227695)	1.64	0.101	4.543072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성별(남성=1)	0.5424373 (0.3696136)	1.47	0.142	1.720194
	연령	-0.0310863 (0.0214989)	-1.45	0.148	0.9693919
	창업이후 영업기간	-0.0740864** (0.0270702)	-2.74	0.006	0.9285915
	연간 매출액 규모	0.0000351** (0.0000134)	2.61	0.009	1.000035
	연간 순이익 규모	-0.0000632 (0.0000431)	-1.47	0.143	0.9999368
	상수항	1.33012 (0.986195)	1.35	0.177	3.781499
1억원 이상~ 3억원 이하	성별(남성=1)	1.46913** (0.603479)	2.43	0.015	4.345451
	연령	0.0118324 (0.0294791)	0.40	0.688	1.011903
	창업이후 영업기간	-0.056991 (0.0321863)	-1.77	0.077	0.9446026
	연간 매출액 규모	0.0000553** (0.0000154)	3.58	0.000	1.000055
	연간 순이익 규모	-0.0000351 (0.0000418)	-0.84	0.401	0.9999649
	상수항	-3.129869** (1.480381)	-2.11	0.034	0.0437235
3억원 초과	성별(남성=1)	1.01415 (0.6460794)	1.57	0.116	2.757018

	연령	-0.1451144** (0.0360533)	-4.02	0.000	0.8649234
	창업이후 영업기간	0.0654774 (0.0431484)	1.52	0.129	1.067669
	연간 매출액 규모	0.0000577** (0.0000178)	3.24	0.001	1.000058
	연간 순이익 규모	-0.0000779 (0.0000561)	-1.39	0.165	0.9999221
	상수항	2.626832 (1.363722)	1.93	0.054	13.82989
	$X^2 / \text{Prob}>\chi^2$	125.50 / 0.0000			
	표본수	437			

주1 : **은 5% 유의수준임.

- 추정결과 ‘연간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5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 ‘1억원 이상~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등 고액의 추가대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대체로 추가대출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1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 추가대출 희망금액 종속변수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독립변수가 없었음.
- ‘연령’이 높아질수록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 추가대출 희망금액의 승산이 약 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순이익 규모’가 증가할수록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 추가대출 희망금액의 승산율이 미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이 높아질수록 ‘2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 추가대출 희망금액의 승산이 약 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간 매출액 규모’가 증가할수록 ‘5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 ‘1억원 이상~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추가대출 희망금액의 승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창업이후 영업기간’이 길수록 ‘5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 추가대출 희망금액의 승산이 약 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일수록 ‘1억원 이상~3억원 이하’ 추가대출 희망금액의 승산이

졌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3억원 초과’ 추가대출 희망금액의
 승산이 약 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차분석

(1) 연간 매출액 규모별 대부업 대출 유무 교차분석

□ 아래와 같이 ‘연간 매출액 3억원 이상’ 소상공인의 대부업 대출 빈도는 적고, ‘연간 매출액 5천만원 이상~1억원 이내’ 소상공인의 대부업 대출 빈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대출 유무		연간 매출액 규모별						합계
		3천만원 이내	5천만원 이내	1억원 이내	3억원 이내	5억원 이내	5억원 초과	
대출 없음	빈도	106	96	178	122	34	36	572
	%	84.80	85.71	83.18	87.77	89.47	85.71	85.37
대출 있음	빈도	19	16	36	17	4	6	98
	%	15.20	14.29	16.82	12.23	10.53	14.29	14.63
합계	빈도	125	112	214	139	38	42	670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 연간 순이익 규모별 대부업체 대출 유무 교차분석

□ 아래와 같이 ‘연간 순이익 7천만원 이상’ 소상공인의 대부업 대출 빈도는 적고, ‘연간 순이익 3천만원 이내’ 소상공인의 대부업 대출 빈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대출 유무		연간 순이익 규모별							합계
		1천만원 이내	3천만원 이내	5천만원 이내	7천만원 이내	1억원 이내	2억원 이내	2억원 초과	
대출 없음	빈도	141	196	117	32	38	14	7	545
	%	80.57	87.50	86.03	86.49	86.36	77.78	77.78	84.76
대출 있음	빈도	34	28	19	5	6	4	2	98
	%	19.43	12.50	13.97	13.51	13.64	22.22	22.22	15.24
합계	빈도	175	224	136	37	44	18	9	643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3) 금융권 대출 거절경험 횟수별 대부업 대출 유무 교차분석

대부업 대출 유무		금융권 대출 거절 경험 횟수				합계
		거절경험 없음	1~2회	3~4회	5회 이상	
대출 없음	빈도	202	77	17	3	299
	%	85.96	68.14	70.83	37.50	78.68
대출 있음	빈도	33	36	7	5	81
	%	14.04	31.86	29.17	62.50	21.32
합계	빈도	235	113	24	8	380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아래와 같이 ‘금융권 대출 거절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이 그런 경험이 없는 소상공인보다 대부업 대출을 두 배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4) 인천 시민은행에 대한 연간 매출액 규모별 필요성 공감 교차분석

☐ 아래와 같이 ‘연간 매출액 규모’ 범위와 관계없이 인천 소상공인들은 대체로 ‘인천 시민은행’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인천 시민은행 필요성 공감		연간 매출액 규모						합계
		3천만 원 이내	5천만 원 이내	1억원 이내	3억원 이내	5억원 이내	5억원 초과	
매우 그렇지 않다	빈도	5	5	6	1	1	2	20
	%	3.73	3.18	2.04	0.47	2.13	3.33	2.21
그렇지 않다	빈도	10	15	19	6	2	2	54
	%	7.46	9.55	6.46	2.83	4.26	3.33	5.97
보통이다	빈도	29	37	80	48	10	16	220
	%	21.64	23.57	27.21	22.64	21.28	26.67	24.34
그렇다	빈도	43	45	97	73	19	13	290
	%	32.09	28.66	32.99	34.43	40.43	21.67	32.08
매우 그렇다	빈도	47	55	92	84	15	27	320
	%	35.07	35.03	31.29	39.62	31.91	45.00	35.40
합계	빈도	134	157	294	212	47	60	904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4) 금융기관(신협) 대상 설문조사(빈도분석)

(1)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비중 빈도분석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비중	빈도	비율(%)	합계
정책자금대출 취급하지 않음	16	20.78	20.78
50% 미만	28	36.36	57.14
50% 이상	24	31.17	88.31
100%(정책자금대출 만 취급)	9	11.69	100.00
합계	77	100.00	

(2) 금융회사 임직원 또는 금융기관 선호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제도 빈도분석

선호 소상공인 정책금융지원제도	빈도	비율(%)	합계
대출원리금 전액보증	51	68.00	68.00
대출 원리금 일부 보증	15	20.00	88.00
이차보전	2	2.67	90.67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6	8.00	98.67
우수한 소상공인의 추천	1	1.33	100.00
합계	75	100.00	

(3)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의 건당 평균 대출금액 빈도분석

소상공인 정책자금 건당 평균 대출금액	빈도	비율(%)	합계
5백만원 이하	4	5.41	5.41
1천만원 이하	35	47.30	52.70
3천만원 이하	31	41.89	94.59
5천만원 이하	3	4.05	98.65
5천만원 초과	1	1.35	100.00
합계	74	100.00	

(4) 소상공인 대출상담 신청시 사업자금과 가계자금으로 자금용도 구분
여부 빈도분석

대출상담 신청시 소상공인 자금용도 구분 여부	빈도	비율(%)	합계
명확히 구분하여 상담 신청	41	51.90	51.90
구분하지만 실제로는 대체로 혼재	36	45.57	97.47
구분하지 않고 상담 신청	2	2.53	100.00
합계	79	100.00	

(5) 소상공인 사업자금 대출 신청 거절 사유 빈도분석

사업자금 대출 신청 거절 사유	빈도	비율(%)	합계
담보 부족	20	8.26	8.26
낮은 신용평가점수	47	19.42	27.69
기존 사업자금대출 과다	32	13.22	40.91
가계자금 포함 기존대출 과다	33	13.64	54.55
사업자금으로서 자금용도 불분명	15	6.20	60.74
불성실한 과거 거래 실적	26	10.74	71.49
매출액 등 사업 현황 저조	19	7.85	79.34
객관적 서류로 사업 현황 파악 곤란	12	4.96	84.30
업무량 대비 낮은 수익 기여도	5	2.07	86.36
감독규제로 소상공인 특성을 반영한 대출심사 한계	3	1.24	87.60
감독 규제로 대출 취급 후 불이익	4	1.65	89.26
상대적으로 높은 연체 가능성	18	7.44	96.69
대출연체 시 대출취급자 문책	2	0.83	97.52
소상공인 사업자금 대출 한도 소진	4	1.65	99.17
조직 내부평가의 성과평가기준(KPI) 충족	1	0.41	99.59
기타	1	0.41	100.00

합계	242	100.00	
----	-----	--------	--

(6) 소상공인 사업자금 대출신청 거절 정도(가계자금 변경대출 제외) 빈도 분석

사업자금 대출신청 거절 정도(가계자금 변경 대출 제외)	빈도	비율(%)	합계
대부분 지원	6	7.59	7.59
50% 미만	33	41.77	49.37
50% 이상	16	20.25	69.62
대부분 거절	24	30.38	100.00
합계	79	100.00	

(7) 소상공인 사업자금 대출신청 거절 정도(가계자금 변경대출 포함) 빈도 분석

사업자금 대출신청 거절 정도(가계자금 변경 대출 포함)	빈도	비율(%)	합계
대부분 지원	7	8.86	8.86
50% 미만	35	44.30	53.16
50% 이상	13	16.46	69.62
대부분 거절	24	30.38	100.00
합계	79	100.00	

(8) 소상공인 대출 실행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빈도분석

대출 실행 결정 주요 요인	빈도	비율(%)	합계
담보(정책금융기관 보증서 포함)비율(LTV)	32	15.17	15.17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점수	39	18.48	33.65
심사(신용평가)시스템의 평가결과	24	11.37	45.02
부채상환능력 평가지표(DSR 등)	31	14.69	59.72

매출액 규모	13	6.16	65.88
소요자금 적정성	14	6.64	72.51
과거 대출거래 실적 (연체 여부 등)	33	15.64	88.15
소상공인의 사회적 지위, 지역 평판	8	3.79	91.94
수익 기여도 (부대거래 포함)	3	1.42	93.36
당국의 규제 (충당금 설정 등)	9	4.27	97.63
당국의 소상공인대출 확대 권고	5	2.37	100.00
합계	211	100.00	

(9) 특화된 소상공인 대출심사(신용평가)시스템 유무 빈도분석

소상공인 대출심사(신용평가) 시스템 유무	빈도	비율(%)	합계
소상공인대출에 특화된 자체 시스템이 있다.	4	5.06	5.06
소상공인대출에 특화된 신용평가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한다.	14	17.72	22.78
별도 시스템은 없으며,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용한다.	47	59.49	82.28
별도 시스템은 없으며, 법인 대출의 심사(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한다.	14	17.72	100.00
합계	79	100.00	

**(10) 대출심사 시스템 평가결과의 대출조건 항목 결정 활용에 대한 빈도
분석**

심사 시스템 평가결과의 대출조건 항목 결정 활용	빈도	비율(%)	합계
대출 실행 여부	53	28.80	28.80
대출한도 산정	58	31.52	60.33
이자율 결정	40	21.74	82.07

대출 기간 결정	11	5.98	88.04
담보 취득 여부	8	4.35	92.39
기타	14	7.61	100.00
합계	184	100.00	

(11) 소상공인 대출시 신용평가 점수가 영향을 미치는 대출 조건의 항목 빈도분석

신용평가 점수가 영향을 미치는 대출조건 항목	빈도	비율(%)	합계
대출 실행 여부	61	31.28	31.28
대출한도 산정	59	30.26	61.54
이자율 결정	42	21.54	83.08
상환방법	14	7.18	90.26
대출 기간 결정	10	5.13	95.38
담보 취득 여부	9	4.62	100.00
합계	195	100.00	

(12) 소상공인 대출 시 담보(정책금융기관 보증서 제외)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대출조건의 항목 빈도분석

담보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대출조건 항목	빈도	비율(%)	합계
대출 실행 여부	48	27.91	27.91
대출한도 산정	48	27.91	55.81
이자율 결정	35	20.35	76.16
상환방법	13	7.56	83.72
대출 기간 결정	10	5.81	89.53
담보 취득 여부	15	8.72	98.26
없음	3	1.74	100.00
합계	172	100.00	

(13) 소상공인 대출시 정책금융기관 보증서담보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대출조건의 항목 빈도분석

정책금융기관 보증서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대출조건 항목	빈도	비율(%)	합계
대출 실행 여부	62	32.98	32.98
대출한도 산정	53	28.19	61.17
이자율 결정	34	18.09	79.26
상환방법	16	8.51	87.77
대출 기간 결정	13	6.91	94.68
담보 취득 여부	10	5.32	100.00
합계	188	100.00	

(14) 자기 기관의 소상공인 대출서비스 수준 빈도분석

자기 기관의 소상공인 대출서비스 수준	빈도	비율(%)	합계
매우 미흡하다	6	7.59	7.59
미흡하다	25	31.65	39.24
보통이다	37	46.84	86.08
충분하다	10	12.66	98.73
매우 충분하다	1	1.27	100.00
합계	79	100.00	

(15) 금융권 전체의 소상공인 대출서비스 수준 빈도분석

금융권 전체의 소상공인 대출서비스 수준	빈도	비율(%)	합계
매우 미흡하다	4	5.06	5.06
미흡하다	23	29.11	34.18
보통이다	41	51.90	86.08
충분하다	11	13.92	100.00
합계	79	100.00	

5) 금융기관(신협) 대상 설문조사(교차분석)

(1) 소상공인 대출에 특화된 대출심사(신용평가)시스템 유무별 사업자금 대출 지원 거절 정도(가계자금 변경 대출 제외) 교차분석

☐ 아래와 같이 가계자금 변경대출을 제외하고 ‘별도 시스템 없고,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이나 법인대출 심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50% 이상 또는 대부분’ 대출을 거절하는 빈도가 약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소상공인 대출심사 시스템 유무별 사업자금 대출 거절 정도		소상공인 대출심사(신용평가) 시스템 유무별				합계
		특화된 자체 시스템 있다	특화된 신용평가기관 시스템 활용	별도 시스템 없고,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활용	별도 시스템 없고, 법인대출 심사시스템 활용	
대부분 지원	빈도	0	1	5	0	6
	%	0.00	7.14	10.64	0.00	7.59
50% 미만	빈도	1	5	19	8	33
	%	25.00	35.71	40.43	57.14	41.77
50% 이상	빈도	2	1	10	3	16
	%	50.00	7.14	21.28	21.43	20.25
대부분 거절	빈도	1	7	13	3	24
	%	25.00	50.00	27.66	21.43	30.38
합계	빈도	4	14	47	14	79
	%	100	100	100	100	100

(2) 소상공인 대출에 특화된 대출심사(신용평가)시스템 유무별 사업자금 대출 지원 거절 정도(가계자금 변경 대출 포함) 교차분석

☐ 아래와 같이 가계자금 변경대출을 포함해서 ‘별도 시스템 없고,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이나 법인대출 심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50% 이상 또는 대부분’ 대출을 거절하는 빈도가 약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소상공인 대출심사 시스템 유무별 사업자금 대출 거절 정도		소상공인 대출심사(신용평가) 시스템 유무별				합계
		특화된 자체 시스템 있다	특화된 신용평가기관 시스템 활용	별도 시스템 없고,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활용	별도 시스템 없고, 법인대출 심사시스템 활용	
대부분 지원	빈도	0	1	5	1	7
	%	0.00	7.14	10.64	7.14	8.86
50% 미만	빈도	1	7	18	9	35
	%	25.00	50.00	38.30	64.29	44.30
50% 이상	빈도	2	0	10	1	13
	%	50.00	0.00	21.28	7.14	16.46
대부분 거절	빈도	1	6	14	3	24
	%	25.00	42.86	29.79	21.43	30.38
합계	빈도	4	14	47	14	79
	%	100	100	100	100	100

6) 소결

□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인천 소상공인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인천소상공인의 사업 자금 대출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 소상공인들은 ‘연간 순이익 규모’가 작을수록, ‘연령’이 젊을수록 상대적으로 소액인 ‘3천만원 이하’ 사업자금 대출보유 확률이 증가했으며, ‘연간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고액인 ‘5천만원 이상’의 사업자금 대출이 증가할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인천 소상공인들은 ‘대출건당 금융권의 대출 거절 경험 횟수’가 늘어날수록 대부업 대출이 있을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인천 소상공인들은 ‘창업 이후 영업 기간’이 늘어날수록 대부업 대출 보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인천 소상공인들은 ‘연간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고액인 ‘5천만원 이상’의 추가대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대체로 추가대출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간 매출액 3억원 이상’ 소상공인의 대부업 대출 빈도는 적고, ‘연간 매출액 5천만원 이상~1억원 이내’ 소상공인의 대부업 대출 빈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순이익 3천만원 이내’ 소상공인의 대부업 대출 빈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금융권 대출 거절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이 그런 경험이 없는 소상공인보다 대부업 대출을 두배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인천 소상공인들은 ‘연간매출액 규모’범위와 관계없이 대체로 ‘인천시민은행’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금융기관(신협)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의 건당 평균 대출금액은 5백만원 이하~3천만원 이하가 94.6%이었음.
- 금융회사 임직원이 응답한 소상공인 사업자금 대출 신청 거절 사유 중 ‘낮은 신용평가점수’가 19.4%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이어서 ‘가계자금 포함기준대출 과다’ 13.6%, ‘기존 사업자금대출 과다’ 13.2%, ‘불성실한 과거 거래 실적’ 10.7% 순이었음.
- 금융회사의 소상공인 대출 실행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점수’가 18.5%로 가장 큰 빈도를 보였으며, ‘과거 대출거래 실적(연체 여부 등)’이 15.6%, ‘담보(정책금융기관 보증서 포함)비율(LTV)’ 15.2%, ‘부채상환능력 평가 지표(DSR 등)’ 14.7%, ‘심사(신용평가)시스템의 평가결과’ 11.4% 순이었음.

- 소상공인 대출시 신용평가 점수가 영향을 미치는 대출조건의 항목은 ‘대출 실행 여부’ 31.3%, ‘대출한도 산정’ 30.3%, ‘이자율 결정’ 21.5% 순의 빈도를 나타냈음.
- 소상공인 대출시 담보(정책금융기관 보증서 제외)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대출조건의 항목은 ‘대출 실행 여부’와 ‘대출한도 산정’이 27.9%, ‘이자율 결정’이 20.4% 순의 빈도를 나타냈음.
- 금융회사 임직원은 금융권 전체의 소상공인 대출서비스 수준에 대해 34.2%가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하다고 응답했으며, 51.9%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했음.
- 소상공인 대출에 특화된 대출심사(신용평가) 시스템 유무와 사업자금 대출 지원 거절 정도(가계자금 변경 대출 제외)를 교차분석한 결과 ‘특화된 신용평가기관 시스템 활용’하는 금융회사는 50%가 ‘사업자금 대출 지원 대부분 거절’이라고 응답했으며, ‘별도 시스템 없고, 법인대출 심사시스템 활용’하는 금융회사는 57.1%가 ‘사업자금 대출 거절 50% 미만’이라고 응답했음.
- 소상공인 대출에 특화된 대출심사(신용평가) 시스템 유무와 사업자금 대출 지원 거절 정도(가계자금 변경 대출 포함)를 교차분석한 결과 ‘특화된 신용평가기관 시스템 활용’하는 금융회사는 50%가 ‘사업자금 대출 지원 거절 50% 미만’이라고 응답했으며, 42.9%가 ‘사업자금 대출 지원 대부분 거절’이라고 응답했음. 또한, ‘별도 시스템 없고, 법인대출 심사시스템 활용’하는 금융회사는 64.3%가 ‘사업자금 대출 거절 50% 미만’이라고 응답했음.

□ 소결

- 소상공인 설문조사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 금융수요 측면에서 소상공인들 대다수가 5천만원 이하의 총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5천만원 이하의 추가대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음. 또한, 이들은 연간 매출액과 순이익이 클수록 대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음.

- 반면에 금융회사는 소상공인 대출 실행여부 결정에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점수’, ‘과거 대출거래 실적(연체 여부 등)’, ‘담보(정책 금융기관 보증서 포함)비율(LTV)’, ‘부채상환능력 평가지표(DSR 등)’, ‘심사(신용평가)시스템의 평가결과’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5천만원 이하의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다수의 입장에서는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짐작됨.
- 따라서 이러한 소상공인 금융수요와 금융회사의 금융공급을 매칭시켜 금융배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금융수요를 완화시키기 위한 매출 증가, 순이익 증가 등 금융시장 이외의 정책과 금융배제 정책 간의 정책결합(policy mix)이 필요하며, 둘째 금융서비스가 가치재, 공공재 라는 것을 전제로 정부와 지자체가 개입해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상공인 전담 공공 금융기관 설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릴 수 있음.

7. 인천시 소상공인 금융배제 현상의 특징

1) 소상공인의 정의, 규모, 경영실태

- ☐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또는 ▲5인 미만(기타업종)인 기업을 의미함.
-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산업별 대분류(10차)에 따른 우리나라의 전체 기업수는 6,643,756개이며, 이중 소상공인 기업수는 6,199,980개(93.3%)임. 이를 시도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인천은 전체 기업수 340,339개중 소상공인 기업수가 318,288개(93.5%)임.
- ☐ 소상공인은 기업체수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경영면에서는 영세함.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산업중분류별에 따른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의 매출 구간 비율은 연 매출 2억원 이상이 31.3%, 5천만원 미만이 28.1%, 5천만원~1억원미만(%)이 21.3%, 1억원~2억원미만(%)이 19.3%이었음. 즉,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전체의 68.7%이다. 인천의 경우도 64.5%의 소상공인이 연매출 2억원 이하임. 또한, 2019년 기준으로 산업중분류별에 따른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의 영업이익 구간 비율은 연간 영업이익 1천만원~3천만원미만(%)이 36.1%, 5천만원 이상(%)이 23.3%, 3천만원~5천만원미만(%)이 22.7%, 1천만원 미만(%)이 17.9%였음. 즉, 전체 소상공인 중에서 76.7%의 소상공인이 연간 영업이익 5천만원 이하의 영세한 사업체인 것임. 인천의 경우도 74.4%의 소상공인이 연간 영업이익 5천만원 이하의 영세한 사업체임.

2) 현재 소상공인 부채 현황

-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으로

인천 소상공인의 약 51%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금액별로 살펴보면 5천만원 미만이 41.3%, 1억원 이상이 35.2%,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23.5%이었음.

- 지난해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와 그에 따른 부채 증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일 것으로 추정됨.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831.8조원(차주 수 245.6만명)이며, 이중 개인사업자 대출 541.0조원, 가계대출 290.8조원이다.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차주의 대출은 698.3조원으로 전체 자영업자대출의 84.0%를 차지함. 또한, “업종별로는 코로나19로 매출감소 충격을 크게 받은 도소매, 숙박음식, 여가서비스 등의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소득분위별로는 저소득층(1분위 및 2분위)의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 그리고 “2020년 2/4분기 이후 사업자대출 잔액이 없던 신규 차주 수가 큰 폭으로 증가(40만명대 미만에서 70만명대 이상으로)했으며, 금융업권별로는 코로나19 이후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이 빠르게 증가했음. “대출금리 수준별로는 고금리대출(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 대출) 비중이 2020년 3/4분기 이후 상승했으며, 2021년 1/4분기말 자영업자 대출중 고금리 대출비중은 5.2%이다.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자영업대출 차주의 금융업권별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은행 3.1%, 비은행 4.7%(농·수협 3.8%, 새마을금고 3.7%, 저축은행 11.6%, 여신전문금융회사 9.0%)로 나타났음.”
-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도 “전국 자영업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81.4%가 부채 증가를 답했으며 평균 부채 증가액은 5,132만 원으로 집계됐음.”

3) 소상공인 금융배제 현상

- 한국은행 인천본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말 기준 인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57조 8,326억원임. 이것은 2018년 5조 2,746억원, 2019년 5조 6,173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드러냄과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금융 서비스 수요가 폭증했음을 나타냄.

- 이러한 상황은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음. 설문에 응한 전체 응답자의 75%가 현 상황의 경영애로 사항으로 ‘매출감소’를 꼽았으며, 응답자의 79%는 추가대출을 희망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대출금액은 1천만원 이하~3천만원 이하가 34%, 1천만원 이하~5천만원 이하 53%로 나타났음.
- 그렇다면 금융 서비스 공급자인 금융기관은 어떤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봄.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발행한 「2019 소상공인 금융실태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거절 경험에 대해 응답자 3001명 중 1회 거절 12.1%, 2회 2.8%였으며, 대출 거절 사유로는 낮은 신용도 34.4%, 담보부족 32.8%, 대출 한도 18.1%, 높은 금리 10.1%, 구속성 예금 2.3% 순이었음. 이러한 설문 결과를 통해 금융기관이 자신들이 이윤추구 행위만 할 뿐 공공서비스 제공 역할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금 중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2015년 42.7%에서 2020년 44.0%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은 같은 기관 14.9%에서 37.3%로 크게 증가했음. 즉, 늘어나는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대출기관인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지 않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중금리 대출기관인 비은행금융기관이 늘어나는 중소기업 대출 시장을 크게 잠식하고 있는 것임.
- 그 결과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피해로 나타났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업경영분석(지역)에 따르면, 인천 중소기업 전 산업의 2017년 기준 2019년의 이자비용 부담이 13.4% 늘어나는 등 2017년~2019년의 인천 중소기업의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이자비용은 2017년 기준 2019년에 18.7% 늘어났으며,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03.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9.7%, 교육서비스업 129.0%, 건설업 97.6%,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8.4,

운수 창고업 23.2%, 도매 및 소매업 21.7% 순으로 이자비용이 높게 증가했음. 이러한 현실로부터 유추해볼 때, 인천 중소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천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부담도 이러한 실태를 보일 것으로 판단됨.

- 결국 소상공인의 금융배제 현상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악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추가 대출 희망 등 금융 서비스 수요 증가 ▲금융기관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잦은 대출 거절과 자산 담보, 높은 신용등급 기준의 대출 행태 ▲소상공인들의 높은 이자비용 부담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금융배제 현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개선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음.

4) 인천 소상공인 금융배제자 추정

-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소상공인들은 규모와 매출액, 영업이익 면에서 영세하고, 코로나19 이후 더욱 더 큰 빚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고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대출을 희망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소상공인들이 금융배제 없이 필요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적절하게 받으면서 정상적인 사업체 경영을 통해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고 국민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임.
- 그런 맥락에서 ‘소상공인 금융배제’ 개념을 앞에서 정의한 금융배제 개념을 토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금융배제’ 개념은 ‘지역성 또는 계층성’, ‘접근성’, ‘충분성’, ‘수용성’, ‘지속성’이 담보되는 금융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라고 정의한 바 있음.
- 이 개념을 토대로 ‘소상공인 금융배제’ 개념을 정의하면 “자산 담보가 없고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사업자금을 충분하게 대출받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거나, 사업의 지속을 위해 기존 대출을 연장하지 못하는 금융 현상이자 그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과 사회적 배제를 겪게 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이러한 ‘소상공인 금융배제’ 현상은 본 연구의 인천 소상공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인천 소상공인 금융배제자’를 추정할 수 있음.

○ 전체 응답자의 26.7%는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자금 대출을 충분히 지원받았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78.6%는 사업자금 대출을 못 받았거나 충분하게 대출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음. 즉, 인천 소상공인의 약 73.3%는 잠재적인 금융배제 대상자라고 추정할 수 있음.

○ 전체 응답자의 38%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거절 사유 중 30%는 낮은 신용평가 점수, 27%는 담보제공 곤란 이라고 응답했음. 즉, 인천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거절 사례가 많으며, 금융기관들은 주로 신용평가점수나 담보제공 능력을 기준으로 대출 거절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음.

○ 전체 응답자 중 13.5%가 대부업체로부터 사업자금 대출을 받고 있음. 본 연구의 소상공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간 매출액 규모별 대부업체 대출 유무’를 교차분석 한 결과, 대부업체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들의 72.4%가 연간 매출액 1억원 이내 소상공인인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대부업체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들의 82.6%가 연간 순이익 5천만원 이내 소상공인인 것으로 나타났음. 즉, 인천의 소상공인 대부업 대출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음.

○ 또한, 전체 응답자 중 사업자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29%의 소상공인 중 44%, 즉 전체 응답자 중 12.8%는 사업자금 대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음. 그리고 전체 응답자의 5.2%는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거절당할 것 같아서 대출신청을 포기했음. 금융권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68.8%는 연간 매출 규모 1억원 이내 응답자였으며, 86.7%는 연간 순이익 규모 5천만원 이내 응답자였음. 즉, 금융권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인천의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연간 매출 1억원 이내, 연간 순이익 5천만원이내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이러한 본 연구의 소상공인 설문조사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표 7-1〉 인천 소상공인 금융배제 실태 추정

금융배제	금융배제 세부 구분		전체 대비 비중(%)
	대부업 대출 보유 소상공인(대부분 연간 매출 1억원 이내, 연간 순이익 5천만원 이내 영세 소상공인)		13.5%
	대출이 필요한데 대출받지 못한 소상공인		12.8%
		-대출 거절(대부분 연간 매출 1억원 이내, 연간 순이익 5천만원 이내 영세 소상공인)	4.1%
		-대출 거절을 예상해 신청포기	1.2%
합계			26.3%

- 결론적으로 인천의 소상공인 금융배제자는 “사업자금 대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대부업체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고 있는 26.3%의 인천 소상공인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연간 매출액 1억원 이내, 연간 순이익 5천만원 이내의 영세한 소상공인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음.

8. 소상공인 대상 FGI분석

1) FGI 설계

□ 본 조사의 목적은 인천지역 소상공인 금융소외계층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들의 금융 접근성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FGI를 실시함.

○ 소상공인은 핏줄처럼 지역경제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여러 이유로 금융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지역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의지와는 달리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충분한 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FGI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융담당자들에게 금융서비스의 이용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지역사회를 이끄는 소상공인과 금융회사가 서로 상생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FGI를 실시함.

□ FGI의 대상은 인천지역에서 실제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소상공인단체 대표나 간부를 중심으로 FGI를 실시하였으며 금융서비스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대출기관인 금융종사자 가운데 대출담당자를 중심으로 제2금융권의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출실태에 대하여 FGI를 실시함.

○ FGI와 관련하여 지역 소상공인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정립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다음과 같은 질문을 FGI를 실시함.

- 소상공인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실제 사업을 하면서 금융서비스를 받기 위한 문제점 그리고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평소에 생각하는 대안을 중심으로 FGI를 실시함.

〈표 8-1〉 FGI 참여자 현황

구 분		도매업	소매업	소공인
성	여성	-	2	-
	남성	1	6	1
연 령		60대 1명	50대 7명 70대 1명	50대 1명
인원수		1	8	1
비고			1명 전통시장	

2) 인천시 소상공인 대상 FGI 내용

□ 소상공인 인터뷰 1 (남, 68) 도매업

○ 인터뷰 일시 : 2021년 6월 7일 10:00

○ 소상공인 금융접근 애로점

- 신용보증정책의 한계가 존재하며, 이자가 너무 비싸고 지역신용보증도 공공금융인데 적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금리가 12%~15%까지 하고 도매업을 하는 사람은 창고가 필요한데 이는 50평에서 100평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평당 임대료는 5만에서 10만원 정도 함으로 50평 기준으로 2,500천원에서 5,000천원이고, 100평이면 5,000천원에서 10,000천원이 창고 임대료 때문에 도매인이 결판남.
- 물류비가 많이 들어서 소매점에 비싸게 넣고 임대료 문제로 작은 물류창고는 동네슈퍼에 제때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지 못할뿐더러 제 기능도 못함.
- 따라서 소상공인의 도매인은 임대료에 높은 금리에 이중고를 당하고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밀려 삼중고를 당하고 있음.

○ 소상공인이 원하는 해결방안

- 소상공인 대출금리가 낮았으면 좋겠다. 코로나19의 상황처럼 저금리로 나오면 장사하기도 쉽고 번 만큼 세금을 내는 것임.

- 물류창고의 임대료 문제로 창고를 확보하지 못하니 거점별로 도매업자의 물류창고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대형마트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 소상공인 인터뷰 2 (남, 71세) 소매업(상인협동조합)

○ 인터뷰 일시 : 2021년 6월 7일 10:00

○ 소상공인 금융접근 애로점

- 신용보증재단의 정책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음, 특히,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같이 할 때 하던 사람들이 새로 물갈이가 되어서 원년 멤버가 없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이 폐업하기가 더 어려움.
- 사업을 하다가 폐업할 때 애로사항이 매우 크다. 가게를 접고 싶어도 마음대로 폐업신고를 할 수가 없음.
- 왜냐하면 폐업하면 2~3일 내 은행에서 바로 대출한 자금을 바로 일시불 상환하라고 함.
-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못 하고 점포를 유지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음.

○ 소상공인이 원하는 해결방안

- 소상공인들의 창업도 중요하지만 폐업할 때 금융기관이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을 요구하지 말고 사업하던 점포주에게 선택하여 분납이 가능하도록 폐업을 잘 유도하는 금융정책이 필요함.
- 폐업하고자 하는 시기에 바로 폐업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고 그래야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김.

□ 소상공인 인터뷰 3 (남, 55세) 소매점

○ 인터뷰 일시 : 2021년 6월 16일 18:00

○ 소상공인 금융접근 애로점

- 신용보증재단이 전국적 기준에 따르다 보니 지역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소상공인의 대출이 어렵고 또한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음.
- 공적영역과 민간영역에서 자기자본으로 구성된 은행 등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역 기반 은행이 필요함.
- 금융소외자와 저신용등급자 등 용어에서 오는 어감이 차별화되고 있으며 금융소외자는 담보도 없고 신용도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므로 빚을 진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 매우 중요하며 금융소외자의 정의도 막연하고 모호하게 정의되고 있음.
- 따라서 빚을 많이 진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를 두어야 하지만 파산한 금융소외자와 빚이 많은 금융소외자를 복지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는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봄.

○ 소상공인이 원하는 해결방안

- 지역은행이 필요함. 인천의 공공은행이나 아니면 인천의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은행을 통해 금융의 접근성과 대출 규모, 특화된 인천지역의 대출이 저금리로 준비되었으면 함.
- 금융소외자를 모호하게 구분하기보다는 단계별로 소상공인의 금융양상을 세분화해서 정의하여야 대응도 달라짐.
- 따라서 세분화하는 금융양상은 A단계 소상공인, B단계 소상공인, C계 소상공인으로 구분하고 단계별 요구에 맞는 대응이 중요함.
- 금융소외자 혹은 빚이 많은 점포주, 파산자 등 어떤 관점에서 대응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며 이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사회구조적 문제로 바라보면서 복지적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 인터뷰 4 (남, 56세) 소매점

○ 인터뷰 일시 : 2021년 6월 16일 18:00

○ 소상공인 금융접근 애로점

- 폐업할 때 은행이 잔액 일시불 상환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사업자가 재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방향이 이어야 함.
- 국가가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 노인 일자리 만드는 비용을 소상공인 폐업자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공과금 낼 수 있는 일자리를 늘려야 함.
-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금융은 일자리를 만들 때 무엇을 했는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대안이 나올 것임.

○ 소상공인이 원하는 해결방안

-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사업소득자가 빌렸던 부채를 같은 조건으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폐업할 때 안정적으로 사업소득자가 근로소득자로 바뀌는 것은 간접적으로 고용 창출의 효과도 있고, 폐업에서 고용 창출의 효과로 연계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해 보임.

□ 소상공인 인터뷰 5 (남, 52세) 소공인

○ 인터뷰 일시 : 2021년 7월 6일 17:00

○ 소상공인 금융접근 애로점

- 신용대출은 매우 어렵고 담보대출도 어려움
- 사업을 하다 보면 급전이 필요한데 담보 비율이 낮아서 실제 빌리고 싶어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미 짝찬 대출로 신용대출은 더욱 어려움.

○ 소상공인이 원하는 해결방안

- 소상공인이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 담보 비율을 높여서 대출하는 대안이 필요함.
- 이때 담보는 공장이나 주택담보인데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담보대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필요함.

□ 소상공인 인터뷰 6 (여, 55세) 소매점

○ 인터뷰 일시 : 2021년 7월 8일 10:00

○ 소상공인 금융접근 애로점

- 기보나 신보 신용보증재단 등 수수료도 비싸고 은행과 이중으로 승인받게 되어 있어서 매우 불편함.
-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사업에서 필요한 규모가 적은 돈을 빌릴 때도 서류준비와 소요시간 등 복잡한 절차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 소상공인이 원하는 해결방안

- 따라서 기보나 신보, 신용보증재단 등을 거치지 않고 은행에서 500만원 미만 규모의 대출 시, 간단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보증을 받고 바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정책이 필요함.

□ 소상공인 인터뷰 7 (여, 50세) 소매점 전통시장

○ 인터뷰 일시 : 2021년 7월 8일 10:00

○ 소상공인 금융접근 애로점

- 시중은행 대출은 이자가 높거나 까다롭고 소상공인의 정책자금은 대상은 많은데 규모가 작고, 지원대상 증빙이 현실적이지 않음.
- 일반적인 증빙 방식은 전년 대비 소득세 등 공식적 매출변동을 활

용하는데, 이것이 사실 현금매출이 빠진 카드매출 기준임.

- 코로나19로 인한 유통(배달)결제가 많고 인천의 경우 e음카드 등 카드 고객이 매년 급증하는 상황에서 전년과 비교한 매출은 증가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임.
- 긴급자금을 받는 대상에 빠진다는 것임.

○ 소상공인이 원하는 해결방안

- 경기도의 기본대출 정책처럼 일정 기준 금액의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

□ 소상공인 인터뷰 8 (남, 50세) 소매점

○ 인터뷰 일시 : 2021년 7월 8일 15:00

○ 소상공인 금융접근 애로점

- 소상공인이 폐업 후 재도약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신용관리가 필요하며 신용관리가 안 되면 재창업 대출이나 정부 정책자금의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가 되거나 대출액이 소액으로 줄어듦.
-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대부분 신용불량이거나 그 직전의 경우가 대부분임.

○ 소상공인이 원하는 해결방안

- 소상공인이 폐업 직전에 금융 세이프존을 만들어서 채무 이행을 정지시켜놓고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게 조치함.
- 일정 기간 정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재도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진행함.
- 그리고 어느 정도 여력이 돌아오면 금융 세이프존에서 나와서 일상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 인터뷰 9 (남, 56세) 소매점

○ 인터뷰 일시 : 2021년 7월 12일 10:00

○ 소상공인 금융접근 애로점

- 신용보증의 경우와 금융서비스가 대부분 창업자금 육성자금인데 정말 어려운 것은 폐업 때 나타남.
- 다수의 소상공인은 일정 정도의 부채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폐업과 동시에 일시 상환을 해야 함.
- 폐업은 정말 어려운 부분으로 가게 문을 열어놓고 다른 일을 하러 다니는데 주로 배달, 일용직 건설로 벌어 임대료를 낼 정도로 심각한 문제임.

○ 소상공인이 원하는 해결방안

- 폐업할 때 일시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와 계약 기간 폐업을 하더라도 같은 금리로 지속해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금융정책이 필요함.

□ 소상공인 인터뷰 10 (남, 56세) 소매점

○ 인터뷰 일시 : 2021년 7월 12일 10:00

○ 소상공인 금융접근 애로점

- 소상공인의 사업자도 이제는 최소한의 직업윤리와 교육 등 최소한의 걸림 망이 필요함.
- 창업의 문턱을 높여 폐업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함. 주변에서 이야기하지만, 자영업 시장은 매우 넓고 그렇게 되면 프랜차이즈 기업이 번성하게 됨.
- 협동조합으로 대응을 하려고 해도 협동조합의 경우 신생협동조합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구조임. 협동조합 이사장의 신용에 따른

대출만 가능한 것이 문제점임.

○ 소상공인이 원하는 해결방안

- 우리나라는 소상공인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고 따라서 창업교육 등 기본적인 경영교육을 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금융에서 대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 후 그 기업의 마케팅부터 매출 등 교육부분의 투자가 필요함.
- 기업이 잘되어야 부실 없이 상환도 하고 부실률도 낮추어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세워야 함.
- 신생협동조합에 대한 보증과 정책자금의 대출 등 방안을 마련함.

□ 소상공인 인터뷰 11 (남, 69세) 소매점

○ 인터뷰 일시 : 2021년 5월 7일 14:00

○ 소상공인들의 금융접근 애로점

- 정책자금 등 신청을 위한 서류준비에 시간이 소요됨, 특히 1인 자영업자는 서류준비를 위해 영업을 중단하고 준비해야 되는 상황임.
- 문의사항이 있어도 통화연결이 어려움.
- 정책자금 신청을 위한 창구 다원화로 전화상담하기 어려움.

○ 소상공인이 원하는 해결방안

- 서류의 간소화
- 지자체의 금융지원센터 운영(서류준비 등)

□ 소상공인 인터뷰 12 (남, 57세) 도소매점

○ 인터뷰 일시 : 2021년 5월 13일 14:00

○ 소상공인들의 금융접근 애로점

-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 중 대출을 받고자 신청해도 신규 협동조합은 대출 불가인 경우가 많음.
- 협동조합이 공동사업(공동구매, 공동브랜드개발 등)을 위한 정책자금의 조기 소진으로 신규 조합은 정보의 접근이 어려움.

○ 소상공인이 원하는 해결방안

- 신규 조합에 정책자금 우선 배정함.
- 자금 운용 금융기관에서 관내 소상공인 단체에 자금 지원을 안내함.

□ 소상공인 인터뷰 13 (남, 60세) 도소매점

○ 인터뷰 일시 : 2021년 5월 21일 14:00

○ 소상공인들의 금융접근 애로점

-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이미 부채를 가지고 있음. 사업의 경영을 위해 추가 대출을 하고자 해도 기존 부채의 상환 또는 대환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음.

○ 소상공인이 원하는 해결방안

- 서류의 간소화
- 대출 상한의 완화

□ 소상공인 인터뷰 14 (남, 61세) 도소매점

○ 인터뷰 일시 : 2021년 5월 28일 14:00

○ 소상공인들의 금융접근 애로점

- 대리점의 경우 본사에 담보를 제공해야 함.
- 본사에 제공하는 담보물은 대부분 아파트 등의 자산임.

- 경영상 소매점에 여신을 일정정도 주는데 현금유동성이 없는 경우 부득이 대출을 받아야 함.

- 담보대출의 경우 본사에 제공한 담보물건으로 대출이 어려움.

○ 소상공인이 원하는 해결방안

- 운영자금 용도의 대출은 담보대출에서 제외함.

□ 소상공인 인터뷰 15 (남, 48세) 도소매점

○ 인터뷰 일시 : 2021년 6월 4일 14:00

○ 소상공인들의 금융접근 애로점

- 운영자금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면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받음.

- 어쩔 수 없이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

○ 소상공인이 원하는 해결방안

- 대출을 위한 금융상품 가입 폐지

□ 소상공인 인터뷰 16 (남, 50세) 도소매점

○ 인터뷰 일시 : 2021년 6월 11일 14:00

○ 소상공인들의 금융접근 애로점

- 폐업을 하게되면 대출을 일시에 상환해야하는 현실임.

- 폐업은 대출 등으로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함인데 경영정상화가 안되면 남아있는 대출금에 대해 일시 상환하게 되면 생계가 곤란해짐.

○ 소상공인이 원하는 해결방안

- 폐업시 대출잔액에 대해 원래의 상환조건 유지(원리금분할상환 등)

- 기존 대출을 저리의 대출상품으로 전환하여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소상공인 인터뷰 17 (여, 59세) 음식점

○ 인터뷰 일시 : 2021년 6월 18일 14:00

○ 소상공인들의 금융접근 애로점

- 코로나로 인해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이 존재함.
- 정부의 선별 재난지원금 대상이 안 됨.
-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어도 자금의 조기 소진으로 혜택을 받기가 어려움.

○ 소상공인이 원하는 해결방안

- 혜택 대상의 확대
- 지원금 규모의 확대

□ 소상공인 인터뷰 18 (남, 58세) 도소매점

○ 인터뷰 일시 : 2021년 6월 24일 14:00

○ 소상공인들의 금융접근 애로점

- 코로나 여파로 이내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됨.
- 1000만원 임차료 대출 신청 시 앱으로만 신청함.
- 고령자로서 앱 사용이 용이하지 않음.
- 대출 앱이 전산망 장애로 작동하지 않음.

○ 소상공인이 원하는 해결방안

- 긴급한 시기의 대출시 전화상담으로 원스톱으로 진행함.

- 상담센터 상담대기시간 줄이기 위해 상담인력을 확충함
- 영업장을 벗어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센터 운영함.

□ 소상공인 인터뷰 19 (남, 59세) 도소매점

○ 인터뷰 일시 : 2021년 7월 2일 14:00

○ 소상공인들의 금융접근 애로점

- 대출 절차 복잡
- 상담→서류신청→현장실사→보증심사→보증서 발급→은행 대출
- 대출 목적에 맞지 않게 돈을 쓰는 사람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대출 절차 까다롭게 함.

○ 소상공인이 원하는 해결방안

- 대출 절차의 간소화
- 선 대출 후 용도의 사용은 추후 정산에서 확인

□ 소상공인 인터뷰 20 (남, 60세) 도소매점

○ 인터뷰 일시 : 2021년 7월 9일 14:00

○ 소상공인들의 금융접근 애로점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대출 시 1차, 2차, 3차에 따라 금리 변동 있음.
- 기 받은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대환도 안 됨.

○ 소상공인이 원하는 해결방안

- 같은 목적의 대출은 차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리로 적용함.
- 기 받은 대출금리가 높을 경우 낮은 금리로 대환 가능하도록 전환

을 유도함.

□ 소상공인 인터뷰 21 (여, 64세) 음식점업

○ 인터뷰 일시 : 2021년 7월 13일 14:00

○ 소상공인들의 금융접근 애로점

-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작성할 서류가 너무 많음,
- 서류작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됨.
- 대출기관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대출기관 방문을 위해 1일 영업 포기

○ 소상공인이 원하는 해결방안

- 서류의 간소화
- 대출기관의 찾아가는 서비스
- 서류작성
- 대출상품 설명

□ 소상공인 인터뷰 22 (남, 57세) 도소매업

○ 인터뷰 일시 : 2021년 7월 16일 14:00

○ 소상공인들의 금융접근 애로점

- 신용대출만 가능한 경우가 많음
- 대리점 운영 시 본사에 담보를 제공, 대부분 집을 담보로 함.
- 추가 담보대출이 어려움

○ 소상공인이 원하는 해결방안

- 담보물건에 대해 중복 담보 설정이 가능하게 제도 개선

□ 소상공인 인터뷰 23 (여, 60세) 문구업

○ 인터뷰 일시 : 2021년 7월 23일 14:00

○ 소상공인들의 금융접근 애로점

- 사업의 경영을 위해 추가 대출 시 기존 부채의 상환 또는 대환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음.

○ 소상공인이 원하는 해결방안

- 서류의 간소화
- 대출 상환의 완화

□ 소상공인 인터뷰 24 (남, 62세) 도소매업

○ 인터뷰 일시 : 2021년 7월 30일 14:00

○ 소상공인들의 금융접근 애로점

- 대리점의 경우 본사에 담보를 제공해야 함
- 본사에 제공하는 담보물은 대부분 아파트 등의 자산
- 거래처 소매점에 일부 여신을 주는데 현금 유동성이 없는 경우 부득이 대출을 받아야 함.
- 담보대출의 경우 본사에 제공한 담보물건으로 대출이 어려움

○ 소상공인이 원하는 해결방안

- 운영자금 용도의 대출은 담보대출에서 제외

□ 소상공인 인터뷰 25 (남, 50세) 음식점업

○ 인터뷰 일시 : 2021년 8월 3일 14:00

○ 소상공인들의 금융접근 애로점

- 운영자금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면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받음
- 어쩔 수 없이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

○ 소상공인이 원하는 해결방안

- 대출을 위한 불필요한 금융상품 가입 폐지

□ 소상공인 인터뷰 26 (남, 56세) 도소매업

○ 인터뷰 일시 : 2021년 8월 6일 14:00

○ 소상공인들의 금융접근 애로점

- 폐업을 고려 중에 있음.
- 폐업 시 기존 대출을 일시에 상환해야 함.

○ 소상공인이 원하는 해결방안

- 폐업 시 대출잔액에 대해 원래 상환조건 유지(원리금 분할상환 등)
- 기존 대출을 저리의 대출상품으로 전환하여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소상공인 인터뷰 27 (남, 66세) 도소매업

○ 인터뷰 일시 : 2021년 8월 13일 14:00

○ 소상공인들의 금융접근 애로점

-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 대출 활성화
- 임차료 대출 신청 앱으로만 신청 가능

- 고령자로서 앱사용이 용이하지 않음

○ 소상공인이 원하는 해결방안

- 긴급한 시기의 대출시 전화상담으로 원스탑으로 진행
- 상담센터 상담 대기시간 줄이기 위해 상담 인력 확충
- 영업장을 벗어나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

□ 소상공인 인터뷰 28 (여, 54세) 음식점업

○ 인터뷰 일시 : 2021년 8월 20일 14:00

○ 소상공인들의 금융접근 애로점

- 코로나로 인해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
- 정부의 선별 재난지원금 대상이 않됨(간이과세자)
- 지원대상으로 확인 되어도 자금의 조기 소진으로 혜택 받기 어려움

○ 소상공인이 원하는 해결방안

- 혜택 대상의 확대
- 지원금 규모의 확대

□ 소상공인 인터뷰 29 (남, 61세) 도소매업

○ 인터뷰 일시 : 2021년 8월 24일 14:00

○ 소상공인들의 금융접근 애로점

-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 중
- 조합 명의의 장비구입을 위한 대출 신청했으나 거절당함

- 신생 조합의 경우 이사장의 신용으로만 대출이 가능

○ 소상공인이 원하는 해결방안

- 신생조합의 경우 법인 대상 대출 우선 배정
- 공동사업 관련 대출은 조기 집행

□ 소상공인 인터뷰 30 (남, 63세) 도소매업

○ 인터뷰 일시 : 2021년 8월 27일 14:00

○ 소상공인들의 금융접근 애로점

-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대출 받을 시 1차, 2차, 3차에 따라 금리변동
- 기 받은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대환도 안됨.

○ 소상공인이 원하는 해결방안

-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금리를 초저금리로 고정
-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대환대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3) 소상공인 대상 FGI 분석결과 요약

□ 소상공인 금융접근의 애로점

○ 소상공인들의 금융과 관련된 애로사항으로 폐업할 때 금융기관의 일시불 상환요구가 폐업을 하고자 하여도 폐업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신용불량자 직전에 폐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폐업 시 일시불상환으로 문 열어 놓고 다른 일 하러 다니면서 이자와 임대료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가 발생함.
- 재기를 위한 신용관리가 중요한데 신용불량자가 되고 나면 재창업 시 대출이나 정부 정책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재기의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도 발생함.

- 최근 현금고객이 줄고 배달 앱을 활용한 고객의 이용과 e음카드 사용 고객이 급증하여 소상공인 점포가 전년대비 매출증가로 나타나 긴급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려움이 있음.

○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할 때 고금리이며 대출 규모가 작고 대출 서류작성이 복잡함.

- 따라서 대출 시 적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경우가 있고, 신용대출도 어렵고 담보대출도 어려움.
-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공공금융임에도 불구하고 이자도 비싸고 적금 가입의 의무화가 문제임.
- 신용보증재단은 수수료가 비싸고 은행에 이중으로 승인받는 시스템이 불편함.
-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담보 비율이 낮아서 어렵고, 딱찬 대출로 신용대출은 더더욱 어려우며, 소액 대출 시 서류준비, 소요시간 등 복잡한 대출 절차로 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 금융소외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막연하고 모호하며, 금융소외자의 분류도 세분하여 정책을 보완하고 소상공인의 금융소외자를 복지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소매점의 점포는 물류창고의 임대료가 비싸서 소비자가 필요한 물건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소매점은 3중고에 시달림(비싼 이자, 비싼 임대료와 물류비, 대형마트나 SSM같은 유통)

□ 소상공인이 원하는 해결방안

○ 소상공인들의 폐업과 대출금 일시불 상환과 신용불량자 및 긴급자금 소외와 관련한 해결방안

- 일시불 상환을 요구하지 말고 폐업할 때 잔액은 점포주가 분납이나 기존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금융정책이 필요함.

-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사업소득자를 근로소득자로 변경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이때 근로소득자의 변경은 고용창출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함.
- 소상공인 폐업 직전에 금융 세이프존을 만들어서 채무 이행을 정지시키고 신용도를 유지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필요
 - 일정 기간 정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재도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진행
 - 여력이 돌아오면 금융 세이프존에서 나와서 일상 비즈니스 등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할 때 고금리이며 대출 규모가 작고 대출 서류작성이 불편 등과 관련된 해결방안
 - 인천의 특화된 금융기관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은행은 금융의 접근성과 대출규모의 확대, 저금리 지원이 필요함.
 - 소상공인들의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 담보 비율을 높여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소상공인에게 500만원 미만의 소규모의 대출 시, 간단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고 바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함.
 - 경기도의 기본대출 정책처럼 일정 기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금융소외자의 해결방안으로 금융소외자를 세분화하여 A단계 소상공인, B단계 소상공인, C계 소상공인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함.
 - 금융소외자 혹은 파산을 당한 점포주나 소상공인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문제는 정책적 대응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이러한 소외 및 파산자를 현대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면서 노동 및 복지적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소매점의 3중고(비싼 이자, 비싼 임대료와 물류비, 대형마트나 SSM 같은 유통) 중 점포의 비싼 임대료와 물류비에 대한 해결방안
 - 소매 점포의 물류창고 임대료 문제는 거점별로 도매업자의 물류창고를 공동으로 운영하게 하고 조건이 충족될 때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대형마트와 SSM에 경쟁력을 갖추어 골목상권의 형평성을 제 공함.
- 기타 한국 내 소상공인이 너무 많아 창업교육 등 기본적인 경영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 밀착형 금융을 통하여 대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 후 그 기업의 마케팅부터 매출 등 사후적 관리를 해주는 사회적금융의 지원이 필요함.
 - 점포의 운영이 잘되어야 부실 없이 상환도 하고 부실률도 낮추어져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 필요함.
 - 신생협동조합에 대한 보증과 정책자금의 대출 등 방안도 필요함.

9. 금융기관(신협) 대상 FGI분석

1) 금융기관(신협) 대상 FGI 내용

□ 금융기관(신협) 인터뷰 1

○ 인터뷰 일시 : 2021. 6.

○ 주요 내용

- 현재 신협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신협만의 소상공인 대출 상품이 없음.
- 신협의 영업지역이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은행과 영업환경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음.
- 대출 심사과정, 자산건정성 분류 기준 등 감독당국의 규제도 사실상 은행과 동일함. 이런 조건에서는 신협도 소상공인 대출을 취급할 때 은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밖에 취급할 수밖에 없음.
- 신협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용협동조합의 성격을 반영하여 영업하고, 대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영업 및 대출 심사 관련 감독 규제 변경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심사평가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담당자가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현황을 평가한 후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이렇게 하면, 신협만의 특성을 반영한 소상공인 대출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임.

□ 금융기관(신협) 인터뷰 2

○ 인터뷰 일시 : 2021. 6.

○ 주요 내용

- 신탁 차원에서 고객과 접점을 넓히는 노력을 하지만, 소상공인에 한정하여 관계형금융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음.
- 차라리 신탁의 당초 정체성에 맞게, 신탁의 전반적인 영업방침을 관계형금융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대해서는 신탁 종사사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실정이지만, 본인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뿐 아니라 신탁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낫다고 생각함.
- 소상공인과 대출거래 이후 부대거래를 확대하여 수익성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음. 소상공인 대부분이 이미 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임.
- 옛날처럼 소상공인 사업장을 신탁 직원이 방문하여 수금을 할 수 있다면 유대를 강화하여 부대거래를 유지할 수 있고, 소상공인의 사업 실태도 정확히 파악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수월하게 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함.
- 신탁의 정체성을 관계형금융이 가능한 상호금융기관으로 명확히 하여야 함.

□ 금융기관(신탁) 인터뷰 3

○ 인터뷰 일시 : 2021. 6.

○ 주요 내용

- 신탁을 비롯한 2금융권은 소상공인이 대출을 신청하면 주로 담보가 있는 가계대출로 취급하고,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정책자금대출으로 유도하거나 소개하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대출에 알맞은 대출 심사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정의나 특성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소상공인들이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과 대출 상담 시 가게자금으로 자금용도를 바꾸어 대출하는 경향이 없지 않음.
- 소상공인들이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감안하여 소상공인 대출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이 늘어날 수 있을 것임.

□ 금융기관(신협) 인터뷰 4

○ 인터뷰 일시 : 2021. 6.

○ 주요 내용

- 감독 당국의 규제 중 소상공인이 대출 확대에 부정적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대표적으로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관련 대출금의 자산건정성 분류시 고정 이하 대출로 분류하는 규정임.
- 이자를 잘 납부하고 있어도 고정이하로 분류하여야 하는데, 대출 사후관리 차원에서 매우 불리한 조항임. 개정이 필요하다고 봄.
- 또한 소상공인 대출 확대에 인센티브를 주는, 소상공인 대출을 장려하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금융기관(신협) 인터뷰 5

○ 인터뷰 일시 : 2021. 6.

○ 주요 내용

-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을 확대하려면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제도가 100% 보증제도로 확대하여야 함.

- 신탁 입장에서는 이익도 나지 않는데 신용대출이나 일부 보증으로 대출을 취급할 이유가 없음.
- 현재 100% 보증대출도 지역 공헌사업 차원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임.
- 소상공인 대출을 취급하여 신탁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함.
- 그 방법으로 100% 보증제도를 늘리고, 적절한 이자율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함.

□ 금융기관(신탁) 인터뷰 6

○ 인터뷰 일시 : 2021. 6.

○ 주요 내용

- 소상공인 대출이 연체되어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대출 취급직원에게 대해 면책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음.
- 대출 사후관리를 잘하더라도 소상공인의 대출상환 능력을 끌어 올리는 데 한계가 있고, 처음부터 소상공인 대출은 부실 위험이 많으므로 면책 규정이 없으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취급하려고 하지 않을 것임.

□ 금융기관(신탁) 인터뷰 7

○ 인터뷰 일시 : 2021. 6.

○ 주요 내용

- 소상공인의 보증서 담보대출은 1건 대출금액이 적어 생산성이 낮아 수익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보증대출 1건당 1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1천만원 대출이나 1억 대출이나 직원의 업무량은 비슷함.

- 그렇다고 소상공인의 부실위험이 높으니 대출금리도 올리려 해도, 평판리스크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 1건당 보증기관의 보증금액을 확대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신협) 인터뷰 8

○ 인터뷰 일시 : 2021. 6.

○ 주요 내용

- 신협의 신협중앙회 예치금의 투자수익은 매우 낮은 것은 사실임.
- 2019년 기준 예치금 수익률은 상품에 따라 1.5% ~ 2.5% 수준으로, 대출금이자율 4.7% 보다 낮음.
-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낮아져 2019년보다 더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됨. 1% 내외로 예상되는데 1%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큼.
- 투자수익률이 낮은데도 대출을 하지 못하고, 예치금으로 예치하는 것은 원금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임.
- 동 재원을 소상공인 대출재원 등으로 활용하려면 확신한 원금보장방안이 있어야 할 것임.

□ 금융기관(신협) 인터뷰 9

○ 인터뷰 일시 : 2021. 6.

○ 주요 내용

- 소상공인의 사업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음.
- 현재는 신협의 영업지역이 넓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상공인의

사업장 방문도 쉽지 않아 소상공인의 현황을 파악하거나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움.

- 금융기관이 싼 비용으로 소상공인의 사업 현황 정보를 객관적인 형태로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면 소상공인의 현실에 맞게 대출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금융기관(신협) 인터뷰 10

○ 인터뷰 일시 : 2021. 6.

○ 주요 내용

- 인천지역 소상공인 지원이 우수한 신협에 지자체 여유자금 예치 등 지역사회 차원의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음.
- 지자체 여유자금 예치기관을 선정할 때 소상공인 지원 실적을 평가항목으로 넣어도 좋을 것임.

10.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개괄

1)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정책(2018~2021)

(1) 경제금융 관련 정책

e음카드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융자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 차액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	-----------------------	----------------------------	---------------------

□ 긍정평가

- 2018년부터 도입된 전자식 e음 카드 사용률이 인천 경제인구 중 약 90% 이상이 지역화폐를 가입 및 사용하고 있음으로 분석되었으며, 여론조사 결과 사용자 중 98%가 지속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밝힘.
(출처 : 인천광역시청)
- e음 카드 기준 21년 3월 기준 누적 금액 5조원을 넘겼으며, 소상공인 뿐만이 아닌 인천시민들에게 효과적인 경제정책으로 되었음으로 분석됨.
- 소상공인 대상 융자 및 이자 차액을 지원함으로 누적 업체가 약 12만 곳 이상으로 파악되었으며, 정책을 혜택 보는 누적 총량이 증가하고 있음.
-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시에서 집중적인 홍보 및 지원을 함으로 소상공인들의 폐업 이후 경제 소외계층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부정평가

- 각 정책마다의 중앙정부예산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비율은 50%이거나 최소 30%를 차지하고 있음.

- 지원금액 및 시행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나 국가에서 진행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정책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분석으로 혜택을 본 누적 업체는 많지만 중복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에서의 경제금융정책에 대해 소상공인 대상에게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고 분석됨.
- 지역화폐 부분 초기 ‘구’ 별로 캐쉬백이나 혜택금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일부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 지역이 있었다고 분석되었지만, 이후 안정화된 운영이 되고 있음.
- 지역화폐 부분 전체 혜택금액의 차이가 개월마다 큰 변동이 있었으며, 코로나가 유행한 2020년부터 50만원까지 10% 캐쉬백을 현재까지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 코로나 이후 정책의 안정성을 위한 절대적 금액 산정과 혜택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됨.

(2) 소상공인 직접 지원정책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사업	소상공인 현장 클리닉	상점가 활성화 추진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소상공인 sos 응급클리닉	소상공인 경영개선 사업	소상공인 폐업 사업전환 지원사업	소상공인 교육	이어가 게 발굴 및 육성
------------------------------	-------------------	------------------	-------------------	----------------------	--------------------	----------------------------	------------	---------------------

□ 긍정평가

- 소상공인 자생능력 향상 및 생계 지원 중심 정책에 대해 정책 만족도 부분에서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남.
- 교육 프로그램 대상에 있어 모든 소상공인 계층이 포함되어 있어 계층 불평등 현상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홍보와 현대화를 위해 국가와 시가 끊임없는 투자가 진행중에 있음.
- 새로 창출하는 영업점 및 상권에 대해 투자 중임.

□ 부정평가

- 규모에 비해 예산이 부족한 사업이 있으며, 중앙정부 예산의존도가 높게 나타남.
- 소상공인 및 자영업 준비 대상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역성 강조나 지역 특성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상권 활성화 정책에 비해, 상권을 찾는 유동인구 증가 및 방문인구 증가에 대한 유도사업 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정책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집계 되었지만, 이용 비중과 홍보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종합평가

- 사업대비 중앙 예산 의존도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기에 사업 유지성을 위해서는 시의 투자 비중이 높아야 함.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인천 모든 지역의 전통시장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는 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곳을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됨.
- 소상공인 정책 만족도가 종합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위 정책들에 정보가 부족한 계층에서 불만족 성향이 높게 나타남. 이를 홍보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분석됨.

-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장기적 관점의 소상공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되며, 이는 인천광역시만의 특색 있는 혜택이나 교육, 지원 정책 등 지역 특색과 더불어 앞으로의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인천시에서 코로나로 관련하여 지원한 정책 중 인식율은 51.2%며, 시의 정책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시 지원정책 정책 만족도 순위에서 1위 캐쉬백 10%, 2위 긴급재난지원금, 3위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 5위 소상공인 업소 상하수도 요금 감면 순으로 5개 순위 중 4개 정책이 소상공인 대상이며, 지원 정책 중 대다수가 혜택을 보는 정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이나 지원정책 등을 시민들에게 잘 전달한다는 응답한 시민은 73.8%며 코로나 이후에도 시의 지원정책이나 다른 정책들도 계속 홍보한다면, 정책만족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11. 인천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정책에 대한 개괄

1)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업무

-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은 “기업인·소상공인의 충실한 조력자로서 희망과 협력을 약속한 지역공공보증기관임.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목적)를 보면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
 - 위의 동법 제2조 정의의 5항의 각 목을 보면 “가. 소기업 등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소기업 등의 채무를 금융회사 등이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그 밖에 소기업 등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로 되어있음.
 - 위의 가, 나, 다는 신용보증의 일반보증, 협약보증, 특례보증으로 사업으로 되고 있음.
-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미션(Mission)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와 비전(Vision)으로 고객과 함께 도약하는 인천경제의 금융파트너로 하고 있음.
 - 인천신용보증재단 80여 명의 직원이 있으며, 영업본부에는 영업관리부를 포함해 남동, 부평, 서인천, 남부, 계양, 중부, 연수가 있음.
-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디딤돌센터는 소상공인의 사업실패 위험을 줄이고 성공경영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개소함.
-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으로 실전 위주의 맞춤형 교육, 소득증대 및 비용절감을 위한 1:1 컨설팅, 안정적인 재기지원 등 소상공

인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지원하기 위해 개소함.

-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디딤돌센터 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디딤돌아카데미, 맞춤형컨설팅, 재기지원사업, 무방문보증지원, 상권정보시스템 등을 운영함.

□ 디딤돌아카데미는 창업아카데미, 경영아카데미, 성공거점사업지원, 성공사업자현장견학, 온라인마케팅 실무교육 있음.

○ 창업아카데미는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후 3년 이내의 소상공인으로 창업절차 및 상권분석 등 성공창업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임.

- 매년 2월부터 11월 사이 매월 진행하며 온라인 접수를 하고 교육은 20명 내외 1일 4시간 정도로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창업절차 및 인허가, 상권분석,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성공사업자 특강 등

○ 경영아카데미는 사업자등록이 인천으로 되어 있는 소상공인이며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임.

- 매년 2월부터 11월 사이 매월 진행하며 온라인 접수를 하고 교육은 20명 내외로 1일 4시간 정도로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신용관리, 전세전략, 근로기준법, 마케팅 전략 등

○ 성공거점사업지원은 인천 군·구에 지역별 성공거점을 마련하여 교육 및 점포체험 등 사업경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창업 및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으로 성공거점을 통한 성공창업 장려를 위한 사업임.

- 위 사업은 예비창업자 및 업종 전환 구상 중인 소상공인으로 사회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는 조건이 있음.

□ 교육으로 창업아카데미, 경영아카데미, 온라인 마케팅실무교육 등 접수하여 수료하면 수료 혜택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일반보증 이용 시 보증료 0.2% 감면, 소상공인디딤돌센터 컨설팅 우대 지원” 이 있음.

□ 성공사업자 현장견학프로그램은 청년유입과 지역상인 상생협력을 통한 상권회복지역, 구도심의 활성화, 신사업 아이템 집중지역을 방문하여

소상공인 미래생존 사업아이템 구상을 지원하는 무료 현장 견학 프로그램임.

○ 위 사업은 예비창업자 및 업종 전환 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센터 교육 이수자 및 재단의 보증이용고객 우대가 있으며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 운영함.

- 장소(현장) 선정은 상권이 회복되고 있는 신흥상권 견학으로 미래 지향적 아이템 구상상권회복지역,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전통 시장 활성화 지역 등이 있음.

□ 멘토링 지원은 현장 견학할 때 전문 컨설턴트 동행, 사업입지분석, 세무 등 전문 컨설턴트 멘토링 지원이 있음.

○ 소상공인 디딤돌센터 홈페이지, 센터 또는 재단 지점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 후 혜택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일반보증 이용 시 보증료 0.2% 감면, 소상공인디딤돌센터 컨설팅 우대지원” 이 있음.

□ 온라인마케팅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인천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상품및 제품 홍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온라인 마케팅 교육(모바일 홍보 동영상 제작)을 제공함.

○ 매년 2월부터 11월 사이 분기별 1회 진행하며 온라인 접수를 하고 교육은 20명 내외로 1일 4시간 정도로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를 기반으로 마케팅 제작이론 및 실습 등임.

- 참석대상은 인천 거주하고 사업자등록 예정인 예비창업자와 관내 소상공인(기존사업자)이 연 1회 지원 가능하며 수수료 혜택으로 소상공인 디딤돌센터 경영전문가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디딤돌센터 각종 프로그램 우선 지원함.

□ 맞춤형 컨설팅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컨설턴트가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신청자격은 제도전 특례보증 지원 대상자 및 디딤돌센터 교육 이수 대상으로 재단의 보증거래가 있는 인천 소재 기업이며, 무등록 사업

자 및 무점포 사업장, 보증 제한업종은 제외되며, 2일 8시간 정도 컨설팅을 진행함.

- 비용은 전액 지원되며 컨설팅분야는 다음의 1개 분야 지원 가능함.
- 컨설팅분야는 다음과 같음 ① 홍보 및 마케팅 ② 온라인 마케팅 ③ 사업계획수립 ④ 상권/임지분석 ⑤ 점포운영, 매장관리 ⑥ 매장연출(VMD) ⑦ 세무, 회계, 재무관리 ⑧ 노무관리

□ 재기지원사업으로 폐기지원 연계와 재도전지원, 재창업지원이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 희망 리턴 패키지로 연계하는 사업임.

○ 폐업지원 연계사업은 사업정리 컨설팅은 폐업 시 절세·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방법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컨설팅을 지원하며, 점포철거 컨설팅은 집기·설비관리, 철거·원상 복구 관련 컨설팅 및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함.

- 전직 장려수당은 재기지원 컨설팅·재기교육 수료 및 폐업신고 후 취업 활동에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성공패키지는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을 통해 고용노동부 취업 성공패키지(3단계:취업상담 ⇨ 직업훈련 ⇨ 취업알선)와 연계를 지원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로 연계하여 폐업지원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음.

□ 재도전지원은 특례보증을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개인회생, 파산 종료 후 면책판결을 받은 법적 채무 종결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 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관리종결(소각)기업으로 함.

○ 보증 제한기업으로는 재보증 제한업종 영위기업, 휴업 중인 기업,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 규제 중인 자가 영위하는 기업, 신보 또는 기보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신보 또는 기보가 사고 또는 대위변제 관련 채무관계자로 규제 중인 자가 영위하는 기업,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의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보유한 기업, 국세채납기업으로 하며, 국세청채납기업은 국세 채납금액(잔액)

이 50백만원 이하 이거나 세무서 사실증명서류 등을 통해 세금분납 및 성실상환 중(상환비율 50% 이상)임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증지원이 가능함.

- 지원내용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보증지원이며 이는 단, 재단의 소상공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신용등급이 CCC등급 이상 및 재단의 “재도전 실무위원회”심의 결과 본 특례보증 지원이 결정된 기업으로 하며 재기교육 수료 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함.

- 경영지도 컨설팅 우대 지원사업은 사업타당성 분석, 창업 마케팅 전략 등 컨설팅이 제공(1일 4시간, 2일간)되며,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관련 신용정보상 불이익정보 공유 제한과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지원기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용정보를 등록하여 불이익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점 혜택을 부여함.

○ 재창업 지원은 인천지역 소상공인 창업생태계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하여 과거 우수한 기술이나 사업 노하우의 사장을 방지하고 창업 ⇨ 성장 ⇨ 회수 ⇨ 재도전의 소상공인 창업생태계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정직한 실패기업인에 대하여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

- 성공적인 재창업 안착을 위한 컨설팅 기회 제공, 사업 타당성 분석, 창업 마케팅 전략 등 컨설팅 제공(1일 4시간, 2일간)함.

□ 무방문 보증지원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을 찾아오지 않고도 업무처리가 가능한 사항으로 무방문 기한연장과 이동출장소 사업이 있음.

○ 무방문 기한연장은 대상기업이 아래에 열거하는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함.

- 연대보증인이 없는 개인기업, 재단에서 이용 중인 기한연장 신청대상 보증금액이 50백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보증 사고사실 및 사고사유가 없는 경우이며 예시로 연체, 체납, 압류, 가압류, 경매, 가처분 등이 해당, 무방문 기한연장 보증료 납입계좌 안내와 무방문 연장처리를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무방문 기한연장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는 가능함.

- 이동출장소 서비스는 생업으로 재단 방문이 힘든 전통시장 및 지하상가, 도서지역 등에 이동출장소를 운영하여 신용보증제도를 홍보하고 현장에서 보증상담, 서류접수 및 사업장 실사를 진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기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內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한 상가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2)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업무 일반현황

□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업무와 관련된 최근 3년간 보증공급현황을 살펴보면 3년간 건수와 금액에서 매우 가파르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음.

○ 보증건수에 보증잔액의 총건수는 8만 4건에서 158천 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증가율은 11.6% 상승하고 2019년 대비 2020년은 67.93% 증가하여 매우 가파른 증가를 하였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보증업무의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보증금액과 보증잔액의 총금액은 연도별로 규모가 1조 6천억 규모에서 3조 8천억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19.6% 상승하고 2019년 대비 2020년은 74.3% 증가하여 매우 가파른 증가를 하였고 이는 코로나로 인한 보증업무의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어려운 시기 보증업무의 증가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보증공급 건수와 보증잔액 건수를 비교하면 2018년 32.6%, 2019년 33.5%, 2020년에는 39.5%로 건수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보증공급 금액과 보증잔액 금액을 비교하며 2018년 37%에서 2019년 38.4%, 2020년 42.5%로 금액의 비중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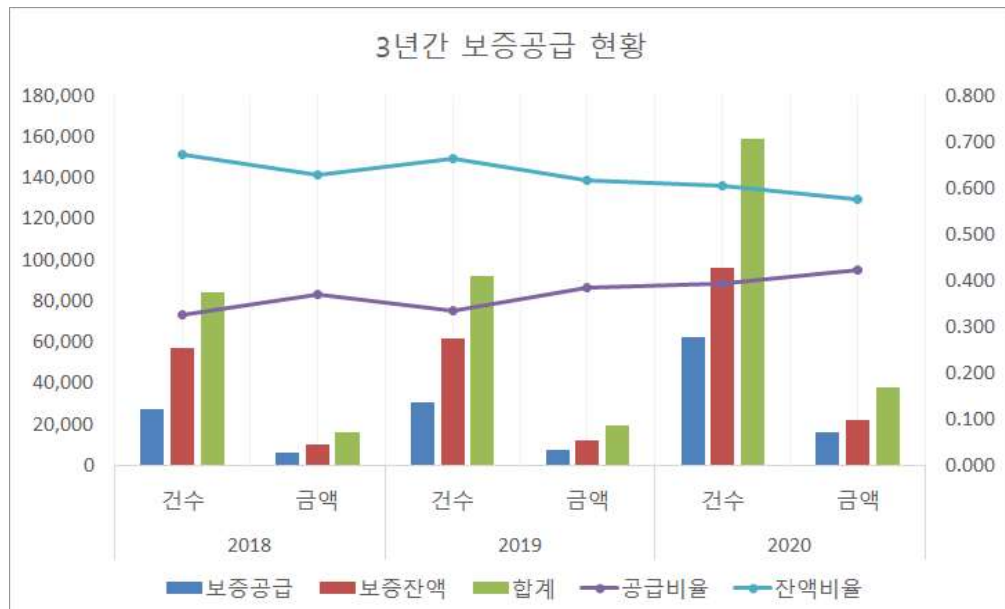
- 따라서 실제 총금액이 1조 6,437억에서 3조 8,098억으로 잔액의 규모는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 비율을 따져보면 건수와 금액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11-1〉 최근 3년간 보증공급현황(단위: 건, 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보증공급	27,554	6,090	30,960	7,417	62,774	16,178
보증잔액	57,023	10,348	61,556	11,915	96,099	21,920
공급비율	32.6%	37.0%	33.5%	38.4%	39.5%	42.5%
잔액비율	67.4%	63.0%	66.5%	61.6%	60.5%	57.5%

자료: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2021.07.14.)

〈그림 11-1〉 보증공급과 보증잔액현황 비교



□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을 살펴보면 전국 재단의 평균보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이 조금씩 높게 나타나며 이는 인천의 소상공인들의 영업상황이 어렵다고 판단됨.

○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은 2018년 전국 평균보다 0.38% 높게 나타났고, 2019년에도 0.21%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 그런데 2020년에 재단 평균과 인천신보의 경우 모두 급격한 하락을 보여 확인한 결과 채무조정 상환유예를 통하여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씩 연장하여 현재 2021년 9월까지 2회 연장을 더 하여 대위변제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대위변제율과 관련된 최근 기사를 보면 2016년에서 2019년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운용배수가 5.27~6.23배였고 코로나 이후 2020년 9.16배로 치솟았다고 함.¹⁸⁾

- 향후 대위변제의 유동성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연착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표 11-2〉 최근 3년간 대위변제현황(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재단평균	인천	재단평균	인천	재단평균	인천
대위변제율	2.99	3.37	3.01	3.22	1.73	1.72

자료: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2021.07.14.)

□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연도별 출연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는 완만한 상승을 보이다가 2020년 급격한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으면 이는 코로나19와 관련된 현상으로 파악됨.

○ 인천신용보증재단의 2017년 대비 2018년 전체 실적은 10%에서 2018년 대비 2019년은 0.9%, 2019년 대비 2020년은 21.6%로 급격한 상승세로 나타남.

18) 한국경제 코로나에 독 터진 자영업 대출.. 월 1조씩 빚보증 선 지역신보 ‘흔들’ 2021.07.15. 3면.

- 2017년 대비 2019년은 43.5% 상승했으며 2020년은 무려 119%로 상승하여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연실적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꾸준한 상승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11-3〉 연도별 출연실적(단위: 억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소계	160	240	249	629
인천시	54	96	90	248
지자체	13	9	9	12
정부	0	0	0	39
금융회사	91	135	150	330
기타	2	0	0	0

자료: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2021.07.14.)

- 일반보증은 신용보증재단의 고유한 업무로 중앙신보에서 보증상품을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보증 상품으로 2013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인천신용보증재단은 15,504건에 37조 429억원의 실적이 있음.
-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일반보증에서 최근 신용점수로 분류하지만 기존의 10등급으로 분류하여 건수를 살펴보면 1등급~6등급까지 15,423건에 비중은 99.5%를 차지하고 있으며 1등급~3등급까지 고신용층의 경우 9,828건수에 63.4%를 차지하고 있고 4등급~6등급까지 중신용층의 경우 3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일반보증의 경우 7등급 이하의 저신용층은 81건에 0.4%를 차지하여 미미한 상태로 분석되었으며 일반보증의 경우 1등급~3등급까지 고신용층에 63.4%로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음.
-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금액을 보면 1등급~6등급까지 368,897억원에 비중은 99.6%를 차지하고 있으며 1등급~3등급까지 고신용층의 경우 265,070억원에 71.6%를 차지하고 있고 4등급~6등급까지 중신용층의 경우 103,827억원에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일반보증의 경우 7등급 이하의 저신용층은 금액은 1,532억원에 0.4%를 차지하여 미미한 상태로 분석되었으며 일반보증의 경우 고신용층에 보증된 금액은 71.6%로 매우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음.

〈표 11-4〉 인천신보 일반보증 신용등급별 현황(2013~2021.5.)

(단위: 억원)

자금 구분	신용 등급	신용 접수	보증 건수	건수 비중	보증 금액	금액 비중
일 반 보 증	1등급	920~1000	3,988	25.7%	114,535	30.9%
	2등급	880~919	3,593	23.2%	93,627	25.3%
	3등급	840~879	2,247	14.5%	56,908	15.4%
	4등급	780~839	2,597	16.8%	55,162	14.9%
	5등급	745~779	1,988	12.8%	32,769	8.8%
	6등급	710~744	1,010	6.5%	15,896	4.3%
	7등급	595~709	65	0.4%	1,301	0.4%
	8등급	355~594	5	0.0%	110	0.0%
	9등급	350~354	5	0.0%	55	0.0%
	10등급	349 이하	6	0.0%	66	0.0%
	합계		15,504	99.9%	370,429	100.0%

자료: 인천신용보증재단 내부자료

〈그림 11-2〉 일반보증 건수와 금액 비교 및 비중 (2013~2021.5)



-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재개발지역 상권활성화, 청년스타트업, 지하도상가 활성화, 스마트혁신성장,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 특례보증 상품이 있으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상품으로 2013년부터 2021년 5월까지 102,213건에 금액은 218조 604억원의 실적이 있음.
-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에서 기존의 10등급으로 분류하여 건수를 살펴보면 1등급~6등급까지 91,729건에 비중은 89.7%를 차지하고 있으며 1등급~3등급까지 고신용층의 경우 48,408건수에 47.4%를 차지하고 있고, 4등급~6등급까지 중신용층의 경우 43,321건수에 4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특례보증의 경우 7등급 이하의 저신용층은 10,484건에 10.3%를 차지하여 다른 보증상품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금액을 보면 1등급~6등급까지 205조 8,304억원에 비중은 94.4%를 차지하고 있으며 1등급~3등급까지 고신용층의 경우 127조 2,913억원에 58.4%를 차지하고 있고 4등급~6등급까지 중신용층의 경우 78조 5,391억원에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특례보증의 경우 7등급 이하의 저신용층은 금액은 12조 2,300억원에 5.6%를 차지하여 타 보증상품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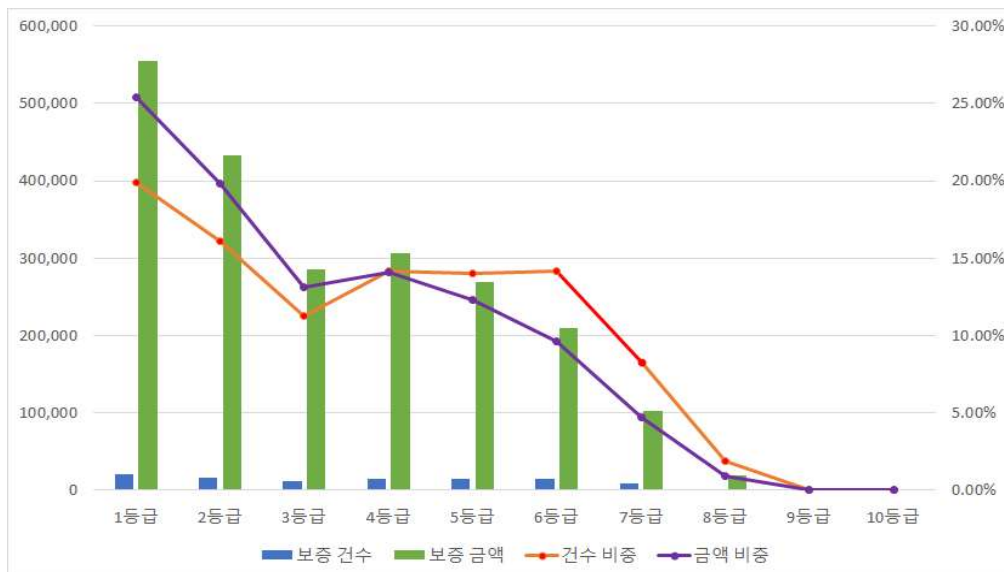
〈표 11-5〉 인천신보 특례보증 신용등급별 현황(2013~2021.5)

(단위 : 억원)

자금 구분	신용 등급	신용 점수	보증 건수	건수 비중	보증 금액	금액 비중
특 례 보 증	1등급	920~1000	20,308	19.9%	554,642	25.4%
	2등급	880~919	16,503	16.1%	432,614	19.8%
	3등급	840~879	11,597	11.3%	285,657	13.1%
	4등급	780~839	14,479	14.2%	306,630	14.1%
	5등급	745~779	14,347	14.0%	268,605	12.3%
	6등급	710~744	14,495	14.2%	210,156	9.6%
	7등급	595~709	8,465	8.3%	102,228	4.7%
	8등급	355~594	1,968	1.9%	19,436	0.9%
	9등급	350~354	44	0.0%	531	0.0%
	10등급	349 이하	7	0.0%	105	0.0%
	합계		102,213	99.9%	2,180,604	99.9%

자료: 인천신용보증재단 내부자료

〈그림 11-3〉 특례보증 건수와 금액 비교 및 비중(2013~2021.5)



□ 협약보증은 “신용 및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계층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증상품”으로 보증부 서민대출협약보증(햇살론), 시니어창업기업, 풍수해보험가입기업, 친환경녹색기업 등 협약보증이 있으며 2013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인천신용보증재단은 37,260건에 100조 6,523억원의 실적이 있음.

○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협약보증에서 10등급으로 분류하여 건수를 살펴보면 1등급~6등급까지 37,198건에 비중은 99.8%를 차지하고 있으며 1등급~3등급까지 고신용층의 경우 25,564건수에 68.6%를 차지하고 있고 4등급~6등급까지 중신용층의 경우 11,634건에 3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협약보증의 경우 7등급 이하의 저신용층은 62건에 0.2%를 차지하여 미미한 상태로 분석되었으며 협약보증의 경우 고신용층에 68.6%로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음.

○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협약보증의 금액을 보면 1등급~6등급까지 100조 5,131억원에 비중은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1등급~3등급까지 고신용층의 경우 75조 7,598억원에 75.3%를 차지하고 있고 4등급~6등급까지 중신용층의 경우 24조 7,533억원에 2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협약보증의 경우 7등급 이하의 저신용층은 금액은 1,392억원에 0.1%를 차지하여 미미한 상태로 분석되었으며 협약보증의 경우 고신용층에 보증된 금액은 75.3%로 매우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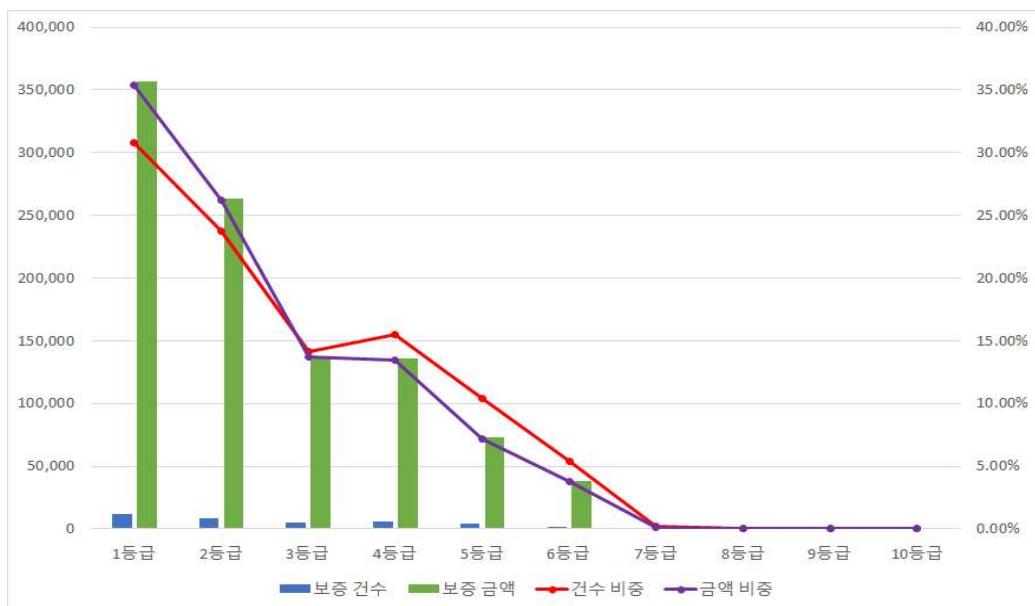
〈표 11-6〉 인천신보 협약보증 신용등급별 현황(2013~2021.5)

(단위 : 억원)

자금 구분	신용 등급	신용 접수	보증 건수	건수 비중	보증 금액	금액 비중
협 약 보 증	1등급	920~1000	11,468	30.8%	356,597	35.4%
	2등급	880~919	8,829	23.7%	263,374	26.2%
	3등급	840~879	5,267	14.1%	137,627	13.7%
	4등급	780~839	5,767	15.5%	136,269	13.5%
	5등급	745~779	3,859	10.4%	72,692	7.2%
	6등급	710~744	2,008	5.4%	38,572	3.8%
	7등급	595~709	56	0.2%	1,303	0.1%
	8등급	355~594	6	0.0%	89	0.0%
	9등급	350~354	-	0.0%	-	0.0%
	10등급	349 이하	-	0.0%	-	0.0%
	합계		37,260	100.0%	1,006,523	99.9%

자료: 인천신용보증재단 내부자료

〈그림 11-4〉 협약보증 건수와 금액 비교 및 비중(2013~2021.5)



3)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업무 요약

-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일반보증·특례보증·협약보증으로 나눈 3가지 보증상품을 통합하여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인천신용보증재단은 154,977건에 355조 7,556억원의 실적이 있었음.
-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상품 전체를 기존의 10등급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1등급~6등급까지 144,350건에 비중은 93.1%를 차지하고 있으며 1등급~3등급까지 고신용층의 경우 83,800건수에 54.1%를 차지하고 있고 4등급~6등급까지 중신용층의 경우 60,550건수에 3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보증상품 전체에서 7등급 이하의 저신용층은 10,627건에 6.9%로 분석되었으며 고신용층에 54.1%로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음.
-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금액을 보면 1등급~6등급까지 368,897억원에 비중은 96.5%를 차지하고 있으며 1등급~3등급까지 고신용층의 경우 229조 5,580억원에 64.6%를 차지하고 있고 4등급~6등급까지 중신용층의 경우 113조 6,750억원에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보증상품 전체에서 7등급 이하의 저신용층은 금액은 12조 5,226억원에 1.04%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용보증의 경우 고신용층에 보증된 금액은 64.6%로 매우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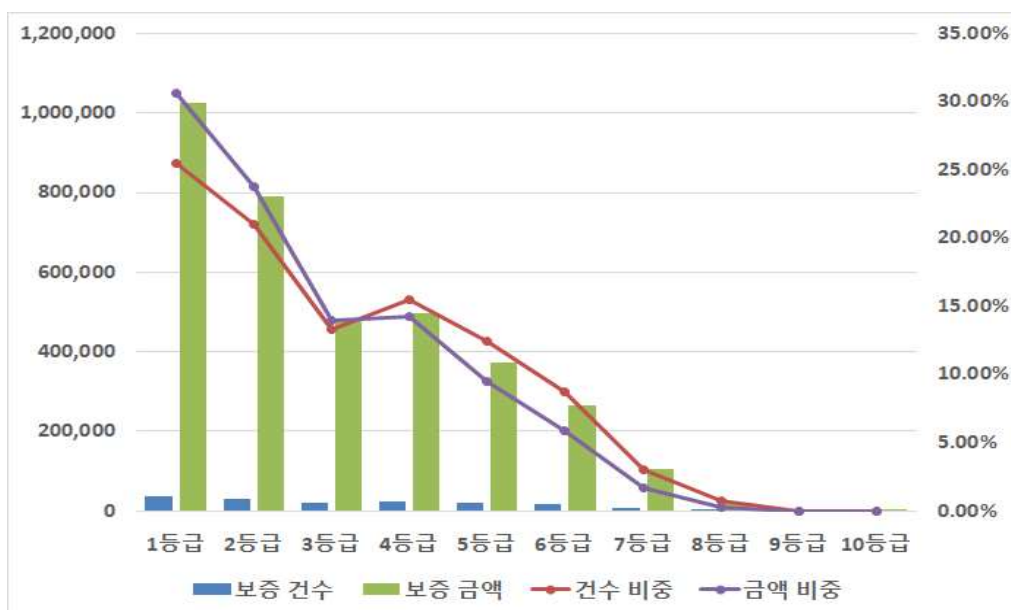
〈표 11-7〉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용등급별 현황(2013~2021.5)

(단위 : 억원)

자금 구분	신용 등급	신용 점수	보증 건수	건수 비중	보증 금액	금액 비중
보 증 전 체 현 황	1등급	920~1000	35,764	23.08%	1,025,774	28.83%
	2등급	880~919	28,925	18.66%	789,615	22.20%
	3등급	840~879	19,111	12.33%	480,191	13.50%
	4등급	780~839	22,843	14.74%	498,061	14.00%
	5등급	745~779	20,194	13.03%	374,065	10.51%
	6등급	710~744	17,513	11.30%	264,624	7.44%
	7등급	595~709	8,586	5.54%	104,832	2.95%
	8등급	355~594	1,979	1.28%	19,636	0.55%
	9등급	350~354	49	0.03%	587	0.02%
	10등급	349 이하	13	0.01%	171	0.00%
	합계		154,977	100.00%	3,557,556	100%

자료: 인천신용보증재단 내부자료

〈그림 11-5〉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용등급별 현황(2013~2021.5)



-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일반보증·특례보증·협약보증으로 나눈 3가지 보증상품을 통합하여 살펴보면 일반보증의 건수와 금액의 규모에서 보면 특례보증 > 협약보증 > 일반보증 순으로 나타남.
- 전체 건수는 154,977건에서 특례가 102,213건이고 협약이 37,260건, 일반이 15,504건으로 나타나고, 전체 금액은 355조 7,556억원에서 특례가 218조 604억원, 협약이 106조 6,523억원, 일반보증이 37조 429억으로 분류됨.
 - 비중으로 보면 건수는 특례가 65.95%, 협약이 24.04%, 일반이 10%로 나타났고 금액으로는 특례가 61.3%, 협약이 28.29%, 일반이 10.41%로 분석됨.
- 일반보증의 건수를 살펴보면 6등급 이상은 99.5%를 차지하고 7등급 이하의 저신용층 건수는 0.4%의 미미한 비중으로 나타났고, 1등급~3등급까지 고신용층에 6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일반보증의 금액을 분석해도 6등급 이상은 99.6%로 나타났고, 7등급 이하의 저신용층은 0.4% 미만의 비중으로 나타났고 고신용층으로 분류된 1~3등급이 무려 71.6%의 비중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특례보증의 건수를 살펴보면 6등급 이상은 89.7%를 차지하고 7등급 이하의 저신용층 건수는 10.3%를 차지하여 특례보증의 경우 일반보증과 협약보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례보증의 금액을 분석해도 6등급 이상은 94.4%로 나타났고, 7등급 이하의 저신용층은 5.6% 비중으로 나타나 건수에 비해 금액으로 비교하면 7등급 이하의 비중이 4.7% 줄었지만 일반보증과 협약보증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협약보증의 건수를 살펴보면 6등급 이상은 99.8%를 차지하고 7등급 이하의 저신용층 건수는 0.2%를 차지하여 미미한 비중으로 나타났고, 1등급~3등급까지 고신용층에 6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협약보증의 금액을 분석해도 6등급 이상은 99.9%로 나타났고, 7등급 이하의 저신용층은 0.1%를 차지하여 매우 미미한 비중으로 나타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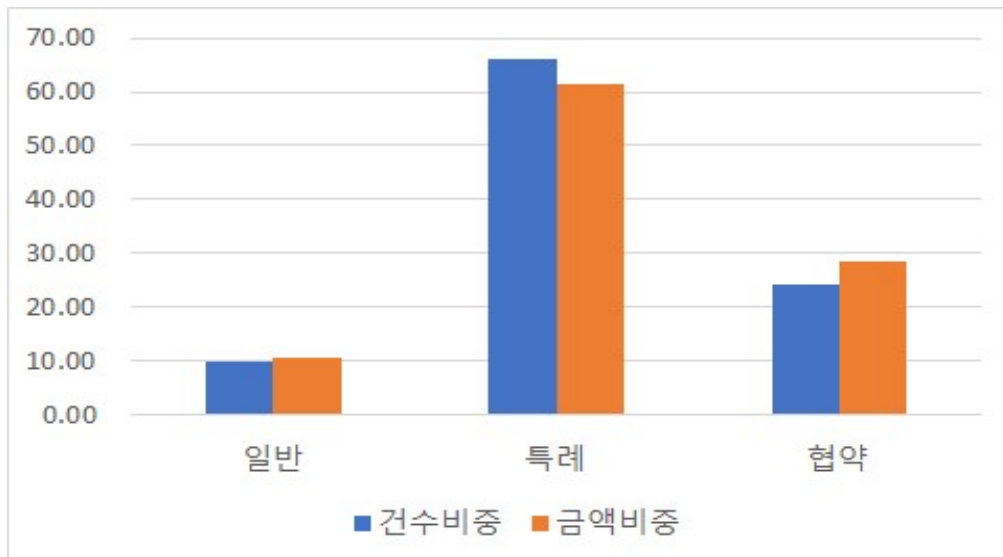
고 고신용층으로 분류된 1~3등급이 무려 75.3%의 비중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현황을 종합하면 1~6등급의 건수와 금액의 보증비중을 살펴보면 건수는 93.1%로 나타났고 금액은 96.5%로 나타나 공공보증기관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며 나아가 2020년 9월 말 기준 윤두현 ‘국민의 힘’ 의원실의 발표자료를 보면 1~4등급의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비중은(2016~2020년)의 평균은 81.4%로 나타남.

○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자료를 2013년부터 2021년 5월까지의 1~4등급의 대출 평균을 살펴보면 건수는 81.8%, 금액은 78.5%로 나타나 일반시중은행의 비중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공공기관보증기관이 일반시중은행과 다른 저신용자의 보증 의무를 통하여 신용보증재단의 역할과 위상이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림 11-6> 인천신용보증재단 일반·특례·협약보증의 비중비교



12. 해외사례 검토

1) 미국 사례

(1) 미국 CDFI(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① CDFI(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 CDFI는 ‘지역개발 금융기관’을 뜻하며, 지역커뮤니티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미국 내 민간 금융 중개조직의 총칭임¹⁹⁾.

○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은 매우 필수적 요소에 속함.

○ 그러나 대부분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자본 투자를 거부당함.

□ 미국의 경우, ‘CDFI FUND(이하 CDFI)’로 불리는 연방정부 기관을 설립, 지원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대해 지속적 투자함.

○ CDFI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CDFIs(CDFI 커뮤니티 회원조직, 50개 주 모두에 이들 CDFIs가 존재)의 지역 밀착형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을 사용함.

○ 또한 소규모 기업, 소규모 기업, 비영리 조직, 상업용 부동산 및 저렴한 주택을 포함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에서의 일자리를 창출함.

19) 양준호 (Jun-ho Yang). “미국 지역개발금융(Cdfi)에 관한 ‘개괄적’ 고찰- 지역 사회적금융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 지역개발연구 48, no. 2 (2016): 43.

○ CDFI 단체들(CDFIs)의 구성은 크게 4개의 부문으로 분류됨.

- 커뮤니티 개발 은행(Community Development Bank)
- 커뮤니티 개발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 for Community Development)
- 커뮤니티 개발 론펀드(Loan Fund for Community Development)
- 커뮤니티 개발 벤처캐피털(VC) 펀드(Venture Capital for Community Development)

○ 다음의 항목들은 CDFI FUND의 대표적인 사업들임.

② RRP(Rapid Response Program)²⁰⁾

□ 긴급 대응 지원금(RRP)는 2021년 제정된 통합세출법(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시행의 일환으로 미국 전역의 소외된 지역사회 개발 기관에 12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지급된 COVID-19 긴급 자금 자금을 말함.

○ COVID-19 대유행은 미국 내 정치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 개발을 더욱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함.

○ 미 재무부는 현금 보조금의 형태로 RRP 프로그램에 12억 5천만 달러 신규 투자하며 지역사회에 구제금융 제공함.

○ RRP 지원금은 CDFIs의 금융 서비스 및 제품 개발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됨.

○ 미 재무부에 따르면 총 5,460만 달러의 보조금을 수여받은 58개 기관은 미 원주민, 알래스카 원주민, 하와이 원주민 사회에 연계 투자에 예정에 있음.

20) CDFI FUND, <https://www.cdfifund.gov/programs-training/programs/rrp>, (21.07.16)

- 총 4,730만 달러의 보조금을 수여받은 28개 기관은 푸에르토리코에 주로 지역사회 개발사업을 추진했음.
- 그 외 총 1억 3,390만 달러의 보조금은 90여 개의 소수민족 CDFIs에 수여됨.
- 지원 기관에는 2년간의 사업 진행 기간이 주어지며, 진행 기간 동안 모든 지원금을 지출해야함.
- 자금 사용 및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가 요구되며, 보고서에는 RRP 지원금의 영향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최소 \$200,000 이상의 지원금을 받은 기관은 새로운 금융 상품을 구축해야 함.
- 2년의 사업 진행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수상자는 해당 시장(커뮤니티)에서 지원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 보유해야 함.
- 통합세출법으로 대표되는 제도적 지원이 두드러짐.
- 민간의 지역사회 개발 움직임에 제도적 뒷받침 제공함.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도 별도로 제공함.
- RRP 지원금으로 협동조합에 대해서만 4,500억 원 규모의 자금 공급함.
- 이 외에도, 긴급 지원금의 빠른 전달을 위해 지원금 신청 과정을 간소화하여 지원 기관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음.

③ CMF(Capital Magnet Fund)²¹⁾

- ☐ 빈곤층 대상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CDFI의 대표적인 공적기금임.
 - 미국 전역의 저소득 가정은 저렴한 주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급여의 절반 이상을 주 임대료로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됨.
 - CDFIs를 포함해 주택 공급 목적의 비영리 단체에 5년간 총 5억 6,5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수여해왔음.
 - 이 보조금은 지역사회 개발 사업, 지역사회 봉사시설 구축, 주택 공급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에 사용될 수 있음.
- ☐ 2020년 한 해 기준, 미국 내 50개 주 전역의 48개의 단체에 총 1억 7,535만 달러를 지원함.
 - 51,700 건의 주택 임대 및 4,500 건의 주택 소유를 창출함.
 - 주택 임대의 60%는 초저소득층에 우선 공급함.
 - 주택 소유의 90%는 저소득층에 우선 공급함.
 - 지역사회 봉사 사업체, 의료 및 기타 커뮤니티 시설 등 총 25개 시설의 완공 지원함.
- ☐ 앞서 소개한 RRP와 마찬가지로, CMF 역시 제도적인 뒷받침과 민간의 관심이 결합된 공적기금의 성격을 가짐.
 - 2008년 제정된 주택 및 경제 회복법(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에 기초해 설립된 기금임.

21) CDFI FUND, [https://www.cdfifund.gov/programs-training/programs/cmf\(21.06.29\)](https://www.cdfifund.gov/programs-training/programs/cmf(21.06.29))

- 이는 인내력있는 자본의 투입이 절실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프로젝트 대부분이 시민에 의해 기획되고 실행된다는 점에서 사업 자체의 방향성이 지역친화적이며 만족도가 높음.

④ NMTC Program(New Markets Tax Credit Program)²²⁾

□ CDFI의 연방세금공제 프로그램

- 저소득 지역사회 투자유치에 선순환을 불러 일으켜, 사회 서비스 설치가 미진한 저소득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을 가짐.
- 2000년 제정된 지역사회 갱신 및 세금감면법(Community Renewal and Tax Relief Act) 시행의 일환임.
- 2020년까지 총 16회에 걸친 선정 과정에서 CDFI FUND는 NMTC 프로그램을 통해 총 610억 달러, 1,254건 규모의 세액 공제를 지원함.

□ NMTC 프로그램의 특징

- ‘지역사회개발기업(CDE)’라 불리는 인증된 금융 중개기관에 자본투자(QEI)를 하는 투자자의 연방 소득세에 대해 신용대출 제공함.
 - 세액공제는 투자금액의 39%(누적비율)이며 7년에 걸쳐 지급함.
- 소득세에 대한 직접 대출이 아닌, 총 투자액에 따른 일정 비율을 토대로 저금리·장기 대출 제공함.
 - 연방 소득세 사실상 공제함.

²²⁾ CDFI FUND, <https://www.cdfifund.gov/programs-training/programs/new-markets-tax-credit> (21.08.31)

- CDE는 QEI로 발생한 투자 수익금을 사용하여 저소득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대출과 같은 ‘저소득 커뮤니티 투자’ (QLICI) 시행함.
- 기업은 NMTC 프로그램을 통해 유연하고 합리적인 금융 조달을, 연방 정부는 지출대비 높은 효율의 민간 투자 창출을 이끌어 냄.
- 연방정부가 1달러를 투자할 때 NMTC 프로그램을 통해 8달러 이상의 민간 투자를 창출하는 것으로 파악됨.
- 미국 내에서 가장 지역사회 투자가 시급한 곳의 투자를 활성화함.
-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NMTC 투자의 약 75%가 미국 내 저소득 지역사회에 투자됨.

⑤ BGP(Bond Guarantee Program)²³⁾

- CDFI가 운영하는 자체 채권 보증 프로그램을 뜻함.
- 연방 재무부로 하여금 연방 재정 은행(FFB)의 자금을 사용하여 CDFIs가 보유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짐.
- CDFIs에 장기자본의 형성과 투입을 목적을 두고 있음.
- 2010년 중소기업 일자리법(Small Business Jobs Act)제정을 통해 시행된 이후 2020년까지 총 17억 달러의 채권을 보증해 왔음.
- BGP의 특징
 - 채권 재판매로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제외한 모든 파생 이익에는 상환 의무가 없음.

23) CDFI FUND, [https://www.cdfifund.gov/programs-training/programs/cdfi-bond\(21.09.01\)](https://www.cdfifund.gov/programs-training/programs/cdfi-bond(21.09.01))

- 채권 발행에 따른 대출에 대해 최대 30년만기 100% 보증 제공함.
- 채권의 공인 발행자(CDFIs)는 정부 지원 채권을 연방 재정 은행(FFB)에 판매하고, 채권 수익금은 지역사회 개발 목적으로 CDFI 자금 공급에 사용됨.
- 채권 공인 발행자인 CDFI는 최소 1억 달러의 채권 발행 권한을 CDFI FUND에 신청할 수 있음.
- CDFI FUND는 연간 최대 10억 달러까지 이 채권에 대한 100%의 보증 제공함.

□ CDFI의 금융 ‘중개자’ 역할 극대화 가능

- 채권 공인 발행자 CDFI는 이 정부 보조 채권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사용하여 다른 CDFI로 신용을 확장하거나, 장기적인 지역사회 투자를 단행함.
- 채권 공인 발행자 CDFI는 기존 대출을 시장 이자율 이하로 다른 CDFI에 재융자 가능함.

(2) 미국 OFE(Office of the Financial Empowerment)²⁴⁾²⁵⁾²⁶⁾

- 재정적 역량 강화(Financial Empowerment)는 저소득층의 금융안정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빈곤 대책 접근법으로 최근 미국, 캐나다 등에서

24) NYC OFE 성과 레포트(NYC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Office of Financial Empowerment: Progress Report, 2010-2013), <https://www1.nyc.gov/site/dca/partners/research.page>

25) OFE 관련 보도내용 <https://www1.nyc.gov/site/dca/media/pr060721-DCWP-Launches-Paid-Safe-and-Sick-Leave-Campaign.page>

26) 재정적 역량 강화의 개념, Canada Prosper <https://prospercanada.org/getattachment/77fecc22-dff1-4a22-9d90-1f6746c9436b/Financial-Empowerment-Improving-Financial-Outcomes.aspx>

확산되는 개념임.

- 재정적 역량 강화는 저소득층의 재정적 자율권에 대한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고 그들의 재정적인 문제를 쉽게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금융 서비스 이용 방법과 행동을 습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미국 뉴욕의 OFE를 필두로 12개 주요 지자체 연합은 미국 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재정적 역량강화 운동의 일환으로 도시 전체의 확장 전략과 프로그램에 투자를 해오고 있음.

- 재정적 역량 강화부서(Office of the Financial Empowerment)는 2006년 뉴욕시 소비자문제부(DCA) 내에 설립된 부서를 칭함.

- 2006년 뉴욕시장 마이클 R. 블룸버그 정권 하, 미국 내 첫 재정적 역량 강화 부서(OFE)가 출범함.

- OFE의 설립목적

- 뉴욕의 저소득 시민들에 재정관리 방법을 교육함.

- 금융적 차원에서의 보호수단 제공함.

- 저소득층의 자산관리 및 축적 방안 모색함.

- OFE의 주요 업무는 4개의 재정적 역량 강화 전략으로 나뉘어짐.

- 재정관리 상담 및 교육

-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 자산 구축

○ 소비자 보호

□ OFE의 사업은 현장과 이론을 오가는 지속적인 연구와 파일럿 프로그램의 실험적 도입, 기술 지원 등에 뿌리를 두고 있음.

□ 대표적인 사업들은 다음과 같음.

○ NYC 직불금 (SAFE START)

- 뉴욕시의 급여관리국(OPA)와 협력하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당좌 예금 계좌를 개설함.
- 최소 잔액 요건, 월 수수료, 당좌대월금 모두 필요하지 않다는 경쟁력을 인정받아 이후 공무원 외 시민전체로 가입대상을 확대
- 급여 제공과 관련된 운영비용 절감 효과
- 직불금 파트너에게 금융 교육 워크숍, 재정적 역량 강화 센터 직통 연결 등의 혜택을 제공함.
- 현재 뉴욕시 공기관 전체, 민간 고용주 대다수가 NYC 직불금 파트너로 등록되어 있음.

○ NYC 선불카드

- 저소득층 대상 저렴하고 합리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선불카드 제작(2010)
- 저소득층 고객의 금융소외 일정부분 완화 효과
- 2014년을 기점으로 선불카드사업은 선별된 카드금융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조직, VITA(자원봉사 소득세 지원) 제공자, 고용주 및 다양한 금융 자산을 충족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핵심으로 자리매김.

□ 이 뿐 아니라, 자산 구축에 있어 납세과정에서의 도움, 맞춤 저축 상품 제공 등 금융소외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사업 진행함.

○ 납세과정 도움의 근본적인 전략은 저소득층 가구의 납세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무료화하고, 그들이 해당되는 모든 세금 공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

○ OFE의 무료 납세 서비스 연결은 시 전역의 VITA 프로그램과의 강력한 제휴를 통해 가능함.

○ 2010년부터 20곳의 VITA(Volunteer Income Tax Assistane)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연간 100개 가까운 사이트를 운영

○ 이 파트너들은 거의 8만 2천 건의 세금 공제를 이뤄냈고, 2013년 한 해 동안만 저소득 및 중간 소득의 가족들이 1억 2천만 달러에 가까운 세금 환납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제공함.

□ 금융소외를 겪고있던 저소득층을 주류 금융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다수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 및 구축에 모범적인 결과임.

○ OFE는 현재에도 이전과 같은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연구하며 비영리 기관 및 시 기관과 같은 주요 이해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 중임.

○ 가장 최근 발표된 분기보고서(the State of Workers' Rights in New York City, 2020)에서도 재정적 역량 강화 전략을 통합하고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등 기존의 역량 함양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음.

○ 또한 OFE는 자산 구축 전략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를 지원하고, 낮

은 리스크의 저축 메커니즘을 더욱 발전시키고, 저렴한 주거 및 노동 보호를 포함한 광범위한 경제 문제에 대해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내고 있음.

(2) 지역공공은행

① 미국 노스다코타 은행(Bank of North Dakota, BND)²⁷⁾²⁸⁾

☐ 노스다코타 주는 1919년 주립 공공은행으로서 노스다코타은행을 설립함.

○ 주민투표를 거쳐 주 예산 200만 달러를 기초 자본으로 공급함.

○ 그 후 100년간 노스다코타 주민만을 위한 공공사업에 재원 제공함.

☐ BND는 연방 준비 은행(Fed)에 소속되어 있지만, 연방 예금 보험 공사(FDIC)에는 소속되어 있지 않음.

○ 자금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됨.

☐ 주립은행으로써 모든 예금은 노스다코타 주정부에 의해 보장됨.

○ 은행 직원 채용에 주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등, 주 정부가 은행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

○ 노스다코타 주민을 위한 금융조달에 더욱 용이함.

☐ BND의 특징은 운영방식과 수익구조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음.

○ 지역경제 재투자를 유도하는 운영방식임.

27) Bank of North Dakota(2019). Annual Report 2009~2019

28) Bank of North Dakota(2019).BND FAQ.

- 민간 상업은행 대신 BND를 통해 납세할 경우 세제혜택 부여
- 주민 뿐 아니라 지역 내 산업들 또한 마찬가지
- 대출 마진 등의 이익을 주정부 주도의 사회기반시설 설립에 기금의 형식으로 투입하며 공공부문의 지원을 제공함

○ 은행의 수익은 주 의회 산하의 일반 기금에 상시 조달되는 구조임.

- 일반 기금 조달 후 임무주도대출(Mission-driven loan)의 자본으로 사용됨.

○ BND의 수익 일부는 자사의 대출프로그램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고객이 직접 이용할 수 있고, 그 외의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기반의 타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용 가능함.

□ 노스다코타은행은 4개의 사업 영역을 구축하고 있음.

○ 학생 대출

- 1967년 정식 출범 이후, 고품격 금융 서비스, 대학 졸업 후에도 제공되는 재용자 서비스임.
- 다양한 대출 옵션 등을 바탕으로 학생들로부터 신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은행은 대출자 개인과 학부모, 대학과 협력해 대출금의 상환,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통합지원하고 있음.

○ 비즈니스 대출

- BND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 후로 지속적으로 대출 사업을 확장시켜

왔고, 매년 일정 수준의 신규 사업 창출 및 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지원을 유지해왔음.

- 노스다코타 주의 농업 기반 수익창출의 특징을 고려해 소농에서 대농까지 다양한 대출 상품을 제공함.
- 대표적으로 농산물 수출증대 프로그램(Ag Commodity Export Enhancement Program), 비전통적 농업 관련 대출 프로그램(Ag PACE), 비 숙련자 농부 대상 대출 프로그램(Beginning Farmer Chattel Loan), 비 숙련자 농부 대상 부동산 대출 프로그램(Beginning Farmer Real Estate Loan), 바이오연료 관련 대출 프로그램(Biofuels PACE Program) 등등을 제공하고 있음.

○ 재정관리 지원

- 노스다코타 은행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재정관리가 지역사회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판단 하에, 다양한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재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그 외 신용지원 서비스

- BND는 대리 은행 서비스(Correspondent Banking Service)를 통해서, 자동어음교환(ACH) 서비스, 수표교환(Check Clearing) 서비스, 연방준비은행 프로그램, 송금서비스 등을 제공함.

□ BND의 경쟁력과 그 원천

- BND는 초기 설립자본금 2백만 달러에서 시작해 현재 3억 달러에 육박하는 자금을 보유한 은행으로 성장함.
- 일반 상업은행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2019년 기준, BND의 순이익은 169백만 달러로, 16년 연속 수익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음.
 - BND의 수익은 최근 9년간 (2010년 대비) 173%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전년대비 약 6%의 성장률을 보였음.
 - 또한 BND의 자산은 2010년 4,029백만 달러를 기록, 최근 9년간 (2010년 대비) BND의 자산규모는 약 75% 성장함.
- 이러한 성장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 사회간접자본 구축 재원을 공급했다는 점에서 기인함.
- 노스다코타은행은 경제개발 지원과 더불어 1997년 그랜드포크 홍수, 2011년 미노트와 비스마르크 홍수, 그리고 기상재해와 관련한 농업 구호자금 대출 등을 2019년에 지원함.
 - 금융위기 당시, 노스다코타 주는 타 지역으로의 자본유출에 의한 지역 경기 침체 우려에도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으며, 낮은 실업률과 주택차압비율을 보였고 금융위기 기간 부실 금융기관의 발생이 없었음.
- 공급 과정에서 과도한 부채나 세금 부담, 환경 피해 최소화한 점도 경쟁력의 원천으로 평가받음.
- BND의 소매 및 운영은 노스다코타 지역 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대리은행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루어짐²⁹⁾.
 - 이를 통해 은행은 거래과정에서의 안정성을 담보 받고, 거래비용 대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자금의 가용성을 충족할 수 있게 됨.

29) 민병길(2015), “경기도 도민은행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해외 사례 연구“, 경기연구원

- ND의 은행 재무상태 또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높은 신용등급 또한 유지하고 있음.
-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20년 11월 9일 발표한 연례 검토에서 노스다코타 은행(BND)의 신용등급을 장단기 신용등급에 대해 각각 A+와 A-1으로 확인한 바 있음.
- 지역 내 소작농과 소상공인 모두를 포괄한 주민들의 열성적인지지 또한 경쟁력의 원천으로 평가받음.
- 고객과의 신뢰를 중요시 하는 사업 태도가 큰 요인으로 작용함.

② 캐나다의 ATB 파이낸셜³⁰⁾

- 캐나다 앨버타 주의 재무부는 ATB 파이낸셜이라는 법인명을 가진 총 500억 달러 규모의 예금취급기관으로, 사실상 법적 공인 은행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00년 제정된 앨버타 주 재무부 법(Revised Statutes of Alberta)에 의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앨버타 주 자산을 지원받고, 주 정부의 세무감독을 받는 공공은행임.
- 소매 및 상업 बैं킹, 신용카드, 디지털 बैं킹, 자산 관리 및 투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앨버타 지역의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의 역할을 하고 있음.
- ATB는 2021년 현재 북미 최대의 지자체 주도의 공공금융이며, 같은 성격의 공공금융인 BND보다 자산규모가 약 7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018년 보고서 기준, 용자는 432억 달러, 예금부채는 335억 달러, 이익잉여금은 34억 달러의 재정여력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18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관리하고 있음.

30) ALBERTA'S PUBLIC BANK, "HOW ATB CAN HELP SHAPE THE NEW ECONOMY", August 2018.

○ 75만 명에 이르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음.

- 이는 앨버타 주 인구의 약 20%에 달함.

○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공공은행인 BND, 앨버타 최대 신용 조합인 Servus와 비교해 보았을 때, 대출액과 운영비용 대비 충당금 손실 비율, 대출액 대비 운영 비율에서 효율적으로 지출 관리를 하고 있음이 드러남.

□ ATB는 앨버타 주 정부의 소유이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 법인세 면제 혜택을 가짐.

○ 타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이 감소해 지역사회 재투자자를 위한 지출에만 집중할 수 있음.

□ 주 정부의 세무감독을 받는 공공은행으로써, 가계, 농업, 기업, 타 정부(지방 정부)와 앨버타 주 정부 본인에게도 더욱 저금리로 대출을 발행할 수 있음.

○ 이는 기존의 상업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금리수준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기업 대출, 농장 대출,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심지어 현재 금융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국채 또는 부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③ 미국의 D.C 그린뱅크(DCGB)³¹⁾³²⁾

□ 2018년 워싱턴 D.C 컬럼비아 시의회 주도로 D.C Green Bank 설립함.

○ 함께 제정된 녹색금융청 설립법(Green Finance Authority

31) DC Green Bank 홈페이지, <https://dcgreenbank.com/>(21.09.04)

32) DC Green Bank, *Annual Report*(2020)

Establishment Act)에 의해 법적 효력을 가짐.

○ DCGB의 초기 설립자본이 D.C 주정부에 의해 조달되었던 점, 사용을 허가받은 점에서 일종의 ‘공공투자은행’의 형태를 가짐.

- 일반적인 당좌예금, 저축계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DC 그린뱅크의 초점은 지속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충분한 투자를 하는 것에 있음.

□ DCGB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함.

○ 에너지 효율 개선, 청정에너지 설비 설치, 그린 인프라 구축 등에 관심이 있는 지역시민, 소상공인, 개발자 등에 직접 자금 조달함.

○ 민간투자를 동원해 갭 금융(Gap financing) 제공, 초기비용 부담 경감, 탄소중립성, 기후탄력성, 포용적 경제성장에 대한 공공투자의 영향 극대화 등을 추진함.

○ 또한 금융 격차를 해소하고 초기 사업 비용 부담 경감 시스템 도입함.

○ 지속가능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공정 분배함.

□ DCGB는 자본조달자, 대출제공자, 구조화된 대부업자, 재무정책 참여자, 재정능력 협력자 등 다양한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음.

○ 태양광 발전 시스템, 건물 에너지 효율화, 재난 피해 복원 프로젝트 등에 집중해왔음.

○ 투자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몇 가지의 사업(Tools)으로 분류함.

- 현재는 추가적인 혁신 청정 에너지 및 효율 증대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DC 그린뱅크만의 프로그램(RFP)을 통해 투자 제안 및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음.

□ 대표적인 사업들(Tools)

- CLEER(Commercial Loan for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s)

- 에너지 및 자원 소비를 줄이는 사업기반 업그레이드를 도움줌.
- 건물 소유주와 녹색사업자 임차인의 자금조달 문제의 해결책으로 자주 쓰임.
- 다양한 현금흐름 모델을 학습하도록 하여 대출 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참여 대출기관의 청정에너지 포트폴리오 및 파이프라인 개발을 촉진함.
- CLEER는 신규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주로 개보수, 개보수, 증축 등에 더욱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는 위의 프로젝트들이 비교적 기존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들이라는 점에서 기인함.

- D.C PACE(Property Assessed Clean Energy)

- 민간 대부업체가 건축물 개량 및 고성능 건축물의 신축 등에 자금을 조달한 뒤, 시의 자산평가를 통해 대출 상환을 받도록 하는 자금조달 매커니즘임.
- DC PACE는 DOEE와 도시공학 학계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된 자금조달 상품임.

- 2008년부터 이 프로그램은 36개 주에서 에너지 효율 및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에 8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부동산 소유주들이 초기 자본 수요를 제한하게 하여 녹색 건축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2015년부터 DC PACE는 거의 4,5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며 큰 성공을 거두고 있음.

○ OPEN SOLICITATION

- 민간 자본 제공자, 개발자, 계약자 및 녹색사업가를 초청한 협의체임.
- 이러한 거래는 금융시장의 격차와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청정에너지, 청정교통, 청정수, 빗물관리, 에너지효율, 수질 효율 및 또는 구의 녹색인프라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조건을 가짐.

2) 독일 사례

(1) 독일 기센 저축은행³³⁾³⁴⁾³⁵⁾

□ 기센 저축은행은 독일 헤센(Hessen)주의 중소도시 기센(Giessen)을 주 거래 지역으로 삼는 저축은행임.

○ 1834년 헤센시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 은행의 모습으로 시작하여 1840년 정식 출범을 거쳐 1841년 영업을 시작해 약 180여년간 독일의 건실한 저축은행으로 자리잡음.

□ 현재 자산규모는 약 3조원, 자기자본은 3,750억원, 예금 2.4조원, 대출 2조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직원 수 550명, 지점 수는 45개에 달하는 독일의 대표적인 저축은행임.

○ 기센 저축은행은 기센의 지역경제와 주민의 금융수요 충족이라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지역경제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이들은 외국 지사나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으며, 이러한 지역경제 중심의 임무 수행으로 인해 그간 발생했던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도 지역의 중소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했음.

□ 저축은행으로써 모든 종류의 은행 서비스를 제공함.

□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자금을 안정적으로 융통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며, 경영 자문 및 컨설팅에도 중점을 두고 있음.

33) 강다연(2020), 지역균형발전(금융산업)을 위한 지방은행 경쟁력강화방안, 금융경제연구소

34) 조병선(2014), 독일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은행권역별 관계금융 사례,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연구

35) 기센홈페이지, <https://www.sparkasse-giessen.de/de/home/service/online-mobile-banking.html>, (21.09.30)

○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컨설팅으로 유명함.

- 일반적으로 3 회의 걸친 미팅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함.

- 각 미팅의 내용과 목적은 서로 배타적인 성격을 가짐.

- 1단계 '기본 사전 미팅'(Voreingestellte Vorbesprechungen)에서는
고객의 경영상태, 필요사항, 목표, 재무상태 등의 종합적인 의견
교환을 나눔.

- 이 단계를 통해서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내용과 함께 기업가 개인
의 문제들에 대해 파악하는 의미가 있음.

- 2단계 '후속 자문 미팅'(Folgeberatungssitzung)에서는 1단계 미팅을
통해 도출된 고객수요에 맞춰진 전담 미팅을 수행함.

-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의 연계 미팅 및 자문을 실시함.

- 3단계 '연례 평가 미팅'(Jährliche Evaluierungssitzung)을 통해 주로
경영 전반에 대한 전략을 협의하고 자문하는 전략미팅 형태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기센 저축은행은 지방정부와 시 지자체들이 공동 소유하고 있음.

○ '지역주의 우선원칙'에 따라 은행이 소재한 기센시의 경제를 중시
하는 경영적 결정을 내림.

□ 기센 저축은행은 거래 과정 속에서 발생한 수익을 모두 주주에게 배당
하는 것이 아닌,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재투자함.

○ 순수자기자본 비율이 일반 상업금융기관에 비해 크게 높은 12.5%를
이루고 있어 건실한 재무구조로 평가받음.

- 바젤협약 자본적정성비율에 근거한 Tier 1자본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무디스로부터 신용평점 Aa2를 부여받는 등, 일반 금융권과의 재무력 평가에서도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기센 저축은행은 대형 일반상업은행인 도이치뱅크, 코메르츠뱅크, 체신뱅크, 외국 자본 기반의 은행인 산탄데르 등의 은행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 경쟁력을 가짐.
- 앞선 언급한 전문적인 컨설팅 과정을 통해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장기적인 관계를 더 깊게 형성해 왔으며, 그 결과 일반 상업은행과 비교해도 전혀 경쟁력이 밀리지 않는 현 상황을 이끌어냄.
- 또한 기센 저축은행은 거래 고객과의 상시적 미팅을 통한 정보교환, 담당자의 주기적 업체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의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부분이 경쟁력의 원천으로 평가됨.
- 거래 기업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인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따라 유연한 대응을 표방한다는 점도 기센 저축은행의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음.

3) 일본 사례

(1) 일본의 코로나19 관련 대응 긴급지원 대책의 내용

- ☐ 일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금융 및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 구체적으로는 신용보증 지원,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대출조건 완화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기업을 지원해 오고 있음.
 - 재해 등 외부요인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의 대출금액을 각각 100%, 80% 보장해주는 안전망(Safety Net) 대출을 확충하고(2.8억 엔 한도), 대상 업종을 확대
- ☐ 소규모 사업자·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업종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무이자·무담보 대출을 지원하는 ‘특별대출’, 음식점, 카페, 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한 ‘위생환경 특별대출제도’ 등 대출 지원제도를 도입
- ☐ 또한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휴직자의 휴업수당 일부를 지원해주는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함.
- ☐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고용조정보조금’ 특례조치를 활용해 기업의 휴업수당(중소기업 2/3, 대기업 1/2)을 지원하고, 지급요건도 완화함.
- ☐ 나아가 일본 정부는 소득 직접지원 정책으로서 자녀양육 세대에 아동수당을 확대해 지급하고 있음.
- ☐ 기존 1인당 월 1만~1만 5,000엔의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에 자녀 1인당 1만 엔을 추가로 지급함.

<표 12-1> 일본 정부의 금융 및 재정지원 내용

지원책	개요
정부계 금융기관에 따른 특별융자, 이자 보급(실질적인 무이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요건: 매출액 5% 이상 감소 - 적용금리: 기준 금리에서 0.9% 인하(3년간) - 중소기업은 매출액 20% 감소, 소규모 기업은 매출액 15% 감소로 실질적 무이자화 - 거치기간: 5년 이내 - 기존 채무의 차환(借換)에도 적용 가능
민간금융기관에 따른 신용보증 대출 (위기 관련 보증), 보증료·이자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전 업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통상의 안전보증(Safety Net)과는 별도임. - 위기 관련 보증의 기본 틀(무담보 8,000만엔, 최대 2.8억엔, 100% 보증) 설정 - 대상요건: 매출액 15% 이상 감소 - 신규 차입 시 보증료 및 이자 감면 - 매출액 15% 이상 감소의 경우 전액면제, 매출액 5~15% 감소의 경우 보증료 반제
일본정책금융공고, 상공조합중앙금고에 따른 자본성 자금 활용 (자본성 열후론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J-Start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중소기업가 출자하는 펀드에서 출자받는 기업 2)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²가 관여하는 사업재생을 행하는 기업 3) 사업계획서를 책정, 민간금융기관에 따른 지원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기업 - 대출한도: 최대 7.2억엔 - 대출기한: 5년 1개월, 10년, 20년(기한 내 일괄 상환) - 금리: 당초 3년간 0.50%, 4년째 이후 흑자 → 2.60~2.95%, 적자 → 0.50%
사업 지속화 급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5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은 최대 200만엔, 개인사업자는 최대 100만엔 지급
집세 지원 급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5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집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은 최대 600만엔, 개인사업자는 최대 300만엔 일괄 지급

주) 1. 열후론은 변제 순위가 다른 채권보다 낮은 무담보의 대출을 말함.

(2) 일본은행의 기업 자금유통 지원책

□ 한편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도 일본 정부와 상호 연계하면서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음.

○ 기업 금융지원 대책으로는 ① 기업어음(CP)·사채 등 매입 증액, ②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특별오퍼레이션³⁶⁾의 확충³⁶⁾, ③ 무이자·무담보융자 등 자금유통 지원을 적격융자로 하는 ‘새로운 자금공급수단’ 도입 등이 있음. 이 같은 기업의 자금유통 완화를 통해 ① 기업 도산의 방지 및 고용 유지, ② 사업 회복 및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의 파급효과가 기대됨.

<표 12-2> 일본은행의 기업 자금유통 지원 내용

지원책	개요
기업어음(CP), 사채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어음(CP), 사채 등의 추가 매입 대폭 확대 - 코로나19 위기 이전: 약 5조엔 (CP: 2.2조엔, 회사채: 3.2조엔) - 2조엔 추가 (2020년 3월) → 20조엔을 상한으로 매입 실시 (2020년 4월) - 발행사별 매입 가능 한도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사별 매입 금액을 기존 1,000억엔 → CP: 5,000억엔 / 회사채 3,000억엔 ☞ 발행사별 발행 잔고에서 일본은행의 보유비율 상한: 25% → CP: 50% / 회사채: 30% ☞ 매입 대상이 되는 사채 등의 만기 연장: 1년 이상 3년 이하 → 1년 이상 5년 이하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특별 오퍼레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채무를 담보로 금리 0%로 최장 1년 동안 자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오퍼레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3월 도입 시 민간기업 채무를 담보로 한 것을 대상으로 확대 - 본 오퍼레이션의 이용잔고에 상당한 당좌예금에 대해 +0.1% 이자율 적용
새로운 자금공급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융자(간접경제대책에 있어서 무이자·무담보융자, 신용보증협회의 보증 인증을 받아 실행한 융자,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대상의 프로파 대출 등) 잔고를 한도로 일본은행에 차입되어 있는 공통담보를 담보로 하여 기간 1년 이내, 제로금리로 자금공급을 실시 - 이용잔고의 2배 금액을 ‘매크로 가산잔고¹⁾’에 가산 - 이용잔고에 상당한 당좌예금에 대해 +0.1% 이자율 적용

주) 1. 매크로 가산잔액(Macro Add-on Balance)에는 일본은행의 대출 지원프로그램 및 동일본대지진(2011년 3월) 관련 대출실적 등이 포함되며, 일본은행의 예치금 확대를 감안해 정기적인 조정(비중 확대)에 있어서 제로금리를 적용함.

36) 일본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해 기업어음(CP) 및 사채 등의 민간기업 채무를 담보로 정책금리 평균치(0.1%)로 기간 3개월의 자금을 무제한으로 빌려주는 것임.

(3) 금융기능의 강화

□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자본참가제도인 ‘금융기능강화법’ 개정을 추진함.

○ 개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정부의 공적자금 신청기한을 2021년 말에서 2025년 말로 4년간 연장하고, ②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타격을 받은 금융기관이 정부의 자본참여를 받고자 한 경우 경영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수익성, 효율성 향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등 특례를 마련하였음. 2020년 2차 추경예산에서 금융기관에 의한 자금유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적자금액을 12조엔에서 15조엔으로 확대함.

〈표 12-3〉 일본의 ‘금융기능강화법’ 개정경위

개정 연도	주요 내용
2004년	- 건정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자본조달이 용이하지 못한 금융기관에 대해 선제적인 예방조치로서 '금융기능강화법' 개정을 추진 ·지역에서의 원활한 금융중개 기능 확대가 목적임(2008년 3월까지 시한 조치)
2008년	- 2008년 리먼쇼크 이후 공적자금 신청 기한을 2012년 3월말까지 연장 ·경영에 대한 책임추궁이나 심사요건에 관한 조건을 완화
2009년	-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피해지역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특례조치 실시 ·재해특례(경영책임을 묻지 않음, 구체적인 수치 목표의 기재 면제 등)를 신설함과 동시에 공적자금 신청 기한을 2017년 3월말까지 연장
2010년	- 2016년 공적자금 신청 기한을 2022년 3월말까지 재연장(재해특례 제외)
2011년	- 2016년 공적자금 신청 기한을 2022년 4월말까지 재연장(재해특례 제외)
2020년	- 금융기관에 의한 자금유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능강화법' 개정 추진 ·코로나19 관련 특례 신설(재해특례의 응용) ☞ 정부의 공적자금 신청 기한을 4년간 연장(2021년말 → 2025년말)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타격을 받은 금융기관이 정부의 자본참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경영책임을 묻지 않음과 동시에 수익성이나 효율성 등의 향상 전망에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등의 특례를 마련 ☞ 정부의 공적자금액 확대(12조엔 → 15조엔)

(4) 일본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가) 중소기업 지원책

- ☐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금융 및 세제 측면, 직간접 지원으로 나눌 수 있음. 일본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 두텁다고 할 수 있음.
- ☐ 금융 측면의 지원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것으로, 정부계 금융기관(일본정책금융공고, 상공조합중앙금고)의 직접대출(장기·저리·고정금리 융자), 지자체의 제도융자³⁷⁾, 민간금융기관의 신용대출 유도(신용보증협회의 신용보증), 민간금융기관의 중소기업융융자 촉진책 등이 있음. 또한 벤처캐피탈 지원, 펀드 조성 지원 등도 있음.
- ☐ 세제 측면의 지원은 세금을 경감해 주는 것으로, 법인세의 경감, 결손금 이월 및 이월 환급, 중소기업 투자촉진 세제, 정보기반 강화 세제, 인재 투자촉진 세제, 사업승계 세제 등 매우 광범위함.
- ☐ 직접 지원은 중소기업에게 각종 보조금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기술개발 지원, 기반기술의 육성 지원, 경영혁신 지원, 고용·인재개발 지원(중소기업 인재육성 기관인 중소기업대학교 연수 등), 창업·벤처기업 지원, 보육시설의 정비와 이용 촉진, 기업 간 연계 촉진, 농상공 연계 촉진, 공제제도(연쇄도산 방지, 소규모사업자의 퇴직공제금 등) 등이 있음. 반면에 간접 지원은 다양한 공적기관에서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행하는 것으로,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공회의소의 지원 활동이 그것임.

37) 제도융자란, 일본 정부의 긴급경제대책에 따른 무이자·무담보 대출 및 코로나19 대응으로 신용보증협회의 보증을 받아 실행하는 대출을 말함.

나)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① 정책금융기관의 직접융자

- 정부계 금융기관의 지원방식은 크게 일반대출과 특별대출로 대별됨. 여기서 일반대출은 중소기업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며, 특별대출은 정부의 정책 목표에 맞춰 업종·금리·대출기한·담보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설정한 융자제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민간대출로는 대응이 어려운 분야(리스크가 높은 분야)에 지원함으로써 민간대출의 유도 효과 내지 마중물로서의 역할이 기대됨.
- 직접 대출(신용대출)의 경우 저금리로 설정하여 민간 대출 금리보다 낮으므로 민간과의 금리차 만큼을 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됨. 또한 장기 고정금리가 설정되어 대출기간 내 금리부담이 동 기간 중 민간대출의 금리부담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보조금 효과가 됨. 게다가 민간 대출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장기 고정금리·저금리 대출은 대출금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가용성이 높음.
- 일본정책금융공고(Japan Finance Corporation, JFC)³⁸⁾의 융자 규모는 2020년 10월 기준 15.5조 엔이었으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대출 잔액은 5.2조 엔 규모로 나타남.

〈표 12-4〉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주요 사업 및 대출잔액

구분	주요 사업내용	대출잔액
국민생활사업본부	- 개인, 영세기업 대상 소액 대출, 안전망 대출 - 창업 지원 및 지역활성화 지원, 학자금 대출, 연금담보대출 등	7.1
농림수산업본부	- 농림수산업자 및 식품산업 영위자 대상 대출, 안전망 대출 - 컨설팅 및 기업연계 서비스 제공	3.2
중소기업사업본부	-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저리대출, 안전망 대출 - 중소기업 혁신, 해외진출, 기업회생 등 지원 - 신용보증협회의 중소기업 채무보증에 대한 재보증	5.2

38) 일본정책금융공고(JFC)는 일본 정부가 전액 출자한 정책금융기관으로, 중소기업 지원·신용보증·자산 유동화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

② 신용보완제도의 활용

- 신용보완제도란, 민간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신용을 보증해주는 제도임.
- 일본의 경우 지자체 중심의 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신용보증과 신용보험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신용보완제도’를 운용 중임.
 - 1937년 도쿄 신용보증협회 설립을 계기로 2020년 10월 현재 51개의 지역 신용보증협회³⁹⁾가 운영되고 있음.
 - 신용보완제도의 주체는 중소기업, 금융기관, 지역 신용보증협회, 일본정책금융공고, 지자체, 정부로 구성됨.
 - 중소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지역 신용보증협회에 보증 신청하면, 지역 신용보증협회는 자체 심사를 통해 80~100% 보증비율의 보증서를 발급함.
 - 중소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지역 신용보증협회는 금융기관에 대위 변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회수활동을 전개함.
- 특히 신용보완제도는 민간 대출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는 것으로, 민간 대출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로 대출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민간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기대됨(지자체의 제도융자 등에서도 신용보증협회의 신용보증이 가능함). 반면에 신용위험의 대부분을 신용보증협회라는 공적기관에 전가함으로써 민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가 약화될 우려가 있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이러한 신용보완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금융기관인 일본정책금융공고가 지역 신용보증협회의 신용보증을 재보증하는 신용보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임.

39) 신용보증협회는 신용보증협회법(1953년 8월 10일 법률 제196호)에 근거해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의 금융 원활화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할 때 신용보증협회가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함.

③ 펀드 등을 통한 지원

(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REVIC)

□ REVIC(Regional Economy Vitalization Corporation of Japan)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재정기반이 일시적으로 악화한 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사업재생의 틀을 활용한 지원 및 지역금융기관과 연계한 펀드를 조성해 자본성 자금을 공급하고 있음.

○ 2013년 3월 중소기업의 실질적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⁴¹⁾가 발족하였음. 또한 본 기구는 다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단체(중소기업 재생지원 협의회, 중소기업 지원네트워크)와 연계하여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컨설팅, 실무자와의 네트워킹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음.

○ REVIC의 지원방식은 사업재생펀드와 지역재생펀드의 두 가지이며, 개별 중소기업의 사업재생을 지원하는 펀드와 지역이나 복수의 기업을 하나로 병합해 지원하는 펀드를 각각 운영하고 있음.

- 사업재생펀드는 일본 전국에 20개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지역재생펀드는 47개 지자체에 각각 하나씩 설치해 운영 중이며, 지역재생펀드는 예를 들어 온천지역의 여행, 레저, 온천시설 등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경우임.

○ 이 같은 REVIC에 의한 지원 및 출자 결정기한은 2021년 말까지였지만, 작년 6월 법 개정을 통해 지원 및 출자 결정기한과 업무완료 기한을 각각 5년간 연장했음. 또한 제2차 보정예산(2020년 6월)에서 REVIC은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할 때 정부의 보증범위를 1조 엔에서 2조 엔으로 확대하고, 전체 2.5조엔의 사업규모로 편성하였음.

41) 기존 ‘기업재생지원기구’를 새롭게 개편하여 출범한 기구로, 중소기업의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중소기업 금융원활화법’의 종료 후 중소기업 지원에 전념하고 있음.

(나) 산업혁신투자기구(JIC)

- 일본 최대의 민관펀드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는 2009년에 설립된 산업혁신기구에서 개편되어 2018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오픈이노베이션에 의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적펀드를 통해 자사의 경영자원 외의 자원을 활용하여 높은 생산성이 기대되는 사업과 신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자에 대해 출자를 지원하고 있음.
-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민간만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분야(바이오, 우주기술, 소재 등)나 장기 투자가 필요한 벤처기업 투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의 투자 등 리스크 머니 공급이 밀리지 않도록 제2차 보정예산(2020년 6월)에서 정부의 보증범위를 1.5조 엔으로 확대하고, 전체 2.8조 엔 규모로 편성하였음.

(다)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SMRJ)

-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Organization for Small & Medium Enterprises and Regional Innovation, JAPAN)는 민관협력 펀드 조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제2차 보정예산(2020년 6월)에서 약 600억 엔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기금을 창설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지역의 핵심 사업자가 도산·폐업하지 않도록 출자·경영개선 등을 통해 사업의 재생과 그 후의 기업 가치 향상을 지원하는 등 기업성장을 전폭 지원해 오고 있음.
-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한 ‘중소기업 재생펀드’는 기존 18개 펀드에 더해 공백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펀드를 조성하고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중소기업의 재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권 매입이나 출자 등을 통해 재무상황이나 경영개선까지 지원해 오고 있음.

(라) 정책투자은행 등에 의한 중소기업의 위기대응 지원

- ☐ 2020년 5월부터 은행이나 신용금고 등 민간 금융기관에 따른 실질 무이자·무담보 용자가 전국적으로 전개됨.
- ☐ 조건을 충족한 사업자라면 3년간 대출금액 3,000만 엔까지 실질적인 무이자에 보증인이나 담보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음. 이 대출은 주로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용자’의 틀이 활용됨.
- ☐ 이 대출의 특징은 당초 3년간 실질적 무이자로 신용보증료가 반액 또는 전액 면제됨과 동시에 거치기간을 최대 5년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점임. 또한 신용보증 대출을 이미 이용 중인 경우에도 동 제도에 의한 실질 무이자 용자로 재용자가 가능한 점도 큰 특징임.

<표 12-5> 실질 무이자, 무담보 금융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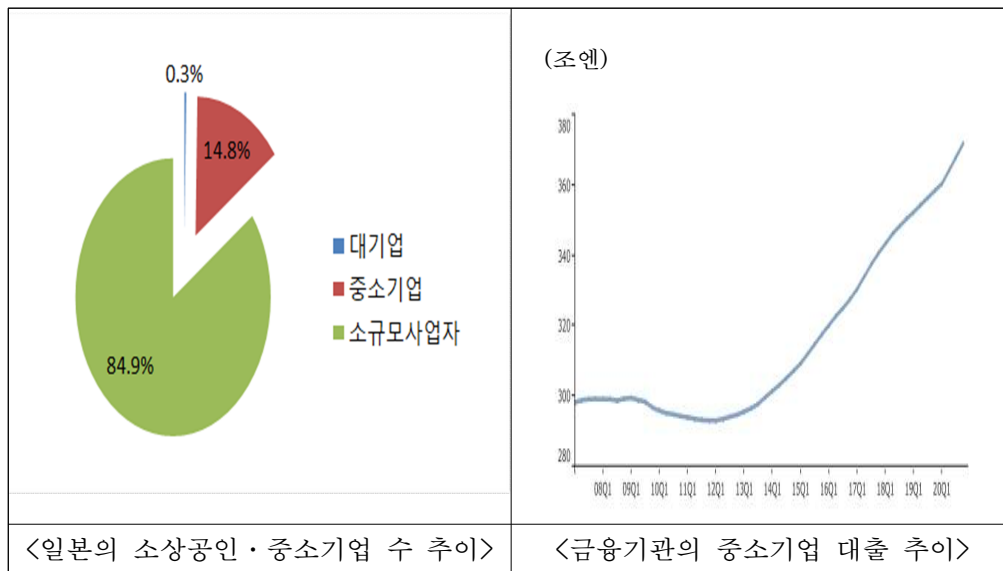
구분	정부계 금융기관			민간금융기관 (신용보증)
	일본정책금융공고 (중소)	상공조합중앙금고	일본정책금융공고 (국민)	
요건	매출액 전년 대비 5% 감소(소규모 개인사업자), 15% 감소(소규모 법인사업자), 20% 감소(중소기업)			매출액 전년 대비 5% 감소(소규모 개인사업자, 15% 감소(기타)
지원조치	3년간 실질 무이자			3년간 실질 무이자, 보증료 제로
상한액	2억엔 (실질 무이자) 6억엔 (용자범위)	2억엔 (실질 무이자) 6억엔 (용자범위)	4,000만엔 (실질 무이자) 8,000만엔 (용자범위)	4,000만엔 (실질 무이자) 2.8억엔 (보증범위)
기한	2021년 전반까지			2021년 3월까지

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의 효과

- ☐ 일본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수는 2016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의 약 9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경제활력의 원천이며, 지역경제를 지탱해 오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 해도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기업, 창업 100년이 넘는 전통 장수기업, 가족 경영의 소규모 상점 등 그 형태 및 규모도 다양함.
- ☐ 최근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인해 법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잔액이 20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중견기업이 커미티드 라인(Commitment Line)⁴²⁾ 등을 통해 신속한 자금조달에 나서는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에 따른 자금유통 지원으로 중소기업 대출도 크게 증가함.
- 특히 중소기업의 대출 추이를 보면, 2012년까지 대체로 보합세를 보였지만, 2013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하였음.

〈그림 12-2〉 일본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수 및 중소기업 대출규모



자료: 경제산업성 ‘평성28년도 경제활동조사’, 일본은행의 ‘대출처별 용자금’

□ 신용보증 효과

- 민간 금융기관에 의한 무이자·무담보 대출의 자금유통 지원책이 마련됨에 따라 신용보증협회의 보증 승인건수는 2019년 기준으로 67만 건, 보증 승인액은 8.9조 엔으로 2008년 금융위기 시 승인금액(19.6조엔)과 비교하면 45% 규모까지 축소되었음.
- 또한 보증채무 잔액의 추이를 보면, 2010년 35조 683억 엔에서 2019년에는 20조 8,053억 엔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용보증협회의 대위변제(代位辨濟)⁴³⁾는 최근 일본 정부의 코

42) 커미티드 라인(Committed Line)이란 금융회사 간에 이뤄지는 일종의 단기 마이너스대출로, 다른 금융사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유사시에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권한이 있음.

로나19 긴급대책에 따른 대규모 기업금융 지원(보증확대, 만기연장 등) 영향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감소 추세를 보임.

〈표 12-6〉 신용보증협회의 보증실적

(단위: 건, 백만엔, %)

	보증승인		보증채무 잔액		대위변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	1,002,990	14,172,296	3,294,020	35,068,273	86,796	936,644
2011	869,972	11,553,307	3,282,380	34,446,374	77,586	860,797
2012	762,417	9,751,836	3,189,748	32,078,613	71,056	777,853
2013	731,712	9,306,831	3,068,922	29,778,513	60,522	650,974
2014	714,340	8,939,404	2,949,589	27,701,740	49,771	526,570
2015	694,526	8,967,054	2,796,391	25,761,647	44,338	445,256
2016	663,183	8,534,785	2,623,498	23,873,792	40,439	397,896
2017	632,930	8,051,386	2,473,377	22,215,070	35,984	351,690
2018	633,614	8,072,811	2,332,923	21,080,871	36,036	345,948
2019	671,583	8,938,970	2,241,042	20,805,320	35,337	338,636

자료: 일본 신용보증협회연합회(www.zenshinhoren.or.jp) 홈페이지 참조.

□ 기업 도산, 여신관계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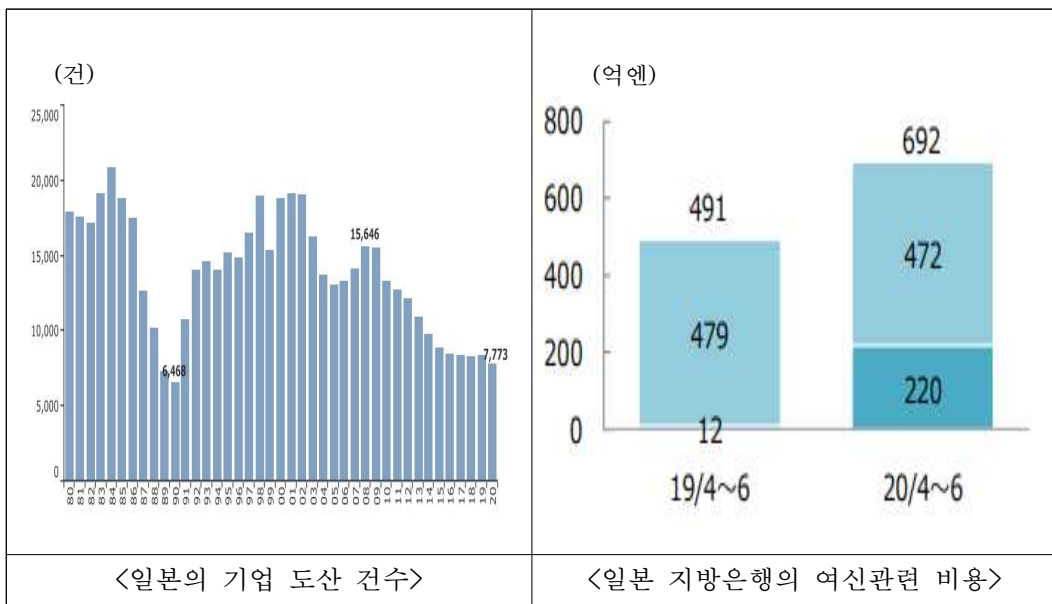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도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효과도 작용하면서 전체 도산 건수의 급격한 증가는 보이지 않음.

- 연도별 도산기업의 추이를 보면, 2009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2020년 일본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효과도 작용하면서 30년 만에 8,000건을 하회하는 수준을 기록함. 특히 2020년 1~9월까지의 전체 도산 건수(6,022건) 중 코로나19 영향으로 도산한 기업 건수는 541건에 달했으며, 기업규모로 보면 도산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었음.

43)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제3자(공동채무자 등)가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를 해주고 변제를 해 준 사람은 구상권을 취득함으로써 채권자의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함.

- 이로 인해 일본 지방은행의 4~6월기 결산의 여신관련 비용의 증가는 신용손실충당금 증가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여신관련 비용이 전년 대비 감소한 지방은행(32행)도 40%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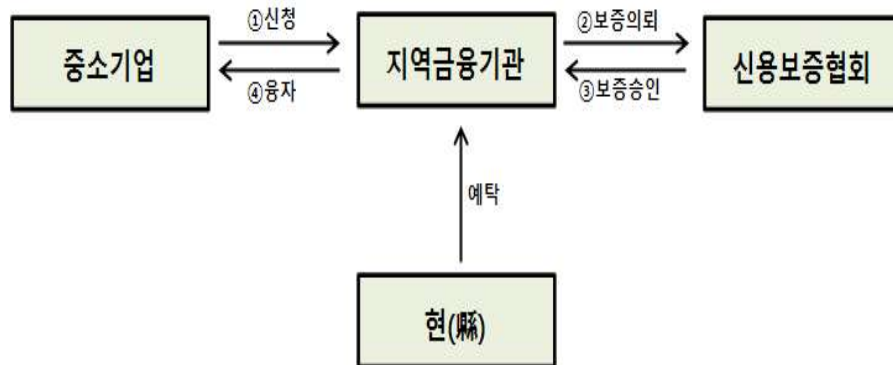
〈그림 12-3〉 일본의 기업 도산 건수 및 지방은행의 여신관련 비용



5) 지자체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례

- 제도융자(制度融資)는 지자체가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협회에서 채무보증을 하고 민간 금융기관에게 예치금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시스템임.
- 이러한 제도융자에는 ①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출해주는 방법, ②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대출해주는 방법, ③ 정부와 지자체가 연대해 대출해주는 방법 등이 있음. 현재 일본의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융자’는 신용도가 떨어지는 현내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원활화나 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대출 등 지역금융기관이나 신용보증협회와의 연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임.

〈그림 12-4〉 제도융자의 기본 틀



(1) 효고현(兵庫県) 사례

-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책으로서 중소기업 융자제도의 충실화를 꾀하고자 함.
- 현재 효고현이 추진하고 있는 제도금융에는 ‘반주형 경영자금 융자’ 지원, ‘기업의 사업재생’ 지원, ‘재도전 창업’ 지원, ‘관광·활력자금’ 지원, ‘해외시장 개척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활용되고 있음.

① ‘반주형(伴走型, 밀착형) 경영자금 특별융자’ 신설

- 금융기관의 지속적인 밀착 지원을 받으면서 경영개선 활동에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보증료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와 함께 정부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보증료를 보조 지원하고 있음.
- 대상자: 안전망 보증(Safety-Net Loan) 4호·5호(매출 감소율 15% 이상)에 한함, 위기관련 보증에 관련된 지자체장의 허가를 취득하고 또한 경영행동 계획을 책정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자금용도: 사업운영자금·설비자금, 효고縣, 고베市 제도융자의 차환 자금
- 융자 제한액: 정부 지원분 4,000만 엔, 현(縣) 지원분 2,000만 엔
- 금리: 연 0.9% (고정)
- 보증료율: 0.2% (정부 및 현의 보조 후) (3/4 상당분 보증료 보조)
- 대출기간: 10년 (그 중 거치기간 5년 이내)

② ‘경영안정 자금(사업재생 융자)’ 지원

- 사업 재생을 하는 등 재무 면에서 경영개선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등 융자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음.
- 대상자: 효고현 중소기업재생지원협회, 금융기관 등에 의한 지원체제가 구축되고 사업재생에 임하는 중소기업
- 융자 제한액: 2억 엔
- 금리: 연 1.4%
- 대출기간: 15년 (그 중 거치기간 3년 이내)
- 차환 지원 요건 완화: 효고현의 제도융자에 한정됨 → 신용보증협회의 보증 하에 융자의 기왕(既往) 차입금도 대상이 됨.

③ ‘재창업 자금’ 지원

- 기업이 폐업한 뒤, 재창업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기간을 연장하는 등 융자조건을 완화하였음.
- 대상자: 사업 폐지 또는 해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했던 연수 요건을 철폐

- 융자 제한액: 2,000만 엔
- 금리: 연 0.6%
- 대출기간: 10년 (거치 1년) 이내 → 15년 (거치 3년) 이내

④ ‘관광·활력자금’ 지원

- 음식점, 요가 체육관 등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에서 행하는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사업 지속을 위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활력자금’ 융자 제도의 조건을 완화하였음.
- ☞ 테이크아웃(포장)·배달 실시,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정비, 점포 내 코로나19 예방대책 실시 등
- 사용용도: 사업운영자금 및 설비자금의 지원 확대
- 융자 제한액: 3억 엔
- 금리: 연 0.9%
- 대출기간: 10년 (그 중 거치기간 2년 이내)

⑤ ‘사업승계’ 지원

-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현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임.
- 대상자: 사업승계를 예정하고 있거나 또는 사업승계를 받은 자
- 사용용도: 사업운영자금, 설비자금
- 융자 제한액: 2억 8,000만 엔
- 금리: 연 0.9%
- 대출기간: 10년 (그 중 거치기간 2년 이내)

⑥ ‘원격근무·근로환경 개선자금’ 지원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환경·복지개선 융자’ 지원에서 ‘원격근무·근로환경 개선자금 융자’ 지원으로 개정하고 융자 요건을 완화하였음.
- 대상자: 노동자의 일하는 방식 개혁을 위해 원격근무 도입을 위한 환경정비를 행하는 사업자
- 자금용도: 설비자금, 사업운영자금
- 융자 제한액: 3억 엔
- 금리: 연 0.6%
- 대출기간: 10년 (그 중 거치기간 2년 이내)

⑦ ‘해외시장 개척자금’ 지원

-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해외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사업 전개 이전으로 한정했던 대상요건을 사업개시 후로 완화하였음.
- 사용용도: 사업운영자금, 설비자금
- 융자 제한액: 설비자금 3억 엔, 사업운영자금 1억 엔
- 금리: 연 0.9%
- 대출기간: 10년 (그 중 거치기간 2년 이내)

⑧ ‘신기술·신사업 창출(AI·IoT 촉진)’ 지원

- 장관으로부터 계획 인증을 받은 5G 정보통신기술이나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개발 및 도입을 추진할 때, 통상의 일반 보증과 달리 별도의 신용보증을 지원받는 제도를 이용하는 사업자를 융자 대상으로 추가하였음.
- 사용용도: 설비자금, 사업운영자금
- 융자 제한액: 2억 엔 (이 중 사업운영자금은 1억 엔)
- 금리: 연 0.9%
- 대출기간 10년 (그 중 거치기간 2년 이내)

〈표 12-7〉 효고현(兵庫県)의 제도용자 개요

구분	반주형(伴走型, 밀착형) 경영자금 용자	경영안정 자금 (사업재생 용자)	재창업 자금	관광·상업자금	해외시장 개척자금	사업승계 지원
용자대상	위기관련 보증에 관련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고 경영활동을 하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효고현 중소기업재생지원 협회에 의한 지원체제가 구축되고 사업재생에 임하는 중소기업	기업이 폐업한 뒤 재창업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현내 사업을 계속 유지 하면서 동일업종으로 해외사업을 전개하는 자	사업승계를 예정하거나 사업승계를 받은 자
자금용도	사업운영자금, 설비자금	사업운영자금, 설비자금	사업운영자금, 설비자금	사업운영자금, 설비자금	사업운영자금, 설비자금	사업운영자금, 설비자금
용자 제한액	4,000만엔 (정부 지원) 2,000만엔 (지자체 지원)	2억엔	2,000만엔	3억엔	설비자금 3억엔 사업운영자금 1억엔	2억 8,000만 엔
대출기간·이율	연 0.9% 10년 (거치 5년 이내)	연 1.4% 15년 (거치 3년 이내)	연 0.6% 15년 (거치 3년 이내)	연 0.9% 10년 (거치 2년 이내)	연 0.9% 10년 (거치 2년 이내)	연 0.9% 10년 (거치 2년 이내)
담보·보증인	보증협회 소정	보증협회 소정	보증협회 소정	보증협회 소정	보증협회 소정	보증협회 소정
보증료율	0.2%	보증협회 소정	보증협회 소정	보증협회 소정	보증협회 소정	보증협회 소정

(2) 오사카부(大阪府) 사례

- 오사카 부내(府内)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원활화와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융자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음⁴⁴⁾.
- 오사카부의 제도융자 실적(2020.4.~2021.3.)월을 살펴보면, 총 융자 규모는 203,518백만 엔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코로나19 대응자금’이 197,780백만 엔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소규모사업자 지원자금’ 895백만엔, ‘설비투자 응원자금’ 298백만엔, ‘경영력 강화자금’ 270백만엔, ‘개업자금’ 186백만엔 등의 순으로 나타남(오사카부 홈페이지(www.pref.osaka.jp) 참조).
- 현재 오사카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금융에는 ‘개업자금’ 지원, ‘SDGs(지속가능 개발목표) 비즈니스’ 지원, ‘사업승계’ 지원, ‘소규모사업자 사업자금’ 지원 등이 있음.

① ‘개업자금’ 지원

- 오사카시에서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개업자금(개업자금, 지역 지원네트워크형) 지원을 행하고 있음. 이 중에서 지역 지원네트워크형은 융자 후 3년간 금융기관·상공회/상공회의소 등의 금융지원을 받는 것으로 금리나 보증료도 통상적인 개업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 또한 다양한 기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여성, 청년(35세 미만), 시니어(55세 이상), UIJ턴⁴⁵⁾ 해당자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하(0.2%)함.
- 대상자: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 사업개시 후 5년 미만의 법인이 대상임.
- 자금용도: 사업운영자금, 설비자금
- 금리: 연 1.4%
- 보증료율: 1.0%
- 융자 제한액: 2,000만 엔
- 대출기간: 7년 이내 (그 중 거치기간 1년 이내)
- 자기자금: 사업 개시에 필요한 자금의 1/5

44) 오사카 부내(府内)에는 43개의 기초자치단체와 오사카 부청이 있으며, 경제의 중심은 오사카 시내에 집중되어 있음.

45) UIJ턴이란, 3가지 인구 퇴조현상(U턴: 지방에서 도시로 이주했던 사람이 다시 출신 지방으로 돌아가는 현상, J턴: 도시로 이주했던 사람이 출신지방 인근의 중간규모의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 I턴: 출신지와는 별개로 지방으로 이주하는 현상)의 총칭으로, 최근 노동자의 대규모 정년퇴직으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말함.

② ‘SDGs 비즈니스’ 지원

- 2020년 ‘SDGs 선진도시 오사카’ 실현을 위해 오사카 부내의 중소기업들이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⁴⁶⁾ 비즈니스를 전개하려고 할 때 필요한 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있음.
- 대상자: 오사카 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SDGs 대처에 관한 사업계획을 책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사업자
- 자금용도: 사업운영자금, 설비자금
- 금리: 연 1.4% (고정)
- 보증료율: 신용보증협회 소정
- 용자 제한액: 2억 엔 (이 중 무담보 8,000만 엔)
- 대출기간: 7년 이내 (그 중 거치기간 6개월 이내)

③ ‘사업승계 자금’ 지원

- 이 제도는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오사카시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임.
- 대상자: 3년 이내에 사업승계(대표자 교체) 계획이 있는 법인 또는 대표자가 사업자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사업활동의 지속에 지장이 발생해 ‘중소기업 경영승계 원활화법’에 근거해 도도부현 지사의 인정을 받고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법인 및 사업자임.
- 자금용도: 사업승계 시 필요한 자금
- 금리: 연 1.4% (고정)
- 보증료율: 신용보증협회 소정
- 용자 제한액: 2억 엔 (이 중 무담보 8,000만 엔)
- 대출기간: 10년 이내 (그 중 거치기간 1년 이내)

④ ‘소규모사업자 사업자금’ 지원

- 이 제도는 소규모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자금을 정부의 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해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소규모사업자의 활력을 뒷받침하고 경영력 강화 및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 것임.
- 대상자: 오사카 부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자

46) SDGs(지속가능 개발목표)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중요한 발전 프레임워크를 제공한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의 후속 의제로 2015년 9월에 채택됨.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SDGs는 사회적 포용, 경제성장, 지속 가능한 환경의 3대 분야를 유기적으로 아우르며 ‘인간 중심’의 가치 지향을 최우선시 하고 있음.

- 자금용도: 사업운영자금, 설비자금
- 금리: 연 1.6%
- 보증료율: 신용보증협회 소정
- 용자 제한액: 2,000만 엔
- 대출기간: 7년 이내 (그 중 거치기간 6개월 이내)

⑤ ‘소규모사업자의 설비투자’ 지원

- 소규모사업자 또는 창업자를 위한 설비 대여와 설비자금을 1/2까지 무이자
로 대여해 주는 제도임. 공익재단법인 오사카산업국이 그 설비를 구입해
장기 또한 저리로 제공하고 있음.
- 이 제도의 장점으로 ① 금융기관의 용자범위나 신용보증협회의 보증범위
와는 무관계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력을 확보하면서 설비투자가 실현될 수
있으며, ② 본 사업은 공적기관에 의한 제도라서 안심할 수 있고, ③ 설비
가격의 10% 자금(보증금으로서 충당, 리스 시에는 불필요)으로 설비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에 초기 비용을 억제할 수 있으며, ④ 동 제도의 할부 사용
료율은 0.7%에서 1.5%, 리스료는 0.933%에서 2.935%로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과거 5년간의 도입 실적을 보면, 신청건수(할부·리스)는 93.2건으로, 대여
결정금액(할부·리스)은 16억 4,000만 엔에 달했음.

<표 12-8> 오사카부(大阪府)의 제도용자 개요

구분	개업자금		소규모사업자 사업자금	SDGs 비즈니스 지원	설비투자 지원	사업승계 지원
	개업자금	지역 자원네트워크형				
용자대상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 사업개시 후 5년 미만의 법인	지역 지원네트워크형의 취급지역에서 지역 지원 이용을 희망하는 자	오사카 부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오사카 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오사카 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오사카 부내의 중소기업
자금용도	사업운영자금, 설비자금	사업운영자금, 설비자금	사업운영자금, 설비자금	사업운영자금	설비자금	사업운영자금
용자 제한액	2,000만엔	2,000만엔	2,000만엔	2억엔	2억엔	2억엔
대출기간·이율	연 1.4% 7년 (거치 1년 이내)	연 1.2% 7년 (거치 1년 이내)	연 1.6% 7년 (거치 6개월 이내)	연 1.4% 7년 (거치 6개월 이내)	연 1.2% 10년 (거치 1년 이내)	연 1.4% 10년 (거치 1년 이내)
담보·보증인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보증협회 소정	보증협회 소정	보증협회 소정
신용보증	연 1.0%	연 0.5%	보증협회 소정	연 1.4%	보증협회 소정	보증협회 소정

(3) 아이치현(愛知県) 사례

□ 아이치현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융자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특히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음.

□ 아이치현 제도융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원칙상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계획적인 상환이 가능함.

○ 신용보증협회의 신용보증료에 대해 일반요율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시정촌(市町村)에서는 신용보증료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추진하고 있음.

○ 가까운 취급 금융기관 각 지점 창구에서 신청 가능함.

□ 현재 아이치현이 추진하고 있는 제도융자에는 ‘경제환경 대응자금(경영안심, 안전망대출)’ 지원, ‘소규모사업자 진흥자금’ 지원, ‘일반 사업자금’ 지원, ‘중소기업 조직력 강화자금’ 지원 등의 제도가 활용되고 있음.

① ‘경제환경 대응자금(경영안심)’ 지원

○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상 필요로 하는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대상자

- (매출 감소)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1개월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매출액과 비교해 3% 이상 감소하고 이후 2개월간을 포함한 3개월간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의 매출액과 비교해 3% 감소한 중소기업

- (관련 도산방지) 현에서 도산 사실이 인정된 사업자에 대해 50만 엔 이상의 매출채권 등을 가진 자 또는 도산한 사업자와의 거래가 전체 거래액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 자금용도: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운영자금

○ 융자 제한액: 8,000만 엔

○ 금리

- 운전자금 (1년 초과 3년 이내 1.2%, 3년 초과 5년 이내 1.3%, 5년 초과 7년 이내 1.4%)

○ 보증료율: 연 0.40%~1.83%

○ 상환방법: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분할 상환

② ‘경제환경 대응자금(안전망 대출)’ 지원

○ 안전망대출(Safety Net Loan)은 거래처 기업의 도산, 사업활동의 제한, 매출액 감소,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 등에 의한 차입금 감소에 의해 경영안정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한도액의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임.

☞ 아이치현을 포함한 전국 47 도도부현을 지정 지역으로서 안전망 보증 4호가 발동됨.

☞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의 대상 업종에 대해 일부 예외 업종을 제외한 원칙 전 업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자금용도: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운영자금 및 설비자금

○ 용자 제한액: 8,000만 엔

○ 금리

- 운전자금 (1년 초과 3년 이내 1.1%, 3년 초과 5년 이내 1.2%, 5년 초과 7년 이내 1.3%, 7년 초과 10년 이내 1.4%)

- 설비자금 (1년 초과 3년 이내 1.2%, 3년 초과 5년 이내 1.3%, 5년 초과 7년 이내 1.4%, 7년 초과 10년 이내 1.5%)

○ 보증료율: 연 0.67%~0.79%

○ 상환방법: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분할 상환

③ ‘소규모사업자 진흥자금’ 지원

○ 이 제도는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약한 중소기업의 상공업자가 사업상 필요로 하는 자금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대상자: 아이치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임.

○ 자금용도: 사업운영자금 및 설비자금

○ 용자 제한액: 5,000만 엔

○ 금리

- 운전자금 (3년 이내 1.3%, 5년 이내 1.4%, 7년 이내 1.5%)

- 설비자금 (3년 이내 1.3%, 5년 이내 1.4%, 7년 이내 1.5%, 10년 이내 1.6%)

○ 보증료율: 신용보증료의 50% (상한 10만엔)

○ 상환방법: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분할 상환

④ ‘일반 사업자금’ 지원

-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사업상 필요로 하는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경영기반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대상자: 아이치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임.
- 자금용도: 사업운영자금, 설비자금
- 용자 제한액: 2억 엔
- 금리
 - 운전자금(1년 이내 1.3%, 3년 이내 1.4%, 5년 이내 1.5%, 7년 이내 1.6%)
 - 설비자금(3년 이내 1.4%, 5년 이내 1.5%, 7년 이내 1.6%, 10년 이내 1.7%)
- 보증료율
 - 용자기간 1년 이내 연 0.38%~1.74%
 - 용자기간 1년 초과 연 0.40%~1.83%
- 상환방법: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분할 상환
- 책임공유제도⁴⁷⁾: 대상

⑤ ‘중소기업 조직력 강화자금’ 지원

-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인 협동조합이 사업상 필요로 하는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조직력 강화와 경영기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대상자: 상공조합중앙금고(정부 산하의 정책금융기관)의 용자대상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 자금용도: 사업운영자금
- 용자 제한액: 3억 엔 (단, 전대용자의 경우 조합원당 3,000만 엔 이내)
- 금리: (주)상공조합중앙금고에서 결정
- 상환방법: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분할 상환

47) 여기서는 신용보증협회와 금융기관이 적절한 책임 공유를 도모해 양자가 연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행하고 있음. 상공업 진흥 자금이 편성되어 아이치현 신용보증협회와 금융기관이 책임을 공유하고 있음.

<표 12-9> 아이치현(愛知県)의 제도용자 개요

구분	소규모사업자 진흥자금		일반 사업자금	중소기업 조직력 강화자금	경제환경 적응자금	
	일반자금	소액자금			사업재생	사업승계
용자대상	종업원수 50인 이하의 (상업·서비스업 30인) 법인, 개인, NPO법인 등	종업원수 20인 이하의 (상업·서비스업 5인) 법인, 개인, NPO법인 등	중소기업	상공조합중앙금고의 용자대상 자격이 있는 조합	경영지원회의 등 지원을 받아 작성된 사업재생 계획에 따라 실행 중인 중소기업	사업승계 전에 사업승계 계획을 책정, 실행 중인 중소기업
자금용도	사업운영자금, 설비자금	사업운영자금, 설비자금	사업운영자금, 설비자금	사업운영자금	사업운영자금, 설비자금	사업운영자금, 설비자금
용자 제한액	5,000만엔	2,000만엔	2억엔	3억엔	2억 8,000만엔	2억 8,000만엔
대출기간·이율	3년 연 1.3% 5년 연 1.4% 7년 연 1.5% 10년 연 1.6%	3년 연 1.1% 5년 연 1.2% 7년 연 1.3% 10년 연 1.4%	3년 연 1.4% 5년 연 1.5% 7년 연 1.6% 10년 연 1.7%	1년 상공조합중앙금고 소정	10년 연 1.5% 13년 연 1.6% 15년 연 1.7% (거치기간 1년 이내)	3년 연 1.2% 5년 연 1.3% 7년 연 1.4% 10년 연 1.11%
담보·보증인	보증협회 소정		보증협회 소정	상공조합중앙금고 소정	보증협회 소정	
신용보증	보증협회 소정		보증협회 소정	상공조합중앙금고 소정	보증협회 소정	

(6) 소결

-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기업의 자금유통 지원책으로서 ① 정부계 금융기관이나 민간 금융기관에 의한 실질 무이자·무담보 대출과 자본성 자금조달 지원, ② 일본은행의 금융기관 지원을 위한 새로운 자금공급 조치(기업어음(CP)과 회사채 매입,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특별오퍼레이션, 중소기업 신규 자금지원 등), ③ 지방은행 등에 대한 자금유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금융기능강화법’ 개정 등을 정비함.
- 일본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수는 2016년 기준 전체 기업의 9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경제활력의 원천이며, 지역경제를 지탱해 오고 있음.
 - 최근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인해 범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잔액이 20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중견기업이 커미티드 라인(Commitment Line) 등을 통해 신속한 자금조달에 나서는 한편,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에 따른 자금유통 지원으로 중소기업 대출도 크게 증가했음.
 - 또한 민간 금융기관에 의한 무이자·무담보 대출의 자금유통 지원책이 마련됨에 따라 신용보증협회의 보증 승인건수는 2019년 기준으로 67만 건, 보증 승인액은 8.9조 엔으로 나타남.
 - 신용보증협회에 의한 보증채무잔액 추이를 보면, 2010년 35조 683억 엔에서 2019년에는 20조 8,053억 엔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또한 대위변제는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긴급대책에 따른 대규모 기업금융 지원(보증규모 확대, 보증만기 연장 등) 영향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감소 추세를 보임.
- 또한 일본 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제도금융’ 실천사례 중 효고현(兵庫県), 오사카부(大阪府), 아이치현(愛知県)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
 - 효고현의 경우 ‘반주(伴走)형 경영자금 융자’ 지원, ‘기업의 사업재생’ 지원, ‘재도전 창업’ 지원, ‘관광·활력자금’ 지원, ‘해외시장 개척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활용되고 있음.
 - 오사카부의 경우 ‘개업자금’ 지원, ‘SDGs(지속가능 개발목표) 비즈니스’ 지원, ‘사업승계’ 지원, ‘소규모사업자 사업자금’ 지원, ‘설비투자’ 지

원 등이 이뤄지고 있음.

- 아이치현의 경우 ‘경제환경 대응자금(사업재생, 사업승계)’ 지원, ‘소규모 사업자 진흥자금’ 지원, ‘일반 사업자금’ 지원, ‘중소기업 조직력 강화자금’ 지원 등의 제도가 활용되고 있음.

□ 나아가 일본은 지자체 중심의 신용보증 체계를 구성·운영해 오고 있음.

- 일본은 신용보증과 신용보험 기능이 결합된 중층적 신용보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기준 51개의 지역 신용보증협회가 운영 중임.
 - 정부계 금융기관인 ‘일본정책금융공고’는 지역 신용보증협회의 신용보증을 재보증하는 신용보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일본의 신용보증은 경제위기 발생 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규모 확대, 보증만기 연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사정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 평상시에는 부분보증 적용으로 금융기관과 리스크를 분담하지만, 경제위기 발생 시 보증비율(전액보증 포함) 확대, 기간 연장 등으로 대응함.

13. 결론을 대신하며

- 인천시의 소상공인 및 금융기관(신협)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인천 지역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형태의 금융소외 현상이 관찰됨.
- 일부이기는 하나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현상이 존재함.
- 금융회사의 대출을 받았더라도 충분한 수준의 대출을 받지 못하고, 소상공인의 사업 환경에 적합한 특화된 대출서비스가 미흡한 상황임.
- 금융소외 현상에 따라 소상공인이 자금용 피해를 당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 가능함.
- 소상공인은 사업 수입금으로 금융소외 현상에 대응하지 못하고, 친인척이나 대부업체 등을 통한 자금조달로 금융소외 현상을 타개하는 경향을 보임.
- 금융회사의 대출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사업 유지, 사업 확장 등 대출을 지원받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향유 할 기회가 차단된 것으로 해석 가능함.
- 소상공인의 금융소외 원인은 소상공인의 상환능력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금융회사의 신용할당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됨.
- 금융회사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서비스에 소극적인 사유 중 가장 중요한 사유는 대출원금의 회수 우려임.
- 금융회사가 소상공인에 특화된 대출상품이나 대출 심사시스템 등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등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도 미흡한 것이 현실임.
- 이른바 서민금융기관으로 일컬어지는 서민금융회사가 지역 밀착형 상호금융회사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상업은행과 유사한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한 원인으로 이해됨.

- 소상공인이 자신의 대출 상환능력이나 사업 현황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제시하지 못하여, 금융회사가 높은 거래비용을 이유로 대출서비스를 기피하는 것도 중요한 사유임.
- 소상공인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출금의 상환 부담감을 호소하며, 추가적인 대출 지원을 희망함.
- 소상공인은 일시상환대출이나 분할상환대출의 상환자금 마련에 상당한 부담이 있음을 호소하며, 대출만기일 연장 등의 지원을 희망함.
- 특히,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매출 및 이익금 감소에 따라 추가적인 대출 지원을 희망함.
-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소외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및 금융회사 종사자 모두 정책자금대출의 확대를 선호함.
-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가 예금자 보호가 필요한 금융회사인 현실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단시일 내에 채택 가능한 대안으로 평가됨.
- 상당수의 소상공인은 인천 내의 소상공인 금융소외계층(개인 금융소외계층 포함)의 금융소외 현상 해결을 위해 인천 시민만을 위한 시민은행(지역공공은행)의 설립 필요성에 공감함.
- 인천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확대 방안으로 인천지역에 특화된 금융기구의 설립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됨.
 - 예금자 보호 등 금융감독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 비대칭성으로 대출 상환능력 평가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유연한 대출서비스 지원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수요자인 소상공인에게 자금공급을 직접 지원할 수 있어야 확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통한 지역 서민금융회사의 육성, 지자체의 독자적인 직접 지원방안의 강구 등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천 소상공인 설문조사 결과를 통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선형회귀분석(OLS)을 통해 인천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천 소상공인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인천소상공인의 사업자금 대출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둘째,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t)’을 통해 인천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대출 규모별로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간순이익’이 작을수록 ‘1천만원 이하’ 사업자금 대출보유 확률이 증가하고, ‘연령’이 젊을수록 ‘2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 사업자금 대출보유 확률이 증가하며, ‘연간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5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 ‘1억원 이상~3억원 이하’, ‘3억원 초과’의 사업자금 대출이 증가할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셋째,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t)’을 통해 인천 소상공인의 대부업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천 소상공인의 대출전당 금융권의 대출 거절 경험 횟수’가 1번 늘어날수록 대부업 대출이 있을 승산이 50.5% 증가하며, 인천 소상공인의 대부업 대출 여부에 대한 결정요인의 한계효과를 추정하면 인천 소상공인의 대출전당 금융권의 대출 거절 경험 횟수’가 1번 늘어날 때 대부업 대출이 있을 확률이 6.4%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됨. 그리고 ‘인천 소상공인의 창업 이후 영업 기간’이 1년 늘어날수록 대부업 대출이 있을 승산이 4.7% 감소하며, 인천 소상공인의 대부업 대출 여부에 대한 결정요인의 한계효과를 추정하면 창업 이후 영업기간이 1년 증가할 때 대부업 대출이 있을 확률이 0.75%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넷째,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t)’을 통해 인천 소상공인의 현재 사업자금 추가 대출 희망금액 규모별로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간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5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 ‘1억원 이상~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등 고액의 추가대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대체로 추가대출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다섯째, 연간 매출액 규모별 대부업 대출유무 교차분석을 한 결과, ‘연간 매출액 3억원 이상’ 소상공인의 대부업 대출빈도는 적고, ‘연간 매출액 5천

만원 이상~1억원 이내’ 소상공인의 대부업 대출빈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여섯째, 연간 순이익 규모별 대부업체 대출 유무 교차분석을 한 결과, ‘연간 순이익 7천만원 이상’ 소상공인의 대부업 대출 빈도는 적고, ‘연간 순이익 3천만원 이내’ 소상공인의 대부업 대출 빈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일곱째, 금융권 대출 거절 경험 횟수별 대부업 대출 유무 교차분석을 한 결과, ‘금융권 대출 거절 경험’ 이 있는 소상공인이 그런 경험이 없는 소상공인보다 대부업 대출을 두 배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여덟째, 인천 시민은행 설립에 대한 연간 매출액 규모별 필요성 공감 교차분석을 한 결과, ‘연간 매출액 규모’ 범위와 관계없이 인천 소상공인들은 대체로 ‘인천 시민은행’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